

THE THEORY OF MONEY AND CREDIT

화폐와

루트비히 폰 미제스 저
김이석 역

신용의 이론 (상)

- 루트비히 폰 미제스의 『화폐와 신용의 이론』은 한마디로 20세기 경제학사에 기념비적 기여를 한 저술 중 하나이다. 이 책은 '오스트리아학파' 경제학의 정점이자 완성으로서 세상에 출간되었으며, 그 자체로 하나의 새로운 학파-신(新)오스트리아학파-를 형성하는 계기가 되었다.

Murray N. Rothbard

- 최근 경제학계 일각에서는 화폐수량설을 기계적인 형태로 퇴화시키려는 경향, 특히 순전히 동어반복적인 항등식의 조작을 통해 연구를 진행하려는 경향도 나타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념화가 까다로운 화폐현상들에 대한 설명에서 더 큰 진보가 성취된다면, 이는 기계적인 연구 경향에서가 아니라 분명 미제스가 택한 길에서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

Lionel Robbins

화폐와 신용의 이론(상)

화폐와 신용의 이론(상)

1판1쇄 인쇄/ 2011년 1월 24일

1판1쇄 발행/ 2011년 1월 28일

발행처/ 한국경제연구원

발행인/ 김영용

편집인/ 김영용

등록번호/ 제318-1982-000003호

(150-70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7-3 하나대투증권빌딩

전화 3771-0001(대표), 3771-0057(직통) / 팩스 785-0270~3

<http://www.keri.org>

© 한국경제연구원, 2011

한국경제연구원에서 발간한 간행물은
전국 대형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구입문의) 3771-0057

ISBN 978-89-8031-602-1

20,000원

* 제작대행: (주)FKI미디어

THE THEORY OF MONEY AND CREDIT

화폐와 신용의 이론 (상)

루트비히 폰 미제스 저
김이석 역

이 번역서 『화폐와 신용의 이론』은 『인간행동론』(*Human Action*)으로 저명한 루트비히 폰 미제스(Ludwig von Mises)의 명저, *Theory of Money and Credit*(Liberty Classic, 1981)를 우리말로 완역한 것이다. 이 책은 1912년 처음 독일어로 발간되었지만 지금도 출판되고 있는, 세월의 테스트를 이겨낸 화폐분야의 고전이다. 총 4부 23장과 부록 2편, 서론 5편 등으로 되어 있는 이 책은 1924년 독일어 재판이 출간되었고, 영역본은 미제스의 제자 하이에크로부터 LSE(London School of Economics)에서 배웠던 라이오넬 로빈스(Lionel Robbins) 경(卿)이 주도해서 1924년 독일어 재판을 영역하여 1934년 영국에서 출판되었다. 여기에 미제스가 제4부 화폐재건(Monetary Reconstruction) 부분을 추가한 영역본이 1953년 예일대 출판부에서 발간되었고, 1971년 FEE(Foundation for Economic Education)에 의해 다시 인쇄되었다. 1981년에는 리버티 펀드(Liberty Fund)가 1953년 영역본에 라스바드(Rothbard)의 서문을 추가하여 리버티 클래식(Liberty Classics)으로 다시 발간하였다.

미제스는 이 책에서 1870년대에 멩거, 제본스, 윌라스가 시작한 주관주의 이론과 한계효용이론을 처음으로 화폐문제에 성공적으로 적용하였다. 당시 최고의 경제학자들조차도 화폐를 자신들의 이론체계 속으로 통합하기 어려워 화폐를 일종의 베일로 취급했으며, 한계효용이론은 상품의 교환에만 적용될 뿐, 화폐문제에는 적용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사무엘슨(P. Samuelson)의 신고전파종합 이래 현대의 경제학은 한편으로는 방법론적 개

인주의와 한계효용을 중심으로 구축된 미시경제학, 다른 한편으로는 이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총량변수를 중심으로 서술되는 거시경제학이 어색하게 동거하고 있는 상태이다. 이런 불편한 동거는 소위 케인스 혁명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지만, 미시경제학이 화폐문제를 제대로 다루지 못한 점도 여기에 크게 기여했다고 할 수 있다. 미제스의 이 책과 그의 『인간행동론』, 라스바드의 『인간·경제·국가』와 같은 책들은 미시경제학의 그런 공백을 채워주고 있다.

이 책은 정책적 관점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오스트리아학파의 경기변동이론은, 현재 비판과 낙관의 심리적 교차라는 체계적이라고 보기 힘든 케인시언 (혹은 포스트 케인시언) 방식의 ‘설명’을 제외하고는, 경기변동과정을 체계적으로 설명하는 거의 유일한 이론이라고 할 수 있다. 미제스는 이 책에서 빅셀의 자연이자율과 시장이자율의 구분, 뵘바베르크의 자본이론 등을 통합하여 오스트리아학파의 경기순환이론(ABCT: Austrian Business Cycle Theory)을 처음으로 제시하고 있다.

2008년 미국발 국제금융위기 이후, 경기변동의 원인, 경기침체 발생 시 적절한 처방, 금융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 중앙은행의 역할 등에 대해 다양한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대다수 연구들은 파생상품 규제 여부, 자본통제 여부와 방법 등과 같은 좁은 시각에 갇혀 있을 뿐, 오스트리아학파의 경기순환론을 활용하여 현재의 국제적인 화폐금융제도의 틀이 ‘건전한 화폐’를 가능하게 하는지와 같은 문제의식을 보여 주는 연구는 많지 않은 형편이다.

시장경제는 '건전한 화폐'가 전제되어야 하지만, 이 '건전한 화폐'에 대한 심각한 고민이 배제된 채 임기응변식의 정책처방들이 난무하고 있다. '불황경제학의 복권'을 외치며, 더 많은 돈을 과감히 쏟아붓지 않은 것이 문제라는 식으로 '건전한 화폐'의 확립을 더욱 훼손시킬 방안들이 여기저기에서 제안되고 있다. 이런 와중에서 '건전한 화폐'라는 주제는 당연히 받아야 할 관심도 받지 못하고 있다. 이 책을 번역하는 목적은, 이런 상황에서 현행 화폐제도가 자유시장경제와 부합하는 제도인지, 또 현행 제도를 어떻게 변화시켜야 불필요한 경기변동과 이에 수반된 실업과 구조조정의 고통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지 등에 대해 연구할 수 있도록 그 기초자료 가운데 하나를 제공하는 데 있다. 아무쪼록 이 번역본이 우리나라의 연구자들로 하여금 건전화폐를 향한 길을 찾는 데, 그리고 향후 국제금융질서의 재편에 대해 고심하는 데,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나라와 같은 입장에서는 어떤 태도를 취하는 것이 유리한지 연구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기원한다. 이 번역에 애써 준 김이석 초빙연구위원에게 감사드린다.

2011. 1.

한국경제연구원

원장 김영용

역자 서문

이 책, 『화폐와 신용의 이론』이 처음 독일어로 출판되었을 때, 저자 미제스를 국제적으로 저명한 경제학자의 반열에 오르게는 하였지만, 그 내용의 파괴력에 비해 충분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제스의 이 책은 꾸준히 발간되었으며, 현재에도 계속 발간되고 있을 만큼 그 중요성이 인식되고 있는 책이다. 특히 최근 미국발 국제금융위기의 원인을 찾으려는 노력 속에서 오스트리아학파의 경기변동이론과 그 기초가 되었던 미제스의 이 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시장경제의 원활한 작동을 위해서는 ‘건전한 화폐’가 전제되어야 한다.¹⁾ 그러나 통화정책이 총수요조절정책의 도구로 인식되면서, 통화팽창정책이 경기부양을 위해 자주 동원되었고, 그 결과 건전한 화폐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크게 약화된 것이 사실이다. 이 책은 건전화폐의 원칙을 부활시킴으로써 불필요한 경기변동의 고통과 경제적 재난으로부터 벗어날 것을 제안하고 있다.

1971년 달러의 금태환이 정지되면서 지금까지 약 40년 동안 세계경제는 불태환 달러본위제도, 중앙은행제도, 부분지급준비제도, (관리)변동환율제도 등을 특징으로 하고 있는 화폐제도 아래에서 운영되고 있다. 미국발 국제금융위기는 이 체제의 불안정성을 잘 보여 주고 있다. 2010년 서울 G20모임에서 보았듯이

1) 건전한 화폐(sound money)의 개념은 어빙 피셔(Irving Fisher)가 주장한 안정적 화폐(stable money)의 개념과는 다르다. 이 책에서 상품본위제에 대한 부분과 어빙 피셔에 대한 부분과 다음의 “Introduction” 부분을 참고, Joseph T. Salerno, *Money, Sound and Unsound*, Mises Institute, 2009.

환율전쟁을 막고자 하는 노력은 선언적 수준의 성과를 낼 수는 있겠지만, 이 체제의 불안정성의 해소와는 거리가 먼 미봉책에 불과하다.

향후 국제교역에서 '건전한 화폐' 혹은 건전한 화폐금융제도는 무엇이어야 하는지, 더 나아가 부분지급준비제도가 가지고 있는 취약성은 중앙은행, 혹은 '세계의 (중앙)은행'의 최종대부자 기능, 예금자보호제도 등으로 보완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잠재적 위험성을 키우는 것인지, 다른 보완책은 있는 것인지 등은 경제학자들이 그 해답을 찾아야 할 중요한 주제가 될 것이다. 그러나 국가 간 환율협상, 금융감독 강화, 토빈세나 자본통제와 같은 미봉책을 넘어서는 근본적인 대책을 제시하고 이에 대해 검토할 수 있기 위해서는, 화폐제도 자체에 대해 선행연구가 축적되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미제스의 이 책은 바람직한 화폐제도의 구축에 관한 연구에서 필수적으로 참고해야 할 가장 중요한 책 가운데 하나이다.

이 책 이외에 현대의 독자들로서는 동일 저자의 『인간행동론』(*Human Action*)과 라스바드(Rothbard)의 『인간·경제·국가』(*Man, Economy, and State*) [나남출판, 2001] 중 화폐와 자본, 이자 및 경기변동 관련 부분을 참고하는 한편, 살레르노(Joseph T. Salerno)의 『건전화폐와 불건전화폐』(*Money, Sound and Unsound*) [Mises Institute, 2009], 힐스만(Hülsmann)의 『화폐생산의 윤리학』(*The Ethics of Money Production*) [Mises Institute, 2008], 데 소토(de Soto)의 『화폐, 은행신용, 그리고 경기순환』(*Money, Bank Credit, and Economic Cycles*) 2판, [Mises Institute 2009], 세크레스트(Larry Sechrest)의 『자유은행업』(*Free Banking: Theory,*

History and a Laissez-Faire Model) [Mises Institute 2008], 라스바드, 『정부
는 우리 화폐에 무슨 일을 해 왔는가?』(*What has Government done
to our Money*) [전용덕 역, 지만지, 2010] 등을 참고하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현재의 거시경제학에 익숙한 독자가 오스트리아학과
경기변동이론에 접근하기 좋게 쓴 책으로는 개리슨(Roger Garrison)
의 『시간과 화폐』(*Time and Money*) [Routledge, 2001]가 있다.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책들은 미세스연구소(www.mises.org)에서 pdf
파일로 볼 수 있어서 참고하기에 좋을 것이다.

나름대로 주어진 시간 안에서 번역에 최선을 다했지만, 현대의
우리나라 독자들이 미세스의 이 책을 이해하기에 가장 좋도록 만
들었다고 감히 확신하기에는 시간과 능력상의 한계가 있었다. 이
책의 번역이 가능하도록 격려해 준 한국경제연구원의 김영용 원
장님, 자문에 응해 주신 대구대학교의 전용덕 교수님, 경희대학
교 안재욱 교수님, 익명의 감수자, 라틴어와 불어로 된 부분의 번
역을 도와 준 한국경제연구원의 김유선 씨께 감사드린다. 번역상
의 오류나 부족한 점은 당연히 번역자의 몫이다. 독자들의 질정
(叱正)을 바란다. 아무튼 이 번역서가 건전화폐(sound money)를 탐
구하고 확립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원한다.

2011. 1.

한국경제연구원

초빙연구위원 김이석

화폐와 신용의 이론(상)

서 언	12
영어 신판 서문	18
서 론	20
영문판 서문	25
독일어 재판 서문	37
제1부 화폐의 속성	43
제1장 화폐의 기능	45
제2장 가치의 측정에 대해	58
제3장 화폐의 다양한 종류에 대해	76
제4장 화폐와 국가	105
제5장 경제재(經濟財)로서의 화폐	122
제6장 화폐의 적들	141
제2부 화폐의 가치	149
제7장 화폐가치의 개념	151
제8장 화폐의 객관적 교환가치 혹은 구매력의 결정요인	168
제9장 화폐의 객관적 교환가치가 지역적으로 동일하지 않은 문제 ..	262
제10장 서로 다른 종류들의 화폐 사이의 교환비율	276
제11장 화폐의 객관적 교환가치와 그 변화의 측정 문제	288
제12장 화폐의 객관적 교환가치 변동의 사회적 귀결	300
제13장 화폐정책	332
제14장 국가주의 화폐정책	373

화폐와 신용의 이론(하)

서 언	12
영어 신판 서문	18
서 론	20
영문판 서문	25
독일어 재판 서문	37
제3부 화폐와 은행업	43
제15장 은행업	45
제16장 신용수단의 진화	71
제17장 신용수단과 화폐에 대한 수요	98
제18장 신용수단의 상황	131
제19장 화폐, 신용 그리고 이자	162
제20장 신용정책의 문제들	203
제4부 화폐 재건	269
제21장 건전화폐의 원칙	271
제22장 현행 통화체제	297
제23장 건전화폐로의 회귀	305
부 록	341
부록 A: 화폐이론의 분류에 대하여	343
부록 B: 기술적 용어들에 대한 번역자의 노트	378

서 언

루트비히 폰 미제스의 『화폐와 신용의 이론』은 한마디로 20세기 경제학사에 기념비적 기여를 한 저술 가운데 하나이다. 이 책은 ‘오스트리아학파’ 경제학의 정점이자 완성으로서 세상에 출간되었으며, 그 자체로 하나의 새로운 학파—신오스트리아학파—를 형성하는 계기가 되었다.

오스트리아학파는 1870~1880년대에 경제학의 세계에 새로운 빛을 던지며 등장하여, 막다른 골목에 이른 고전학과 혹은 리카디언 시스템을 전복하는 역할을 하였다. 경제학사에서는 이러한 전복을 흔히 ‘한계혁명’이라고 명명하지만, 이 명칭은 새로운 경제학적 사고방식에 대한 적절한 이름이 아니다. 새로운 오스트리아학파의 패러다임의 핵심은 경제의 근본적 빌딩 블록으로서 개인과 개인의 행동과 선택들을 분석하는 데 있다. 고전학과 경제학자들은 개인이 아니라 더 광범한 계층(혹은 계급)을 기준으로 사고하였으며, 그 결과 시장경제에서의 가치, 가격, 소득 등의 현상에 대해 만족스러운 설명을 제공하지 못하였다. 오스트리아학파는 개인의 행동들로부터 분석을 시작하였다. 예를 들면 그들은 경제적 가치가 선택을 하는 개인들에 의해 행해지는 가치평가들로 이루어지며, 가격이란 바로 이런 가치평가들에 근거한 시장에서의 상호작용의 결과로 설명한다.

오스트리아학파는 비엔나 대학의 경제학 교수 칼 멩거가 1871년 『국민경제학의 기본원리』(*Principles of Economics(Grundsätze der*

Volkswirtschaftstehre)를 출간하면서 시작되었다. 오스트리아학파는 멩거의 제자이자 계승자인 비엔나 대학의 유진 뵘바베르크에 의해 더 발전되고 체계화되었다. 뵘바베르크는 1880년대부터 특히 여러 권으로 된 『자본과 이자』(*Capital and Interest*)를 포함한 저술 활동을 펼쳤다. 멩거와 뵘바베르크는 그들 사이에서 개인들의 가치평가, 행동, 그리고 선택에 대한 근본적 분석에 근거해서 오늘날 ‘미시경제학’이라고 불리는 것들의 모든 측면들—효용, 가격, 교환, 생산, 임금, 이자, 그리고 자본—에 대해 설명을 하였다.

루트비히 폰 미제스(Ludwig von Mises)는 제3세대 오스트리아인이었는데, 20세기 첫 10년간 비엔나 대학에서 유명했던 뵘바베르크의 세미나에서 뛰어난 재능을 보였다. 미제스가 『화폐와 신용의 이론』에서 이론 위대한 업적은 오스트리아학파의 방법론을 오스트리아학파의 이론체계에서 두드러진 중요한 결핍요소, 즉 화폐와 일반 가격들이라는 넓은 ‘거시’분야를 채우는 데 적용했다는 사실에 있다.

왜냐하면 당시 화폐이론은 리카디언(Ricardian) 모델에서 여전히 점점 힘을 잃고 있었던 분야였다. 일반적인 ‘미시’이론은 개별 행동의 분석에 기초해 있었으나, 화폐이론은 여전히, 개별 선택과는 동떨어지게 총량변수들로 분석되고 있어서 ‘전체주의적인 방법론’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그래서 미시와 거시분야가 완전히 분리되어 있었던 것이다. 모든 다른 경제현상들은 개별 행동으로부터 출현하는 것으로 설명되는 반면, 화폐의 공급은 시장에 외부적으로 주어지는 것으로 간주되었고, 공급은 ‘물가수준’이라는 추상적 개념에 기계적으로 작용하는 것처럼 취급되었다.

여기에서 사라져 버린 것은 ‘미시’분야를 밝혀 주었던 개별 선택에 기초한 분석이었다. 두 분야는 완전히 별개로, 그리고 완전히 다른 기초 위에서 분석되고 있었다. 이 책은 미시이론에 화폐분야를 통합시키는 훌륭한 업적, 즉 일반경제 분석의 개인주의적 기초 위에 화폐이론을 구축하는 업적을 이루어냈다.

유진 폰 뵘바베르크는 『화폐와 신용의 이론』이 출간된 후 곧 사망하였으며, 정통 뵘바베르크언들은 그들의 과거 패러다임에 간혀 미제스가 화폐와 경기변동의 이론분야에서 이룩한 새로운 이론적 해결을 수용하지 않았다. 그래서 미제스는 그 자신의 신 오스트리아학과 혹은 미제스학파를 설립하는 몹시 힘든 일에서야 했다. 더욱이 미제스는 비엔나 대학에서 급여를 받는 신분이지 않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그렇지만 1920년대 동안 줄곧 무수히 많은 영민한 학생들이 미제스 세미나(Privatseminar)에 운집하였다.

영어권에서는 미제스의 아이디어에 대한 수용은, 영어 이외의 언어로 된 저술을 읽는 영어권 경제학자들이 별로 없다는 아주 단순하지만 중요한 사실로 인해 크게 지연되었다. 미제스의 『화폐와 신용의 이론』은 1934년까지 영어로 번역되지 않았으며, 그 결과 미제스의 통찰력은 20년 동안 간과되었다. 미제스의 이 이론은 1920년대에 로버트슨(Dennis H. Robertson) 경에 의해 영국에서 발전되었지만, 그의 분석은 (경제 전체를 단위로 하여 분석하는) ‘전체주의적’이었고, 총량적인 것이었으며, 개인의 행동으로부터 구축된 것이 아니었다. 이어 스웨덴의 경제학자 구스타프 카셀(Gustav Cassel)에 의해 제안된 구매력 패리티(purchasing power

parity) 이론이 결합을 지닌 채 약화된 방식으로 영국과 미국에 소개되었다. 그리고 큐헬-미제스의 서수적 한계효용(ordinal marginal utility)이론²⁾을 간과함에 따라, 1930년대 증반에 히스와 알렌이 주도한 서구 경제학자들은 한계효용을 완전히 버리고, 미시경제학 교과서에서 이제 친숙해진 ‘무차별곡선’ 접근법을 택하였다.

미제스의 미시와 거시이론의 통합, 그가 개척한 화폐이론과 회귀정리(regression theorem), 기타 그의 세련된 인플레이션 분석 등은 후대 경제학자들에 의해 완전히 간과되고 말았다. 거시이론을 미시적 기초 위에 통합하려는 개념은 현재 그 어느 때보다 현행 경제학의 관행과는 동떨어져 있다.

단지 미제스의 경기순환이론만이 영어권을 관통하게 되었는데, 그것도 저술의 수단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개인적 차원에서 이루어진 일이었다. 미제스의 뛰어난 제자인 프리드리히 A. 폰 하이에크는 런던 정경대학교(London School of Economics)에서 강사직을 맡으려고 1931년 비엔나에서 런던으로 이주하였다. 미제스의 통찰력들을 체계적인 경기순환이론으로 발전시키는 데 집중하고 있었던 하이에크는 영국의 경제학자들 중 가장 뛰어난 소장학자 집단을 빠르게 개종시킬 수 있었는데, 그 집단에서 가장 총명한 학자의 한 사람이었던 라이오넬 로빈스(Lionel

2) 큐헬(Františk Čuhel, 1862-1914)은 서수적 효용을 체계화한 체코 경제학자이다. 미제스가 언젠가 그 공헌을 인정받을 것을 예측했지만 아직 별로 알려지지 않고 있었다. 여기에서 라스바드는 파레토-스루츠키, 히스, 알렌 등 무차별곡선 이론의 주류 미시경제학의 대안으로서 서수적 효용이론을 언급하고 있다. 큐헬에 대한 글로는 다음을 참고. Marek Hudí, "Františk Čuhel(1862-1914)," *New Perspectives on Political Economy*, Vol. 3, No.1, 2007, pp.3-14.

Robbins)가 미제스의 『화폐와 신용의 이론』의 영역을 주도하였다. 1930년대 초반 약간의 영광스런 기간들 동안, 로빈스, 니콜라스 칼도어(Nicholas Kaldor), 존 R. 히스(John R. Hicks), 아바 P. 러너(Abba P. Lerner), 그리고 프레데릭 벤햄(Frederic Benham) 등의 명석한 청년들이 하이에크의 강력한 영향력 아래에 있었다. 그 동안 미제스의 경기순환이론을 따랐던 오스트리아 내 추종자들, 대표적으로 프리츠 매클럽(Fritz Machlup), 고트프리트 폰 하벌러(Gottfried von Haberler) 등의 저술들이 미국에서 번역되거나 출판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젊은 알빈 H. 한센(Alvin H. Hansen)이 미제스-하이에크 경기순환이론의 대표적 지지자가 되어가고 있었다.

미제스의 경기순환이론은 (미제스가 1920년대에 예측했던 불황이었던) 미국의 대공황에 대한 설득력 있는 강력한 설명으로 채택되고 있었다. 그러나 미제스의 이론이 영국과 미국을 통해 퍼져나가고 있던 바로 그때, 케인스혁명이 경제학계를 휩쓸었고, 미제스의 이론을 따르던 사람들까지 개종시켜 버렸다. 이 개종의 과정은 미제스의 견해 혹은 여타 견해들을 인내심을 가지고 하나하나 논파함으로써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아예 이를 무시함으로써 이루어졌다. 그 결과 경제학계는 겉모습만 인상적인 새 용어들로 치장한 과거의 불건전한 인플레이션주의자들의 견해가 점차 지배하게 되었다. 1930년대 말 무렵, 단지 다른 제자들을 제외한 하이에크와 미제스만이 미제스의 경기순환이론을 진정한 의미에서 고수하고 있었다. 1936년의 케인스혁명이 일어난 이후에는 다음 세대의 경제학자들은 심리적으로 케인스 이

전의 경제사상, 특히 경기순환에 대한 사상에 대해 연구하는 것 자체가 이미 어렵게 되었고, 미제스의 영역(英譯)된 『화폐와 신용의 이론』은 이런 일이 일어나기 이전에 읽힐 시간을 별로 가질 수 없었다.

미제스는 1953년 영어판 『화폐와 신용의 이론』에 제4부를 추가하였다. 그러나 케인스경제학은 크게 흥성하였고 경제학계는 미제스의 통찰력에 대해 관심을 가질 준비가 거의 되어 있지 않았다. 그러나 이제 특히 1973년 그의 사후, 미제스(Misesian) 경제학은 특히 미국에서 괄목할 만한 부활을 경험하고 있다. 오스트리아학과와 미제스경제학에 대한 컨퍼런스, 심포지엄, 책, 논문, 학위논문들이 넘쳐나고 있다. 한 번씩 경제적 정체를 동반하면서 벌어지고 있는 만성적이고 가속화되는 인플레이션(스태그플레이션)에 충격을 받아, 케인스 시스템이 완전히 혼돈에 빠지면서, 경제학자들이 이제 과거 40년 동안에 비해 미제스의 경기순환 이론을 수용할 마음의 문을 열게 되었다. 이 새로운 영역판이 경제학자들을 자극해서 슬픔을 자아낼 정도로 간과되었던 이 대작 속에 빛나고 있는 통찰력들을 재음미하게 되고, 미제스가 이룩한 화폐금융이론과 미시이론의 통합이, 화폐에 대한 경제학적 사고의 향후의 발전에 디딤돌이 되기를 기원한다.

머레이 N. 라스바드(Murray N. Rothbard)

1981년.

영어 신판 서문

이 책의 독일어 초판이 출간된 지 40년이 흘렀다. 이 40년간 세 상에는 많은 재난과 대참사들이 벌어졌다. 이 불행한 사건들을 초래한 정책들이 국가들의 통화 시스템에 또한 영향을 주었다. 건전 화폐는 점점 더 가치가 하락하는 법정화폐에 자리를 내어 주고 있다. 모든 국가들이 오늘날 인플레이션으로 문제가 되고 있으며, 그들 통화의 완전한 붕괴의 어두운 전망으로 위협을 받고 있다.

우리는 전 세계의 현 상태와 특히 화폐문제의 현 상태가 우리 동시대인들의 마음을 붙잡고 있는 특정 원리들을 적용함으로써 빚어진 필연적인 결과라는 사실을 깨달을 필요가 있다. 우리 시대의 대규모 인플레이션은 신의 행위가 아니다. 그것은 인간이 만든 것이며, 좀 무딘 표현이지만 정부가 만든 작품이다. 인플레이션은 무(無)에서 부(富)를 창출하고, ‘국민소득’을 증가시킴으로써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마법의 힘이 정부에 있다는 특정 이론들에서 파생된 결과이다.

경제학의 주요 과제들 가운데 하나가 존 로(John Law)의 시절로부터 케인스 경의 시절에 이르기까지 저술가들과 정치가들의 사고를 혼돈케 해 온, 인플레이션정책의 기본적인 오류를 명백하게 밝혀 이를 논파하는 것이다. 통화팽창주의와 같은 우화들이 공식적 원칙의 핵심적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한, 그리고 이런 우화들이 국가의 경제정책들을 지도하는 원칙으로 자리 잡고 있는 한, 화폐적 재건과 경제회복은 불가능할 것이다.

인플레이션주의와 통화팽창주의를 반대하면서 경제학이 발전한다는 주장은 그 어느 것도 선동가들에게 별 인상을 주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선동가는 그의 정책이 먼 훗날에 미칠 결과에 대해서는 상관하지 않기 때문이다. 비록 그들이 창출하는 붐이 오래가지 못하며 필연적으로 슬럼프로 끝을 맺는다는 것을 그가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선동가는 인플레이션과 신용팽창을 선택한다. 어찌면 그는 장기적 효과들을 무시하는 것을 뽐낼지도 모른다. 그는 반복한다. 장기(長期)에는 우리 모두 죽고 없다. 중요한 것은 단기(短期)일 뿐이다.

그런데 그 단기가 얼마나 오래 지속될 것인가? 그것이 중요하다. 정치가들과 관료들은 그 단기의 지속기간을 과도하게 본다. 현재 상황에 대한 정확한 진단은 이것이다. 우리는 그 단기를 넘어서 살고 있으며, 이제 정당들이 고려하기를 거부했던 바로 그 장기에 나타나는 결과들에 직면해야 한다. 사태들은, 신(新)인플레이션 학파로부터 인습적이라고 비난을 받았던, 건전한 경제학이 예언하는 그대로 전개된다는 것이 드러났다. 이 상황에서 낙관주의자라면, 아마도 국민들이 부주의하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무시했던 것을 배울 준비가 되어 있을 것이라고 기대할지도 모른다. 바로 이런 낙관적 기대가 출판사들로 하여금 이 책을 재출간하게 하고, 저자로 하여금 화폐 재건에 대한 에세이³⁾를 에필로그에 추가하도록 하였다.

루트비히 폰 미제스

뉴욕, 1952년 6월.

3) 이 책 제4부 참고.

서론

경제학의 모든 분야 중에서 화폐와 신용과 관련된 부분은 아마도 가장 긴 역사와 가장 광범한 문헌이 존재하는 분야일 것이다. 화폐수량설의 기초적 진실들은 다른 유형의 경제문제에 대해 아직 연구를 시작해 보기도 전에 이미 확립되었다. 가치의 일반이론에서 만족할 만한 정태적 이론체제가 아직 확립되기 이전이었던 19세기 중반 무렵, 화폐금융 분야에서의 소책자들은 상당히 성공적으로 경제 동학(動學)의 미묘한 문제들을 다루고 있었다. 오늘날 경제학자들은 여타 분야에 대해서는 상당한 이견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화폐와 신용의 이론보다 더 효과적으로 정치가나 당사자들에게 실제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경제이론 분야가 없다고 느끼고 있다.

그러나 아무튼 영어문헌에서 이 책에서 보이는 유형과 같은 통합의 시도들은 너무나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케인스는 그가 『화폐론』(*Treatise on Money*)을 쓰면서 이런 통합을 이루려는 확립된 전통이 없다는 점에 대해 탄식했을 뿐만 아니라, 순수균형이론의 핵심적 문제를 다루는 표준적인 논의에 버금가는 수준과 규모로 화폐금융 분야를 체계적으로 다룬 사례가 없다는 점에 대해서도 탄식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폐금융 분야만큼 분석과 경험의 확립된 결과들이 거의 체계화되지 못하고 이론경제학의 주요 범주들과의 연관성이 잘 밝혀지지 않은 경제학의 분야도 없을 것이다. 단편적인 글들은 수

백 개가 존재하고 있다. 소책자들도 어느 한 사람이 완전히 소화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광범위하게 존재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이 책의 출판이 영어권 학생들에게 그들의 진정한 필요를 충족시켜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왜냐하면 이 저술은 비엔나 대학의 루트비히 폰 미제스 교수의 독일어로 된 『화폐와 신용의 이론』(*Theorie des Geldes und der Umlaufmittel*)을 영역한 것인데, 바로 이런 결핍을 채워 줄 것이기 때문이다. 이 책은 체계적으로 화폐와 신용의 이론의 주요 명제들을 다루고 있을 뿐 아니라, 이들을 분석경제학의 주요 체계와 연계시키고 있으며, 아울러 화폐와 신용의 명제들이 현행 정책에서의 주요한 문제들에 갖는 의미를 함께 다루고 있다. 화폐의 본질과 기능에 대한 엄격한 분석으로 출발하여, 이 책은 매우 정교한 일련의 근사적 묘사들을 통해, 한 종류의 화폐만이 존재하지만 은행 시스템은 존재하지 않는 단순한 상황에서의 화폐의 가치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병렬적 통화(parallel currency)와 외환현상의 분석, 그리고 현대의 은행제도의 문제와 신용창출이 경제의 자본구조와 안전성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광범위한 논의를 모두 다루고 있다. 유럽 대륙의 경제학자 서클들에서 이 책은 화폐금융의 주제에 대한 표준적인 교재로 오랫동안 간주되고 있다. 영어권 국가들에서도 이 영역본이 비슷한 역할을 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나는 논리적 일관성과 현대 경제분석의 힘에 대해 이 책만큼 강렬한 인상을 남기는 저작을 별로 보지 못했다.

그러나 화폐와 신용이라는 주제를 체계화한 것이 이 저술의

유일하고도 주요한 장점이라고 생각한다면, 이는 커다란 실수가 될 것이다. 이 저술에서 처음으로 도입된 너무나 많은 명제들이 출판된 지 20여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는 현대 화폐이론의 공통된 자산이 되고 있는 중이어서, 영국 독자들은 이제 처음으로 이 책을 접하게 되면, 이 책이 (화폐와 신용에 관련된) 경제학적 지식에 보탠 독창적 기여를 간과하기 쉽다. 그의 기여들은 현재 논의에서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것 대다수가 벌어지게 된 단초가 되었다. 1912년에 누가 강제저축(forced saving), 균형이자율과 화폐이자율의 괴리, (신용의 불안정성의 결과인) 생산재와 소비재 가격들 사이의 관계들의 변화와 연계된 경기변동의 사이클에 대해 들어 보았는가? 이 개념들이 이 책에 모두 다 들어 있다. 이 개념들은 이 책에서는 예전의 문헌에서 가끔 보듯이 부차적 이슈들에 대한 부록으로 들어 있는 게 아니라, 명료하게 설명된 완전한 이론적 시스템의 핵심적 요소로서 구비되어 있다. 저자는 종전(終戰) 직후 기간의 대규모 인플레이션과, 그리고 그 이후에는 전(全) 세계가 고통을 겪고 있는 불황을 야기한 사건들 등을 통해 그의 이론체계가 풍부하게 입증되고 있음을 목격하였다. 그는 자신의 이론이 옳다는 어느 정도는 '우울한' 만족을 경험하였던 것이다. 우리가 또한 간과하지 말아야 할 부분은 화폐가치이론의 보다 추상적인 부분에 대한 이 저술의 기여이다. 미세스 교수는 가치의 순수이론의 일반적 범주들에 이 화폐이론을 통합시키는 중요한 장점을 마셜과 한두 명의 경제학자들과 공유하고 있다. 그리고 이 통합의 과정에서 미세스는 불확실성과 현금보유의 크기 사이의 관련성, 그리고

미래에 대한 예측의 불가능성에 따른 화폐적 현상 등을 강조하였는데, 이런 그의 강조는 이 문제들에 대한 최근의 사색적 연구들에 가장 도움이 되고 있음이 증명되고 있다. 최근 경제학계 일각에서는 화폐수량설을 더 기계적인 형태로 퇴화시키려는 경향이 관측되고 있으며, 특히 순전히 동어반복적인 항등식의 조작을 통해 연구를 진행하려는 경향도 나타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념화가 까다로운 화폐현상에 대한 설명에서 더 큰 진보가 이루어진다면, 이것은 그런 기계적인 연구 경향에서가 아니라 분명 미제스가 택한 길을 따른 곳에서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 번역본은 1924년에 출간된 독일어 2판에 기초한 것이다. 어떤 구절들은 영국의 독자들에게 별로 큰 관심사가 아니어서 생략했으며, 순전히 독일에서의 논쟁들을 주로 다루는 장들은 부록에 배치하였다. 그러나 제3부 제6장의 정책에 대한 코멘트들은 1924년에 서술된 것을 그대로 두었다.⁴⁾ 이 책의 저자인 미제스는 번역의 모든 단계에서 관대하게 도움을 주었으며, 특별히 1924년 출간 이후 출현한 문제들에 대해 그의 견해를 개괄하는 서문을 써 주는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 부록 B는 서로 다른 종류의 화폐들을 지칭하기 위해 사용된 기술적(영어) 용어들에 대응

4) 한 가지 시제상의 변화를 제외하고는 그대로이다. 독일어 제2판에서 저자는 제3부의 마지막 장의 첫 번째 부분에서 그 부분에서 언급하고 있는 시기가 이 책이 처음으로 저술된 1912년 무렵임을 유의하고 읽어야 한다는 주석을 달고 있다. 현재 영역본에서는 이 주석이 386면에 다시 나와 있기는 하지만, 있을 수 있는 독자들의 오해를 피하기 위해 관행이나 상황들(특히 제4절과 제8절)이 과거시제로 묘사되고 있다(p.386의 377 주석, p.390의 주석을 보라).

하는 독일어 원어를 기록하고, 정확하게 대응되는 영어가 존재하지 않는 용어에 대한 번역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라이오넬 로빈스

런던 정경대(London School of Economics)

1934년 9월.

화폐금융정책에 관련된 질문들이 취하는 구체적인 궤모습은 매달, 매년 변한다. 그러나 이런 변화 속에서도 우리로 하여금 이 질문들을 다룰 수 있게 해 주는 이론적 도구는 변화하지 않는다. 사실 경제학의 가치는 우발적인 잔가지들을 쳐내고 당면한 문제들의 진정한 중요성을 인식하도록 해 주는 데 있다. 특정한 조치의 즉각적인 효과를 파악하는 데에는 보통 그렇게 깊은 경제학의 지식이 필요하지 않다.

이 책의 독일어 2판이 출간된 지도 10년이 흘렀다. 이 기간 중 이 세계의 통화와 은행과 관련된 문제들의 궤모습은 완전히 바뀌었다. 그러나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예전과 마찬가지로 똑 같은 근본적 이슈들이 경합을 벌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예전에는 영국이 파운드화의 금 가치를 한 번 더 전쟁 이전의 수준으로 인상시키려고 하는 중이었다. 사실 가격과 임금은 이미 파운드화의 낮아진 가치에 적응을 하였다. 그리고 만약 전쟁 이전 패리티(parity)로 파운드화를 다시 고정시킬 경우, 이로 인해 가격의 하락이 초래되고, 그래서 실제 임금과 자유시장에서였더라면 지불되었을 임금 사이의 불균형이 확대됨으로써 기업가들의 처지가 더욱 어려워지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영국의 종전 이전 수준으로의 파운드화 재확립 정책은 이런 사실들을 모두 간과하고 있었다. 물론 그와 같은 정책의 의심할 여지없는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패리티를 재확립하려고 시도하는

데에는 몇 가지 이유들이 있다. 그와 같은 정책에 대해 장점과 단점들을 적절하게 고려한 다음 정책결정이 이루어졌어야 한다. 대중들이 충분히 불가피한 부작용들에 대해 미리 알게 된 상태가 아님에도 그와 같은 조치들이 취해짐에 따라 금본위제에 대한 반대를 엄청나게 강화시켰다. 그리고 그 정책의 해악들이라고 비난을 받았던 것들은 금본위제의 부활 그 자체에 따른 것이 아니라, 순전히 영국에서의 가격들과 임금들에 상응하는 것보다 더 높은 수준에서 파운드화의 금 가치를 고정시킨 데 따른 것일 뿐이었다.

1926년에서 1929년까지 세계의 이목은 주로 미국의 번영의 문제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었다. 미국의 번영은 과거 모든 붐들과 마찬가지로 신용의 팽창에 의해 초래되었지만, 당시에는 그 번영이 영원히 지속될 것처럼 간주되고 있었으며, 경제학자들의 경고는 무시되었다. 1929년에 경제의 물결이 방향을 전환하고 그 후 심각한 경제위기가 이어졌지만, 이는 경제학자들에게는 놀랄 일이 아니었다. 그들은 이런 일들이 일어날 정확한 날짜는 예측할 수 없었지만, 이런 사태가 일어날 것을 내다보고 있었다.

현 상황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우리가 불황의 시기가 그 뒤를 이을 신용팽창의 시기를 방금 지나왔다는 사실이 아니라, 정부들이 이런 상황들에 대처하는 방식이다. 거의 모든 정부들이, 가격들의 일반적 하락의 와중에서 화폐임금의 하락을 방어하기 위해, 그리고 위기에 따라 없어졌을 사업들을 지탱하기 위해, 한편으로는 공공자원들을 고용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공공

사업계획에 의해 경제활동을 인위적으로 자극하는 노력들을 취하였다. 이는 예전의 불황기에 작동했던 힘들—즉, 가격과 임금을 현재의 환경에 맞게 조정되게 함으로써 경제회복의 길을 닦는 기능을 하는 (시장에서 작동하는) 힘들—을 제거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임금들의 안정화는 실업의 증대를 의미할 뿐만 아니라—경제위기의 증상(症狀)인—가격들과 비용들의 간격의 심화, 생산과 판매의 간격의 심화를 의미한다는 불편한 진실은 무시되었다.

이런 태도는 순전히 정치적인 고려에 의해 강요된 것이다. 정부들은 임금소득을 버는 국민들 대다수를 불안하게 하고 싶지 않았다. 그들은 고임금을 가장 중요한 경제적 이상으로 간주하고, 가격들이 하락하고 있는 동안에도 노조의 정책과 정부의 간섭을 통해 임금수준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고 믿는 원칙에 감히 반대하지 않았다. 그리고 정부들은 그래서 임금수준에 영향을 주는 압력들을 완화시키거나 전부 제거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였다. 노조가 더 낮은 임금을 제시하는 것을 막기 위해 늘어가는 실직상태의 사람들에게 실업수당을 주었으며, 중앙은행이 이자율을 올리지 못하게 하였고, 중앙은행이 신용을 제약하고 위기국면이 지닌 정화기능이 자유롭게 펼쳐지도록 하는 것을 방해하였다.

정부가 더 이상 줄일 수 없는 것으로 간주하는 지출을 충족시키기 위해 필요한 자원을 과세(課稅) 혹은 기채(起債)를 통해 획득하기가 어렵다고 느끼거나 현행 수입을 초과하는 지출을 줄이지 못할 때, 정부들은 불태환(不兌換)지폐의 발행과 이에 따

른 화폐가치의 하락에 의존하였다. 이는 유럽과 미국의 역사에서 여러 번 벌어졌던 일이다. 그러나 최근의 평가절하의 실험은 결코 재정부족을 메우려는 이유에서가 아니었다. 최근 화폐단위의 금 함량을 감소시킨 것은 국내의 임금수준과 물가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 그리고 국내산업이 국제교역에서 해외 경쟁자들에 비해 유리하도록 만들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졌다. 그와 같은 조치에 대한 요구는 유럽과 미국에서 별로 새로운 것이 아니었다. 그러나 예전의 경우에는 모두 소수의 중요한 예외를 제외하고는, 이러한 조치를 요구한 사람들은 그런 조치를 성사시킬 만큼의 권력을 지니지 못했다. 그러나 영국은 파운드의 과거 금(金) 함량을 포기함으로써 이를 실행하기 시작하였다. 은행금리를 인상하는 관행적이며 절대 실패하는 법이 없는 처방을 채택함으로써 금(金) 가치를 유지하는 대신, 영국 정부와 의회는 은행금리 4.5퍼센트와 함께, 과거의 법정 패리티에서의 지폐의 상환을 정지하기를 선호하였으며, 그래서 스테링화(貨) 가치의 상당한 하락을 초래하였다. 그 목적은 영국에서의 가격들의 추가적인 하락을 막는 것이었으며, 무엇보다도 임금의 하락이 필요한 상황을 피하려는 것이었다.

다른 나라들, 특히 미국이 영국의 사례를 따르기 시작하였다. 루스벨트 대통령은 달러의 금 함량을 감소시켰는데 이는 그가 임금의 하락을 방지하고자 했기 때문이며 1926~1929년 사이 번영하던 시기의 물가수준을 회복하고자 했기 때문이었다.

중앙유럽에서 영국의 사례를 따른 첫 번째 국가는 체코슬로바키아 공화국이었다. 전쟁 직후 체코슬로바키아는 국가 위신

(威信)을 이유로, 별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채 크로네의 가치를 인상하는 영국의 정책을 따랐다. 통화가치의 인상이 체코의 수출을 방해하며, 아울러 외국제품의 수입을 촉진하고, 은행신용의 방법으로 그들의 운영자본의 상당 부분을 확보하는 기업들의 채무이행 능력을 해친다는 사실을 깨닫고서야 체코는 이 정책을 멈추었다. 그러나 1934년 첫 몇 주 동안 크로네의 골드 패리티는 채무를 진 기업의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그리고 임금의 하락을 방지하고 수출을 촉진하며 수입을 제한하려는 목적에서 인하되었다. 오늘날 세계의 모든 국가에서 화폐단위의 구매력이 유지되어야 하는지 감소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만큼 열띤 논쟁을 야기하고 있는 주제는 거의 없다.

필요한 모든 것은 구매력을 예전 수준보다 인하하는 것 혹은 심지어 예전 수준 이상으로 상승하지 않도록 방지하는 것이라고 보편적으로 단언하고 있음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것이 필요한 모든 것이라면, 왜 예컨대 1913년 수준이 아니라 1926~1929년의 수준이 목표로 삼는 예전 수준이 되어야 하는지 이해하기가 매우 어렵다.

민약 인덱스 수치들이 우리에게 통화정책을 세우는 데 확실한 기초를 제공하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고 정부와 정당의 변화하는 경제 프로그램들로부터 통화정책을 독립적으로 만든다고 생각될 수만 있다면, 아마도 나는 이 책에서 내가 말하고 있는 인덱스 수치들을 계산하는 특정한 방법을 유일하게 과학적으로 정확한 방법이며, 다른 모든 방법들이 과학적으로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던 것을 참고할 수 있을지 모른다. 인덱스 수치를 이

용해 구매력을 측정하는 데에는 무수히 많은 방법이 있을 수 있으며, 그 어느 한 방법도 특정 관점에서 볼 때에는 옳다고 볼 수 있지만, 그러나 모든 각각의 인덱스 수치 측정방법은 앞의 관점들과 다를 바 없이 똑같이 정당화될 수 있는 또 다른 관점들에서 볼 때 또한 틀린 것으로 볼 수 있다. 각 계산방법은 다른 계산방법들과는 다른 계산결과를 만들어 내기 때문에, 그리고 각 결과는, 만약 실제 조치들의 기초가 된다면 특정 이익을 더 크게 만들고 다른 이익들에 대해서는 해를 끼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각 집단의 사람들은 그 집단의 이익에 가장 잘 봉사하는 방법들을 적합한 방법이라고 선언할 것이다. 구매력 조사이 통화정책의 적합한 관심사로 선언되는 바로 그 순간, 이 구매력이 고정될 수준에 대한 문제는 가장 중요한 정치적 중요성을 가지게 될 것이다. 금본위제 아래에서 화폐가치의 결정은 금 생산의 사업성에 달려 있다. 일부 사람들에게는, 이 사실이 금본위제를 불리하게 하는 단점으로 보일지 모른다. 그리고 이 사실이 확실히 경제활동에 계산할 수 없는 요인을 도입하는 것으로 보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품의 가격들이 화폐 측면으로부터 기인해서 급격하고도 갑작스럽게 변화하게 하지는 않는다. 지난 세기 동안 우리가 경험했던 가장 큰 화폐가치의 변동은 금 생산의 상황으로부터 기인하지 않았으며, 정부들과 발권은행들의 정책들로부터 기인한 것이었다. 화폐가치가 금의 생산에 의존하는 것은 적어도 순간적인 정치로부터 독립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통화를 확정적이고 불변적인 금 패리티로부터 분리시키게 되면서 화폐가치의 결정문제는 정치의 장난감이 되고 말았

다. 오늘날 우리는 화폐가치에 대한 고려들이 모든 여타 고려들을 국내 혹은 국제 경제정책에서 뒷마당으로 몰아내고 있음을 목격한다. '경제정책'이 기본적으로 화폐의 구매력에 대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이해되는 상황으로부터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상황이 아니다. 우리는 통화단위의 현재의 금 함량을 유지해야 할 것인가, 아니면 금 함량을 감소시켜야 할 것인가? 이것이 현재 모든 유럽과 미주 대륙의 국가들의 경제정책에서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 아마도 우리는 이미 문명세계의 국가들이 수십 년 동안 증가하는 적의를 가지고 벌인 상업전쟁에서 (더구나 자기기만에 근거한) 임시적인 이득들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통화 단위의 금 함량을 줄이는 경주의 와중에 있지만 이로 인해 국가들이 국민들의 후생에 재난적인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이 상황을 금으로부터의 해방이라고 부르는 것은 결코 만족스러운 명명이 아니다. 지난 수년 사이에 금본위제를 포기한 그 어떤 국가도 금의 국내 혹은 국제 거래에서 교환의 매개로서의 중요성에 영향을 주지 못하였다. 그런 조치들의 주요한 목표는 명목임금—때로는 가격—의 안정성을 가장 크게 확보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실제로 벌어진 일은 금으로부터의 이탈이 아니라 단지 통화단위의 과거 법정 금 패리티로부터의 이탈이었으며, 그리고 무엇보다 채권자의 부담으로 채무자의 부담의 완화였다.

위에서 묘사한 이유들로 그들 통화들의 금 가치를 절하시켰던 나라들 이외에도, 은행권의 유통을 지나치게 팽창시켜서 나타난 그들 화폐의 금으로 평가된 가치의 절하를 인정하기를 거부하고, 그 나라의 통화가 법정 금 가치를 여전히 지니고 있다

는 현실과 다른 허상을 유지하는, 그런 나라들도 있다. 이런 허상을 지지하기 위해 그 나라들은 수출업자들로 하여금 그 통화의 법정 금 가치에서—즉, 상당한 손실을 보고—외환을 팔게 하는, 외환규제를 실행하였다. 그와 같은 상황에서 중앙은행들에 판매되는 외국 화폐의 수량이 크게 감소한다는 사실은 더 설명할 필요가 거의 없을 것이다. 이 나라들에서는 이런 식으로 ‘외환 부족’이 발생한다. 외환은 사실 처방된(규제된) 가격에서는 획득할 수 없으며, 중앙은행은—시장가격을 지불하기를 거절하고 규제가격을 지불할 것이므로—외환이 적정(시장)가격에서 거래되는 불법적인 시장에 의존하지도 못하게 된다. 이 외환부족 사정은 이 나라에서 외국으로의 자금이전의 애로나 외국으로의 이자나 상환을 금지하는 핑계로 이용된다. 그리고 이로 인해 실질적으로 국제신용은 정지상태에 이르게 되며, 과거 부채에 대한 상환금은 매우 불만족스럽게 지불되거나 전혀 지불되지 않게 되고, 이렇게 되면 새로운 국제 신용거래들은 이제 진지한 고려의 주제가 되기 어려울 것임은 쉽게 예측될 수 있다. 어떤 정부도 외국으로의 부채지불을 금지하는 것이 언제나 ‘외환정책’이라는 이유로 정당화될 수 있다는 원칙이 점차 수용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해외로 자금을 빌려 주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에서 그리 멀리 떨어져 있는 상황이 더 이상 아니게 되었다. 이 외환정책의 진정한 의미를 이 책에서는 철저하게 논의하고 있다. 이 서문에서는 단지 이 정책이 국제 경제관계에 미치는 해악이 지난 50~60년 동안 보호주의와 세계대전 동안 취해진 조치들이 미쳤던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는 사실을 지

적하고자 한다. 국제신용의 질식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모든 정부의 재량 아래 놓여 있는 이 원칙—즉, 정부 자신의 행동에 의해 야기된 외환 부족을 내세워 외국으로의 이자지불을 정지시키고 국민들의 이자와 상환지급을 금지시키는 원칙—을 무효화하는 것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을 것이다. 이것이 성취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각 국가가 입법을 통해 국제 신용거래에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을 제거하는 것인데, 이런 각국의 행동을 제약할 특별한 국제적 규칙을 제정하여 이것이 국제연합(League of Nations)에 의해 보장되고 실제로 집행되게끔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조건들이 창출되지 않는다면, 새로운 국제신용의 공여는 거의 가능하지 않을 것이다. 모든 국가들은 국제신용의 회복에 동일한 이해를 가지고 있으므로, 유럽이 전쟁과 혁명을 통해 더 이상 침체되지 않는다면, 아마도 다음 수년 동안에 이런 방향으로의 시도들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와 같은 미래의 합의들의 기초가 될 화폐 시스템은 금에 기초한 시스템이다. 금은 화폐정책의 가장 이상적 기초는 아니다. 모든 인간의 창조물이 그런 것처럼 금본위제도 여러 단점들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그러나 현존하는 상황들 아래에서는, 현재 나타나고 있으며 또 미래를 예측해 보는 한에 있어서도, 정당정치와 정부 간섭의 변화무쌍한 영향력으로부터 화폐 시스템을 해방시킬 다른 방법들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런 영향력들로부터 자유롭지 않은 그 어떤 화폐 시스템도 신용거래의 기초가 될 수는 없을 것이다. 금본위제를 비난하는 사람들은 19세기 문명을 서구 유럽의 과거 자본주의 국가들을 넘어 전파시

키고 이 서구 국가들의 부가 나머지 국가들의 발전에 이용될 수 있도록 만든 것이 금본위제였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유럽의 조그만 부분이었던 이 소수의 자본주의 국가들의 저축은 전 세계의 현대적 생산설비가 존재하게끔 만들었다. 만약 채무국들이 그들의 현재의 부채를 상환하기를 거절한다면, 그들은 분명 당장의 처지를 개선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통화문제에 대한 논의에서 채권국(債權國)들의 이익들 간의 대립적 입장, 자본이 잘 공급되는 국가들과 그렇지 못한 국가들 사이의 충돌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를 잘못된 결론으로 이끌 수 있다. 그들의 생산자원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외국자본을 수입해야 하는 가난한 국가들로서는 국제신용의 질식은 너무나 위험한 일이 아닐 수 없다.

현재 모든 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화폐와 신용의 시스템의 혼란은, 금본위제도의 부적절성에 기인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 시대의 화폐 시스템이 주로 비난받고 있는 점인 지난 5년 동안의 가격들의 하락은 금본위제의 단점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붕괴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신용팽창의 불가피한 결과이다. 그리고 그 치유책으로 주로 주장된 것은, 임시적인 붐으로 아마도 거의 확실하게 이끌겠지만, 이에 상응하는 심각한 위기로 끝날 운명인 또 한 번의 신용팽창에 불과하다.

화폐와 신용의 시스템의 어려움들은 세계가 현재 겪고 있는 큰 경제적 어려움의 일부일 뿐이다. 고장이 난 것은 화폐와 신용의 시스템뿐만 아니라 전 경제 시스템이 그렇다. 지난 수년 동안 모든 국가들의 경제정책은 19세기에 국가의 복지를 쌓아

올렸던 원칙들과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 노동의 국제분업은 악(惡)으로 간주되고 있으며, 사람들은 먼 과거의 자립경제로의 복귀를 요구하고 있다. 외국재화의 수입은 그 어떤 것이든 어떤 비용을 치르더라도 피해야 할 불행한 일로 보도되고 있다. 힘센 정당들이 지구상의 평화는 바람직하지 않으며, 전쟁만이 진보를 의미한다는 복음을 엄청나게 정열적으로 선포하고 있다. 그들은 전쟁을 합리적인 국제적 교류의 한 형태로 묘사하는 정도로 만족하지 않고, 국내 정치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적대자들의 억압을 위해 무력을 사용할 것을 추천하였다. 과거 자유주의 경제정책은 최고의 노동생산성을 확보할 수 있는 지역에 모든 산업이 입지되는 데 장애물을 만들지 않으려고 고통을 수반한 노력을 아끼지 않았지만, 요즘에는 생산조건이 불리한 곳에 기업을 설립하려는 노력이 마치 정부의 지원을 받을 가치가 있는 애국적인 행동으로 치부되고 있다. 화폐와 신용 시스템에 대해 그와 같은 왜곡된 경제정책들의 불만족스러운 결과를 없애 줄 것을 요구한다는 것은 불공평한 처사이다.

단순히 화폐금융 시스템을 바꾸는 것으로 왜곡된 경제정책과 금융정책의 결과들을 없애려고 하는 모든 정책제안들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인식에 바탕을 둔 것이다. 화폐는 교환의 매개에 불과하며, 재화와 서비스의 교환이 화폐의 도움으로 인해 물물 교환에 의해 가능했을 때보다 더 쉽게 수행되면 그 기능을 완수한 것이다. 화폐 측면의 경제개혁을 수행하려는 시도들은 유통 신용의 팽창에 의해 경제활동을 인위적으로 자극하려는 것이 이상 이하도 될 수 없다. 그리고 이런 신용의 팽창은—이 점은 끊임

임없이 강조되어야 하겠지만—필연적으로 위기와 불황으로 이어지게 된다. 반복되는 경제위기들은, 경험을 통해 교훈들을 배우고 경제학자들의 경고들에 귀를 기울여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신용을 통해 경제활동을 자극하려는 시도에 따른 결과에 불과하다.

이런 관점은 영국의 불멸의 영광인 고전학과 경제학자들의 원칙들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때로는 ‘정통적’ 혹은 ‘골수적’인 관점으로 명명되기도 한다. 나는 정통적이라거나 골수적이라고 해서 부끄러울 이유는 전혀 없다고 믿고 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원칙이 정통적인지 아니면 최신 유행을 따른 것인지 여부가 아니라 그것이 진실인지 거짓인지 여부이다. 그리고 나의 연구들이 이끌고 갈 결론, 즉 신용의 팽창은 자본의 대체물이 될 수 없다는 결론에 대해 아마도 일부 사람들은 불편하게 여길지 모른다. 그러나 나는 이 결론이 틀린다는 그 어떤 논리적인 증명도 제시될 수 있다고 믿지 않는다.

루트비히 폰 미제스
비엔나, 1934년 6월.

이 책의 초판이 12년 전에 발간되었을 때, 국가와 그 정부들은 세계대전이라는 비극적 사업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들은 무기공장에서 무기를 생산하고 군수품을 비축하면서 전쟁 이데올로기의 선포와 열광적인 보급을 통해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다. 이 전쟁 이데올로기에서 가장 중요한 경제적 요소는 인플레이션주의였다.

나의 책도 인플레이션주의의 문제를 다루었으며, 이 원칙의 부적절성을 보여 주려고 노력하였다. 그리고 곧 닥칠 미래에 우리의 화폐 시스템을 위협할 변화들에 대해 언급하였다. 그래서 화폐적 재앙이 찾아올 길을 준비하고 있던 이들은 이 책을 열정적으로 공격하였다. 이 책을 공격했던 사람들 중 일부는 얼마 지나지 않아 매우 큰 정치적 영향력을 획득하였다. 그들은 그들의 원칙을 실천에 옮길 수 있었고, 그들 국가들에서 인플레이션주의를 실험할 수 있었다.

전쟁과 전후(戰後) 시기에 직면해서는 경제학이 적용될 수 없다는 흔히 듣는 단언만큼이나 왜곡된 생각도 찾기 어렵다. 그와 같은 단언을 하는 것은 경제이론의 문헌에 무지하다는 의미이며, 경제학을 역사학과—경험학과—실증학과와 고수자(固守者)들의 저술에서 발견되는 원칙들을 경제학과 혼동하는 것을 뜻한다. 경제학자들보다 경제학의 단점들을 잘 의식하고 있는 사람들은 없으며, 누구보다도 경제학자들이 경제학과 현실의 간

격과 경제학이 성취할 수 없는 것을 가장 아쉬워한다. 그러나 지난 10년간 정치학자들이 필요했던 모든 이론적 지침은 현존하는 경제원칙으로부터 배울 수 있었던 것들이다. 과학적 수고를 해서 얻어진, 그래서 확인되고 수용된 결과들을 “살과 피도 없는 추상”(bloodless abstraction)이라고 조롱하고 부주의하게도 이를 기각한 사람들은 경제학이 아니라 자신들을 비난해야 한다.

어떻게 최근의 경험이 경제학의 수정을 불가피하게 한다고 단언할 수 있는지도 마찬가지로 이해하기 어렵다. 우리가 경험한 엄청난고도 급작스런 화폐가치의 변화는 통화의 역사에 친숙한 사람에게는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다. 화폐가치의 변동이건 그에 따른 사회적 결과이건 정치가들이 이 두 가지에 대해 반응했던 방식이건 경제학자들에게는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다. 이런 경험들이 많은 국가주의자들에게는 새로운 것이 사실이다. 이는 아마도 이 신사들이 고백하는 역사에 대한 깊은 지식은 진정한 것이 아니라 실은 그들의 중상주의적 선전을 위장하는 데 불과함을 보여 주는 최선의 증거일 것이다.

이 저술이, 비록 그 본질에 있어서는 변하지 않았지만, 초판에 비해 다른 형태로 출판된 것은 새로운 사실들을 예전의 원리들로 설명할 수 없어서와 같은 이유 때문이 아니다. 이 책의 초판이 출간된 후 12년 동안 경제학은 무시할 수 없는 커다란 진보를 이루었음은 사실이다. 그리고 교환학(交換學, catallactics)의 문제들에 대한 나의 연구들은 많은 점들에서 초판에서의 결론과는 다른 결론으로 나를 이끌었다. 오늘날 이자율이론에 대한 나의 태도는 1911년 당시와는 다르다. 그리고 비록 초판을 준비할 때

와 마찬가지로 재판을 준비하면서, 나는 (간접교환의 이론 영역의 외부에 속하는) 이자율 문제에 대한 취급을 연기하지 않을 수 없었으나, 나는 책의 어떤 부분에서는 그 문제에 대해 언급할 필요가 있었다. 다시 한 번 경제위기의 문제에 대한 내 의견은 하나의 측면에서 변화하였다. 내가 통화학과(Currency School)의 원칙에 대한 더 정치한 설명과 지속으로서 내세웠던 이론은—이것이 초판에서는 직접교환의 이론에서 사용하는 용어들로 설명하는데 대한 하나의 보충적 설명이라고 생각했었지만—그 자체로 경제위기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

더 나아가 정학(靜學)과 동학(動學)의 구분은 화폐이론을 소상하게 설명하는 데 불가결하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다. 초판을 쓰면서, 나는 독일 독자에게 그 어떤 오해도 불러일으키지 않기 위해 이런 구분을 하지 않으면서 저술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광범한 독자들이 발표된 논문을 주시하는 심포지엄에서 발표된 한 논문에서 알트먼(Altmann)은 현대 미국학과의 용어들과 다른 의미에서 화폐이론에 정학과 동학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였다.⁵⁾ 그 이후 현대 이론에서 정학과 동학의 구분의 중요성은, 비록 경제학의 발전을 매우 세세하게 추적해오지 않았던 사람들이 이더라도 이제 거의 모든 이에게 아마 익숙해졌을 것이다. 이제 알트먼의 용어들과 혼동될 수 있다고 두려워할 필요 없이 그 용어들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나는 나의 주장을 명

5) Altmann, "Zur deutschen Geldlehre des 19. Jahrhunderts," in *Die Entwicklung der deutschen Volkswirtschaftslehre im 19. Jahrhunderts*, Schmoller Festschrift (Leipzig, 1908).

료화하기 위해 화폐가치의 변화가 주는 사회적 결과들에 대한 장을 부분적으로 수정하였다. 초판은 화폐정책에 대한 장은 매우 긴 역사적 논의들을 포함하고 있다. 최근의 경험들은 이제 이에 대한 논의들 없이도 최근의 경험들을 가지고 이 책의 핵심적 주장을 충분히 예시적으로 설명할 수 있게 되었다.

오늘날의 은행정책의 문제점들을 다루는 부분이 추가되고, 국가주의자들의 화폐이론과 정책이 간략하게 검토되었다. 몇 동료들의 권유에 부응하여, 몇 년 전 출판된 화폐이론의 분류에 대한 짧은 에세이(Vol.44, *Archiv für Sozialwissenschaft und Sozialpolitik*)를 수정하고 확장한 것을 포함시켰다.

그 밖의 것에 대해서는 홍수처럼 쏟아진 화폐와 신용의 문제들에 대한 새로운 출판물들을 비판적으로 다루는 것이 나의 목적이 전혀 아니었음을 밝히고자 한다. 스피노자가 말했듯이 과학에서 “진리는 그 자체의 속성과 오류에 두 가지 모두를 증언한다.” 나의 책은 나 자신의 관점들을 확립하고 나의 관점들에 대한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만 비판적 주장들을 시도하고 있다. 그 외 최근의 출판물들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생략한 것은 최근에 출판된 뛰어난 두 저술에서 이런 검토가 훌륭하게 수행되었다는 점에서 쉽게 정당화될 수 있을 것이다.⁶⁾

6) Döring, *Die Geldtheorien seit Knapp*, 1st ed.(Greifswald, 1921; 2nd ed. Greifswald, 1922); Palyi, *Der Streit um die Staatliche Theorie des Geldes*(Munich and Leipzig, 1922), (그리고 *Schmoller's Jahrbuch* 45, Jahrgang에도 수록). 또한 스튜어트의 다음의 매우 날카로운 분석에 대해서도 참고, G. M. Verrijn Stuart, *Inleiding tot de Leer der Waardevastheid Van het Geld*(Gravenhage, 1919).


신용정책의 문제들을 다루고 있는 제3부의 결론에 해당하는 장은 초판 그대로 두었다. 그 주장들은 1911년의 은행업의 지위와 관련된 것이지만 이론적 결론들의 중요성은 변한 것 같지 않다. 이 주장들은 이 재판의 결론부에 해당하는 오늘날의 은행정책의 문제들에 대한 위에서 언급한 논의들에 의해 보완되고 있다. 그러나 이 추가적 논의에서조차 절대적으로 유효하다고 주장되고 있는 그런 제안들은 찾을 수 없을 것이다. 추가적 논의의 목적은 단지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문제의 본질을 보여 주려는 데 있을 뿐이다. 각 개별 경우에 가능한 해결책들 중에서 선택하는 문제는 각 해결책의 장단점을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에 달려 있는데, 이들 간의 결정은 경제학이 아닌 정치의 기능이다.

루트비히 폰 미제스
비엔나, 1924년 3월.

제1부

화폐의 속성


1. 화폐 사용을 위한 일반적인 경제적 조건

 재화와 서비스의 자유로운 교환이 이루어지지 않는 곳에서는 화폐가 필요하지 않다. 노동의 분업이 순전히 가내(家內) 문제이고 생산과 소비가 한 가정 안에서 완성되는 사회에서는 독립된 사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화폐는 쓸모가 없을 것이다. 노동의 분업에 기초한 경제라고 하더라도, 만약 생산수단이 사회화되어 있어 생산에 대한 통제와 최종재에 대한 분배가 특정한 기구의 손에 장악되어 있고 개인들이 그들에게 할당된 소비재들을 교환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면, 화폐는 여전히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화폐 현상은, 생산이 노동의 분업에 기초해 있고, 사적 재산 속에 1차 재화(소비재)뿐만 아니라 고차 재화(생산재)도 포함되어 있는 경제 질서를 전제로 하고 있다. 그와 같은 사회에서는 생산에 대한 체계적인 중앙집권적인 통제가 존재하지 않는다. 고차 재화인 생산수단을 중앙집권적으로 처분하지 않는 사회에서는 생산에 대한 중앙집권적인 통제도 상상할 수 없기 때문이다. 생산은 '무정부적'이다. 무엇이 생산될 것인지, 어떻게 생산될 것인지는 무엇보다 먼저 생산수단의 소유자들에 의해 결정

된다. 이 생산자들은 그들 자신의 필요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생산한다. 그래서 이들은 가치평가를 할 때, 그들 자신이 그 생산물에 대해 부여하는 사용가치만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다른 구성원들이 가치평가를 통해 이 생산물에 부여하는 사용가치를 함께 고려한다. 생산과 소비를 서로 맞추어 나가는 과정은 시장에서 벌어지는데, 여기에서 서로 다른 생산자들은 재화와 서비스들을 협상을 통해 서로 교환하기 위해 만난다. 화폐의 기능은 교환의 공통매개물로 작용함으로써 시장에서의 경제활동을 용이하게 만들어 주는 데 있다.

2. 화폐의 기원

 간접교환은 교환의 매개가 개입되느냐 여부로 직접교환과 구별된다.

A와 B가 상품 m 과 n 몇 단위들을 서로 교환한다고 해 보자. A가 상품 n 을 획득하는 것은 상품 n 이 A에게 지닌 사용가치 때문이다. 그는 상품 n 을 소비하고자 한다. B도 마찬가지이다. 그는 상품 m 을 그의 당장의 사용을 위해 획득한다. 이것이 직접교환의 경우이다.

시장에 두 명 이상의 사람과 두 개 이상의 재화가 존재한다면 간접교환도 가능하다. A가 상품 p 를 획득하는 것은 소비를 위해서가 아니라, p 를 제공하고 그가 소비하려는 두 번째 상품

q 를 획득하기 위해서일 수 있다. 이제 이렇게 가정해 보자. A가 상품 m 을 두 단위 가져오고, B는 상품 n 을 두 단위, 그리고 C는 상품 o 를 두 단위 가져왔으며, A가 상품 n 과 상품 o 한 단위씩을 획득하고자 하며, B는 상품 o 와 상품 m 한 단위씩을, 그리고 C는 상품 m 과 상품 n 한 단위씩을 획득하고자 한다. 이 경우에도 만약 m, n, o 각 단위가 다른 상품의 한 단위와 교환되는 방식으로 A, B, C가 세 상품에 대해 주관적 가치평가를 내리고 있다면 직접교환이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만약 이 가정 혹은 유사한 가정이 성립되지 않는다면, 그리고 모든 교환 거래 중 엄청나게 많은 경우 이 가정이 성립되지 않는다면, 간접교환이 필요하게 된다. 직접 필요를 충족시켜 줄 재화에 대한 수요는 대부분 다른 재화들과 다시 교환될 재화에 대한 수요로 대체될 것이다.⁷⁾

예를 들어 상품 p 는 상품 q 의 보유자들만 필요한 반면, 상품 q 는 상품 p 의 보유자들은 필요하지 않고, 제3의 상품 r 의 보유자들이 필요하며, 이번에는 상품 r 은 p 의 보유자들이 필요한 단순한 사례를 가정해 보자. 이 사람들 사이에서는 직접교환은 일어날 수 없다. 교환이 이루어진다면 간접적인 방식으로만 가능할 것이다. 상품 p 의 보유자들이 그것을 q 와 교환한 다음, q 를 그들이 직접 소비하려는 상품 r 과 교환한다면, 이것이 간접교환의 사례일 것이다. 수요와 공급이 수량적으로 서로 일치하지 않을 때, 여러 단위로 분리될 수 없는 어떤 현 재화를 가지고 이를

7) Wicksell, *Über Wert, Kapital und Rente*(Jena 1893; London 1933), pp.50f.

여러 사람들이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재화들과 교환해야 하는 경우는 (앞의 단순 사례에 비해 좀 더 복잡하지만) 간접교환의 필요성 면에서 앞의 단순 사례와 본질적으로는 전혀 다르지 않다.

간접교환의 필요성은 노동의 분업과 욕구들이 세분화될수록 더욱 절실해진다. 오늘날과 같은 경제발전의 단계에서는, 직접 교환이 가능하면서 실행되는 사례는 이미 매우 예외적이 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에도 직접교환은 가끔씩 실행된다. 현물급여의 지급이 그 사례이다. 한편으로는 고용자가 자기 자신의 직접적인 필요의 만족을 위해 남의 노동을 사용하고, 생산된 재화를 급여로 주면 되고, 이것을 다시 교환을 통해 (임금이 지불될 현물인) 또 다른 재화들을 확보할 필요가 없는 한,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피고용자가 그가 받은 재화를 소비하면 되며, 이것을 다시 판매할 필요가 없는 한에 있어서는, 이 현물급여는 직접교환에 해당한다. 그러한 임금의 현물지급은 아직도 농업분야에서는, 비록 그 중요성은 농업분야에서도 자본주의적 경영방식의 확장과 노동분업의 발달에 따라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지만, 여전히 광범위하게 실행되고 있다.⁸⁾

8) 대부분의 경우 간접교환이 필요하다는 결론은 지극히 명백하다. 독자들이 예상했겠지만, 이는 경제학의 초창기 발견들 가운데 하나이다. 이 사실은 다음과 같은 파울루스 법전(Pandects of Paulus)의 유명한 구절에 분명하게 표현되어 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당신이 가지고 있고 이번에는 당신이 취하고자 하는 것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동시에 발생하기는 쉽지 않은 까닭이다.” (Paulus lib. 33 ad edictum 1.I. pro D. de contr. empt. 18, 1). 슈페터는 화폐의 필요성이 단지 간접교환의 가정으로부터 증명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점에서 확실히 오류를 범하였다(그의 다음의 책 참고, *Wesen und Hauptinhalt der theoretischen Nationalökonomie* [Leipzig, 1908], pp.273ff.). 이 점에 대해서는 다음의 책도 참고. Weiss, *Die moderne*

그래서 시장에서는 사람들이 직접 소비에 사용하려고 재화를 수요하기도 하지만, 이와 함께 구매자가 소비에 충당하려는 것이 아니라 다음의 교환에서 처분하기 위한 목적에서 특정 재화들을 수요하기도 한다. 모든 재화들에 대해 이런 두 번째 유형의 수요가 존재하는 것이 아님은 분명하다. 어떤 개인이라도 그 자신이 사용하려는 재화의 획득이라는 최종 목적지에 더 근접하게 해 주지 않는다면 간접교환을 할 동기가 전혀 없다. 비록 간접교환이 아니면 교환을 할 수 없더라도, 그 간접교환을 통해 직접적인 개인적 이득을 전혀 얻을 수 없다면, 아무도 간접교환에 임하지 않을 것이다. 직접교환이 불가능하고, 간접교환이 개인적 관점에서 목적 없는 일이 될 때는 그 어떤 교환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개인들은 이를 통해 득을 볼 때에만, 즉 단지 그들이 획득하는 재화들이 그들이 내놓는 재화들에 비해 더 시장성이 높을 때에만 간접교환에 의존한다.

그런데 모든 재화들은 똑같은 정도로 시장성을 지니고 있지 않다. 어떤 재화들에 대한 수요는 단지 제한적이고 우발적인데 비해 다른 재화들에 대한 수요는 더 일반적이고 상시적이다. 결과적으로 첫 번째 유형의 재화들을 그들 스스로 필요한 재화들과 교환하기 위해 시장에 가져오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두 번째 유형의 재화들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에 비해 자신의 의도를 달성할 전망이 더 작다. 그렇지만 만약 그들이 상대적으로 시장성이 작은 재화들을 시장성이 큰 재화들로 교환한다면, 그들은

Tendenz in der Lehre vom Geldwert, Zeitschrift für Volkswirtschaft, Sozialpolitik und Verwaltung, Vol.19, pp.518ff.

그들의 목표에 한 발 다가갈 수 있을 것이고, 단지 직접교환만 고집하는 경우에 비해 좀 더 확실하게 또 경제적으로 자신의 목표에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방식으로 원래 가장 시장성이 높았던 재화가 교환의 공통적인 매개—즉, 다른 재화들을 파는 모든 판매자들이 가장 먼저 그들의 물품들을 교환시키고자 했던 재화, 그리고 어떤 다른 재화를 구매하고자 하는 잠재적 구매자들로서도 가장 먼저 획득하는 것이 유리했던 재화—가 되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가장 시장성이 큰 상품들이 교환의 매개가 되자마자 그 상품들과 여타 모든 재화들 사이의 시장성에 더 현격한 차이가 벌어졌으며 이런 사실이 다시 그 상품들의 교환의 매개로서의 지위를 강화하고 확장시켰다.⁹⁾

그래서 시장의 조건들은 특정 상품들이 점차 교환의 공통적인 매개로 선별되도록 이끌었다. 교환의 매개로 사용된 상품들의 집단은 원래는 컷으며 또 나라마다 달랐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축소되었다. 직접교환을 상상하기가 점차 어려워지면서 거래 당사자들은 자연히 그의 잉여 상품들을 일반적으로 더 시장성이 좋은 상품들과 바꾸려고 노력했을 뿐 아니라, 최고의 시장성을 지닌 상품들로 교환하고자 애쓰게 되었다. 사람들은 자연히 이러한 상품들 중에서도 다시 최고의 시장성을 지닌 특정 상품을 선호하였을 것이다. 간접교환에서 최초로 획득한 재화가

9) Menger, *Untersuchungen über die Methode der Sozialwissenschaften und der politischen Ökonomie insbesondere*(Leipzig, 1883), pp.172ff.; *Grundsätze der Volkswirtschaftslehre*, 2d ed.(Vienna, 1923), pp.247ff.

시장성이 높을수록, 사람들이 최종 목적을 더 빨리 달성할 가능성이 커질 것이다. 그래서 더 낮은 시장성을 가진 일련의 재화들은 비록 한때 교환의 매개로 사용되었더라도 점차 거부되고 마지막으로는 단지 하나의 재화만이 보편적으로 채택되는 교환의 매개, 즉 한마디로 화폐로서 살아남게 될 것이다.

교환의 매개의 사용에 있어, 하나의 경제재를 교환의 매개로 배타적으로 채택하는 정도로의 발전은 아직 완전하게 성취되지 않았다. 상당히 이른 시기부터—어떤 지역은 다른 지역보다 좀 더 빨리—간접교환의 확장으로 두 개의 귀금속, 금과 은이 교환의 공통적인 매개로서 사용되는 단계에 이르렀다. 그러나 화폐 목적으로 사용된 재화들의 집단이 점차 축소되는 데에는 아주 긴 단절의 시기가 있었다. 수백 년, 심지어 수천 년 동안 인류는 금과 은 사이에서 선택하지 못한 채 망설이고 있었다. 이 주목할 만한 현상의 주요 원인은 두 금속의 자연적 속성에 있다. 물리적으로 그리고 화학적으로 매우 유사한 두 금속은 인간의 필요의 충족에 거의 유사한 정도로 봉사할 수 있었다. 모든 종류의 장신구나 보석을 만들어 내는 데 한 금속이 다른 금속과 거의 다름없이 좋았다. (기술적 발견들로 인해 귀금속들의 사용범위가 상당히 확장된 것은 최근에 벌어진 일일 뿐이다.) 격리된 공동체들 각각에서, 하나의 금속 혹은 다른 금속을 유일한 교환의 공통적 매체로 선택하게 되었지만, 격리되었던 공동체들이 국제무역에 참여하면서 각 공동체의 화폐의 단일성은 오래 가지 못했다.

경제사(經濟史)는 경제적 공동체가—하나의 가계(家計)가 지닌 본래의 한계들을 처음에는 국가를 포괄함으로써 극복하고 나중


에는 전 세계를 포괄함으로써 극복해 나가는 과정을 거치면서— 점진적으로 확장되어 가는 이야기이다. 그러나 공동체가 확장될 때마다 서로 뒤섞이게 된 두 공동체들이 한 종류의 화폐를 가지고 있지 않을 때마다 종전과는 새로운 2종의 교환의 매개가 등장하게 되었다. 지구에 인류가 사는 주요 지역들이 대부분 하나의 상업지역으로 통합될 때까지는 어느 교환의 매개가 선택될지 최종적인 판정을 내리기는 불가능하였을 것이다. 그 까닭은 그런 상업지역이 형성되어야 비로소 다양한 화폐체제를 가진 다른 국가들이 그 상업지역에 참여하고 자신의 화폐체제를 그 상업지역에 맞추어 변경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만약 둘 혹은 그 이상의 경제재들이 정확하게 동일한 시장성을 가지고 있다면, 그래서 교환의 매개로서 그 어느 것도 다른 것보다 우월하지 않다면, 이는 하나의 통합된 화폐체제로의 발전을 제약할 것이다. 우리는 이 가정이 금과 은, 두 귀금속에도 적용되는지 여부를 확정하려고 시도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 의문은, 수십 년 동안 펼쳐졌던 치열한 논쟁을 통해 답을 구하려고 했던 것이지만, 화폐의 속성에 대한 이론에는 별로 중요한 의미를 지니지 않는다. 그 까닭은 교환의 매개로 사용된 재화들의 불균등한 시장성이 동기가 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화폐통합은 화폐정책으로서 여전히 매우 바람직한 목표이기 때문이다. 여러 종류의 화폐들의 동시적 사용은 너무나 불리한 점들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교환의 방법을 복잡해지게 하기 때문에, 아무튼 사람들은 틀림없이 화폐체제를 통합하려고 애썼을 것이다.

화폐이론은 여러 종류의 화폐들이 동시에 기능하고 있을 경

우 이것이 의미하는 모든 점들을 감안하여야 한다. 화폐이론의 결론이 한쪽 또는 다른 쪽으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거의 없을 경우에 한해 화폐이론은 하나의 재화가 교환의 공통적인 매개체로서 채택된다는 가정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는 반드시 여러 교환의 매개체들의 동시적 사용을 감안하여야 한다. 이를 간과한다면 이는 화폐이론에서 가장 어려운 과제를 회피하는 것과 다름없다.

3. 화폐의 이차적 기능들

 화폐는 그 경제적 기능이 재화와 서비스의 교환을 용이하게 해 주는 데 있는 상품이다. 그러나 이런 가장 단순한 진술은 지식의 증가보다는 저술 소재의 발견에 관심이 있는 저술가들을 만족시키지 않는다. 많은 연구조사자들도 화폐에 단지 교환의 매개라는 기능을 부여하는 것은 화폐가 경제활동에서 차지하는 괄목할 만한 역할에 대해 충분한 관심을 쏟지 않은 결과라고 생각한다. 그들은 화폐의 추가적 기능들을 충분히 많이 열거하지 않는 한 화폐의 중요성을 정당하게 존중하지 못한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마치 재화의 교환에 기초한 경제질서에서 교환의 공통적 매개의 기능 이외에 더 중요한 기능을 화폐에 부여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한다.

멍거가 이런 의문에 대해 다시 검토한 이후에는 화폐의 이차적 기능들과 그 기본적 기능 사이의 관계에 대해 더 이상 논의

할 필요가 없어졌다.¹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화폐에 관한 문헌에서 보이는 경향을 감안할 때 간략하게나마 이 이차적 기능들을 검토하고, 이 이차적 기능들은 모두 교환의 공통된 매개로서의 화폐의 기능으로부터 도출될 수 있음을 재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이 점은 무엇보다 먼저 신용거래들을 촉진시키는 데 있어 화폐가 수행하는 기능에 적용된다.¹¹⁾ 이것을 화폐의 교환매개기능의 일부로 간주하는 것이 가장 간명하다. 신용거래는 사실 현재재화들을 미래재화와 교환하는 것에 불과하다. 영국과 미국의 저술들은 연기된 지불(deferred payment)의 기준으로서의 화폐의 기능을 자주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이 표현의 원래 목적은 화폐의 원래 기능과 이 특정한 기능을 대비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단지 화폐가치의 변화가 화폐 채무의 실질적 부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의를 단순화하려는 것이었다. 이것은 그런 목적에 훌륭하게 봉사한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 용어를 사용하게 되면, 화폐가치의 변화가 미치는 일반적인 경제적 귀결들에 대한 문제를 다룰 때, 많은 저술가들이 단지 기존 부채관계의 변화라는 관점에서만 다루고 여타 모든 관계에서 화폐가치의 변화가 지니는 중요성을 간과하게 될 수 있다.

시간(時間)과 공간(空間)상으로의 가치이전 수단(a transmitter of value through time and space)으로서의 화폐의 기능도 역시 화폐의

10) Menger, *Grundsätze*, pp.278ff.

11) Nicholson, *A Treatise on Money and Essays on Present Monetary Problems*(Edinburgh, 1888), pp.21ff.; Laughlin, *The Principles of Money* (London, 1903), pp.22f.

교환매개기능에서 직접 유래되었음을 추적해 볼 수 있다. 멩거의 지적에 의하면 특정 재화들은 특별히 저장하기(hoarding)에 적합하였고, 그 결과 그 재화들이 이 목적으로 광범하게 사용되었는데 바로 이 점이 그 재화들의 시장성을 제고하였다. 이러한 저장(貯藏)에의 특별한 적합성이 특정 재화들에 교환의 매개로서의 자격을 부여한 가장 중요한 원인들 가운데 하나였다.¹²⁾ 특정한 경제재를 교환의 매개로서 채택하는 관행이 일반적이 되는 순간, 사람들은 다른 재화보다는 이 재화를 저장하고자 하였다. 사실 투자의 한 형태로서의 저장은, 현재처럼 경제발전이 진전된 단계에서는 그리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는다. 이는 이자를 받는 (수익)자산의 구매로 대체되었다.¹³⁾ 다른 한편으로 화폐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가치를 공간상으로 이동시키는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다.¹⁴⁾ 이 기능은 다시 한 번 재화의 교환을 용이하게 하는 것에 불과하다. 미국으로 이민을 가는 유럽의 농부가 유럽에 있는 그의 자산을 미국에 있는 자산으로 교환하고자 한다면, 그는 유럽의 자산을 팔고 화폐(화폐로 지불될 수 있는 증서)를 가지고 미국으로 가서 그곳에서 새로운 가산(家産)을 구매한다. 이는 다른 아닌 화폐에 의해 용이해진 교환의 교과서적 사례이다.

일반적 지불수단(a general medium of payment)으로서의 화폐의 기능에 대한 특별한 관심이 특히 최근 부쩍 높아지고 있다. 간

12) Menger, *Grundsätze*, pp.284ff.

13) 이는 금, 은, 그리고 해외 증권을 저장하려는 예외적인 경향과는 별개로 인플레이션과 이를 심화시키는 법률들에 의해 촉진되었다.


14) 특히 크니스(Knies)는 화폐가 지닌 서로 다른 장소 간 가치의 이전기능을 강조하였다. Knies, *Geld und Kredit*, 2nd ed., Berlin 1885, pp.233ff. 참고.

접교환은 하나의 거래를 두 개의 구별된 부분으로 나누는데, 이 두 개의 부분은 교환하는 사람들의 궁극적 의도, 즉 소비재를 획득하려는 의도에 의해서만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판매와 구매는 외관상으로는 서로 독립적이다. 게다가 만약 판매와 구매 거래의 두 상대방이 거래협상에서의 각각의 부분을 서로 다른 시점에서 수행하여 판매자의 시점이 구매자(신용구매)의 시점보다 앞선다면, 그 거래협상의 최종적 청산 혹은 그 협상에서 판매자 부분의 실현은—두 가지는 동일한 것일 필요가 없다—구매자 부분의 실현과 그렇게 명백한 연계를 보이지 않게 된다. 모든 다른 신용거래들에서도, 특히 가장 중요한 종류의 신용거래인 대부에서도 이 점은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하나의 거래의 두 부분들 사이의 외관상의 연계 부재는, 이 두 부분들을 서로 독립된 거래로 간주하는 이유로서, 그리고 (대금)지불을 독립된 법적 행동이라고 말하는 이유로서, 그래서 결과적으로 화폐에 공동된 지불수단이라는 기능을 부여하는 이유로서 받아들여져 왔다. 이것이 정확하지 않음은 명백하다. “만약 상품과 자본의 거래를 용이하게 하는 것으로서의 화폐의 기능—이 기능 속에 화폐가격의 지불과 대부금의 상환을 포함하는데—을 염두에 둔다면, …… 화폐를 특별한 목적으로 고용하는 것에 대해 더 이상 논의할 필요성도 근거도 남지 않는다. 심지어 지불수단으로서의 화폐의 기능에 대해서도 그럴 필요가 없기는 마찬가지이다.”¹⁵⁾

15) Menger, *Grundsätze*, p.282f.

이 오류의 뿌리는 (경제학의 많은 다른 오류들과 마찬가지로) 법적 개념과 법적 사고의 습관을 무비판적으로 (경제학자들이) 수용한 데에서 찾아야 한다. 법의 관점에서 보면, 미지불 부채는 다른 문제들로부터 분리해서—예를 들어 지불의무의 원천에 대해 완전히 (혹은 최소한 어느 정도는)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도—고려될 수 있고 또 그렇게 해야 하는 주제의 하나이다. 물론 경제학에 서처럼 법에서도 화폐는 단지 교환의 공통된 매개일 뿐이다. 그러나 법(法)에서 화폐에 관심을 가지는—배타적 동기는 아닐지라도—주요한 동기는 지불의 문제이다. 법이 “무엇이 화폐인가?”라는 질문에 대답을 추구할 때 이는 화폐적 채무는 어떻게 벗어나게 되는지를 확정하기 위해서이다. 법률가에게 화폐는 지불수단이다. 법률가와는 다른 측면에서 화폐의 문제를 다루는 경제학자라면, 그가 처음부터 경제이론의 진보에 기여하기를 포기하지 않는 한 이 관점을 채택하지는 않을 것이다.

1. 주관적 사용가치의 측정 불가능성

 비록 화폐를 가치와 가격들의 척도라고 흔히 말하지만, 그러한 개념은 완전히 잘못된 것이다. 주관적 가치이론이 수용되는 한 이 측정과 관련한 질문은 제기될 수 없다. 더 이전의 정치경제학에서는 가치의 측정을 지배하는 원리에 대한 탐색은 어느 정도 정당화될 수 있었다. 만약 객관적 가치이론에 따라 객관적 상품가치라는 개념의 가능성을 받아들인다면, 그리고 교환이 동가(同價)의 재화를 상호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간주한다면, 교환거래들에 앞서 교환될 대상들 각각에 내재된 가치의 크기에 대한 측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렇게 되면 명백히 다음 단계에서는 화폐를 가치의 척도로 간주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현대 가치이론은 고전학과와 다른 출발점을 가지고 있다. 현대 가치이론에서 가치란, 다양한 상품들을 소비하거나 이들을 가장 유리하게 처분하고자 하는 인간이 개별 상품단위들에 부여하는 중요성이다. 모든 경제적 거래는 가치들의 비교를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비교의 가능성과 마찬가지로) 비교의 필요성도 오직 관련된 사람이 각각의 상품들 사이에서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으로

부터 기인한다. 그 선택이 자신이 보유한 상품과 (교환을 통해 획득할지도 모를) 다른 사람이 보유한 상품 간에 이루어지는지, 혹은 주어진 수량의 생산자원들이 투입될 상이한 용도들 간에 이루어지는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로빈슨 크루소의 무인도에서처럼) 구매와 판매가 전혀 없는 격리된 가구라 하더라도 어떤 것이 생산되거나 소비될 때마다 그 가구의 저차(低次) 재화와 고차(高次) 재화의 스톡¹⁶⁾에 변화가 발생한다. 그 수입액이 그 변화들에 내포된 지출액을 초과하는지 가치평가에 기초하여 스톡의 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 가치평가의 과정은, 그것이 노동과 밀가루를 빵으로 변환시킬지 말지, 혹은 시장에서 의류를 포기하고 빵을 획득할지 말지, 그 어떤 질문과 관련된 것이든 상관 없이 근본적으로 마찬가지이다. 가치평가를 하는 사람의 관점에서, 어떤 생산행위가 어떤 방식의 재화와 노동의 지출을 정당화하는지를 알기 위한 비교는 교환거래에 앞서 이루어져야 하는, 양도해야 할 상품의 가치와 획득하게 될 상품의 가치 사이의 비교와 정확하게 동일하다.

이 이유로 모든 경제행위는 일종의 교환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언급되어 왔다.¹⁷⁾ 가치평가라는 행위는 어떤 종류의 측정도 허용하지 않는다. 누구나 한 조각의 빵이 그에게 한 조각의 철강보다 더 가치가 있는지, 혹은 한 조각의 쇠고기보다 가치가

16) 스톡(stock)은 비축분, 저장량, 저량 등으로 번역될 수 있으나 경제학에서 플로, 스톡 등의 용어는 일상화되어 있어서 그냥 스톡으로 번역하였다. (역자 주)

17) Simmel, *Philosophie des Geldes*, 2nd ed.(Leipzig 1907), p.35; Schumpeter, *op. cit.*, p.50.

작은지, 말할 수 있고, 누구나 비교 가치들의 엄청난 리스트를 작성하는 위치에 있다는 것은 사실이다. 이 리스트는 욕구들과 상품이 특정한 배합으로 주어져 있다고 가정하고 작성되므로 이는 특정 시점에서만 유효할 것이다. 만약 그 개인의 상황이 변화하면, 이에 따라 가치의 척도도 변화한다. 그러나 모든 경제활동의 중심축인 주관적 가치평가는 단지 그 중요성의 순서대로 상품들을 정돈할 뿐이다. 가치평가는 그 중요성의 크기를 측정하지는 않는다. 그리고 경제활동은 개인들에 의해 그렇게 구축된 가치척도들 이외에는 다른 기초를 전혀 가지고 있지 않다. 두 상품 단위들이 두 사람의 가치척도 상에서 다른 순서로 중요할 때 교환이 이루어질 것이다. 상품들의 상호 양도를 통해 각자가 양도한 상품들에 비해 획득한 상품들이 각자의 가치척도 상에서 더 높은 위치를 차지하도록 만드는 것이 불가능해질 때까지 시장에서 교환이 계속될 것이다. 만약 한 개인이 경제적 근거에서 교환을 하고자 한다면, 그는 단지 해당 상품들의 특정 수량이 지닌 상대적 중요성을 고려하기만 하면 된다. 이러한 상대적 가치들의 추정 은 전혀 측정의 개념을 내포하지 않는다. 그 추정은—그 어떤 종류의 중간 단계나 부차적인 과정에 의존하지 않는—직접적인 심리적 판단이다.

그와 같은 고려들은 또한 주관적 가치이론에 대한 일련의 반대들에 대한 답을 제공한다. 심리학은 욕구를 측정하는 데 성공하지 못했으며 그럴 개연성이 별로 없다. 그러나 이를 근거로 해서 수량적으로 정확한 시장의 교환비율들이 궁극적으로 (정확한 측정이 불가능한) 주관적 요인들에 기인할 수 없다는 성급하고

잘못된 결론을 내리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상품들의 교환비율들은 시장에서 거래를 하는 개인들의 가치척도들에 근거하고 있다. A가 3개의 배를, 그리고 B가 2개의 사과를 보유하고 있는데, A는 2개의 사과보다 3개의 배를 보유하는 것이 더 가치 있다고 여기는 반면, B는 2개의 사과보다는 3개의 배를 가지는 것을 더 가치 있게 여긴다고 해 보자. 이 추정들을 기초로 2개의 사과에 3개의 배가 주어지는 교환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하나의 과일을 한 단위로 삼으면) 수치적으로 정확한 교환비율 2:3이 결정되기 위해 교환으로 획득할 특정 수량의 재화가 줄 만족이, 교환으로 포기될 특정 수량의 재화를 보유했더라면 얻었을 만족을 얼마나 많이 초과하는지를 A와 B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한다는 전제는 전혀 필요하지 않다.

현대 가치이론의 창조자들 덕분에 이 점을 인식하게 되었지만, 이에 대한 일반적 인식은 오랜 기간 특이한 종류의 방해물로 인해 지연되었다. 스스로 새로운 길을 창조하는 데 주저하지 않았던 개척자들과 낡은 전통과 사고방식을 대담하게 거부하며 개척자를 따르던 후계자들도 때로는 그들 자신의 원리들을 엄격하게 적용했을 때 의미하는 것들을 전적으로 모두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로부터 뒷걸음질 친다. 이럴 때 사태를 올바르게 확립하는 것이 우리들이 애써야 할 몫이다. 현재 우리의 주제가 바로 그런 경우에 해당한다. 가치측정의 주제에 대해—이 주제와 아주 밀접하게 연관된 일련의 다른 주제들에 대해서처럼—주관주의 가치이론의 창시자들은 그들 자신의 원리들을 일관되게 발전시키기를 자제하였다. 뵘바베르크가 특히 그러했다. 그에게

는 적어도 이 점이 특별히 두드러진다. 그 까닭은 뵘바베르크가 단지 자신의 주장들로부터 결정적인 결론을 도출하기만 했더라면, 가치측정의 문제에 대해, 필자의 의견으로는 대안적이고 더 훌륭한 해결책을 제공했을 체계로 나아갈 수도 있었기 때문이다. 그의 주장들은 이 체계가 구체적인 모습으로 드러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뵘바베르크는 이렇게 지적한다. 실제 생활에서 우리의 수단들이 제약되어 있기 때문에 동시에 가질 수 없는 여러 만족들 사이에서 선택을 해야만 한다. 그래서 우리는 한편으로는 한 번의 커다란 만족, 다른 한편으로는 여러 번의 동질적인 작은 만족들 사이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자주 직면한다. 그와 같은 경우에도 합리적 결정에 도달하는 것은 우리의 능력범위 안에 있다. 아무도 이를 부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단지 한 종류의 만족이 다른 종류의 만족보다 크다는 결론을 내리는 판단은 위의 상황에서의 의사결정에 부적절하다는 사실 또한 마찬가지로 명확하다. 첫 번째 종류의 만족이 다른 종류의 만족에 비해 훨씬 더 크다는 판단도 마찬가지로 충분하지 않을 것이다. 여기에서 뵘바베르크는 그렇기 때문에 그 판단이 얼마나 많은 작은 만족들이 첫 번째 종류의 만족에 비해 더 가치가 있는지를, 혹은 다시 말해 얼마나 하나의 만족이 다른 만족의 몇 배나 되는지를 확정적으로 단언해야 한다고 결론을 내린다.¹⁸⁾

18) Bohm-Bawerk, *Grunthage der Theorie des wirtschaftlichen Güterwertes* (Jahrbücher für Nationalökonomie und Statistik(1886), New Series, Vol.13, p.48(London School of Economics에 의해 재출간, 1932).

이 마지막 두 명제들 속에 내포된 오류를 드러내 보인 공로는 큐헬(Cuhel)에게 돌아간다. 여러 개(X 개)의 작은 만족들이 다른 종류의 하나의 큰 만족보다 가치가 낮다는 (가치평가에 관한) 판단, 그리고 그 하나의 큰 만족이 하나의 작은 만족의 여러 배(X 배) 더 크다는 판단, 이 두 판단은 전혀 동일한 것이 아니다. 그 두 판단이 동일할 수 있는 유일한 경우는 오로지 X 개만큼 특정상품이 한꺼번에 주어질 때 얻는 만족이, 그 상품 한 단위로부터 얻는 만족에다 X 를 곱해 얻는 수치와 동일할 때에 한한다. 이 가정이 성립되지 않음은 욕구만족에 대한 고센의 법칙(한계효용체감의 법칙)으로부터 도출된다. 사과 1개, 자두 8개, 자두 7개에 대해 누가 “사과 1개보다는 자두 8개를 가지겠으며” 또 “자두 7개보다는 사과 1개를 갖겠다”는 (가치평가에 대한) 판단을 했다고 해 보자. 뵘바베르크는 이 판단으로부터 이 사람이 사과 1개의 소비로 얻는 만족이 자두 1개의 소비로 얻는 만족에 비해 7배보다는 크지만 8배보다는 작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으나, 이 뵘바베르크의 결론은 전혀 위의 두 판단에 의해 정당화되지 않는다. 유일한 타당한 결론은 사과 1개로부터의 만족이 자두 7개로부터의 총(總)만족보다 더 크며, 자두 8개로부터의 총만족보다는 작다는 것이다.¹⁹⁾

이것이 한계효용이론가들, 특히 뵘바베르크 자신에 의해 상세

19) Cuhel, *Zur Lehre von den Bedürfnissen*(Innsbruck, 1906), pp.186ff.; Weiss, *op. cit.* pp.532ff. 그가 수정한 대작 『자본과 이자』의 마지막 판본에서 뵘바베르크는 큐헬의 비판을 논박하기 위해 애썼으나 그 문제의 해결에 도움이 되는 그 어떤 것도 내놓는 데 실패하였다. *Kapital und Kapitalzins*, 3rd ed., (Innsbruck 1909-12), pp.331ff. Exkurse, pp.280ff.

하게 설명된 근본적인 개념—어떤 상품의 단위들의 효용(그리고 또한 결과적으로 주관적 사용가치)은 이 단위들의 공급이 증가함에 따라 감소한다는 개념—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유일한 해석이다. 그러나 이를 수용한다는 것은 상품들의 주관적 사용가치를 측정한다는 개념 전체를 기각하는 것을 의미한다. 주관적 사용가치는 어떤 종류의 측정도 허용하지 않는다.

미국의 경제학자 어빙 피셔(Irving Fisher)는 가치측정의 문제를 수학을 통해 접근하고자 하였다.²⁰⁾ 그는 그와 다른 방법들을 시도한 그의 선배들보다 결코 더 성공적이지 못했다. 그들과 마찬가지로 그도 한계효용이 공급이 증가함에 따라 감소한다는 사실로부터 발생하는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없었으며, (그가 그의 주장에 입힌 수학이란 옷은 경제학의 연구에 특별히 잘 어울린다고 광범하게 간주되고 있었지만) 여기에 사용된 수학의 유일한 용도는 그들의 영리하지만 인위적인 구축물의 결함을 숨기는 것이었다.

피셔는 특정한 재화 혹은 서비스의 효용이 비록 그 재화나 서비스의 공급에는 의존하지만, 모든 다른 재화들이나 서비스들의 공급에는 독립적이라고 가정하고 시작한다. 그의 목표는 효용을 측정할 하나의 단위를 발견하는 것이다. 피셔는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먼저 두 주어진 한계효용들의 비율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를 보여 줄 수 있어야 함을 깨닫는다. 만약 예를 들어 어떤 개인이 한 해 동안 빵 100개를 처분할 수 있다면,

20) Fisher, *Mathematical Investigations in the Theory of Value and Prices* (Transactions of the Connecticut Academy, Vol.9), New Haven, 1892, pp.14ff.

그에게 빵 한 개의 한계효용은 150개의 빵을 가지고 있을 때보다 더 클 것이다. 문제는 두 한계효용 사이의 수학적 비율을 결정하는 것이다. 피셔는 세 번째 효용을 이들과 비교함으로써 이 비율을 구하고자 시도한다. 그래서 그는 1년에 기름 B갤런을 가진 개인을 가정하고 100번째 빵의 효용과 동등한, B의 증가분의 효용을 β 라고 부른다. 두 번째 경우에 100개가 아니라 150개의 빵이 가용하다면, “B의 공급은 불변인 채 있고, 그래서 150번째 빵의 효용은 어쩌면 $\beta/2$ 와 같을 수 있다.”고 가정한다. 여기까지 피셔의 주장에 대해 언쟁을 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의 문제의 모든 애로사항들을 깔끔하게 회피하는 논리적 비약이 등장한다. 그러나 피셔는 마치 단순히 자명한 것을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계속한다. “그러면 150번째 빵의 효용은 100번째 빵의 효용의 절반이라고 말할 수 있다.” 더 이상의 설명을 생략한 채, 그는 조용히 문제를 풀어 나간다. 그 문제의 해결은 (만약 위의 명제가 정확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면) 더 이상의 어려움을 안고 있지 않으며, 그래서 마침내 그는 그가 ‘유틸’(util)이라고 부르는 단위를 추정하는 데 성공한다. 방금 인용한 그 구절에서 피셔는 한계효용이론 전체에 대해 도전하고 현대 경제학의 근본적 원리에 반대하는 입장에서 있지만 그는 그런 점을 깨닫지 못한 것 같다. 피셔의 이 결론은 당연히 효용 β 가 $\beta/2$ 의 두 배와 같은 경우에만 타당할 것이다. 그러나 만약 정말 그렇다면 두 한계효용의 비율을 결정하는 문제는 더 빠른 방법으로 해결되었을 것이고, 그의 긴 추정과정은 불필요했을 것이다. 그가 효용 β 가 효용 $\beta/2$ 의 두 배와 같다고 가정하는

것이 정당했듯이 정확하게 마찬가지로 150번째 빵의 효용이 100번째 빵의 효용의 3분의 2라고 곧바로 가정했어도 되었을 것이다.

피서는 n 개의 작은 수량의 β 로 분할될 수 있는 혹은 $2n$ 개의 작은 수량의 $\beta/2$ 로 분할될 수 있는 B꺄련의 공급을 상상한다. 피서는 B만큼의 공급을 처분할 수 있는 어떤 한 개인이 어떤 한 상품단위 X 를 $\beta/2$ 의 가치와 같다고 간주한다고 가정한다. 그리고 피서는 더 나아가 두 가치평가, 즉 X 의 가치를 β 의 가치와 동일시하는 가치평가와 y 의 가치를 $\beta/2$ 의 가치와 동일시하는 가치평가에서 그 개인은 그가 B꺄련이라는 동일한 수량을 처분할 수 있는 상태라고 가정한다.

그는 분명 이로부터 β 의 효용이 $\beta/2$ 의 효용보다 두 배 크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 여기에서의 오류는 명백하다. 그 개인은 하나의 경우에는 X (100 번째 빵의 가치)와 $\beta = 2 * \beta/2$ 사이의 선택에 직면한다. 그는 그 둘 사이에서 결정을 내리기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즉 그가 양자를 똑같이 가치를 두고 있음을 알게 된다. 두 번째 경우에 그는 y (150번째 빵의 가치)와 $\beta/2$ 사이에서 선택해야 한다. 여기에서 다시 그는 두 대안들은 동일한 가치를 가지고 있음을 발견한다. 이제 질문이 제기된다. 무엇이 β 의 한계효용과 $\beta/2$ 의 한계효용 사이에서의 비율인가? 우리는 오로지 우리 자신에게 무엇이 주어진 공급의 n 번째 부분의 한계효용과 똑같은 공급의 $2n$ 번째 부분의 한계효용 사이의 비율, β/n 의 한계효용과 $\beta/2n$ 의 한계효용의 비율인가 물어봄으로써 이를 결정할 수 있다. 이 목적을 위해 B의 공급이 $\beta/2n$ 만큼의

2n개의 부분들로 분할된다고 상상하자. 그러면 (2n-1)번째 부분의 한계효용은 2n번째 부분의 한계효용보다 크다. 만약 우리가 똑 같은 공급 B가 n개의 부분으로 분할되었다고 상정한다면, 우리는 분명 n번째 부분의 한계효용은 앞 경우에서의 (2n-1)번째 부분의 한계효용과 (2n)번째 부분의 한계효용의 합과 같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2n번째 부분의 크기의 두 배가 아니며 두 배보다 더 크다. 사실 공급이 변화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함께 취해진 몇 단위들의 한계효용은 한 단위의 한계효용에다 그 단위의 수를 곱한 것과 동등하지 않으며, 반드시 그 곱한 값보다 더 크다. 두 단위의 가치는 한 단위의 가치보다 크지만 두 배로 크지는 않다.²¹⁾

아마도 피셔는 β 와 $\beta/2$ 가 그 효용이 지극히 작은 수량이라고 가정함으로써 이런 고려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했을지 모른다. 만약 이것이 진정 피셔의 의견이라면, 무엇보다 먼저 특이하게 수학적인 극소 수량의 개념은 경제문제에 적용될 수 없으므로 그의 의견에 반대하지 않을 수 없다. 상품들의 주어진 수량에 의해 부여되는 효용 혹은 상품의 주어진 수량의 주어진 증가에 의해 주어지는 효용은 가치평가가 가능할 정도로 충분히 크든지, 아니면 가치 평가자에게 인식될 수 없을 정도로 적어서 그의 가치평가에 대한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을 정도로 작을 것이다. 그러나 극소의 수량에 대한 개념의 적용 가능성을 허용하더라도, 그 주장은 여전히 설득력이 없다. 그 까닭은 그 유한한

21) 다음도 참고. Weiss, *op. cit.*, p.538.

두 한계효용들 사이의 비율을 구하는 것은, 이 둘을 무한소인 한계효용들과 동일시하는 한에 있어서는 명백히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상품들의 주어진 수량의 소비로부터 도출되는 만족의 단위를 구축해서 이 단위의 배수로써 다른 만족들을 표현하고자 했던 슈페터의 시도에 대해 몇 마디 할 필요가 있다. 이 원칙에 근거한 가치판단들은 다음과 같이 표현되어야 할 것이다. “내가 어떤 수량의 상품들의 소비로부터 얻을 수 있었을 만족은 내가 하루에 사과 1개를 소비할 때 얻는 만족의 1,000배이다.” 혹은 “이 수량의 재화들을 얻기 위해 나는 많아야 이 사과 하나의 1,000배만큼 줄 것이다.”²²⁾ 지구상에 그와 같은 심리적 이미지들을 희미하게나마 그럴 수 있거나 그와 같은 판단을 진술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진짜 존재할까? 그와 같은 의사결정에 실제로 의존하는 그런 종류의 경제활동이 실제로 있을까? 명백히 없다.²³⁾ 슈페터는 하나의 ‘가치의 수량’(quantity of value)을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있기 위해서는 가치의 척도가 필요하다는 가정으로부터 출발하는 피셔와 동일한 오류를 저지르고 있다. 그러나 가치평가는 전혀 두 가지의 ‘가치의 수량’을 비교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다. 그것은 오로지 서로 다른 욕구들의 중요성에 대한 비교로 구성된다. “상품 a 가 나에게 상품 b 보다 더 가치가 있다.”는 판단은 경제적 가치의 측정치를 전제할 필요가 없는데, 이는 “ A 가 나에게 B 보다 더 소중하다—

22) Schumpeter, *op. cit.*, p.290.

23) 더 자세한 것은 다음 참조. Weiss, *op. cit.*, pp.534ff.

더 존경 받고 있다.”는 판단이 우정에 대한 측정치를 전제할 필요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이다.

2. 총가치

 만약 주관적 사용가치를 측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이로부터 직접 주관적 가치에 ‘수량’을 배정하는 것은 실용적이지 못하다는 결론이 나온다. 우리는 이 상품의 가치가 저 상품의 가치보다 크다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우리가 이 상품은 이만큼 가치가 있다고 단언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런 식으로 말하는 것은 특정한 단위를 함축하고 있다. 그것은 정말 주어진 단위의 몇 배가 추정될 수량 속에 포함되어 있다고 말하는 것에 해당한다. 그러나 그런 종류의 계산은 가치평가의 과정에 적용될 수 없다.

이 원칙들을 일관되게 적용할 때 우리는 특정 재고량의 재화가 지닌 총가치에 대한 슈페터의 견해에 대한 비판에 이르게 된다. 비저(Wieser)에 따르면, 특정 재고량의 재화의 총가치는 어떤 주어진 시점에서 그들의 한계효용에 그 재고를 구성하는 부분들이나 아이템의 숫자를 곱하여 구한다. 비저의 주장이 지지될 수 없음은 자유재의 총재고는 언제나 아무런 가치가 없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증명해 줄 사실에 의해 드러날 수 있다. 슈페터는 그래서 또 다른 수식을 제안하는데, 이 수식에서는 재고의 각 부분이 가치척도에서 그것의 위치에 상응하는 지수(그런데 그

것은 상당히 자의적이다)에 의해 곱해지며, 이 곱해서 나온 값들이 다 합해지거나 통합된다. 슈페터의 문제해결 시도는 그 이전의 시도들과 마찬가지로 한계효용과 가치의 '강도'(強度)를 측정할 수 있다고 가정하는 결함을 가지고 있다. 그와 같은 측정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은 두 제안들을 똑같이 쓸모없게 만든다. 그 문제에 대한 완전한 이해는 측정의 정확성을 기하려는 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추구되어야 한다.

가치는 언제나 가치평가의 과정에 따른 결과이다. 가치평가의 과정은 가치평가를 하는 그 개인의 관점으로부터 두 재화 묶음의 중요성을 비교한다. 이는 그들이 다른 측면들에서도 마찬가지로 반드시 물리적으로 혹은 경제적으로 분리될 수 없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가치평가 행위라는 주체들(subjects)은—대표자를 통해 하나의 단위로써 행동하는 특별한 경우에 한해서—한 집단의 사람들일 수도 있고, 국가, 사회 혹은 가족일 수도 있다. 그리고 그렇게 가치가 평가된 객체들(objects)은 상품들의 구분된 단위들의 집합일 수 있는데, 이는 이 집합들이 이 특별한 경우에 하나의 전체로서 다루어져야 하는 한에 있어서는 그렇다. 그 어떤 것도 (가치평가의) 주체나 객체가—비록 다른 경우에는 그 주체나 객체들의 구성부분이 완전히 서로 독립적일 수 있다고 하더라도—하나의 가치평가를 하려는 목적에서 하나의 단위가 되는 것을 막지는 못한다. 하나의 국가처럼, 그들의 대리인인 한 사람의 대표자를 통해 함께 행동함으로써 (하나의 주체로서) 전함(戰艦)과 병원의 상대적 가치들에 대해 판단을 내리는 똑같은 사람들이, 담배와 신문과 같은 다른 상품들에 대한 가치평가에서는

서로 독립적인 가치평가의 주체들이다. 상품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현대 가치이론은, 가치의 척도를 결정하는 것은 서로 다른 종류의 필요의 추상적 중요성이 아니라 구체적 욕구들의 강도라는 사실에 기초해 있다. 이 사실에서 출발하여 한계 효용의 법칙이, 상품들의 집합이 나눌 수 있는 통상적인 경우를 지칭하는 형식으로 발전되었다. 그러나 총공급이 (나뉘지 않고) 그대로인 채로 가치가 부여되는 경우도 있다.

경제적으로 격리된 한 개인이 두 마리의 소와 세 마리의 말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의 가치척도에서 소와 말과 관련된 부분이 다음과 같다고 해 보자. 1) 소 한 마리, 2) 말 한 마리, 3) 말 한 마리, 4) 말 한 마리, 5) 소 한 마리. 만약 이 개인이 한 마리의 소와 한 마리의 말 가운데 선택해야 한다면, 그는 말보다는 차라리 소를 희생할 것이다. 만약 야생동물들이 그의 소들 가운데 한 마리와 말들 가운데 한 마리를 공격한다면, 그리고 그가 두 마리 모두를 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그는 말을 구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그러나 소 전체와 말 전체가 위협에 처했다면 결정은 달라질 것이다. 그의 말 마구간과 소 외양간이 모두 불이 났고, 그는 단지 한 축사의 점유 동물을 구할 수 있을 뿐이며 다른 동물들은 그들의 운명에 내맡겨야 한다고 해 보자. 그러면 만약 그가 세 마리의 말을 두 마리의 소보다 가치를 작게 평가한다면, 그는 세 마리의 말을 구하려 하지 않고 두 마리의 소를 구하고자 할 것이다. 한 마리의 소와 한 마리의 말 사이에서의 선택에 내포된 가치평가 과정의 결과는 말에 대한 더 높은 가치 부여이다. 이용 가능한 소 전체의 스탁과 말 전체의 스탁

사이에서의 선택에 내포된 가치평가 과정의 결과는 소 전체의 스톡에 대한 더 높은 가치의 부여이다.

가치는 오로지 가치평가의 구체적 행동과 관련을 지어 언급될 수 있을 뿐이다. 가치는 그런 관계 속에서만 존재한다. (구체적) 가치평가 과정을 벗어나서는 그 어떤 가치도 존재하지 않는다. 추상적 가치와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어떤 한 개인 혹은 다른 가치평가를 하는 '주체'가 어떤 경제적 재화들의 총이용 가능한 수량들 사이에서 선택을 하는 매우 특별한 경우에 대해서만, 우리는 총(總)가치를 언급할 수 있다. 다른 모든 가치평가 행위와 마찬가지로 이것은 그 자체로 완결적이다. 이 경우 선택에 직면한 사람은 그 상품의 각 단위의 가치라는 개념을 이용할 필요 없이 선택을 할 수 있다. 그의 가치평가 과정은 모든 다른 것들과 마찬가지로 현안이 된 효용들을 고려한 끝에 얻은 직접적인 추론이다. 재고 전체가 하나로서 가치를 부여받고 있을 때, 그것의 (이용 가능한) 최종 단위의 한계효용은—총(總)공급이 하나의 분리될 수 없는 수량이기 때문에—그것의 총(總)효용과 일치한다. 이는 자유재의 총(總)가치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자유재의 독립된 단위들은 언제나 가치가 없다—즉, 언제나 모든 다른 자유재들의 단위들과 함께 섞인 채 가치척도의 맨 끝 변방으로 추방된다.²⁴⁾

24) 다음을 참고. Clark, *Essentials of Economic Theory*(New York, 1907), p.41. 이 책의 독일어 초판에서 위의 주장은, 총(總)가치 문제에 대한 연구의 결과들을 적절하지 않은 방식으로 요약하고 있는, 두 문장을 더 포함하고 있다. 이 두 문장은 스튜어트의 비판에 대한 존중에서 2판에서는 생략되었다. C. A. Verrijn Stuart, *Die Grundlagen der Volkswirtschaft*

3. 가격지수로서의 화폐

지금까지의 논의를 통해 지금쯤 화폐가 가격 혹은 심지어 가치의 측정치로서 작용한다는 기능을 화폐에 부여하는 관행이 얼마나 비(非)과학적인지 충분히 명백해졌을 것이다. 주관적 가치는 측정되는 것이 아니라 순위가 매겨진다. 객관적 사용가치의 측정 문제는 전혀 경제(학)적 문제가 아니다. (여기에서 하나 언급할 것은 효율성의 측정도 모든 종류의 상품에 대해 가능하지 않으며, 효율성의 측정치도 기껏해야 단지 몇 종류의 상품들 안에서만 이용 가능하다는 점이다. 이에 비해 우리가 둘 혹은 그 이상의 종류의 효율성 간의 관계를 확립하려고 하는 순간, 측정의 가능성뿐만 아니라 수치를 이용한 단순 비교의 모든 가능성까지 사라진다. 석탄과 목재의 열(발생) 효율성을 측정하고 비교하는 것은 가능할지 모른다. 그러나 테이블의 객관적 효율성과 책의 객관적 효율성을 객관적 공통분모로 축소시키는 것은 전혀 가능하지 않다.)

객관적 교환가치도 마찬가지로 측정 가능하지 않다. 교환가치도 개인들의 가치평가들로부터 도출된 비교들의 결과이기 때문이다. 주어진 상품단위의 객관적 교환가치는 모든 다른 종류의 상품단위들로 표현될 수 있다. 오늘날 교환은 화폐를 수단으로 보통 수행되며, 모든 상품은 화폐로 표현될 수 있는 하나의 가격을 가지고 있다. 이 때문에 모든 상품의 교환가치는 화폐단위로 표현될 수 있다. 교환의 발달로 인해 가치척도가 점차 더 정교하게 표현되었으며, 이에 따라 가치평가의 기술을 수정되지 않을 수 없게 하였을 때, 화폐단위로의 표현 가능성으로 인해

(Jena, 1923), p.115.

화폐는 가치들을 표현하는 수단이 될 수 있었다.

그것은 말하자면 교환할 기회들이 그 개인으로 하여금 그의 가치의 척도를 재조정하게 유도한다. 자신의 가치의 척도에서 '포도주 한 통'이라는 상품이 '귀리 한 마대'라는 상품 뒤쪽에 위치하고 있더라도, 만약 그가 포도주 한 통을 시장에서 귀리 한 마대보다 더 가치 있게 여기는 상품과 교환할 수 있다면, 그는 그 순서를 바꿀 것이다. 개인들의 가치척도들에서 상품들의 위치는 더 이상 그들의 주관적 사용가치에 의해서만 결정되지 않으며, 그 상품들을 교환해서 얻을 상품들에 대한 주관적 사용가치에 의해서도 결정된다. (그 개인의 가치평가에서 후자가 전자에 비해 더 높은 위치에 있을 때마다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만약 그가 그의 자원으로부터 최고의 효용을 획득하려면, 그 개인은 시장에서의 모든 가격들에 익숙해져야 한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 그는 혼동을 주는 복합적인 교환비율들 사이에서 길을 찾게 해 줄 안내자가 필요하다. 교환의 공통 매개인 화폐는 모든 상품과 교환될 수 있고, 모든 상품을 살 수 있다는 점에서, 그 무엇보다 탁월하게 이 목적에 적합하다. 그 개인으로서는, 그가 상업적 문제들에 대한 완전한 전문가라 할지라도 시장조건들의 모든 변화를 계속 추적하고 그의 사용가치들과 교환가치들에 대한 척도를 이 변화들에 맞추어 바꾸는 것은, 그가 각 교환비율을 축소시킬 수 있는 어떤 공통분모를 선택하지 않는 한 절대 불가능할 것이다. 시장은 그 어떤 상품도 화폐로 전환할 수 있게, 또 화폐를 그 어떤 상품으로도 전환할 수 있게 해 주기 때문에, 객관적 교환가치는 화폐로 표현된다. 그래서

맹거의 표현처럼 화폐는 가격지수(a price index)가 된다. 기업가와 소비자의 계산의 전체 구조는 상품들을 화폐단위로 평가하는 과정에 의존한다. 화폐는 그래서 인간 정신이 경제계산을 할 때 필수불가결한 조력자가 되었다.²⁵⁾ 만약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화폐에 가격들의 척도라는 기능을 부여하고자 한다면, 우리가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전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처럼 쉽게 오해할 소지가 높은 용어라면 사용을 피하는 것이 더 좋을 것이다. 아무튼 그런 용어의 사용은 확실히 정확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우리는 보통 위도와 경도의 결정을 별들의 한 ‘기능’이라고 묘사하지는 않는다.²⁶⁾

25) 경제계산을 위해 화폐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명제에 대해서는 미제스의 다음의 책 참고. *Die Gemeinwirtschaft: Untersuchungen tiber den Sozialismus*, Jena 1922, pp.100ff.

26) 이 장(章)은 기술적(技術的) 문제들을 다루고 있어서 일반 경제이론에 익숙하지 않은 독자에게는 어려울 수 있고 처음 읽을 때는 생략될 수 있으나, 나중에 다룰 지수문제와 같은 이슈들을 완전히 이해하기 위해서 필수적이다. (역자 주)

1. 화폐와 화폐대용물

 간접교환이 화폐의 지원으로 이루어질 때, 화폐가 반드시 물리적으로 다른 사람의 수중으로 이동할 필요는 없다. 요구에 의해 지불되는 동일한 액수에 대한 완벽하게 안전한 청구권이 실제 경화(硬貨) 대신 이전될 수 있다. 이 점에 있어 그 자체로 화폐에만 주목할 만하거나 특이한 것은 전혀 없다. 다만 화폐의 특별한 특성과 관련해서 설명되어야 특이성은 이런 식으로 화폐거래를 완성하는 빈도(頻度)가 너무나 높다는 사실이다.

무엇보다 첫 번째로 화폐는 일반적(generic) 의무의 대상이 되기에 특별히 잘 적응되어 있다. 거의 모든 다른 경제재의 대체 가능성은 다소간 제약되어 있으며 인위적인 상업용어에 근거한 상상의 것에 불과할 때가 많은 반면, 화폐의 대체 가능성은 거의 무한하다. 단지 주식과 채권의 대체 가능성이 화폐의 대체 가능성에 비교될 수 있을 뿐이다. 이들 중 그 어느 것도 완전히 대체 가능하도록 하지 못하게 하는 유일한 요인은 그들의 개별적 단위들을 세분하는 어려움이다. 그래서 다양한 방편이 채택되었지만, 적어도 화폐와 관련해서는 모든 실제적 중요성을 지니는 세분상의 어려움은 완전히 제거되었다.

여전히 더 중요한 상황이 화폐가 수행하는 기능의 속성에 개재되어 있다. 화폐에 대한 청구권은, 그 청구권을 청산하라는 요청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얼마든지 여러 번의 간접교환에서 또다시 이전될 수 있다. 이것은 명백히 다른 경제재들이 관련되어 있는 한 그렇지 않다. 이 경제재들은 궁극적인 소비를 향해 나아갈 운명이기 때문이다.

절대적으로 안전하고, 요구하면 즉각적으로 화폐로 지불되는 청구권—우리는 이들을 간략하게 화폐대용물(money-substitutes)²⁷⁾이라고 부를 것인데—이 지닌 간접교환을 용이하게 해 주는 특별한 적합성은 법률과 상업에서 그들의 지위에 의해 더 증대되었다.

기술적으로, 그리고 어떤 나라들에서는 법률적으로도 은행권의 이전은 경화의 이전과 거의 다르지 않다. 외양(外樣)의 유사성이 너무나 커서 상업적 거래 중인 사람들이 보통 실제로 화폐의 기능을 수행하는 물체들과 단지 그것들의 대용물로 고용된 물체들을 구별할 수 없을 정도이다. 사업가들은 여기에 내포된 경제문제들에 대해 걱정하지 않는다. 그는 단지 경화, 은행권, 수표 등의 상업적·법률적 성격에 대해 관심이 있을 뿐이다. 은행권들은 서류상의 증거가 없이도 이전된다는 사실, 은행권들이 경화와 마찬가지로 정수(整數) 금액으로 유통된다는 사실, 은행권의 종전 보유자들의 이익에 반대되게 이들에 대한 반환의 권한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 법률적으로는 이들과 화폐 사이

27) 화폐대용물이라는 용어 이외에도 화폐대용품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으나, 권리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화폐대용물이라는 용어를 선택하였다.
(역자 주)

에 부채청산의 도구로써 구별되지 않는다는 사실. 이 모든 사실들은 사업가에게는, 이것들을 ‘화폐’라는 용어의 정의 속에 포함할 충분한 이유, 그리고 이들과 현금 예금들 사이에 근본적인 구분을 할 이유로 보인다. (현금 예금들은 오로지 훨씬 더 기술적으로 복잡한 과정에 의해서만 이전이 될 수 있으며 법에서 화폐와 다른 종류로 간주되고 있다.) 이것이 일상생활에서 지배적인 통속적 화폐개념의 기원이다. 의심의 여지없이 이것은 은행 임원의 목적에 봉사하며, 사업세계 전반에서도 매우 유용할지 모른다. 그러나 이 개념을 경제학의 과학적 용어 속에 도입하는 것은 가장 바람직하지 않은 일에 속한다.

화폐개념에 대한 논쟁은 경제학의 역사에서 정확하게 가장 만족스러운 부분 가운데 하나는 아니다. 이 논쟁에서 주로 두드러진 점은 법률적이고 상업적인 지엽적 전문성들에 가려서 경제학적 초점이 심하게 흐려졌으며, 궁극적으로는 용어상의 문제에 불과한 것에 부당하게도 너무 큰 중요성이 부여되었다는 것이다. 질문에 대한 해답은 그 자체로 하나의 목적으로 간주되었으며, 질문을 던진 진정한 목적은 단순히 더 깊은 탐구를 용이하게 만들기 위함이었음은 까맣게 잊혀졌다. 그와 같은 논쟁은 결실을 거두지 못하게 되어 있다.

화폐와 외관상 화폐를 닮은 대상들 사이에 경계선을 획정하려고 시도함에 있어 우리는 조사의 목적을 염두에 두기만 하면 된다. 현재의 논의는 화폐와 다른 경제재와의 교환비율을 결정하는 법칙들을 추적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다른 것이 아닌 바로 이것이 화폐에 관한 경제이론의 과제이다. 이제 용어는 우리

의 문제에 적합해야 한다. 만약 상업에서 화폐적 기능을 수행하는 모든 것들 중에서 특정 집단의 대상들이, 화폐—오직 이 집단에게만 이 이름이 따로 주어져야 한다—라는 특별한 이름 아래, (이 이름이 부인되는) 다른 나머지 것들과는 날카롭게 대비되면서 선별된다면, (이런 상업적 기능상의 화폐의 범위를 파괴하는) 이런 분류는 당연히 우리의 조사를 더 쉽게 진전시키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만 한다.

필자가 완전히 안전하고 즉각적으로 화폐로 전환될 수 있는 청구권들로 이루어져 있어 상업에서 화폐처럼 고용되는 대상들에 대해 화폐라는 이름이 아니라 화폐대용물이라는 이름을 부여한 까닭은 이런 고려들 때문이다. 청구권은 재화가 아니다.²⁸⁾ 청구권은 재화에 대한 처분권을 확보하는 수단이다. 이 사실이 그들의 속성 전체와 경제적 중요성을 결정한다. 그것들은 직접적이 아니라 간접적으로만 가치 있게 여겨진다. 그들의 가치는 그것들이 지칭하는 경제재(經濟財)들로부터 도출된다. 두 가지 요소들이 어떤 한 청구권의 가치평가 속에 포함되어 있다. 첫째, 그 청구권이 특정 재화의 보유에 대한 권리를 주는 그 재화의 가치, 그리고 둘째, 그 재화를 실제로 보유하게 될 확률이 그것이다. 이에 더해 만약 그 청구권이 단지 일정기간 이후에 집행될 수 있다면, 이 상황에 대한 고려가 그 청구권의 가치평가에서 세 번째 요인이 될 것이다. 같은 해 12월 31일에 석탄 10자루를 받을 권리의 1월 1일자 가치는 지금 석탄 10자루의 가치가 아니라 1년 후에 배달될 석탄 10자루의 가치에 근거해 있을 것

28) Böhm-Bawerk, *Rechte und Verhältnisse*(Innsbruck, 1881), pp.120ff.

이다. 청구권의 가치를 계산할 때에 그 청구권의 건전성 혹은 안전성이 고려된다는 사실은 우리가 흔히 경험하듯이, (집행 가능 일자를 감안하는) 이런 종류의 계산도 마찬가지로 그렇다.

화폐에 대한 청구권도 물론 예외가 아니다. 어떤 청구권이 지불을 요구하면 곧바로 지급되며, 그 건전성에 대해 아무런 의심의 여지가 없고 아무런 비용의 지출 없이 청산될 수 있다면, 그런 청구권들은 현금과 거의 마찬가지로 높은 가치를 지닌 것으로 수용되며, 화폐와 동일한 방식으로 채무의 변제에 쓰이고 또 받아들여진다.²⁹⁾ 오로지 이런 종류의 청구권들, 즉 요구하는 즉시 지불될 수 있고, 인간의 예지능력이 허용하는 한에 있어서는 절대적으로 안전하며, 법적 의미에서 완전하게 유동적인 청구권들만이, 거래의 목적에서는, 그 청구권들이 언급하는 총액의 화폐에 대한 정확한 대응물들이다.

물론 다른 청구권들—의심스런 신용도를 가진 은행에 의해 발행된 은행권들 혹은 아직 만기가 도래하지 않은 어음과 같은—도 금융거래에 사용되며 마찬가지로 교환의 일반적 매개로 사용될 수 있다. 이것은 우리의 용어에 따르면 그것들이 화폐임을 의미한다. 그러나 그것들은 독립적으로 가치가 있다고 여겨진다. 그것들은 그것들이 언급하는 화폐의 합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되지도 않으며, 그것들이 나타내고 있는 권리의 가치조차도 있다고 간주되지 않는다. 그것들의 교환가치를 결정하는 것을 도와주는 그 외 특별한 요인들이 무엇인지는 앞으로 논의하면서 발견해 갈 것이다.

29) Wagner, *Beiträge zur Lehre von den Banken*(Leipzig, 1857), pp.34ff.

물론 만약 우리가 화폐개념 속에 절대적으로 안전하고 즉각적으로 화폐에 대한 청구권—우리가 화폐대용물이라고 부르기를 선호했던 것—으로 전환될 수 있는 것들을 포함한다고 해서 전혀 부정확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전적으로 비난받아야 할 점은 특정한 집단의 화폐대용물, 통상적으로 은행권들, 명목화폐(token money) 등에 화폐라는 이름을 부여하고 이를 현금이나 예금과 날카롭게 대비시키는 널리 퍼진 관행이다.³⁰⁾ 이것은 적절한 차이가 없음에도 구분을 하는 데 속한다. 예를 들어 은행권과 현금예금(cash deposits)³¹⁾은 단지 외부적인 점에서만 다른데, 이 차이는 아마도 사업과 법적 관점에서는 중요할지 모르지만 경제학의 관점에서는 거의 의미가 없다.

다른 한편, 모든 화폐대용물들을 예외 없이 모두 화폐라는 하나의 개념 속에 포함하라는 상당한 무게를 지닌 주장이 강하게 제기될지 모른다. 예를 들어 완전히 안전하고 유동적인 화폐에 대한 청구권은 다른 경제재에 대한 청구권과는 크게 다르다는 점이 지적될 수 있다. 상품에 대한 청구권은 조만간 청산되어야만 하는 반면 화폐에 대한 청구권은 반드시 그럴 필요는 없기 때문이다. 그와 같은 청구권은 손에서 손으로 넘어가 무한정 이전될 수 있으며, 이들을 청산하려는 시도들이 없으면 화폐의 자리를 대신한다. 화폐를 요구하는 사람들은 이와 같은 청구권에


30) 예를 들어 다음을 참고. Helfferich, *Das Geld*, 6th ed.(Leipzig, 1923), pp.267ff.; 영역본, *Money*(London, 1927), pp.284ff.

31) 현금예금은 언제든지 인출할 수 있는 당좌예금을 의미하는데, 그 경제적 성격이 예금이라기보다는 은행권과 같다는 점을 저자가 강조하고 있다. (역자 주)

매우 만족할 것이라는 점, 그리고 화폐를 지출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이 청구권들이 그들의 목적을 화폐에 못지않게 잘 수행한다는 점, 그리고 결과적으로 화폐대용물들의 공급이 화폐의 공급과 함께 계산되어야 하며, 이들에 대한 수요도 화폐에 대한 수요와 함께 계산되어야 한다는 점 등이 지적될 수 있을 것이다. 아마도 더 나아가 예를 들어 빵에 대한 수요의 증가는, 빵 자체의 실제 공급을 늘리지 않은 채 빵에 대한 청구권 티켓을 더 많이 발행한다고 해서 결코 충족될 수 없지만, 증가된 화폐에 대한 수요는 단지 이와 같은 과정에 의해 충족될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될 수 있다. 요컨대 화폐대용물은, 이들을 화폐의 개념 속에 포함함으로써 가장 잘 설명될 수 있는, 어떤 특이성들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할지도 모른다.

그와 같은 주장의 중요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지 않으면서, 우리는 편의의 차원에서 더 좁게 형성된 화폐의 개념을 선택할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가장 추천할 만한 길인지, 그리고 아마도 어떤 다른 절차가 우리의 주제에 대한 더 나은 이해로 이끌어가는 것은 아닌지, 그것은 독자의 판단에 맡긴다. 필자로서는 선택된 길이 화폐이론이라는 어려운 문제들을 풀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로 보인다.

2. 화폐대용물의 특이성

 화폐에 대한 경제학적 논의는 반드시 오직 경제적 고려들에

기초해야 하며 경제적 관점에서도 중요한 경우에 한해서 법률적 구분들을 감안하여야 할 것이다. 그와 같은 논의는 결과적으로, 법적 정의나 구분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그 경제적 성격에 근거한 화폐개념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 그래서 어음과 여타 화폐에 대한 청구권들을 화폐 자체를 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지 않기로 한 결정은 단지 좁은 개념의 법률적 화폐에 대한 청구권을 그대로 수용한 결과가 아니며 그렇게 해석되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또한 엄격히 법률적 의미에서는 청구권이 아닐지라도 상업관행에서는 청구권으로 취급받고 있는 그런 관계들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관계들이 실제로 화폐에 대한 청구권을 구성하는 것처럼, 일부 사람들은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고 또 일부 사람들은 그렇게 간주하기 때문이다.³²⁾

1873년 7월 9일의 화폐주조법에 따라 주조된 독일의 명목화폐(token coins)들이 법률에서는 화폐에 대한 청구권이 아니라는 사실에는 전혀 의문이 없다. 아마도 화폐의 모든 외양들을 가지고 있는 검인이 찍힌 둥근 모양의 은, 동, 주석으로 이루어진 이 명목화폐들을 실제로 화폐라고 분류하고자 하는 일부 피상적 비판자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외양에도 불구하고 경제학의 관점에서는 이 명목화폐들은 단지 국고(國庫)에 대한 어음들일 뿐이다. 화폐주조법의 제9절의 두 번째 구절은 (1909년 6월 1일의 법률에서는) 분데스라트(the Bundesrat)에게 200 마르크 가치보다 작지 않은 은화(銀貨) 혹은 50 마르크 가치보다 작지 않은

32) Laughlin, *The Principles of Money*(London, 1903), pp.516ff.

주석화(朱錫貨), 동화(銅貨)를 받고 금화(金貨)를 지불하는—지불센터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의무를 지우고 있다. 라이히스뱅크의 일부 지점들은 이 기능을 위탁받았다. 화폐주조법의 또 다른 장(제8절)은 공화국(the Reich)이 언제나 이 태환성(兌換性)을 실제로 항상 유지할 지위에 있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이 절에 따르면 주조된 명목화폐 은화의 총(總)가치는 결코 인구 1인당 20마르크를 초과하지 않았으며, 주석 니켈과 동화(銅貨)는 인구 1인당 21마르크를 초과하지 않았다. 입법부의 견해로 볼 때는 이 총액들은 소액 경화(coin)에 대한 수요를 나타내는 것이었으며, 결과적으로 명목화폐의 총발행액(總發行額)이 수요를 초과할 위험은 없었다. 널리 알려져 있듯이 명목화폐 보유자의 태환에 대한 권리의 법률상의 인정은 없었으며, 법정화폐(legal tender)에 대한 한계 부여(§ 9, par. 1)가 유일하게 부적절하게나마 태환의 권리를 대체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목화폐가 사실상 수상(首相)에 의해 지정된 라이히스뱅크의 지점들에서 아무런 이의 없이 사실상 현금화되고 있었음은 일반적으로 주지하고 있던 사실이다.

1억2,000만 마르크 이상은 유통이 허용되지 않았던, 독일의 재무성 증권도 정확하게 마찬가지로[1874년 4월 30일, 조례 제5절(§ 5 of the Act of April 30, 1874)] 재무성을 대신한 라이히스뱅크에 의해 언제나 금으로 현금화되었다. 20마르크까지는 은화를, 1마르크까지는 동화를 받아들이도록 의무화되어 있었지만 재무성 증권들이 사적 거래들에서 법정지불수단이 아니었다는 사실은 논점을 벗

어난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이다.

금본위제가 도입되던 시점에서부터 1907년 10월 1일 탈리의 유통이 중지될 때까지의 기간에 독일 탈리(German thaler)는 또 다른 사례를 제공한다. 이 기간 출공 탈리는 명백히 법정지불수단(legal tender)이었다. 그러나 우리가 이 표현 뒤에 들어가 보고—그 표현의 법률적 도출 자체에 대한 추적은 우리의 현재 목적에서 볼 때 쓸모없는 일일 것이다—그리고 탈리가 이 시기 동안 화폐였는지 질문을 던지면, 그 대답은 ‘아니다.’이다. 탈리가 상업에서 교환의 매개로 사용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상업에서 사용될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바로 그것이 진정으로 화폐, 즉 공통된 교환의 매개물인 그 어떤 것에 대한 청구권이었기 때문이다. 탈리가 이런 결과를 얻은 것은 바로 지불을 할 때 그 고객들에게 탈리를 강요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것은 탈리가 라이히스뱅크와 공화국에 지불을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법정 지불수단이었다는 사실과 함께, 탈리를 실제로 화폐로 언제나 태환될 수 있는 어음이 되게 하기에 충분하였고 결과적으로 탈리가 국내에서 화폐에 대한 완전히 만족스런 대응물이 되게 하였다. 그들이 은행권을 금으로 현금화해 주지 말고 탈리로 현금화시켜 주며, 금으로 지불할 때는 금의 수출을 방해하기 위해 일정한 프리미엄을 물게 하자는 주장이 라이히스뱅크의 경영진에게 끊임없이 제시되었다. 그러나 라이히스뱅크는 이런 주장과 유사한 제안들을 채택하기를 점차 거절하였다.

다른 국가들에서의 명목화폐 주조의 정확한 속성은 독일의 사례만큼 이해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다. 독일의 은행과 통화

체제는 밤버거(Bamberger), 미카엘리스(Michaelis), 그리고 소에트 비어(Soetbeer)와 같은 사람들의 영향 아래 그 모양이 갖추어졌기 때문이다. 일부 법률에서는 현대 명목화폐 주조 정책의 이론적 기초는 이를 발견하거나, 혹은 이미 다루었던 사례들에서처럼 보여 주기가 쉽지 않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그런 정책은 궁극적으로 동일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 명목화폐 주조의 보편적인 법률적 특이성은 미리 특정된 최고 액수만큼만 그 지불의 힘(power of payment)이 제한된다는 데 있다. 그리고 보통 이 조항은 주조될 수 있는 총량에 대한 법률적 제한에 의해 보완되고 있다.

명목화폐 주조의 경제학적 개념과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경제학은 이 청구권 집단 가운데 일부 특정한 하부집단, 즉 화폐에 대한 대용물로 고용되는 화폐에 대한 청구권들을 구별해 낼 수 있을 뿐이다. 이 하부집단의 구성요소들은 소액 거래에서 사용되게 하려는 의도로 만들어졌다. 명목화폐(주화)의 발행과 유통이 특별한 법률과 규제들 아래 있었다는 사실은 이들이 봉사하는 목적의 특별한 성격으로 설명된다. 많은 나라들에서 명목화폐의 태환은 행정적 재량에 달려 있는데 반해 은행권 소지자가 이를 화폐로 교환할 권리에 대해 일반적으로 존중되는 것은 은행권과 명목화폐가 각각 따랐던 서로 다른 방식의 발전과정의 결과이다. 명목화폐들은 작은 가치를 가진 재화들의 소량 교환을 촉진시킬 필요성에서 비롯되었다. 명목화폐들의 발전에 대한 역사적 세부사항들은 아직 명백하게 백일하에 드러나지 않았지만 대부분 예외 없이 이 주제에 대한 모든 저술들은

순전히 과거의 화폐의 역사와 도량형적인 관점에서 중요성을 지니고 있다.³³⁾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점만은 확실하게 단언할 수 있다. 즉, 명목화폐는 언제나 기존 화폐체제의 결함을 치유하려는 시도들의 결과이다. 성공하지 못한 모든 종류의 시도들을 하고 나서 오늘날 우리가 채택하고 있는 해결책에 이르게 한 것은 바로 화폐단위를 더 소액의 주화들로 세분하는 것을 어렵게 하는 기술적 어려움이다. 많은 국가들에서 현재 발전되고 있는 중이지만, 일종의 법정화폐(fiat money)³⁴⁾가—공통의 교환매개물의 기능을 바로 곁에서 수행하는 두 가지 상이한 독립적인 종류의 화폐를 갖게 되는 매우 불편한 결과를 빚으면서—때로는 소액거래에서 사용되어 왔다. 그와 같은 상황의 불편함을 피하기 위해, 거액 거래들에서 사용된 화폐들과 고정된 법적 비율로 교환되는 소액(주화)화폐들이 도입되었으며, 소액화폐들의 수량이 상업에서 요구되는 수량을 넘지 않아야 한다는 필요한 예방조치들이 취해졌다. 이 목적에 가장 중요한 수단들은 언제나 소액지불에 필요할 개연성이 높은 수량으로 주조의 수량을—법으로 고정하든 아니면 그런 법적 강제 없이도 고수되든 상관없이—제한하는 것이었다. 이와 함께 사적 거래들에서 법적

33) Kalkmann, *Englands Übergang zur Goldwährung im 18. Jahrhundert* (Strassburg, 1895), pp.64ff.; Schmoller, "Über die Ausbildung einer richtigen Scheidemünzpolitik vom 14. bis zum 19. Jahrhundert," *Jahrbuch für Gesetzgebung, Verwaltung und Volkswirtschaft im Deutschen Reich* 24 (1900): pp.1247-1274; Helfferich, *Studien über Geld und Bankwesen*(Berlin, 1900), pp.1-37.

34) 이 상품화폐, 신용화폐, 그리고 법정화폐의 개념에 대해서는 이 장의 제 3절을 참조.

지불수단이 비교적 소액의 거래로 제한하는 규제가 이루어졌다. 이런 규제들이 적절치 못할 수 있음이 증명될 사태가 나타날 위험은 결코 매우 크게 보이지 않았으며, 결과적으로 명목화폐들의 태환에 대한 법적 규정은 완전히 무시되거나 소지자들이 이를 화폐로 교환할 권리에 대해 명확하게 언급하지 않음으로써 불완전한 상태로 남게 되었다. 그러나 오늘날 거의 모든 곳에서 유통에서 거부된 이런 명목화폐들은 이의 없이 국가 혹은 중앙은행과 같은 곳에 의해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이들의 화폐에 대한 청구권으로서의 속성이 확립되었다. 이 정책이 한 동안 단절되고, 명목화폐들의 태환을 실질적으로 보류시킴으로써 강제로 명목화폐들을 요구된 것보다 더 많이 유통시키려 한 시도들이 이루어진 곳에서는 이 명목화폐들이 신용화폐 혹은 심지어 상품화폐가 되었다. 그러면 그들은 이제 더 이상, 요구에 따라 지불되는, 따라서 화폐와 동등한 가치를 지닌 화폐에 대한 청구권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이제 독립적인 가치를 지닌 것으로 수용된다.

은행권은 이와는 매우 다른 발전 경로를 따랐다. 은행권은 언제나, 심지어 법률적 관점에서도, 청구권으로 간주되었다. 은행권이 화폐와 동등한 가치를 유지하려면 화폐로의 영구적인 태환성이 확보되어야만 한다는 사실이 결코 사람들의 뇌리를 떠나지 않았다. 현금지급의 중단은 은행권의 경제적 지위를 변경시킬 것이라는 사실은 사람들이 쉽게 알아차리지 못하게 하기가 매우 어렵다. 소액거래에서 사용된 수량적으로 더 중요하지 않는 명목화폐의 경우에는 이 점은 더 쉽게 망각되었다. 게다가

가, 명목화폐들이 소액일수록 이들의 태환성 유지 목적을 위한 특별한 기금을 확보하지 않고도 이들의 영구적 태환성을 유지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런 특별기금의 부재는 또한 이 명목화폐 주조의 진정한 성격을 감추는데 일조했을 수 있다.³⁵⁾

오스트리아-헝가리의 화폐 시스템은 이 점에서 특히 교훈적이다. 1892년에 시작된 통화개혁은 결코 형식적으로 완성되지 않았으며, 합스부르크 군주정의 붕괴 때까지 화폐의 본위제는 법률적으로 통상 지폐본위(paper standard)로 불리던 것으로 유지되고 있었다. 왜냐하면 오스트리아-헝가리 방크가 발행한 은행권은 그 액수가 얼마이든 법적 지불수단이었고, 그 은행권들을 상환할 의무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00년에서부터 1914년까지 오스트리아-헝가리는 진정 금본위제 혹은 금환본위제를 가지고 있었다. 왜냐하면 그 은행은 사실 상업적

35) 명목주화의 속성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고. Say, *Cours complet d'économie politique pratique*, 3d ed.(Paris, 1852), Vol.1, p.408; and Wagner, *Theoretische Sozialökonomik*(Leipzig, 1909), Part II pp.504ff. 매우 교훈적인 논의들이 1860년의 벨기에 명목주화법(the Belgian Token Coinage Act of 1860)의 비망록과 논쟁에 들어 있다. Pirmez의 비망록에는 현재적인 태환되는 명목주화의 속성이 다음과 같이 서술되어 있다. “이 성격(태환성)을 지닌 주화들은 단순히 주화가 아니다. 그것들은 청구권, 즉 지불약속들이다. 그 소지자는 더 이상 단지 그 주화 자체에 대한 재산권(*jus in re*), 즉 전환을 요구함으로써 언제든지 행사할 수 있는 권리만을 가지는 것이 아니다. 그는 그 주화의 명목금액 전체에 대해 국가에 대한 청구권(*jus ad rem*), 즉 그가 언제든지 전환을 요구함으로써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 명목주화들은 화폐가 되기를 멈추고 신용수단(*une institution de crédit*), 금속에 새겨진 은행권이 된다.”(다음을 참고. *Loi décrétant la fabrication d'une monnaie d'appoint ... précédée des notes sur la monnaie de billon en Belgique ainsi que la discussion de la loi à la Chambre des Représentants*[Brussels, 1860], p.50).

필요에 대해 금을 기꺼이 제공하였기 때문이다. 법(法)의 자구에 따르면 은행이 은행권을 현금으로 상환할 의무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은행은 위쪽 이론적인 금 포인트(upper theoretical gold point) 아래의 가격으로 교환어음들(bills of exchange)과 해외에서 금으로 지불될 수 있는 여타 청구권들(수표, 은행권 등)을 제공하였다. 그와 같은 조건에서는 수출을 위해 금을 원했던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이런 종류의 청구권을 구매하기를 선호하였다. 이 청구권은 그들로 하여금 실제 금의 수출에 비해 비용이 덜 들면서 목적을 달성하게 해 주었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은행권과 명목화폐로 넘어가기 전에 오랜 세월이 지나야 했기에³⁶⁾ 금의 사용이 예외적이었던 국제 상업에서도 마찬가지로 은행은 그렇게 해야 할 법적 의무가 없었지만 그 은행권을 금으로 상환하였다. 그리고 이 정책은 우연히 혹은 어쩌다가 그 중요성에 대해 완전히 인식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추구된 것이 아니라, 의도적, 체계적으로 오스트리아와 헝가리가 금본위제의 경제적 이점을 누리도록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추구되었다. 은행의 이 정책을 주도했던 오스트리아와 헝가리 두 정부는 모두 그들이 할 수 있는 한 서로 협조하였다. 그러나 먼저 적절한 할인정책을 따름으로써 자발적으로 그 은행권의 신속한 상환을 수행할 수 있는 위치에 언제나 있을 것임을 확신시켜야 하는 것은 언제나 은행 그 자체였다. 이 목적으로 은행이 취한

36) 오스트리아-헝가리에서 은 굴덴은 1873~1907년 독일에서의 은 탈러와 동일한 지위를 가지고 있었다. 그것은 법정 지불수단이었으며, 발권은행이 사실상 언제든지 요구하면 그것을 현금화시켰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화폐에 대한 청구권이었다.

조치들은 근본적으로 다른 금본위제 국가들에서 발권은행들에 의해 취해진 것들과 전혀 다르지 않다.³⁷⁾ 그래서 사실상 오스트리아-헝가리 은행(Austro-Hungarian Bank)의 은행권들은 다른 아닌 화폐대용물들이었다. 그 나라의 화폐는 다른 유럽의 국가들에서와 마찬가지로 금이었다.

3. 상품화폐, 신용화폐, 법정화폐

☺ 화폐에 대한 경제이론은 일반적으로 경제학적 용어가 아니라 법적 용어로 표현되고 있다. 이 용어는 그 주요 관심사가 서로 다른 종류의 화폐들과 그 대체물들에 대한 법적 성격에 있었던 저술가들, 정치가들, 상인들, 판사들, 그리고 여타 사람들에 의해 구축되었다. 법적 관점에서 중요성이 있는 화폐 시스템의 측면들을 다루는 것은 유용하다. 그러나 경제학적 탐구의 목적에서는 이는 실질적으로는 가치가 없다. 이런 법과 경제학 각각의 영역에 대한 혼동이 화폐이론이라는 바로 이 분야에서만큼 그렇게 빈번하고 또 유해한 결과들로 가득한 분야는 없다. 그럼

37) 나의 다음 논문들을 참고. "Das Problem gesetzlicher Aufnahme der Barzahlungen in Österreich-Ungarn," *Jahrbuch für Gesetzgebung, Verwaltung und Volkswirtschaft im Deutschen Reich*, 33(1909), pp.985-1037; "Zum Problem gesetzlicher Aufnahme der Barzahlungen in Österreich-Ungarn," *ibid*, 34(1910), pp.1877-84; "The Foreign Exchange Policy of the Austro-Hungarian Bank," *The Economic Journal*, Vol.19(1909), pp.201-11; "Das vierte Privilegium der Österreichisch-Ungarischen Bank," *Zeitschrift für Volkswirtschaft, Sozialpolitik und Verwaltung*, 21, (1912): pp.611-24.

에도 불구하고 이런 단점에 대해 충분한 주의를 거의 기울이지 않았다. 법적 기준에 따라 경제문제들을 다루는 것은 실수이다. 경제학은 법적 전문용어들을, 화폐문제에 대한 법적 연구 결과물과 마찬가지로, 연구 대상의 하나로 간주하여야 한다. 법적 전문용어를 자체의 목적을 위해 활용할 권한은 있지만, 그것을 비판하는 것은 경제학의 과제가 아니다. 경제적 주장에서 법적 전문용어들을 사용하는 데 대해, 그것이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들을 초래하지 않는다면, 전혀 반대할 이유가 없다. 그러나 특별한 목적에 맞추어 경제학은 그 자체의 특별한 용어를 구축하여야 한다.

화폐로 이용될 수 있는 것에는 두 가지 종류, 즉 한편으로는 첫째 종류로서 금속인 금(金)이나 은(銀)과 같이 그 자체로 물리적 상품들, 다른 한편으로는 둘째 종류로서 화폐인 다른 대상들과 기술적으로는 다르지 않지만 그것이 화폐인지 결정하는 요인이 그 물리적 성격이 아니라 그 법적 성격에 있는 대상들이 있다. 특정 당국의 각인에 의해 특별히 화폐로 간주되는 한 조각의 종이는 기술적으로 고려할 때, 권위를 부여받지 못한 사람의 비슷한 각인이 있는 또 다른 한 조각의 종기와 전혀 다르지 않다. 이는 진정한 5프랑이 '진정한 모조품'과 기술적으로 구별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이다. 유일한 차이점은, 그와 같은 주화의 제조를 규제하고, 그런 권위가 없이는 주화의 제조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법에 있다.

모든 가능한 오해를 피하기 위해 그 법률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주화발행을 규제하는 것뿐이며, 그 주화들이 실제로 화

폐가 되게 하는 것, 즉 교환의 공통적 매개물로 사용되게 하는 것은 국가의 힘으로 할 수 없음을 명시적으로 언급할 필요가 있다. 국가가 공식적 검인을 통해 할 수 있는 것은 특정 금속이나 종이를 동일한 종류의 모든 다른 것들로부터 독립된 가치평가의 과정 아래 놓일 수 있도록 선발하는 것일 뿐이다. 그래서 동일한 종류의 다른 상품들이 단순한 상품들로 머무는 데 반해, 이 평가과정은 이런 특별한 법적 자격을 갖춘 대상들이 교환의 공통된 매개물로 사용되도록 허용한다. 국가는 또한 자격을 갖춘 상품들의 교환의 공통된 매개물로서의 실제 사용을 촉진시키려는 목적을 지닌 여러 단계의 조치들을 취할 수 있다. 그러나 국가가 명령한다고 해서 이 상품들이 화폐가 될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니다.

우리는 화폐인 동시에 상업적 상품인 종류의 화폐에 대해 상품화폐(commodity money)라는 명칭을, 그리고 특별한 법적 자격을 갖춘 속성들을 지닌 화폐에 법정화폐(fiat money)라는 명칭을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세 번째 범주는 신용화폐(credit money)라고 불릴 수 있을 것인데, 이 범주는 그 어떤 자연인 혹은 법인에 대한 청구권을 구성하는 그런 종류의 화폐이다. 그러나 이 청구권들은 요구하면 곧바로 지불될 수 있는 동시에 절대적으로 안전해야 한다. 만약 실제로 그렇다면, 그들의 가치와 그 청구권이 지칭하는 화폐의 합계액의 가치는 전혀 다르지 않을 수 있을 것이며, 그 청구권들을 다루는 사람들의 독립적인 가치평가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저런 방법으로 이 청구권들의 만기는 어떤 미래의 시점으로 연기되어야 한다. 용어상

의 엄격한 의미에서 법정화폐가 이론적으로 상정이 가능하다는 것에는 거의 의심의 여지가 없다. 가치이론은 그 존재의 가능성을 증명한다. 법정화폐가 실제로 존재하였느냐 여부는 물론 완전히 다른 문제이며, 아무렇게나 그렇다고 쉽게 대답할 수 없는 문제이다. 상품화폐가 아닌 이런 종류의 화폐들이 신용화폐로 분류되어야 한다는 데에는 거의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오로지 치밀한 역사적 연구만이 이 문제를 명백하게 밝혀 줄 수 있을 뿐이다.

우리의 용어는,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용어들에 비해 가치평가를 받는 과정에서 서로 다른 유형의 화폐들이 지닌 특이성을 분명하게 표현해 준다는 점에서 더 유용하다. 우리의 구분은 통상적으로 행해지는 금속화폐와 지폐의 구분보다 더 정확하다. 금속화폐는 표준화폐(standard money)뿐 아니라 명목화폐(token money), 그리고 1873~1907년 사이의 독일 탈러와 같은 주화를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지폐는 통상적으로 종이로 만들어진 법정화폐와 신용화폐뿐만 아니라, 은행들이나 국가에 의해 발행된 태환이 가능한 은행권과 약속어음을 포함하고 있다. 이 용어는 일반 대중들의 관용어에서 도출되었다. 예전에는, 즉 오늘날보다는 더 자주 '금속'화폐가 정말 화폐대용물이 아니라 화폐였던 시절에는 아마도 그런 명칭이 지금보다는 조금 덜 부적절했을 것이다. 게다가 금속화폐라는 용어는, 귀금속에는 어떤 '내재적'인 가치가 존재한다고 보지만 종이 신용화폐(paper credit money)에는 필연적으로 비정상적인 어떤 것이 존재한다고 보는 순진하고 혼동된 가치의 통념(通念)에 상응하는 개념이었으며,

아마도 아직도 그런지 모른다. 과학적으로 볼 때, 이 용어는 완전히 쓸모가 없으며 끝없는 오해와 왜곡의 샘이다. 이와 관련해 경제학적 연구에서 저지를 수 있는 가장 큰 실수는 단순한 외양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해서 외부적 모양들이 유사한 것들 사이에 존재하는 근본적 차이를 인식하지 못하거나 외양들은 상이하지만 근본적으로 유사한 것들을 식별해 내지 못하는 데 있다.


널리 인정되고 있는 것처럼, 고전화폐 연구가, 기술자, 그리고 예술사가(藝術史家)에게는 1879년에서 1892년 사이에 유통되던 오스트리아의 실버 굴덴(Austrian silver gulden)조차도 지폐 굴덴(paper gulden)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반면, 은의 자유주조가 단절된 이전과 이후의 5프랑짜리 사이에는 별반 차이가 없게 보일지 모른다. 그러나 경제학적 논의에서조차 아직도 그와 같은 피상적인 구분들이 일정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은 탄식할 일이다.

우리의 삼중(三重) 분류는 단순한 용어 혼련상의 문제가 아니다. 이 책의 나머지 부분에서 이론적 논의를 할 때 이 분류가 포함하는 개념들이 유용하다는 사실이 틀림없이 드러날 것이다.

상품화폐의 결정적 특성은 기술적 의미에서 한 상품의 화폐적 목적의 사용이다. 우리의 현재의 연구를 위해서는 어떤 특정 상품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완전히 상관없는 문제이다. 화폐를 구성하는 것이 해당 상품이라는 사실, 그리고 그 화폐가 이 상품이라는 사실만이 중요하다. 법정화폐의 경우는 매우 다르다. 여기에서 결정적 요인은 검인이며, 화폐를 구성하는 것은 그 검인이 찍힌 물질이 아니라 검인 자체이다. 그 검인이 찍힌 물질의 속성은 아주 부차적인 중요성을 지닌 문제이다. 마지막으로

신용화폐는 교환의 일반적 매개물로 사용되는 미래에 지불해야 하는 청구권이다.

4. 상품화폐, 과거와 현재

 상품화폐, 신용화폐, 법정화폐의 구분은 원칙상 정확하다고 수용되고, 단지 그 유용성만이 아직 확실하지 않을 때, 현재의 자유롭게 주조될 수 있는 통화와 이전 세기들에서의 금속화폐가 상품화폐의 사례들이라는 명제는 많은 권위자들에 의해 그리고 더 많은 일반 대중들에 의해 완전히 기각되었다. 사실, 일반적으로 화폐의 예전 형태들이 상품화폐였다는 것을 일반적으로 아무도 부인하지 않는다. 더 나아가 예전에는 주화들(coins)이 수(數)가 아니라 중량에 의해 유통되었음이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폐는 먼 옛날 이미 그 속성이 변했다고 단언되고 있다. 1914년에 독일과 영국의 화폐는 금이 아니라 마르크와 파운드라고 말해지고 있다. 오늘날 화폐는 “법에 의해 가치(價値)상의 특정한 중요도가 부여된 구체적 단위들”로 구성된다(Knapp). “표준이라는 것은, 가치의 척도로 채택된 가치의 단위들(플로린스, 프랑, 마르크 등)을 의미하며, ‘화폐’라는 것은 가치의 척도로 기능하는 단위들을 대변하는 증표들(주화와 어음들)을 의미한다. 은과 금 중 어느 하나가 혹은 양자 모두 표준으로서 그리고 통화로서 기능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논쟁은 별 의미가 없는 논쟁이다. 그 까닭은 은 혹은 금 그 어느 쪽

도 이런 기능들을 결코 수행하지 않았으며 그렇게 수행했을 수도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Hammer).³⁸⁾

이 엄청난 단언들이 진실인지 검증해 보기 전에, 이런 단언들의 탄생에 대해 간략하게 언급해 두자. —이런 단언들에 개재된 원칙들은 가장 오래되고 가장 원시적인 화폐이론들과 매우 밀접한 관련성을 보이기 때문에 탄생이라기보다는 부활이라고 부르는 것이 정말 더 정확할 것이다. 과거에도 그랬듯이 오늘날의 유명론(唯名論)적 화폐이론들도 화폐이론의 주요 문제의 해결에 단 하나의 단어도 기여할 능력이 없다는 점이 특징이다. 그 주창자들로서는 가치와 가격들이라는 경제문제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들은 어떻게 시장 비율들이 확정되는지, 혹은 그 시장 비율들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고려할 필요를 전혀 깨닫지 못했다. 그들은 1873년 이후의 독일 탈러 혹은 1879년 이후의 오스트리아 은(銀) 플로린(florin)이 정부 주화제작소에서 공인(公印)된 동일한 중량과 순도의 은의 수량과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사실에 우연히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다. 지폐에 대해서도 유사한 상황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 그들은 이를 이해하지 못해서 이 수수께끼에 대한 답을 찾고자 애썼다. 이 지점에서 그들은 가치와 가격이론에 친숙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의 탐구는 특이하게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말았다. 그들은 화폐와 다른 경제재들

38) 특히 다음을 참고. Hammer, *Die Hauptprinzipien des Geld- und Währungswesens und die Lösung der Valutafrage*(Vienna, 1891), pp.7ff.; Gesell, *Die Anpassung des Geldes und seiner Verwaltung an die Bedürfnisse des modernen Verkehrs*(Buenos Aires, 1897), pp.21ff.; Knapp, *Staatliche Theorie des Geldes*, 3rd ed.(Munich, 1921), pp.20ff.

사이의 교환비율들이 어떻게 확립되는지 탐구하지 않았다. 이것은 분명 그들에게 그저 너무나 자명한 문제로 보였을 것이다. 이들은 그들의 문제를 다른 방식으로 제기하였다. 탈러에 포함된 은(銀)이 마르크에 포함된 금(金)에 비해 더 낮은 시장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3개의 20마르크 짜리가 20탈러와 동등할 수 있는가? 그들의 대답은 이렇다. 왜냐하면 화폐의 가치는 국가에 의해, 법령에 의해, 법체계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요인들을 무시하면서, 그들은 자의적인 오류들의 그물망—즉, “정확히 우리가 가치의 단위라는 용어로 이해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질문을 던지게 되면, 금방 붕괴되는 이론적 구축물—을 짜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주제넘은 질문은 단지 적어도 가격이론의 요소들에 익숙한 사람들에게 떠오를 수 있을 뿐이다. 다른 사람들은 가치단위의 ‘명목성’(nominality)을 지적하는 것으로 만족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이론들이 길거리의 일반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진 것은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니다. 왜냐하면 이 이론들이 인플레이션주의와 높은 친밀성을 가진다는 점 때문에 모든 열광적인 ‘값싼 화폐’ 주창자들에게는 이 이론들을 일반인들에게 강하게 추천할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다.

어느 시대이든 어느 국민들 사이에서이든 대표적 경화(硬貨)들이 그 수량과 질에 대한 고려 없이 단순히 그 숫자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직 특정한 무게와 순도를 가진 금속 조각으로서만 소중하게 여겼으며 수용되었다. 이 사실은 화폐의 역사에 대한 연구에서 확인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경화(硬貨)들이 숫자에 의

해 수용되는 곳에서, 공인(公印)은 언제나 그 경화들이 그 종류의 경화에 통상적인 순도를 지니고 있으며 정확한 무게를 표시하고 있다는 신뢰를 받고 있었다. 이런 가정이 근거가 없는 곳에서는 사람들은 다시 중량을 달고 순도를 테스트하는 일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정부 재정(財政)에 대한 고려로 인해 주조 관청에 주화의 구매력을 규제할 권리를 귀속시키는 이론이 보급되기에 이르렀다. 주화의 주조가 정부의 기능이 되는 한에 있어서는, 정부는 그들이 원하는 대로 주화의 무게와 내용을 고정시키고자 하였다. 프랑스의 필립 6세는 “그와 같은 화폐를 주조하고 우리가 원하고 우리에게 좋아 보이는 그런 통화와 그런 비율이 되게 할”³⁹⁾ 권리가 있음을 명시적으로 주장하였다. 그리고 모든 중세 지배자들은 필립 6세와 같은 방식으로 생각하였으며 또 그렇게 행동하였다. 복종적인 법률가들은, 왕들이 주화들의 가치를 저하시킬 수 있는 신성한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철학적으로 정당화하는 기초를 발견하려고 애쓰는 동시에 주화의 진정한 가치는 그 나라 지배자에 의해 그들에게 주어지는 것임을 증명하려고 시도함으로써 지배자들을 지원하였다.

모든 공식적 규제들과 금지조항들, 가격의 고정, 처벌의 위협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업적 관행은 이에 저항하였다. 상업적 관행에서는 주화들에 가치를 부여할 때 중요한 것은 액면(額

39) Luschin, *Allgemeine Miillzkunde und Geldgeschichte des Mittelalters und der neueren Zeit*(Munich, 1904), p.215; Babelon, *La théorie féodale de la monnaie*(Extrait des memoires de l'Académie des Inscriptions et Belles-Lettres, Vol.38, Part I [Paris, 1908], p.35).

面)가치가 아니라 금속으로서의 가치라는 사실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언제나 강력하게 요구하였다. 어떤 주화의 가치는 언제나 새겨 놓은 이미지에 의해서가 아니라, 혹은 주화제조와 유통 관청들의 선언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 주화의 금속 함량에 의해 결정되었다. 모든 종류의 화폐가 사람들에게 의해 보는 즉시 받아들여진 것이 아니었다. 단지 중량과 순도에 대해 좋은 평판을 지닌 종류의 화폐들만이 그랬다. 대부계약에서 특정 종류의 화폐로 상환하도록 한다는 조항이 삽입되었으며, 화폐주조에 변조가 발생할 경우 금속으로 상환을 하도록 요구되었다.⁴⁰⁾ 모든 재정적 영향들에도 불구하고, 화폐부채를 상환할 때 고려되어야 할 것은 금속가치-법률가들은 이를 내재적 선(善)(*bonitas intrinseca*)이라고 부른다—라는 견해가 심지어 법률가들 사이에서도 서서히 일반적인 승인을 얻게 되었다.⁴¹⁾

화폐의 가치를 변조하더라도 사람들로 하여금 상업적 관행에서도 새로운 더 가벼운 주화들에 종전의 더 무거운 주화와 동일한 구매력을 가진 것으로 취급하도록 강요할 수는 없었다.⁴²⁾ 주화의 가치는 그 중량과 질의 감소에 비례하여 떨어졌다. 가격규제들조차 주화의 품질인하에 따른 감소된 구매력을 감안하였다. 실레시아에서 쇠펜(the Schöffen), 즉 슈바이드니츠(Schweidnitz)의

40) 중요한 참고문헌으로는 다음의 문헌이 있음. Babelon, *op. cit.*, p.35.

41) Seidler, "Die Schwankungen des Geldwertes und die juristische Lehre von dem Inhalt der Geldschulden," *Jahrbücher für Nationalökonomie und Statistik*, 3rd Series, Vol.7, 1894, p.688.

42) 러시아에서의 초기 조건들에 대해서는 Gelesnoff, *Grundzüge der Volkswirtschaftslehre*, Altschul이 번역한 독일어판(Leipzig 1918), p.357을 참고.

과세액 사정자(査定者)는 신규 주조된 페니히에 대해 그 가치를 평가한 다음 시의회와 연장자들과 협의하여 이에 따라 상품들의 가격들을 고정하였다. 13세기 비엔나로부터 시민들의 의사(意思)에 따라 새로이 도입된 매년 판매되는 물품들에 대해 화폐가 재평가되는 공식적 제도가 전수되어 왔었는데, 이 제도에 따라 1460년에서 1474년의 기간에 새로운 주화의 도입과 연계해서 상품들과 서비스들에 대한 가격들이 규제되었다. 유사한 조치들이 다른 도시들에서도 유사한 경우에 취해졌다.⁴³⁾

주화주조의 난맥상이 너무나 심해져 한 조각의 금속 위에 있는 공인이 그 실제 함량을 결정하는 데 더 이상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곳에서는 어디에서나 상업세계는 공식적 화폐 시스템에 의존하기를 멈추고 자체적인 귀금속 측정 시스템을 창출하였다. 대규모 거래에서는 금속 주괴(鑄塊)와 거래증표들(trade tokens)이 사용되었다. 그래서 제네바의 페어(Fair at Geneva)를 방문하는 독일 상인들은 정제된 금(金) 주괴를 소지하고 가서, 화폐를 사용하지 않고 파리 시장에서 사용되는 무게들을 사용하여 그 주괴를 주고 구매를 하였다. 이것이 마르켄스쿠도(Markenskudo) 혹은 스퀴투스 마르카룸(marcharum)의 기원인데, 이는 다름 아닌 상인들의 통상적인 단위인 3.765그램의 정제된 금이다. 15세기가 시작될 무렵, 제네바 교역이 점차 리옹(Lyon)으로 이전되고 있을 때, 금 마르크(gold mark)는 상인들 사이에서 너무나 통상적인 계산 단위가 되어서, 금 마르크 단위로 표시된 어음들이 시장에서 유

43) Luschin, *op. cit.*, p.221ff.

통되었다. 과거 비엔나의 리르 디 그로시(*lire di grossi*)도 유사한 기원을 가지고 있다.⁴⁴⁾ 현대가 시작되는 무렵 모든 거대 상업센터들에서 싹튼 지로(*giro*) 은행들에서 우리는 화폐 시스템을 당국의 주화제조 특권의 남용으로부터 자유롭게 하려는 시도를 볼 수 있다. 이 은행들의 청산소(*clearing house*) 사업은 특정 순도의 주화들 혹은 주괴(鑄塊)들에 바탕을 두고 있었다. 이 은행 화폐는 가장 완벽한 형태의 상품화폐였다.

유명론자(唯名論者)들은 화폐단위는, 아무튼 현대 국가들에서는 적합한 기술적 방법으로 정의될 수 있는, 구체적 상품단위가 아니라 그 가치에 대해 법에 의해 창출되었다는 것 말고는 아무 것도 말할 것이 없는 명목적인 수량일 뿐이라고 단언하고 있다. 이 용어법의 애매하고 흐리멍텅한 성격—아마도 가치이론의 관점으로부터의 비판을 단 한 순간도 견디기 어려울 것이지만—을 건드리지 않으면서, 단지 단순하게 이렇게 질문을 던져보자. 그렇다면 1914년 이전의 마르크, 프랑, 파운드는 무엇이었는가? 명백히 그것들은 금의 일정한 무게에 불과하였다. 독일이 금본위제가 아니라 마르크본위제를 가지고 있었다고 단언한다면, 이것이 불필요한 트집잡기가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관련법의 조문에 따르면, 독일은 금본위제였으며, 마르크는 단지 정제된 금 1/2,790kg으로 지정된 계산의 단위였다.

이것은 아무도 사적 거래에서 금괴 혹은 외국 금화를 반드시

44) *Ibid.*, p.155; Endemann, *Studien in der romanisch-kanonistischen Wirtschafts-und Rechtslehre bis gegen Ende des 17. Jahrhunderts* (Berlin, 1874), Vol.1, pp.180ff.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는 사실에 의해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다. 화폐분야에 대한 국가 간섭의 전체 목표와 의도는 단지 개인들로 하여금 그들이 받는 금의 중량과 순도를 테스트하는 일—전문가에 의해서만 수행될 수 있고 매우 정교하고 조심스런 조치들이 동반되는 일—이 필요 없도록 해 주는 데 있기 때문이다.

주조될 때 법적으로 허용되는 주화들의 중량과 순도의 오차 범위를 매우 좁게 하고, 더 나아가 유통되는 주화의 마모에 따른 손실의 허용범위를 제한하도록 확립하는 것이, 상업적 거래 당사자들이 모두 저울과 질산칼륨산(니트릭산)을 사용하는 것보다 더 좋은 주화제조의 진실성을 확보하는 방법이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자유 주조의 권리—현대 화폐법의 기본원칙의 하나인—는 주화형태로 된 금속과 그렇지 않은 금속 사이의 가치 사이에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보호장치이다. 주화들 한 개씩에 관한 한 무시할 정도로 작은 차이만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한 개의 차이가 모여 누적적 중요성을 가지는 대규모 국제무역에서는, 주화들이 그 개수가 아니라 총 무게에 따라 가치가 평가된다. 즉, 그것들은 주화로서가 아니라 금속의 한 조각으로 취급된다. 왜 국내교역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지 이해하기는 쉽다. 한 나라 안에서의 대규모 지불은 결코 관련된 화폐의 수량의 실제 이동이 아니라 단지 청구권—공급적으로 중앙은행의 귀금속 스톡에 대한—의 양도가 수반될 뿐이다.

중앙은행의 금 준비금 속에 있는 금괴에 의해 수행되는 역할이 바로 화폐본위제도는 당국의 선언이 아니라 귀금속으로 이루어진다는 증거이다.

오늘날의 주화들에 있어서조차 그것들이 화폐대용물, 즉 신용 화폐 혹은 법정화폐인 한에 있어서는, 그것들이 중량과 순도가 공식적으로 보증된 금괴에 불과하다는 명제는 진실이다.⁴⁵⁾ 오늘날 현대의 국가들—주화제조에 제약이 없는 금속주화들이 사용되고 있는—에서의 화폐는 고대와 중세 국가들에서의 화폐들과 정확하게 마찬가지로 상품화폐이다.

45) Chevalier, *Cours d'économie politique, III., La monnaie*(Paris, 1850), pp.21ff; Goldschmidt, *Handbuch des Handelsrechts*(Erlangen, 1868), Vol.1, Part II, pp.1073ff.

1. 시장에서의 국가의 위치


🍷 시장에서의 국가의 입장은 상업적 거래를 하는 여타 경제주체들의 입장과 전혀 다르지 않다. 다른 이들과 마찬가지로 국가도 가격의 법칙에 지배를 받는 조건으로 상품과 화폐를 교환한다. 국가는 국민들에게 주권(sov^{er}ei^gn ri^ghts)을 행사하여 강제적 기여금을 부과한다. 그러나 이 외의 점들에서는 국가도 다른 모든 사람과 마찬가지로 사회의 상업적 조직에 적응하여야 한다. 구매자로서 혹은 판매자로서 국가는 시장의 조건에 따라야 한다. 국가가 시장에서 결정된 교환비율들 가운데 그 어떤 것을 변경하고자 하더라도, 시장 자체의 메커니즘을 통해서 이를 시도할 수 있을 뿐이다. 일반적으로 국가는 시장 바깥에서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원들 덕분에 다른 누구보다도 더 효과적으로 행동할 수 있다. 국가는 시장에서의 가장 두드러진 교란에 대해 책임이 있는데, 그 까닭은 수요와 공급에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할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는 시장의 규칙 아래 놓여 있으며, 가격이 정해지는 과정의 법칙에서 벗어날 수 없다.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에 기초한 경제체제에서 그 어떤 정부규제도 교환조건을 결정하는 요인들을 변경하는 것 이외에는

이들을 변경시킬 수 없다.

왕과 공화국들은 반복적으로 이 점을 인식하기를 거부하였다. 판매가격에 관한 디오클레티아누스 칙령(Diocletian's edict), 중세의 가격규제들, 프랑스 혁명 때의 최고가격(maximum-price)제도 등이 시장에 대한 권위주의적 간섭의 가장 유명한 실패 사례들이다. 이 간섭 시도들이 실패한 것은 이 시도들이 국가의 국경 안에서는 유효했지만 국경 밖의 다른 곳에서는 무시되었기 때문이 아니었다. 유사한 규제들이 격리된 국가들에서 시도되었더라면 원하는 결과를 낳았을 것이라고 상상하는 것은 잘못이다. 그 규제들이 실패한 것은 정부의 지리적 한계 때문이 아니라 그 기능적 한계 때문이었다. 생산과 분배의 중앙집권적 조직을 가진 사회주의 국가에서였다면 아마도 유일하게 그들은 목적을 달성했을지 모른다. 그러나 개별 기업에 생산과 분배를 맡기는 국가에서는, 그와 같은 조치들은 필연적으로 원하는 효과들을 창출하지 못한다.

화폐가 법과 국가의 창조물이라는 개념이 지지될 수 없음은 분명하다. 이 개념은 단 하나의 시장현상에 의해서도 정당화되지 않았다. 국가가 교환의 법칙들을 지배할 힘이 있다고 오해하는 것은 화폐사용 사회의 근본적 원리들을 무시하고 내린 결론일 뿐이다.

2 화폐의 법적 개념

 교환의 두 당사자들이 그들의 의무들을 즉각 완수하고 준비

된 현금을 받고 상품을 양도할 때, 보통 국가가 사법상의 간섭을 할 동기는 전혀 없다. 그러나 교환이 현재의 재화들 가운데 하나를 미래의 재화와 교환할 때, 거래의 한 상대방이 그 계약에서의 그의 몫을 수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상대방이 그의 의무를 완수하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 그러면 사법제도가 발동될 수 있다. 가장 중요한 사례들만 언급하자면, 만약 신용으로 빌려주거나 구매하는 계약인 경우 법원은 화폐로 계약된 부채가 어떻게 청산될 수 있는지 결정해야 한다. 여기에서 법원의 직무는 거래 당사자들의 의도에 맞추어 상업적 거래들에서 당사자들이 화폐를 무엇으로 이해하고 있는지 결정하는 일이다. 법적 관점에서는, 화폐는 교환의 공통된 매개물이 아니라, 지불 혹은 부채해결의 공통된 매개물이다. 그러나 화폐가 지불의 매개물이 될 수 있는 까닭은 오로지 교환의 매개물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오로지 화폐가 교환의 매개물이기 때문에 법(法)은 화폐를, 화폐단위로 맺지 않은 의무들을 완수하는 목적에 대해서도 그 매개물로 삼는다.

법이 화폐를 단지 미지불 채무들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만 간주한다는 사실은 화폐의 법적인 정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법에서 화폐라는 용어가 의미하는 바는 사실 교환의 공통된 매개물이 아니라 법적 지불수단이다. 화폐에 대한 경제학적 정의는 입법자 혹은 법률가가 내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화폐적 부채가 어떻게 효과적으로 변제될 수 있는지 결정할 때, 그렇게 배타적일 필요는 없다. 화폐 자체 대신 화폐대용물들을 지불수단으로 소중히 여기고 받아들이는 것이 비즈니스 세계

의 일반적 관습이다. 만약 법(法)이 상업적 사용에 따라 이미 인정을 받은 화폐대용물들의 유효성을 존중하지 않는다면, 이는 모든 종류의 사기와 기만이 횡행할 문을 열어주는 것일 뿐이다. 이는 “사악한 행동에 탐닉하게 만들지 말라”(malitiis non est indulgendum)는 원칙을 손상시킬 것이다. 이 외에도 기술적 이유들로 인해 소액결제에 명목화폐를 사용하지 않고는 거의 불가능할 것이다. 심지어 부채청산의 힘을 은행권에 부여하는 것도, 그 은행권이 사업가들에게 화폐와 동등한 것으로 간주되는 한에 있어서는, 아무튼 채권자 혹은 여타 인수자들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다.

그러나 국가는 부채청산의 힘(사업가들이 화폐와 동등한 것으로 간주하지 않는) 다른 대상들에게도 부여할지 모른다. 법은, 법이 지불수단으로 간주되길 바라는 것이면 이를 지불수단으로 선언할지 모른다. 그렇게 되면 이런 법의 결정은 모든 법정에 대해, 그리고 법정의 결정을 집행하는 모든 이들에게 구속력을 가질 것이다. 그러나 어떤 물건에 법화(法貨)의 속성을 부여한다고 해서 그것이 경제적 의미에서의 화폐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재화들은 오로지 상업거래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관행을 통해서만 교환의 공통된 매개물이 될 수 있을 뿐이다. 그리고 시장에서의 교환비율들을 결정하는 것도 오로지 이 사람들의 가치평가들일 뿐이다. 국가가 지불능력을 부여한 물건들이 상업의 세계에서 실제로 사용되는 경우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반드시 그럴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 상업의 세계는, 원한다면, 그 물건들을 지불수단으로 사용하기를 거부할 수 있다.

국가가 어떤 대상을 미결제 채무를 해결하는 법적 수단으로

선언했을 때 세 가지 상황이 나타날 수 있다. 첫째, 법적 지불수단이, 계약 당사자들이 합의할 때 염두에 두었던 교환의 매개물과 동일하거나 만약 동일하지는 않더라도, 이것이 지불시점에서 이 교환의 매개물과 동일한 가치를 가지고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국가가 금을 금의 단위로 계약된 부채의무의 청산을 위한 법적 수단으로 선언할 수 있을 것이다. 혹은 금과 은의 상대적 가치가 1 대 15.5일 때 국가가 금의 단위로 된 부채를 은 15.5배로 지불함으로써 청산될 수 있다고 선언할 수도 있다. 그런 해결방법은 단지 그 합의에서 당사자들의 추정된 의도를 법적으로 재구성한 것일 뿐이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은 어떤 당사자의 이익에도 손상을 입히지 않는다. 그것은 경제적으로 중립적이다.

둘째, 국가가 계약상의 매개물보다 더 높은 혹은 더 낮은 가치를 지닌 어떤 것을 지불수단으로 선언하면 상황이 달라진다. 첫 번째 상황의 가능성은 우리가 무시해도 좋을지 모른다. 그러나 무수한 역사적 사례들이 인용될 수 있는 두 번째 상황의 가능성은 매우 중요하다. 국가라는 주체의 그런 조치는, 때로는 사회적 혹은 재정적 근거에서 비난을 면하기는 하지만, 그 근본 원칙이 기득권 보호에 있는 법적 관점에서는 그런 조치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 왜냐하면 그것은 언제나 법적 의무의 완전한 이행이 아니라, 그 의무들의 완전한 혹은 부분적 취소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국가가 상업적으로 액면가의 절반으로 평가받는 어음들을 법화(法貨, legal tender)로 선언한다면, 이는 근본적으로 채무자에게 그들의 채무를 절반으로 탕감하는 것과 다름없다. 그러나 국가의 법화(法貨) 선언은 단지 이미 계약된 화폐적 채무

들에만 영향을 준다. 상업세계는 과거의 교환 매개물을 보유할 지 아니면 스스로 새로운 것을 창출할지 자유롭게 선택한다. 상업세계가 새로운 매개물을 채택하는 경우, 상업세계는 정부가 부채청산의 완전한 힘을 부여한 법화의 유효성을 최소한 미래에는 배제하기 위해, 계약 당사자들의 법적 능력이 미칠 수 있는 한 최대한 이 새로운 매개물을 지연된 지불의 기준으로 만들려고 시도할 것이다. 19세기 마지막 10년간 독일의 복본위제도(複本位制度) 지지자들이 엄청나게 큰 권력을 획득하여 인플레이션적인 계획들을 실험해 볼 가능성을 궁리하게 되자 장기계약에 금 약관(gold clause)⁴⁶⁾이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최근의 통화평가절하(currency depreciation)도 비슷한 효과를 초래하였다. 만약 국가가 모든 신용거래들을 불가능하게 만들 생각이 없다면 국가는 금 약관과 같은 장치들을 존중하고 법정으로 하여금 이들을 적법하게 인정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국가는 스스로 통상적인 상업거래를 할 때, 구매하고, 대출을 보증하거나 빌릴 때, 지불을 하거나 받을 때에도 상업세계의 공통된 교환 매개물을 화폐로서 존중하여야 한다. 법적 기준—즉, 무제한적인 법화로서의 자격을 부여한 특정 집단의 물건들—은 상업적으로 널리 사용됨으로써 저절로 교환의 일반적 매개물로 채택된 것이 아닌 한, 사실 오직 기존의 채무를 청산하는 목적에서만 유효할 뿐이다.

46) 장기계약을 중심으로 화폐단위로 된 계약을 체결하되 화폐의 구매력이 떨어질 때 금으로 환산하여 상환한다는 조건을 붙이는 경우, 이를 금 약관이라고 한다. (역자 주)

3. 국가의 화폐 시스템에 대한 영향

🍷 화폐분야에서 국가의 활동은 원래는 주화의 제조로 한정되어 있었다. 외관, 무게, 순도(純度)상 최대한 유사한 금괴를 공급하는 것, 그리고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국가의 주화라는 표시로 인식하게끔 쉽게 모방할 수 없는 공인(公印)을 제공하는 것이 국가의 화폐와 관련한 활동의 주요 임무였으며, 지금도 그렇다. 이를 시작으로 화폐분야에서 국가의 영향력은 점차 확대되었다.

화폐분야에서 기술의 진보는 느렸다. 처음에는 주화 위의 도장은 단지 그 물질이 순도를 포함해서 진짜임을 나타낸 증거에 불과했으며, 중량은 지불할 때마다 따로 확인하여야 했다. (현재까지 알려진 것들로는 이에 대해 확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 아무튼 발전 경로가 모든 지역에서 같지는 않았을 것이다.) 나중에 서로 다른 종류들의 경화(硬貨)들이 구별되는데, 같은 종류에 속하는 개별 경화들은 서로 교환될 수 있다고 간주되었다. 그다음 단계는 병렬(並列)본위제(parallel standard)의 발전이었다. 이것은 두 화폐 시스템, 하나는 금 상품화폐에 기초한 시스템, 다른 하나는 은 상품화폐에 기초한 시스템의 병치(並置)로 구성된다. 각 개별적 시스템에 속하는 경화들은 독립적(self-contained) 집단을 구성하였다. 그 경화들의 무게는 서로 특정한 관계를 맺고 있었으며, 국가는 동일 금속의 서로 다른 경화들을 교환 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는, 점차 확립된 상업 관행을 인정함으로써 그 경화들에 대해 상업 관행과 동일한 비율의 법적 관계를 부여하였다. 이 단계는 국가의 추가적인 영향력의 발휘가 없는 상태에서 도달되었다. 국가가 그때까지

화폐분야에서 했던 것은 상업적 사용을 위한 주화의 공급이 전부였다. 주화의 통제자(統制者)로서, 국가는 특정한 중량과 순도의 금속 조각에 모든 이가 어려움 없이 어떤 금속이 함유되어 있는지, 어디에서 만들어진 것인지 알 수 있는 공인(公印)을 찍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주화의 형태로 공급하였다. 법의 제정자로서 국가는 법정화폐(legal tender)의 자격—그 중요성은 방금 소상하게 설명했다—을 이 주화들에 부여하였으며, 그리고 판사(判事)로서 국가는 이 법 조항을 적용하였다. 그러나 이 문제는 이 단계에서 끝나지 않았다. 지난 약 200년간 화폐 시스템에 대한 국가의 영향력은 이보다 커졌다. 그러나 이 한 가지만은 명백히 해야 한다. 지금에 있어서조차도 국가는 그 어떤 것이든 그것을 화폐, 즉 교환의 공통된 매개물로 직접 만들 힘은 가지고 있지 않다. 오늘날에 와서도 어떤 상품을 교환의 매개물로 만들 수 있는 것은 오직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개인들의 관행일 뿐이다. 그러나 상업적 사용에 대한 국가의 영향, 잠재적 그리고 실재적 영향이 모두 증가하였다. 먼저 국가의 영향력이 증가한 까닭은 경제주체로서의 국가 자체의 중요성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즉, 국가가 구매자(購買者)와 판매자(販賣者)로서, 임금의 지불자(支拂者)와 조세의 부과자(賦課者)로서 지난 세기들에 비해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화폐상품의 선택에 대한 어떤 한 경제주체의 영향력은 분명 시장의 거래들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비례하여 커질 것이다. 그리고 이 점은 특정 경제주체라고 해서, 즉 국가라고 해서 달라질 것이라고 가정할 이유는 전혀 없다.

그러나 그 외에도 국가는, 상업적 지위, 법의 제정자 혹은 판

사로서의 권위 때문이 아니라 화폐구조의 통제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화폐대용물들의 성격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화폐상품의 선택에 특별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화폐 시스템에 대한 국가의 영향력은 보통 국가의 입법과 사법기능으로 인한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법(法)은 권위적으로 기존 채무관계의 방향을 변경하고 특정한 방향의 새로운 계약들을 강요할 수 있다. 이로 인해 국가는 교환의 상업적 매개물의 선택에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오늘날 가장 극단적 형태의 이런 주장은 크나프(Knapp)의 『화폐에 관한 국가이론』(*State Theory of Money*)⁴⁷⁾에서 나타나지만, 그의 관점으로부터 완벽하게 자유로운 독일 저술가들은 거의 없다. 그 한 예로 헬페리히(Helfferich)를 들 수 있다. 화폐의 기원에 대해 저술하면서, 그는 사실 어떤 물건을 화폐로, 모든 종류의 이연(移延)된 지불의 수단으로 만들기에 충분한 것은 오직 교환의 공통된 매개라는 단독적 기능이 아닐까 싶다고 선언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헬페리히는 현재 경제조직에서 어떤 국가들에서는 특정한 종류의 화폐가, 그리고 여타 국가들에서는 전체 화폐 시스템이 화폐이며, 어떤 물건이 교환의 매개로서 기능하는 유일한 이유가 화폐단위로 계약된 의무적인 지급들과 채무들이 이 특정 물건으로 완수되어야 하며, 완수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개념에 집착함으로써 법으로 정했으므로 교환의 매개가 된다는 점은 어떤 종류의 의심도 있을 수 없는 진리

47) Knapp, *Die Staatliche Theorie des Geldes*, 1905, 영역본(H. M. Lucas and J. Bonar 역) *The State Theory of Money*, London 1924.

라고 간주하고 있다.⁴⁸⁾

이런 성격의 관점에 동의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런 관점은 화폐분야에서의 국가 간섭의 의미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국가가 화폐단위로 표현된 부채의 청산이라는 법률적 의미에 적합한 대상이 무엇이라고 선언할 수 있다고 해서, 국가가 교환의 매개물의 선택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 선택은 거래를 하는 사람들에게 속하는 일이다. 역사를 살펴 보면, 국가들은 그들의 국민이 그 국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고안된 새로운 화폐 시스템을 수용하기를 원했지만, 국민들은 보통 그 화폐 시스템이 아닌 다른 수단들을 채택해 왔음을 알 수 있다.

파기된 종류의 화폐로 계약이 된 채무의 이행을 위해 필요한 신규(新舊) 화폐의 법적 비율의 확립은 (단지 여타 본위제의 변화를 가져오는 중요한 조치들에 따라 본위제가 변화되었을 경우에만 중요한) 부수적인 조치일 뿐이다. 신종 화폐로 앞으로는 조세가 지불되고, 신종 화폐로만 다른 화폐로 된 부채들이 변제될 수 있는 것은 신(新) 본위제로 이행한 결과이다. 그것은 단지 신종 화폐가 상업에서 일반적으로 교환의 공통된 매개물이 될 때에만 실제로 효력을 발휘할 것이다. 화폐정책은 단지 법률적 수단만으로는, 즉 채무계약 내용의 법률적 정의(定義)와 공공지출 시스템의 법률적 정의(定義)를 변경시키는 것만으로는 결코 실행될 수 없다. 화폐정책은 주화제조의 통제자로서, 그리고 상업에서의 화

48) Helfferich, *Das Geld*, p.294; 영역본, p.312.

폐를 대신할 수 있는, 화폐에 대한 요구불 청구권의 발행자로서 국가의 배타적 권위에 근거하여야 한다. 필요한 조치들은 수동적으로 입법회의의 의정서와 공식적 관보에 수동적으로 기록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때로는 큰 재정적 희생 아래 반드시 실제로 작동되어야 한다.

하나의 귀금속 본위제(本位制)에서 다른 본위제로 국민들로 하여금 옮겨 가도록 국민들을 설득하고자 한다면, 그 국가는 시민법과 재정법의 해당 조항들에 이런 희망을 표현하는 것으로 만족한 채 쉬고 있을 수 없다. 국가는 신(新)화폐가 구(舊)화폐의 상업적 지위를 대신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신용화폐(credit money) 혹은 법정화폐(fiat money) 본위제도로부터 상품화폐로 이행할 경우에도 정확하게 마찬가지로이다. 그와 같은 변화의 과제에 직면한 그 어떤 정치가도 이 점에 대해서는 한순간도 의심해 본 적이 없다. 결정적 조치들은 법적 비율의 입법화나 신(新)화폐로 세금을 지불케 하는 명령이 아니라 신(新)화폐가 필요량만큼 공급되게 하고 구(舊)화폐를 회수하는 데 있다.

이것은 몇 가지 역사적 사례들을 통해 확인될 수 있다. 첫째, 단순한 권위의 행사만으로는 화폐제도를 수정할 수 없음은 복본위제 입법의 실패로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이 복본위제는 한 때 커다란 문제에 대한 간단한 해결책이 될 것이라고 간주되었다. 수천 년 동안 금과 은은 상품화폐로 서로 곁에서 사용되고 있었다. 그러나 이 관행의 지속은 점차 더 부담스러워졌다. 왜냐하면 병립(並立)본위제(parallel standard), 즉 두 종류의 상품을 통화로 동시에 채택하는 제도는 많은 불리한 점들을 안고 있었

기 때문이다. 사업을 하는 사람들로 부터 어떤 자발적인 지원을 기대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국가가 이 고르디우스의 매듭(Gordian knot)을 잘라 버릴 수 있다는 생각에서 여기에 간섭하기로 결정을 하였다. 탈리로 계약된 부채들은 반(半) 탈리의 2배나 반(半)의 반(半) 탈리의 4배로 상환될 수 있다고 선언함으로써 명백한 애로사항들을 예전에 제거했듯이, 서로 다른 두 귀금속 사이에 고정된 비율을 확립하려고 나선 것이다. 예를 들어 은으로 지불될 수 있는 부채들은 같은 중량의 금의 1/15.5을 지불함으로써 상환될 수 있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은 이런 고정비율의 확정으로 애로사항이 발생하지는 않을지 의심조차 하지 않았으며, 이것으로 단일 고정비율 확정의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생각하였다. 그레섬의 법칙은 서로 다른 가치를 가진 통화들을 입법에 의해 강제로 가치가 동일하게 취급하도록 할 때 발생할 일들을 설명하는데, 이런 고정비율의 확정으로 바로 그런 결과들이 나타났다. 모든 부채청산이나 이와 유사한 채무지급이 이루어지는 모든 거래에서 사용된 화폐는 전부 그 법률이 시장보다 고(高)평가하는 화폐들이었다. 법률의 평가가 우연히 기존의 시장비율과 정확하게 맞아떨어진 경우에는, 그런 효과들은 그 귀금속의 가격이 다음 번에 변동될 때까지 연기되었다. 그러나 두 종류의 화폐 사이의 법적 비율과 시장 비율이 달라지는 순간 이 효과들은 필연적으로 발생한다. 그래서 병립본위제는 입법자들이 의도했던 복본위제로 나아간 것이 아니라 어느 한 상품화폐를 본위제로 선택하는 대체적 본위제로 변하였다.

이것의 주요 결과는 적어도 당분간 두 귀금속 사이의 교체적

선택이었다. 이것은 국가가 의도한 것이 아니었다. 반대로 국가는 하나의 귀금속의 사용을 다른 귀금속에 비해 선호해서 이를 화폐의 기준으로 결정할 생각은 전혀 없었다. 국가는 두 귀금속을 동시에 유통되게 만들고자 했다. 그러나 공식적 규제는 금과 은의 상호적 대체성을 선언하면서 다른 것에 대한 한 귀금속의 시장가격을 과대평가하였으며, 그래서 화폐적 목적에 대한 이 두 귀금속 사이의 효용성을 차별화시키는 데 성공했을 뿐이다. 그 결과 두 귀금속 가운데 하나는 화폐로서 더 많이 사용되고 다른 하나는 사라지게 되었다. 국가의 화폐에 대한 입법적, 사법적 간섭은 완전히 실패하였다. 이 사례를 통해 국가가 혼자서는 하나의 상품을 교환의 공통된 매개물, 즉 화폐로 만들 수 없을 것이며, 단지 거래를 하는 모든 개인들의 행동에 의해서만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이 매우 현저하게 드러났다.

그러나 국가가 입법적 수단을 통해 달성하지 못하는 것이라도 어느 정도는 화폐주조의 통제자로서의 국가권력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대체적 본위제도(alternative standard)가 단일 금속본위제로 대체되었을 때, 국가가 간섭했던 것은 바로 국가의 후자의 능력에 의해서였다. 이것은 다양한 방식으로 일어났다. 국가가 자유주조의 권리를 철회함으로써, 주기적으로 다른 금속으로 대체되는 단일금속본위 기간들 중 어떤 한 기간에 일시적으로 저평가된 금속으로 회귀하지 못하도록 하였을 때, 단일 금속본위제로의 이행은 매우 단순하고 용이하였다.

현대적 유형의 국가규제가 필요한 단계에 그 국가가 도달하기 이전에 이미 하나 혹은 다른 금속이 더 강력해진 국가들에

서는 단일금속본위제로의 이행 문제는 훨씬 더 단순하였다. 이 경우 법(法)에 남겨진 일이란 단지 이미 확립된 상황을 비준하는 정도에 불과하였다. 국가가 사업가들을 설득해서 이미 사용되고 있는 금속을 버리고 새로운 것을 사용하고 채택하도록 시도했을 때, 그 문제는 훨씬 더 어려웠다. 이 경우 국가는 필요량만큼 새로운 금속을 제조하고 이를 과거 통화와 교환하고, 그렇게 회수된 금속을 명목화폐로 변환시키든가, 아니면 비화폐적 용도로 사용하거나 해외의 재구조를 위해 그 금속을 팔아야 했다. 1871년 독일제국(라이히)의 설립 이후 독일 화폐 시스템의 개혁은 하나의 금속상품본위제로부터 다른 본위제로의 이행의 완벽한 사례로 간주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이행에 내포된 어려움(프랑스 전쟁 배상금 덕분에 극복되었지만)은 잘 알려져 있다. 이런 어려움들은 두 가지 과제—금의 준비와 은의 처분—의 수행에 내재되어 있었다. 바로 이것이 본위제(本位制)를 변경하는 의사 결정을 내릴 때 해결해야 하는 문제의 핵심이었다. 독일제국은 시민들이 가지고 있던 은화와 은화에 대한 청구권을 받고 금과 금에 대한 청구권을 줌으로써 금본위제로의 이행을 완수하였다. 이에 상응한 법률들의 변경은 단지 변화의 수용에 지나지 않았다.⁴⁹⁾

그 후 이어지는 연도들에 화폐 시스템들을 개혁했던 오스트리아-헝가리, 러시아, 그리고 여타 국가들에서 독일에서와 정확

49) Helfferich, *Die Reform des deutschen Geldwesens nach der Grtndung des Reiches*, Leipzig 1898, 1. Bd., pp.307ff; Lotz, *Geschichte und Kritik des deutschen Bankgesetzes vom 14. März 1875*, Leipzig 1888, pp.137ff.

하게 마찬가지로 방식으로 본위제의 변경이 이루어졌다. 여기에서도 문제는 단지 적정한 수량의 금을 준비하고, 사업을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예전에 채택되던 교환의 매개물을 대신하여 이 금들이 유통되도록 해 주는 것이었다. 단일금속본위제로의 이행 과정은 과거의 법정화폐들을 현명하게 이용함으로써 엄청나게 촉진되었다. 이 나라들에서는 과거 법정화폐(fiat money) 혹은 신용화폐(credit money)를 구성하던 주화들을 새로운 종류의 화폐로 언제나 태환(兌換)될 수 있는 청구권으로 변경함으로써 그들의 경제적 성격을 근본적으로 변경하는 한편, 이들이 전적으로 혹은 부분적으로 유통이 되게 허용함으로써 이행과정에 필요한 금의 수량은 상당히 감소하였다. 이런 태환성의 부여가 그 거래에 다른 외관(外觀)을 가지게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동일한 것이었다. 이런 종류의 화폐정책을 채택한 국가들이 취한 조치들은 본질적으로는 상당한 수량의 금속의 준비였음에는 별로 의문의 여지가 없다.

화폐정책에서 국가가 입법능력을 통해 행사할 수 있는 힘의 중요성을 과장하는 것은, 단지 상품화폐에서 신용화폐로 이행하는 과정을 피상적으로 관찰한 데 기인한다. 화폐로 태환되지 않는 청구권이 화폐 자체와 다름없이 지불수단으로서 효력을 지닌다는 국가의 선언에 의해 보통 상품화폐에서 신용화폐로의 이행이 이루어져 왔다. 일반적으로 본위제의 변경을 수행하고 상품화폐를 신용화폐로 대체하는 것은 그와 같은 선언의 목적이 아니었다. 거의 대부분의 경우 국가는 단지 어떤 재정적 목적에서 그와 같은 조치들을 취하였다. 국가는 신용화폐의 창출

을 통해 자신이 처분할 수 있는 자원들을 증가시키고자 하였다. 그와 같은 계획을 추구하였지만, 화폐의 구매력의 감소를 바람직하게 여긴 것은 결코 아니었다. 그러나 그레섬의 법칙이 작동하게 만들어 궁극적으로 화폐기준의 변경을 야기한 것은 언제나 바로 이런 (화폐)가치의 절하였다. 신용화폐제도(a credit standard)로 이행하기 위해 현금지급이 중지된 적이 있었다는, 즉 은행권들의 영구적인 태환성(兌換性)이 중지되었다고 단언하는 것은 사실관계와 너무나 조화되지 않는다. 이 현금지급의 중지는 항상 국가의 의지와 합치해서가 아니라 이에 반해서 벌어졌다.

상업세계에서의 사용만이 어떤 상품을 교환의 공통된 매개물로 만들 수 있다. 화폐를 창출하는 것은 국가가 아니라 시장에서의 거래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의 공통된 관행이다. 이로부터 우리가 얻는 결론은 국가가 어떤 상품에 부채청산의 일반적 힘을 부여하는 규제를 하더라도 그 규제 자체가 그 상품을 화폐로 만들어 주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만약 국가가 신용화폐를 창출한다면, 국가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단지 이미 화폐대용물들(즉, 완전히 안전하고 즉각 화폐로 태환되는 청구권)로서 유통되고 있는 것들을 택해서 이들로부터 영구적 태환성이라는 그들의 본질적 성격을 박탈함으로써 가치평가의 목적들을 위해 이들을 분리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점은 자연히 법정화폐의 경우 더욱 그럴 것이다.) 상업은 언제나 정부 신용통화(government credit currency)를 도입하려는 여타 방법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려 해왔다. 신용화폐를 유통시키려는 시도는, (신용화폐에 상응하는) 해당 경화(硬貨)와 은행권들이 이미 화폐대용물로 유통되고 있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결코 성공적이지 못하였다.⁵⁰⁾

이것이 끊임없이 과장되어 온 국가의 화폐제도에 대한 영향력의 한계이다. 화폐주조의 통제자(統制者)로서의 자신의 위치를 이용해, 그리고 화폐에 대한 요구불 청구권으로서의 화폐대용물들의 지위를 박탈함으로써 화폐대용물의 성격을 변경시킬 수 있는 자신의 힘을 이용해, 그리고 무엇보다도 통화변경의 비용을 부담할 수 있게 해 주는 재정적 자원이라는 수단을 통해, 국가가 특정한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상업 세계의 사람들로 하여금 한 종류의 화폐를 버리고 다른 종류를 채택하도록 설득하는 것뿐이다. 그것이 전부이다.

50) Subercaseaux, *Essai sur la nature du papier monnaie*, Paris 1909, pp.5ff.

1. 생산재도 소비재도 아닌 화폐

🍷 경제재(經濟財)는 두 가지 집단, 인간의 필요를 직접적으로 충족시키는 것과 이를 간접적으로 충족시키는 것, 즉 소비재(1차 재화)와 생산재(고차 재화)로 분류하는 것이 보통이다.⁵¹⁾ 화폐를 이 집단들 중 하나로 분류하려는 시도는 극복할 수 없는 어려움에 직면한다. 화폐가 소비재가 아님을 보이려고 노력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화폐를 생산재라고 부르는 것도 정확하지 않기는 마찬가지이다.

물론 오직 경제재의 이중적 분류만이 가능하다면, 우리는 화폐를 이 중 하나의 집단에 속하는 것으로 분류하고 만족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의 입장이었다. 화폐를 소비재라고 부르는 것은 터무니없었으므로, 화폐를 생산재라고 부르는 것 말고는 대안이 없었다.

분명 자의적인 이런 분류방법에 대해 보통 그저 매우 피상적인 해명만이 주어졌을 뿐이다. 예를 들어 로셔(Roscher)는 화폐

51) Menger, *Grundsätze der Volkswirtschaftslehre*, 2d ed.(Vienna, 1923), pp.20ff.; Wieser, *Über den Ursprung und die Hauptgesetze des wirtschaftlichen Wertes*(Vienna, 1884), pp.42ff.

가 “모든 이전(移轉)의 주요한 수단”(vornehmstes Werkzeug jeden Verkehrs)이라고 언급하는 것으로 충분히 해명되었다고 생각하였다.⁵²⁾

로셔에 반대하여, 크니스(Knies)는 생산재와 소비재라는 2중적인 분류를 생산수단, 소비의 대상, 그리고 교환의 매개물이라는 3중의 분류로 대체함으로써 재화를 분류할 때 화폐를 따로 분류할 여지를 남겨 두었다.⁵³⁾ 이 점에 대한 크니스의 주장은 불행하게도 너무 불충분하였고, 그 어떤 심각한 관심도 불러일으키지 못한 채 대개 오해되곤 하였다. 그래서 헬페리히(Helfferich)는 판매·구매 거래는 그 자체로 생산행위가 아니라 (개인들 간의) 이전의 행위라며 크니스의 제안을 논박하고자 하였다. 헬페리히는 판매·구매를 운송에 비유하며 이렇게 단언하였다. 운송은 그 자체로 생산행위가 아니라 (지역 간) 이전의 행위라는 근거에서, 그리고 소유가 변한다고 재화의 속성이 변하지 않듯이, 운송을 한다고 재화의 속성이 변하지 않는다는 근거에서, 동일한 종류의 반대 논리가 운송수단을 생산수단에 포함하는 것에 대해 제기될 수 있을 것이다.⁵⁴⁾

여기에 개재된 더 깊숙한 이슈를 흐리게 만든 것은 명백히 독일어 ‘Verkehr’의 애매성이다. 한편으로는 *Verkehr*는 상업(*commerce*), 즉 개인들 입장에서의 재화와 서비스의 교환으로 번역될 수 있

52) Roscher, *System der Volkswirtschaft*, ed. Pöhlmann, 24th ed.(Stuttgart, 1906), Vol.1, p.123.

53) Knies, *Geld und Kredit*, 2d ed.(Berlin, 1885), Vol.1, pp.20ff.

54) Helfferich, *Das Geld*, 6th ed.(Leipzig, 1923), pp.264f.; *Money*(London, 1924), p.280.

는 뜻을 담고 있다. 그러나 이 단어는 아울러 사람들, 재화, 정보의 공간상의 이동을 의미한다. 독일어 *Verkehr*가 가진 이 두 가지 의미는 명칭 이외에는 전혀 공통점이 없다. 그러므로 광의의 *Verkehr*—광의에서는 재화를 한 사람의 소유에서 다른 사람의 소유로 이전하는 것을 의미한다—와 협의의 *Verkehr*—협의에서는 공간의 한 지점으로부터 다른 지점으로의 재화의 이전을 의미한다—를 구분하지 않고 말함으로써 그 단어의 두 가지 의미가 마치 연관되어 있는 것처럼 암시되는 상황을 용인할 수는 없다.⁵⁵⁾ 대중적인 용어법도 여기에서 광의와 협의의 의미가 아니라 두 가지 별개의 의미들을 인식하고 있다. 그 의미들을 우발적으로 혼동하거나 두 가지 의미를 하나의 공통된 용어로 나타내게 된 것은 아마도 교환거래들이, 항상 그런 것은 결코 아니지만, 흔히 공간을 통한 운송행위를 수반하거나 반대로 운송행위가 교환거래를 수반한다는 사실에 기인하는 것일 수 있다.⁵⁶⁾ 그러나 이것이 (경제)과학이 본질적으로 다른 이 과정에 내재적 유사성을 귀속시켜야 할 이유가 될 수 없음은 명백하다.

사람들, 재화 그리고 정보의 수송은 그것이 예를 들어 관광여행과 같은 소비행위가 아니라면 생산의 일부로 간주되어야 한다. 이 점은 결코 의심받은 적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55) 예를 들면 Philippovich, *Grundriss der politischen Ökonomie* 1st-3d eds.(Tübingen, 1907), Vol.2; Wagner, *Theoretische Sozialökonomik* (Leipzig, 1909), Vol.2, Part 2 p.1.

56) 예전의 의미, 적어도 문헌에서의 유일한 예전의 의미는 재화의 판매와 관련된 것이었다. 1891년에 간행된 그림의 사전(*Grimm's Dictionary*)의 12권조차도 운송과 관련된 의미에 대해 언급하지 않은 것은 놀랍다.

가지 장애물이 이 점을 인식하지 못하게 하였다. 첫째 장애물은 생산의 속성에 대한 광범위한 오인(誤認)이다. 생산을 종전에 존재하지 않던 것을 존재하게 만드는 것, 즉 그 단어의 진정한 의미에서 ‘창조’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생산에 대한 순진한 견해가 있었다. 이 견해로부터 창조적 생산활동과 재화의 단순한 이동을 대비시키기는 쉽다. 이런 식의 상황 인식은 전적으로 부적절하다. 사실 생산에서 하는 사람의 역할은 오로지 그의 개인적 힘을 자연의 힘들과 특정 방식으로 결합하는 데 있다. 인간과 자연의 협력으로 물질들이 원하던 어떤 특정한 방식으로 배열된다. 인간의 그 어떤 생산행위도 물질의 공간상의 위치를 변경하고 그 나머지는 자연(自然)에 맡기는 것 이상이 아니다.⁵⁷⁾ 이 논의를 통해 우리는 운송을 생산과정으로 간주하는 데 대한 반대 중 하나를 기각할 수 있다.

둘째 장애물은 재화의 속성에 대한 불충분한 통찰로부터 비롯된다. 여타 자연적 성질들 가운데 어떤 물건의 공간상의 위치는 인간의 필요를 만족시키는 그 물건의 능력에 대해 중요한 시사점들을 가지고 있으나, 이 점은 자주 간과되고 있다. 완전히 동일한 기술적 구성요소를 가지고 있는 물건들이라 하더라도, 만약 이것들이 같은 장소에 있지 않고, 즉각적으로 소비되거나 혹은 즉각적으로 더 생산될 수 있는지에 차이가 있다면, 이 물건들은 서로 다른 종류의 재화들의 견본들로 간주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공간상의 물건의 위치는 그 물건의 경제적 혹은 비(非)경

57) J. S. Mill, *Principles of Political Economy*(London, 1867), p.16; Böhm-Bawerk, *Kapital und Kapitalzins*, pp.10ff.

제적 속성을 결정하는 하나의 요소로서만 인식되어 왔다. 사막에서의 식용수(食用水)와 물공급이 원활한 산간지역에서의 식용수가 화학적·물리적 유사성과 같증을 해소하는 동일한 속성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데 있어 완전히 다른 중요성을 지니고 있다. 사막 여행자의 같증을 해소시킬 수 있는 유일한 물은 당장 소비할 수 있는, 그 장소에 있는 물이다.

그러나 경제재 집단 자체 안에서는 상황의 요인(the factor of situation)은 단지 어떤 종류의 재화들—즉, 사람에 의해서든 혹은 자연에 의해서든 상관없이 그 재화의 위치가 고정된 재화들—에 대해서만 고려되어 왔다. 심지어 이 중 가장 두드러진 경우인 토지 이외에는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이동 가능한 재화들에 관한 한 상황의 요인은 무시해도 좋은 것으로 간주되어 왔다.

이러한 태도는 과학적 기술과는 조화로운 것이다. 현미경으로는 두 무더기의—하나는 프라하의 창고 속에, 다른 하나는 런던의 창고 속에 있는—참채당(蔗菜糖) 사이의 그 어떤 차이도 밝혀내지 못한다. 그러나 경제학의 목적에서는 두 무더기의 설당을 다른 종류의 재화로 간주하는 것이 더 낫다. 엄격하게 말해 오직 당장 소비될 수 있는 곳에 있는 소비재들만을 1차 재화로 불러야 한다. 그렇지 않은 여타 경제재(經濟財)들은 비록 기술적 의미에서는 소비될 수 있는 상태라고 하더라도, 보완적 재화인 운송수단과 결합하여야 비로소 1차 재화로 변경될 수 있는 고차 재화로 간주되어야 한다. 이렇게 조명하면 운송수단은 분명 생산재이다. 비저(Wieser)는 이렇게 말한다. “생산은 복지로부터

떨어져 있는(remote) 조건들 중에서 더 유리한 조건을 활용하는 것이다.”⁵⁸⁾ 비저는 ‘떨어져 있다’는 단어를 비유적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우리가 이 단어를 은유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한 번 정도 문자 그대로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다고 이해해서 생산을 지리적으로 더 떨어진 상태에서 덜 떨어진 상태로 만드는 것이라고 이해하지 않아야 할 이유는 전혀 없다.

우리는 공간의 이동은 생산의 한 종류이며, 운송수단은 관광 요트와 같은 소비재가 아닌 이상 생산재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살펴보았다. 화폐에 대해서도 이 점은 마찬가지일까? 화폐가 제공하는 경제적 서비스들은 운송수단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필적하는 것일까? 조금도 그렇지 않다. 생산은 화폐가 없이도 가능하다. 고립된 가계에서도, 사회화된 공동체에서도 화폐가 (생산에) 필요한 것은 전혀 아니다. 그 어느 곳에서도 우리는 화폐의 사용이 그 재화의 생산에 필요조건인 1차 재화를 발견할 수 없다.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이 화폐를 생산재로 간주한 것은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위에 의지한 주장들이라고 해서 유효한 것은 아니다. 어떤 한 이론의 증명은 그 추론의 정확함에 있는 것이지 누가 그 이론을 지지하느냐에 있지 않다. 우리는 우리 분야의 최고봉의 학자들에게 적절한 존경심을 표시해야 하는 동시에 그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자신들의 입장을 아주 철

58) Wieser, *Über den Ursprung und die Hauptgesetze des wirtschaftlichen Wertes*, p.47. 다음의 문헌도 참고. Böhm-Bawerk, *op. cit.*, pp.131f.; Clark, *The Distribution of Wealth*(New York, 1908), p.11.

저하게 정당화하지 못했다고 말해야 한다. 이는 뵘바베르크에게서 두드러진다. 이미 언급했듯이 크니스(Knies)는 경제재를 소비재와 생산재로 나누는 기존의 관습적인 2중의 분류 대신 이를 소비재, 생산재, 교환의 매개물이라는 3중의 분류로 대체하자고 제안하였다. 일반적으로 뵘바베르크는 크니스를 최대의 존경심으로 대하며, 크니스와 다른 입장을 취해야만 한다고 느낄 때, 뵘바베르크는 크니스의 주장을 매우 조심스럽게 비판하였다. 그러나 이 분류의 문제에서 그는 단순히 크니스의 주장을 무시하고 있다. 그는 주저하지 않고 화폐를 그의 사회적 자본의 개념 속에 포함시키고 부수적으로 화폐를 추가적인 생산을 도와주도록 예정되어 있는 하나의 생산물로 구체화하고 있다. 그는 화폐가 생산이 아닌 교환의 도구라는 반대론에 대해 간략하게 언급은 하고 있으나, 이 반대론에 대해 답변을 하지는 않고, 생산자들과 중간상인들의 수중에 있는 재화 스톡들을 중간재로서가 아니라 당장의 소비를 위한 재화로 취급하는 이론들에 대해 확장된 비판을 시작하고 있다.

뵘바베르크의 주장은 결론적으로 재화들이 필요한 곳으로 이전될 때까지는 생산이 완성된 것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운송이라는 마지막 과정이 끝날 때까지 재화가 곧바로 소비될 준비가 된 것으로 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현재의 논의에는 아무런 기여도 하지 않고 있다. 왜냐하면 일련의 추론이 결정적인 연결고리에서 무너지고 있기 때문이다. 농부가 옥수수, 목재와 함께 집으로 가져온 말과 마차가 생산수단으로서 그리고 자본으로서 간주되어야 한다

고 증명하고 나서, 뵘바베르크는 이렇게 추가하고 있다. “논리적으로 더 넓은 경제적 의미에서 집으로 가져오는 모든 대상과 장비, 운송되어야 하는 것들, 도로, 철도, 선박, 그리고 상업적 도구인 화폐는 자본의 개념에 포함되어야 한다.”⁵⁹⁾

이는 로셔(Roscher)가 저지른 것과 동일한 논리적 비약이다. 이것은 (물건의 효용을 변경시키는) 운송과 (전혀 별개의 경제적 범주를 구성하는) 교환 사이의 차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화폐가 생산에서 수행하는 역할을 선박이나 철도가 수행하는 것과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화폐는 분명 회계장부, 교환 리스트, 주식거래소, 혹은 신용 시스템과 동일한 의미에서 ‘상업의 도구’가 아니다.

뵘바베르크의 주장은 그 자체로도 모순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다. 자코비(Jacoby)는 뵘바베르크가 생산자와 중간상인의 수준에 있는 화폐와 상품의 스톡을 사회적 자본으로 취급하면서 동시에 이 사회적 자본이 특정 경제조직과는 독립적인 순수한 경제적 범주이며 모든 법률적 정의(定義)들과는 독립적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반대한다. 왜냐하면 화폐와 소비재의 ‘상품’ 측면은 ‘상업적’ 유형의 경제조직에만 존재하는 특이점이기 때문이다.⁶⁰⁾

위에서 암시하듯이 이 비판이 상품을 생산재로 간주하는 데

59) Böhm-Bawerk, *op. cit.*, Part II pp.131ff. 그리고 역사적 측면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고. Jacoby, *Der Streit um den Kapitalbegriff*(Jena, 1908), pp.90ff; Spiethoff, “Die Lehre vom Kapital,” *Schmoller- Festschrift Die Entwicklung der deutschen Volkswirtschaftslehre im 19. Jahrhundert* (Leipzig, 1908), Vol.4, p.26

60) Jacoby, *op. cit.*, pp.59f.

대한 반대인 한에 있어서는 이 비판은 별 의미가 없다. 이 점에 관한 한 의심할 여지없이 뵘바베르크가 옳고 그의 비판자가 그르다. 그러나 화폐의 포함에 대한 질문인 두 번째 논점에 관해서는 정반대이다. 대부분 인정하듯이 자코비 자신의 자본개념에 대한 논의는 비판에서 자유로운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뵘바베르크가 자코비의 개념을 수용하지 않은 것은 아마 정당화될 수 있을 것이다.⁶¹⁾ 그러나 이것이 현재 우리의 관심사가 아니다. 우리의 관심사는 단지 재화의 개념 문제일 뿐이다. 이 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뵘바베르크는 자코비와 의견이 다르다. 그의 대작 『자본과 이자』(*Capital and Interest*) 제3판 제II권에서 뵘바베르크는 복잡한 사회주의적인 조직조차도 분배를 기다리는 생산물에 관한 ‘유사 화폐’와 같은 서로 차별화되지 않은 명령서들이나 혹은 어떤 종류의 증명서들과 같은 것이 없이는 작동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⁶²⁾ 이 특별한 그의 주장은 우리의 현재 문제를 직접 겨냥한 것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 표현된 의견이 우리의 목적에도 유용한 어떤 것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 탐구해 보는 것은 바람직하다.

모든 종류의 경제조직은 생산 메커니즘뿐만 아니라 생산된 것을 분배하는 메커니즘도 필요하다. 개별 소비자들 사이의 재화의 분배는 생산의 일부를 구성한다는 점, 결과적으로 우리는 생산수단에 증권거래소, 회계장부 등과 같은 상업의 물리적 도구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 담장, 철로, 담, 자물쇠, 금고, 법정의

61) Böhm-Bawerk, *op. cit.*, p.125n

62) *Ibid.*, p.132n.

여러 비품들, 재산권 보호를 위탁 받은 정부기구의 장비들과 같은, 상업의 기초인 법적 시스템을 유지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것을 포함하여야 한다는 점에는 거의 의심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사회주의 국가에서 이 범주는 무엇보다 뵘바베르크의 “개별적으로 식별할 수 없는 증서들”(undifferentiated certificates)을 포함할지 모른다. (그러나 우리는 그 증서에 ‘유사 화폐’라는 이름을 허용할 수 없다. 왜냐하면 화폐는 증서가 아니기 때문에 화폐와 같은 증서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이다. 화폐는 언제나 경제재이며, 청구권—증서인 것을 지칭하는—이 화폐와 같다고 말하는 것은 단지 권리와 사업관계를 재화라고 간주하는 과거의 관습으로 복귀하는 것일 뿐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그 자신의 권위에 호소하여 뵘바베르크에 반대할 수 있다.⁶³⁾)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분배재(distribution goods) 속에, 그리고 생산재 속에 화폐를 넣을 수 없는 까닭은 다음과 같은 고려 때문이다. (그리고 우연하게도 동일한 반대가 소비재 속에 화폐를 포함시키는 데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소비재 혹은 생산재의 유실은 만족의 손실을 초래하고 인류를 더 가난하게 한다. 그러한 재화의 획득은 인간의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초래하며, 인류를 더 부유하게 만든다. 그러나 화폐의 유실 혹은 획득에 대해서도 똑같이 말할 수는 없다. 생산재 혹은 소비재의 이용 가능한 수량의 변화들, 그리고 화폐의 이용 가능한 수량의 변화들, 이 양자는 모두 가치의 변화들을 수반한다. 그러나 생산재와 소비재의 변화들은 그 수량의 변화로부터 발생하는 손실을 완화시키지 않으며 만족의 증가도 감소시키지 않는 데 비해, 화폐가치의 변화들

63) Böhm-Bawerk, *Rechte und Verhältnisse*, pp.36ff.

은 화폐수량의 증가 혹은 감소에도 불구하고 인류의 경제적 지위가 마찬가지로 유지되게 해 주는 방식으로 화폐에 대한 수요의 변화로 수용된다. 화폐수량의 감소가 공동체 구성원들의 후생을 감소시킬 수 없듯이, 화폐수량의 증가가 그 구성원들의 후생을 증가시킬 수 없다. 이 관점에서는 화폐로 채택된 재화들은 정말 애덤 스미스가 “아무 것도 생산하지 않는 …… 죽은 스톡”이라고 불렀던 바로 그것이다.⁶⁴⁾


우리는 어떤 조건들 아래에서는 간접교환이 시장의 필연적 현상이라는 점을 살펴보았다. 재화들이 그 자체로서가 아니라 다음의 교환에서 처분되기 위해 수요가 되고 획득되는 상황은 현재 유형의 시장거래로부터 결코 사라질 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모든 교환거래 중 압도적 다수의 경우에 이 상황을 불가피하게 만드는 조건들이 현존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제 간접교환의 경제발전은 교환의 공통적 매개물의 채용, 화폐제도의 확립과 정교화로 귀결된다. 화폐는 사실 경제질서에 필수불가결하다. 그러나 경제재로서 화폐는 회계장부, 감옥, 무기들과 같은 방식으로서의 사회적 분배도구의 어떤 물리적 구성요소는 아니다. 비록 화폐의 사용이 경제질서가 기초하고 있는 여러 근본적 원리들 가운데 하나일지 모르지만, 총생산 결과 가운데 화폐의 협조에 의존하지 않은 부분은 존재하지 않는다.

생산재는 그 생산재의 생산물의 가치로부터 그들의 가치를 도출한다. 그러나 화폐는 그렇지 않다. 화폐의 추가적 수량의 공급

64) Smith, *The Wealth of Nations*, Cannan's ed.(London, 1930).

으로부터 사회구성원의 복지가 증가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화폐의 가치를 다스리는 법칙들은 생산재나 소비재의 가치를 다스리는 법칙들과 다르다. 이들의 공통점은 그들의 일반적인 기본원칙, 근본적인 가치의 경제법칙일 뿐이다. 이것이 경제재를 생산수단, 소비의 대상, 교환의 매개물로 분류하여야 한다는 크니스의 제안을 전적으로 정당화한다. 결국 경제용어의 기본적인 목적은 가치이론에 대한 탐구를 촉진하는 데 있기 때문이다.

2. 사적 자본의 일부로서의 화폐

 우리는 화폐와 생산재 사이의 관계에 대한 탐구를 용어에 대한 관심에서 시작한 것이 아니었다. 용어 자체의 목적에서 볼 때 중요했던 점도 우리의 최종적인 결론이 아니라 화폐를 여타 경제재(經濟財)들로부터 구별시키는 화폐의 특이성들에 대한 우리의 주장에 의해 우연히 밝혀진 것일 뿐이다. 교환의 공통적 매개물의 특별한 특성들은 우리가 화폐의 가치와 그 변동을 다스리는 법칙들을 고려하는 부분에서 좀 더 자세히 검토될 것이다.

그러나 화폐가 생산재가 아니라는 우리의 추론 결과도 아무 쓸모없는 것이 아니다. 이 결론은 우리가 화폐가 자본인지 아닌지에 대한 질문에 대답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이 질문도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이 책의 제3부에서 다룰 균형(均衡)이자율과 화폐(貨幣)이자율 사이의 관계에 대한 문제에 대한 대답이 옳은 것인지 검토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하는 데 그 목적

이 있다. 만약 각 결론이 다른 결론을 확증한다면, 상당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의 주장이 우리를 오류에 빠지지 않게 하였다고 가정할 수 있을 것이다.

화폐와 자본의 관계에 대해 연구하면서 직면하는 첫 번째 심각한 어려움은 자본의 개념 정의에 대한 의견의 차이로부터 발생한다. 자본의 정의에 대한 학자들의 견해는 경제학의 어떤 부분보다 다양하다. 제안된 많은 정의들 가운데 그 어느 것도 일반적 승인을 얻지 못하였다. 오늘날 사실 자본이론에 대한 논쟁은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만약 우리가 무수한 갈등관계의 개념 중 뵘바베르크의 개념을 선택하고 이것이 화폐와 자본의 관계에 대한 우리의 탐구를 안내하도록 한다면, 비록 그러한 연구가 궁극적으로 (뵘바베르크가 이 문제에 기울인 노고에 빚지지 않을 수 없겠지만) 그가 도달한 결론과는 크게 다른 결론으로 귀결된다 하더라도, 우리는 오로지 이자율 문제에 대한 그 어떤 진지한 연구에도 뵘바베르크가 최선의 안내자라는 사실에 기대어 우리의 절차를 정당화했을 수 있다. 게다가 뵘바베르크가 그의 개념을 확립하고 이를 그의 비판자들로부터 방어하기 위해 제시했던 모든 비증 있는 주장들은 그와 같은 선택을 지지할 것이다. 그러나 이런 고려와는 상당히 별개로, 다른 자본개념은 그 어느 것도 뵘바베르크의 개념만큼 명료하게 발전되지 않았다는 점이 매우 결정적인 이유일 것 같다.⁶⁵⁾ 이 마지

65) 멩거와 클락의 논의를 염두에 두더라도 이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아무튼 이 문제와 제3부 제5장에서 다루는 문제들에 대한 탐구는, 멩거와 클락의 자본 개념으로부터 시작되어 궁극적으로는 뵘바베르크에 근거한 것과 동일한 결과에 이를 것이다.

막 논점이 특히 중요하다. 우리의 현재 논의의 목적은 용어에 대한 어떤 종류의 결론에 도달하거나 개념들에 대한 어떤 비판을 제공하려는 것이 아니라, 단지 균형이자율과 시장이자율 사이의 관계 문제에 중요한 하나 혹은 두 논점에 약간의 조명을 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사물을 정확하게 분류하는 것보다 사물의 속성에 대한 애매한 개념들을 피하는 것이 오히려 더 중요하다. 화폐가 자본의 개념 속에 포함되어야 할지에 대해 다양한 의견들이 견지될 수 있다. 이런 속성의 개념들의 경계 결정은, 이와 관련하여 의견의 차이가 쉽게 발생할 수 있는 편의의 문제일 뿐이다. 그러나 화폐의 경제적 기능은 완전한 동의에 이를 수 있을 그런 (원리의) 문제이다.

전통적인 경제학 용어를 따라서 뵘바베르크가 구분한 자본의 두 개념 가운데 사적(私的) 혹은 획득적 자본은 더 오래되고 광범위한 것이다. 이것이 이로부터 더 좁은 개념인 사회적 혹은 생산적 자본이 분리되어 나온 원래 뿌리인 개념이다. 그래서 우리의 탐구를 사적 자본과 화폐의 연관관계를 따져 보는 데서 시작하는 것은 논리적이다.

뵘바베르크는 사적 자본을 재화의 획득에 수단으로 봉사하는 생산물들의 총합으로 정의한다.⁶⁶⁾ 이 범주에 화폐가 포함되어야 한다는 데 의심이 제기된 적이 없었다. 사실 자본의 과학적 개념의 발전은 이자가 수취되는 화폐의 합이라는 개념으로부터 출발한다. 이 자본개념이 조금씩 넓혀져서 마침내 현대의 과학

66) Böhm-Bawerk, *Kapital und Kapitalzins*, pp.54f.

적 논의에서 사용되는 형태를 띠게 되었다.

이런 자본개념의 점진적 진화는 동시에 자본으로서 화폐의 기능에 대한 이해의 증대를 의미하였다. 역사에서 일찍부터 평범한 대중들은 화폐가 실제로 작동한다는 사실에 대해 대부된 화폐가 이자를 낳는다는 설명을 발견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설명은 과학의 엄밀성의 요구를 오래 충족시킬 수 없었다. 과학은, 화폐 그 자체는 아무 것도 낳지 않는다는 사실을 근거로 이런 설명을 논박하였다. 금언 ‘돈이 돈을 낳지 못한다’(pecunia pecuniam parere non potest)의 모습으로 나타난 그 견해는 고대에 있어서조차 일반적으로 인식되고 있었음이 틀림없다. 이 견해는 나중에 수백 년 심지어 수천 년 동안 이자율의 문제에 대한 모든 논의의 기초가 되었으며, 아리스토텔레스는 의심의 여지없이 그의 『정치학』의 유명한 구절에서 이것을 새로운 원리로 언급한 것이 아니라 단지 일반적으로 수용된 상식으로 취급하였다.⁶⁷⁾ 그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화폐의 물리적인 불임성(不妊性)에 대한 인식은 자본과 이자 문제에 대한 완전한 깨달음으로 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단계이다. 만약 대부된 일정액의 화폐가 ‘과실’을 맺는다면, 그리고 화폐의 물리적 생산성의 현상을 설명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다면, 다른 설명들을 찾아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 하나의 설명을 향한 다음 단계를 제공한 것은, 대부가 이루어지고 난 후 채무자는 일반적으로 그 돈을 다른 경제재로 교환하며, 자신들의 돈을 대부해 주지 않고 그 돈으로부터 이윤

67) Aristotle, *Politics*, I, 3, 23.

을 얻고자 하는 그 돈의 소유자들도 앞의 채무자와 동일하게 그 돈을 다른 경제재로 교환한다는 관찰이었다. 이것이 위에서 언급된 자본개념을 확장하고 화폐이자율의 문제를 '자연'이자율의 문제로 발전시킨 출발점이었다.

사실 그 이상의 단계들이 성취되기까지 수 세기의 세월이 지나야 했다. 처음에는 자본이론의 발전이 완전히 정지된 적도 있었다. 더 이상의 진보가 사실상 요청되지 않았으며, 이미 성취된 것만으로 충분하고도 남았다. 왜냐하면 당시 과학의 목적은 현실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이상(理想)의 정당성을 입증하는데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여론은 이자(利子)의 수취를 찬성하지 않았다. 후일에 와서도 그리스-로마법에서 이자의 수취가 인정되었지만 그것은 존경할 만한 일로 여겨지지 않았으며 모든 고전시대 저술가들은 이자 수취를 저주하는 일에 앞다투어 나섰다. 교회가 이자의 금지를 채택하고 성경에서 인용하면서 이자에 대해 부정적 태도를 취하자, 이 문제를 다루고자 하더라도(교회로부터) 권위를 부여받지 못한 모든 시도들은 아예 밑바닥에서부터 그 근거를 빼앗기게 되었다. 그 문제에 관심을 돌렸던 모든 이론가는 이미 이자의 수취는 해로우며 자연스럽지 못하고, 자비롭지 못하다는 확신을 가지고 출발했으며, 이자 수취에 대한 새로운 반대들을 찾는 것이 그의 주된 과제였다. 그가 할 일은 이자가 왜 존재하게 되었는지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이자가 비난받아야 한다는 명제를 유지시키는 데 있었다. 그와 같은 환경 아래에서 화폐의 불임성의 원칙은, 마치 이것이 이자 지불에 반대하는 엄청난 강렬한 주장인 것으로, 한 저술가에서 다


른 저술가에게로 무비판적으로 널리 전수되었다. 이 불임성의 원칙은 그 내용 때문이 아니라 그 원칙이 지지하는 결론으로 인해 쉽게 전파되었고, 그래서 이자이론의 발전에 걸림돌이 되었다. 이자에 대한 과거 교회법 이론이 붕괴한 이후 새로운 자본 이론을 구축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나자 이 화폐 불임설은 더 이상 장애물이 아니라 오히려 이 이론의 발전에 도움이 되었다. 이 불임설의 첫 번째 효과는 자본의 개념과 결과적으로 이자 문제의 확장을 가져오지 않을 수 없었다는 점이다. 통상적인 용어와 학자들의 전문용어에서 자본은 더 이상 대부분 화폐의 합계가 아니라 '축적된 재화의 스톡'(accumulated stocks of goods)을 의미하게 되었다.⁶⁸⁾

화폐 불임성(不妊性)의 원칙은 우리의 문제에서 또 하나의 중요성을 지닌다. 이 원칙은 사적 자본을 구성하는 물건들의 집단 안에서 화폐의 위치에 대해 빛을 밝혀 준다. 왜 우리는 화폐를 자본에 포함시키는가? 왜 대부분 화폐총액에 대해 이자가 지불되는가? 어떻게 화폐총액을 빌려 주지 않으면서도 소득을 창출하게끔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가? 이 질문들에 대한 대답들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을 수 없다. 화폐는, 이것이 오직 다른 경제제와 교환될 때에 한해서만 하나의 획득수단(acquisitive instrument)이다. 이 점에서 화폐는 사적 자본의 일부를 구성하는 다른 소비재들과 비교될 수 있다. 이런 비교가 가능한 까닭은 오로지 그 소비재들이 그 소유자들 자신들에 의해 소비되지 않고 교환

68) Böhm-Bawerk, *Kapital und Kapitalzins*, Part I, pp.16ff., Part II, pp.23ff.

이라는 수단을 통해 여타 재화나 서비스의 획득을 위해 사용되기 때문이다. 화폐는 이 소비재들과 마찬가지로 더 이상 획득자본이 아니다. 진정한 획득자본은 그 화폐나 그 소비재들이 교환되는 대상인 재화들로 구성된다. '놓고 있는'(lying 'idle') 화폐—즉, 다른 재화들로 교환되지 않은 화폐—는 자본의 일부가 아니다. 그것은 아무런 과실도 생산하지 않는다. 화폐는 오로지 그것이 어떤 한 개인이 다른 자본재를 획득할 수 있는 수단일 경우에만, 그리고 그런 한에 있어서만 그 개인의 사적 자본의 일부이다.

3. 사회적 자본의 일부가 아닌 화폐

 사회적 혹은 생산적 자본은 장래의 생산에 고용하고자 하는 생산물의 총합을 의미하기 위해 뵘바베르크가 쓰는 용어이다.⁶⁹⁾ 만약 우리가 위에서 상술했던 견해들—여기에 따르면 화폐는 생산재 속에 포함될 수 없다—을 받아들인다면, 화폐는 사회적 자본 속에도 포함될 수 없다. 뵘바베르크가 자신보다 앞선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화폐를 사회적 자본 속에 포함시킨 것은 사실이다. 이 태도는 논리적으로 화폐를 생산재로 간주하는 것으로부터 도출된다. 이것은 화폐를 사회적 자본으로 간주하는 태도에 대한 유일한 정당화이며, 화폐가 생산재가 아님을 보여 주려고 애쓰면서 우리는 이 정당화가 얼마나 근거가 없

69) *Ibid.*, Part II pp.54f., 130ff.

는지 암시하였다.

아무튼 아마도 우리는 화폐를 생산재 속에, 그리고 결과적으로 자본재 속에 포함시킨 저술가들은 매우 일관되지는 못하다는 사실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그들은 보통 화폐와 자본의 개념을 다루는 자신들의 시스템의 분할구조 속에서, 화폐를 사회적 자본의 일부로 간주한다. 그러나 문제는 그들이 이로부터 더 이상의 명백한 결론조차 도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화폐의 자본으로서의 본질에 대한 원칙이 논리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곳에서 이들은 그렇게 해야 한다는 사실을 갑자기 망각한 것처럼 보인다. 이자율의 결정요인들을 개관하면서, 저술가들은 중요한 것은 화폐수량의 크고 작음이 아니라 다른 경제재들의 크고 작은 수량임을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이 단언은 의심의 여지없이 관련된 문제의 정확한 요약이지만, 이 단언을 화폐가 생산재라는 또 다른 단언과 조화시키는 것은 그저 불가능할 뿐이다.

1. 사회주의 공동체에서의 화폐

우리는 어떤 조건들—노동의 분업과 욕구의 세분화가 확장될수록 더 자주 발생하는—아래에서는 간접교환은 불가피하며, 간접교환의 진화를 통해 점차 소수의 상품 혹은 심지어 하나의 상품만이 교환의 공통 매개물로 채택된다는 사실을 살펴보았다. 어떤 종류의 교환도, 그래서 어떤 간접교환도 전혀 없을 때, 교환의 매개물의 사용은 자연스럽게 누구에게도 알려지지 않았다. 이것은 고립된 가계가 전형적인 경제단위일 때의 상황이었다. 그리고 이것은 사회주의자들의 열망(socialist aspirations)에 따르면, 순수한 사회주의 질서—생산과 분배가 체계적으로 중앙당국에 의해 규제되는—아래에서는 어느 날엔가 다시 나타날 상황이다. 이 미래 사회주의 시스템에 대한 비전은 그 예언자들에 의해 상세하게 묘사되지 않았다. 그리고 사실상 그것은 그들 모두가 가진 동일한 비전이 아니다. 그들 중 일부는 경제재와 서비스가 교환되는 여지를 어느 정도 허용하고 있다. 이런 경우에 한해 화폐의 계속적인 사용은 가능할 것이다.

다른 한편, 조직화된 사회가 그 구성원들에게 분배하는 증서나 명령서들은 화폐로 간주될 수 없다. 각 노동자에게 각 시간

의 노동에 대한 영수증이 주어지고 사회적 소득이 각 개인이 소유한 영수증의 수에 비례하여 분배된다고 가정해 보자. 그 사회적 소득이 집단적 필요의 충족이나 일할 수 없는 사람들의 부양을 위해 고용되지 않는 한에 있어서는, 각 영수증이 분배될 재화 총량 일부의 약수부분에 대한 청구권을 나타낸다고 해보자. 그러면 한 개인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수단으로서의 어떤 특정 영수증의 중요성은, 다시 말해 그 가치는, 총분배 몫의 크기에 비례하여 변할 것이다. 만약 동일한 수의 노동시간으로, 특정한 연도의 사회의 소득이 직전 연도에 비해 단지 절반에 불과하다면 각 영수증의 가치는 마찬가지로 절반이 될 것이다.

화폐의 경우는 다르다. 실질 사회 소득의 50퍼센트 감소는 분명히 화폐의 구매력의 감소를 수반할 것이다. 그러나 이런 화폐 가치의 감소는 소득 크기의 감소와 어떤 직접적인 관계를 맺을 필요는 없다. 우연히 화폐의 구매력이 정확하게 절반으로 감소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겠지만, 반드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 차이는 근본적 중요성을 지닌다.


사실 화폐의 교환가치는 증서나 보증서(warrant)와는 완전히 다른 방법으로 결정된다. 이런 권리들(titles)은 전혀 독립적인 가치평가의 과정을 허용하지 않는다. 만약 보증서나 지급명령서가 언제나 요구되는 즉시 존중된다면, 그 가치는 그것이 언급하는 재화의 가치와 동일할 것이다. 만약 이 확실성이 절대적이 아니라면, 보증서의 가치는 그 불확실성에 상응하여 작아질 것이다.

만약 우리가 어떤 한 교환—단지 노동증서들의 교환뿐만 아니라 예컨대 개인들 간 소비재의 교환—의 시스템이 사회주의 사

회에서도 발전될 수 있으리라고 가정한다면, 우리는 그와 같은 사회의 틀 안에서조차 화폐의 기능에 대한 자리를 상정할 수 있을지 모른다. 이 화폐는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에 기초한 경제질서에 비해 그만큼 자주 그리고 다양하게 고용되지는 않겠지만 그 사용은 동일한 근본원리에 의해 지배될 것이다.

이러한 고려가 화폐에 대해 취해야 할 올바른 태도를 확정한다. 그래서 어떤 상상의 사회질서를 구축하려고 어떤 시도를 하든지 상관없이 자기모순에 빠지지 않으려면, 우리는 이 태도를 견지해야 한다. 그와 같은 사회질서의 틀이 재화와 서비스의 자유로운 교환을 완전히 배제하는 한에 있어서는 화폐가 존재할 필요는 전혀 없다. 그러나 어떤 종류의 교환이라도 허용되는 한에 있어서는 교환의 공통 매개수단에 의해 수행되는 간접교환도 반드시 허용되어야 한다.

2. 가짜 화폐이론가들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피상적 비판자들은 주로 화폐를 향해 공격을 퍼붓는 습관이 있다. 그들은 생산수단에 대한 사적 소유의 지속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현재와 같은 노동분업의 주어진 단계에서는 재화의 자유로운 교환까지도 기꺼이 허용하고자 한다. 그러나 여전히 그들은 그 어떤 교환의 매개물도 없는 상태에서 혹은 최소한 공통의 매개물, 즉 화폐가 없는 상태에서 이 교환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그들은 분명히 화폐의 사용을

유해하다고 간주하며 화폐를 제거함으로써 모든 사회악을 극복하기를 희망한다. 그들의 원칙은 화폐의 사용이 증대되던 시기에 비전문가들 사이에서 언제나 엄청나게 인기가 있었던 개념들로부터 도출되었다.

우리의 경제생활의 모든 과정들은 화폐적 외관을 띠고 있다. 물건의 외관(外觀) 속의 이면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단지 화폐 현상만 인식할 뿐 그 속의 깊은 관계들을 의식하지 못한다. 화폐는 절도와 살인, 사기와 배신의 원인으로 간주된다. 창녀가 자신의 몸을 팔 때, 매직(賣職)을 한 판사가 법을 고의로 왜곡할 때 화폐가 비난을 받는다. 도덕주의자(道德主義者)가 지나친 물질주의에 반대하고 싶을 때, 그가 맹비난하는 것은 화폐이다. 탐욕은 돈에 대한 사랑으로 불리며, 모든 악은 그 책임이 화폐로 돌려진다.⁷⁰⁾

그런 개념들이 혼동되고 애매하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직접교환으로의 복귀가 그 자체로 화폐사용의 모든 불리한 점들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이들이 생각하는지 아니면 다른 개혁들이 동시에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하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이 모호한 개념들에 책임이 있는 소위 세계를 창조하는 자들과 세계를 개선하는 자들은 그들의 생각들이 불가피하게 어떤 마지막 결과들로 귀결되는지 추적해 보아야 한다는 의무감을 전

70) 그와 같은 개념들의 역사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고. Hildebrand, *Die Nationalökonomie der Gegenwart und Zukunft*(Frankfurt, 1848), pp.118ff.; Roscher, *System der Volkswirtschaft*, ed. Pöhlmann, 24th ed.(Stuttgart, 1906), Vol.1, pp.345f.; Marx, *Das Kapital*, 7th ed.(Hamburg, 1914), Vol.1, pp.95f.n.

혀 느끼지 않는다. 그들은 문제의 어려움이 이제 막 시작되는 지점에서 그냥 멈추라고 요구하기를 선호할 뿐이다. 그리고 이것이 그들의 원칙들이 왜 오래 살아남는지 설명해 준다. 그 원칙들이 애매한 채 남겨져 있어서 다른 사람들이 비판할 수 있는 명확한 대상이 전혀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진지한 관심을 받을 가치가 더 작은 것으로는, 화폐의 일반적 사용을 비난하지 않는 대신 금이나 은의 사용에 반대하는 그런 사회개혁의 계획들이 있다. 사실 귀금속에 대한 그와 같은 적개심은 그 속에 매우 유치한 것을 내포하고 있다. 토머스 모어(Thomas More)가 예를 들어, 『유토피아』에서 죄수들에게 금 사슬을 주고 일반 시민들에게는 금과 은으로 된 침실용 변기를 줄 때,⁷¹⁾ 이것은 원시인류로 하여금 생명이 없는 이미지들과 심벌들에 양갈음을 가하도록 이끌던 그런 정신적인 어떤 것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진지하게 받아들여진 적이 없는 그와 같은 환상적인 제안들에 잠깐이라도 시간을 쏟는 것은 별 가치가 없는 일일 것이다. 이런 제안들에 대한 모든 비판들은 이미 오래 전에 완성되었다.⁷²⁾ 그러나 사람들이 보통 주목하지 않던 것 하나만 강조하고자 한다.

무수히 많은 황당한 화폐의 적(敵)들 가운데 보통 들고 다니

71) More, *Utopia*.

72) Marx, *Zur Kritik der politischen Ökonomie*, ed. Kautsky(Stuttgart, 1897), pp.70ff.; Knies, *Geld und Kredit*, 2d ed.(Berlin, 1885), Vol.1, pp.239ff.; Aucuy, *Les systèmes socialistes d'Échange*(Paris, 1908), pp.114ff.

던 것과 다른 이론적 무기를 가지고 싸운 집단이 있다. 이 집단에 속하는 화폐의 적(敵)들은 은행업에 대한 지배적인 이론으로부터 그들의 주장을 취하며 “자동적으로 통화의 필요에 적응하는 ‘탄력적인’(elastic) 신용 시스템”이라는 수단을 통해 모든 인간의 불행들을 치유할 것을 제안한다. 불만족스러운 은행이론에 이미 친숙한 사람이라면, 과학적 비판이—당연히 그랬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그와 같은 제안들을 다루지 않았을 뿐 아니라 그럴 능력이 없음을 발견하더라도 놀라지 않을 것이다. 어네스트 솔베이(Ernest Solvay)가 주창했던 ‘소셜 콤파빌리즘’(social comptabilism)⁷³⁾과 같은 계획들이 기각된 것은 실용적인 사람들의 용기 부족에 따른 것이었을 뿐 그 계획들의 약점에 대한 어떤 엄밀한 증명—정말 아무도 이런 증명을 내놓지 않았다—에 따른 것이 아니었다. 투크(Tooke)와 플라르턴(Fullarton)의 시스템으로부터 도출된 견해를 지닌 모든 은행이론가들(오늘날의 저술가들 대부분을 포함한다)은 솔베이의 이론 그리고 동일한 종류의 여타 이론들에 대해 무기력하였다. 그들은 이 계획들을 비난하고 싶었다. 실용적 사람들의 신뢰할 만한 판단뿐 아니라, 이런 유형의 개혁가들의 공허한 사색에 반대하는 자신들의 직감도 그런 계획들에 대해 경종을 울리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계

73) 솔베이에 의해 1899년 브뤼셀에서 출간된 세 가지 비망록은 다음 제목을 달고 있었다. *La monnaie et le Compte*, 그의 다음 저술도 참고. *Gesellschaftlicher Comptabilismus*(Brussels, 1897). 솔베이의 이론들에는 또한 다른 근본적인 오류들도 포함되어 있다. 그의 저술은 다음과 같이 영역되어 있다. *Social Comptabilism; The Cheque and Clearing Service in the American Postal Savings Bank; Proposed Law Laid Before the Chamber of Representatives of Belgium*, (역자 주)

획들은 최종적으로 분석해 보면 자신들의 이론을 일관되게 적용한 시스템에 불과했으므로, 그들은 이 계획들에 반대하는 아무런 주장도 제기할 수 없었다.

이 책의 제3부는 은행 시스템의 문제들에 집중하고 있다. 우리는 제3부에서 신용의 탄력성에 대한 이론을 보다 자세히 다룰 것이다. 제3부의 탐구결과는 아마 더 이상 이런 유형의 원칙을 논의할 필요가 없도록 해 줄 것이다.

제2부

화폐의 가치

1. 화폐가치이론에서의 주관적 요인과 객관적 요인들

☺ 화폐의 경제적 문제에서 핵심적 요소는 화폐의 객관적 교환 가치, 소위 화폐의 구매력이다. 이것이 모든 논의에서 반드시 필요한 출발점이다. 왜냐하면 상품들로부터 구별되는 화폐의 특이성들이 가장 현저해지는 것은 오로지 화폐의 객관적 교환가치와 연관됐을 때이기 때문이다.

다만 이것이 화폐이론에서 다른 분야에서보다 주관적 가치가 덜 중요하다는 뜻으로 이해되지 말아야 한다. 개인의 주관적 추정치들은 여타 재화들의 가치평가에서와 마찬가지로 화폐의 경제적 가치평가의 기초이다. 그리고 여타 경제재들의 경우에서처럼 화폐의 경우에도 이 주관적 추정치들은 궁극적으로 어떤 개인의 입장에서 어떤 목표가 주어졌을 때 효용이 존재하기 위한 인정된 필요조건으로서 어떤 재화 혹은 재화들의 묶음에 부여하는 중요성으로부터 도출된다.⁷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타 재화들의 효용은 어떤 외부적 사실(그 상품의 객관적 사용가치)과 내부적 사실들(인간 필요들의 위계)에 의존한다. 즉, 여타 재화의 효

74) Böhm-Bawerk, *op. cit.*, II, Abt., p.211ff.

용은 경제학적 성격의 범주에 속하는 조건들이 아니라 부분적으로는 기술적이고 또 부분적으로는 심리적인 성격의 범주에 속하는 조건들에 의존한다. 이에 비해 화폐의 주관적 가치는 화폐의 객관적 교환가치, 즉 경제학의 범위 안에 들어가는 성격에 의해 조건이 주어진다.

화폐의 경우에는 주관적 사용가치와 주관적 교환가치는 부합한다.⁷⁵⁾ 둘 다 객관적 교환가치로부터 도출된다. 왜냐하면 화폐는 그것과의 교환을 통해 여타 재화들을 획득할 가능성 이외로부터는 전혀 효용을 지니지 않기 때문이다. 화폐로서의, 화폐의 어떤 기능을 화폐의 객관적 교환가치라는 사실로부터 분리한 채 상정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어떤 상품의 사용가치에 관한 한 그 상품이 교환가치도 가지고 있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 그러나 화폐가 사용가치를 가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교환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전제가 충족되어야 한다.

화폐가치의 이런 특이성은 또한 어떤 한 개인이 관련되는 한에 있어서, 화폐는 아무런 사용가치가 없고 주관적 교환가치가 있다고 말함으로써 표현될 수도 있다. 이것이 예컨대 라우(Rau)⁷⁶⁾와 뵘바베르크⁷⁷⁾의 방식이다. 이런 혹은 저런 표현법을 쓰든

75) Walsh, *The Fundamental Problem in Monetary Science*(New York, 1903), p.11; 그리고 비슷한 방식으로 된 것으로는 다음을 참고. Spiethoff, "Die Quantitätstheorie insbesondere in ihrer Verwertbarkeit als Haussetheorie," *Festgaben für Adolf Wagner*(Leipzig, 1905), p.256.

76) Rau, *Grundsätze der Volkswirtschaftslehre*, 6th ed.(Leipzig, 1855), p.80.

77) Böhm-Bawerk, *op. cit.*, Part II, p.275. 그리고 유사한 것으로는 다음을 참고. Wieser, *Der natürliche Wert*, p.45; "Der Geldwert und seine Veränderungen," *Schriften des Vereins für Sozialpolitik* 132: p.507.

과학적 탐구는 동일한 결론으로 이끌고 갈 것이다. 이 점에 대한 논의로 들어갈 필요는 전혀 없다. 특히 사용에서의 가치와 교환에서의 가치의 구별은 가치이론에서 과거에 차지하던 중요한 자리를 더 이상 차지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⁷⁸⁾ 우리의 관심은 단지 화폐의 가치를 다루는 경제학의 과제가 상품의 가치를 다루는 과제보다 더 큰 과제임을 보여 주려는 것뿐이다. 상품들의 가치를 설명할 때, 경제학자는 주관적 사용가치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데 만족할 수 있으며 또 만족해야 한다. 주관적 사용가치의 연원을 따지는 것은 심리학자에게 맡겨야 한다. 그러나 화폐가치의 진정한 문제는 단지 상품가치의 경우에는 경제학자들이 떠나는 곳, 즉 화폐의 주관적 가치의 객관적 결정요인들을 추적하는 지점에서 시작할 뿐이다. 왜냐하면 화폐의 경우에는 객관적 교환가치가 없이는 아무런 주관적 가치도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왜 곡물이 사람에게 유용한지 그리고 사람에 의해 가치를 부여받는지를 설명하는 것은 경제학자가 아닌 자연과학자가 할 과제이다. 화폐의 객관적 가치에 대한 논의 없이 화폐의 주관적 가치를 고려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상품들과는 대조적으로 화폐는 그것이 객관적 교환가치, 즉 구매력이 없이는 결코 사용되지 않을 것이다. 화폐의 주관적 가치는 언제나 화폐와의 교환을 통해 획득할 수 있는 여타 경제재들의 주관적 가치에 의존한다. 그 주관적 가치는 사실 유도된 개념이다. 우리가 어떤 만족을 얻기 위해서는 일정 액

78) Böhm-Bawerk, *op. cit.*, Part II, pp.273ff.; Schumpeter, *Wesen und Hauptinhalt der theoretischen Nationalökonomie*(Leipzig, 1908), p.108.

수의 화폐에 의존해야 한다는 (알려진) 의존성의 관점에서, 어떤 주어진 액수의 화폐가 지닌 중요성을 추정하고자 하더라도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화폐가 어떤 객관적 교환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가정이 성립하여야 한다. “화폐의 교환가치는 화폐로 획득할 수 있는 물건들의 예상된 사용가치이다.”⁷⁹⁾ 화폐가 누군가에 의해 그 가치를 평가받는 까닭은 언제나 어떤 구매력을 지니고 있다고 가정하기 때문이다.

화폐에 의한 정의되지 않은 수량의 객관적 교환가치의 단순한 보유 그 자체만으로는 교환의 매개물로 이를 사용할 가능성을 보장하기에는 미흡하다는 반대 주장이 있을 수 있다. 교환가치의 보유 이외에도 또 구매력이 특정한 정도로—즉, 화폐단위들의 가치와 상품단위들의 가치 사이의 비율이 통상적인 일상의 교환거래들을 해 나가기에 편리한 비율이 될 수 있도록 화폐의 구매력이 너무 크지도 너무 작지도 않게—존재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다. 이 주장에 따르면, 어떤 나라의 화폐의 수량이 절반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만약 그 화폐단위의 가치가 두 배가 된다면, 사실 이 절반으로도 화폐 전체 스톡이 했을 것과 동일한 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이지만, 그 가치가 100만 배 증가하거나 100만 분의 1로 줄어들고 화폐수량은 그 반대로 변경된 그런 경우에도 비슷하게 단언할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 그런 통화는 실제 사용되는 통화들만큼 교환의 공통된 매개물로서의 기능을 잘 완수하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우

79) Wieser, *Der natürliche Wert*, p.46.

리는 상품화폐 1톤 혹은 1밀리그램의 1000분의 1이 달러와 동등한 어떤 상품화폐를 애써 상상해 보고, 그런 교환의 매개물을 채택했을 때 상업에서 불가피하게 벌어질 불편들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

이것이 얼마나 사실에 부합하는지에 상관없이 화폐와 상품들 간의 교환비율 그리고 화폐단위의 크기의 실제 차원들에 대한 문제는 경제학적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특정한 재화가 화폐로 사용하기에 적합한지에 대한 기술적 조건들에 대한 논의에 속하는 질문이다. 귀금속들의 상대적 희소성—즉, 상당히 높은 객관적 교환가치를 주기에 충분할 정도로 높은 교환가치를 가지지만, 동시에 보석이나 라듐(radium)과 같이 지나치게 높지는 않은 교환가치를 지니고 있는—은 반드시 실질적으로 무제한적 분할 가능성, 늘릴 수 있는 성격, 그리고 부식에 강한 성격 등 여타 성격과 함께 귀금속들이 가장 시장성이 있는 재화로 간주되게 하고 결과적으로 화폐로 고용되게 한 요인들 중 하나로 감안되어야 한다. 그러나 오늘날 화폐 시스템이 발전함에 따라 귀금속들의 가치가 어떤 수준인지는 더 이상 화폐로서의 사용에 아무런 중요한 의미를 가지지 않게 되었다. 현대적 청산 시스템이 조직화되고 신용수단이 제도화되면서 화폐적 재료의 크기나 무게는 상업에서 중요하지 않게 되었다.

2. 화폐의 객관적 교환가치

앞에서 말한 것으로부터 화폐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고려하지 않고는 화폐가치의 문제를 논의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현대적 조건 아래서는 객관적 교환가치—비저가 *Verkehrswert* (즉 사업거래들에서의 가치)라고 부른—는 가장 중요한 종류의 가치이다. 왜냐하면 이것이 경제활동의 개인적 측면뿐만 아니라 사회적 측면도 다스리기 때문이다. 가치이론의 근본원칙들에 대해 설명을 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경제학은 거의 배타적으로 객관적 교환가치를 다룬다.⁸⁰⁾ 이 점은 모든 재화들(심지어 교환가치가 없었더라도 유용한 것들을 포함해서)에 해당되는 사실이지만, 특히 화폐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실이다.

“재화의 객관적 교환가치란 교환에서의 객관적 중요성, 다시 말해 주어진 상황에서 교환에서 동등한 것으로서 다른 재화의 특정 수량을 확보할 수 있는 능력이다.”⁸¹⁾ 우리는 객관적 교환가치조차도 진정으로 재화 자체의 속성이 아니라는 점, 즉 자연에 의해 그 재화에 부여된 속성이 아니라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최종적으로는 교환가치도 개별 재화들에 대한 인간의 가치평가의 과정으로부터 도출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상업적 거래에서 서로 다른 재화들 사이에 확립되는 교환비율들은 시장에서 활동하는 모든 사람들의 주관적 가치평가의 집합적 영향에 의해 결정된다. 이 교환비율은 보통 그 비율들의 결정에

80) Wieser, *ibid.*, p.52.

81) Böhm-Bawerk, *op cit.*, Part II, pp.214f.

매우 작은 영향을 끼치는 대부분의 개별 경제주체들에게는 이미 이루어진 (변경될 수 없는) 사실, 혹은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사실로 수용된다. 그래서 이런 대부분의 개별경제주체들이 처한 상황을 잘못 추상화(이론화)하게 되면, 각 재화는 개인들의 가치평가와는 독립적인 특정 수량의 (화폐)가치를 부여받은 채 출시된다는 잘못된 견해를 가지기 쉽다.⁸²⁾ 이 관점에서 보면 재화들이 마치 인간들에 의해 서로 교환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서로 교환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주관적 가치이론에 등장하는 객관적 교환가치는 고전학파에 의해 발전된, 물건들 자체에 내재된 교환에서의 가치(value in exchange)라는 과거의 개념과 이름 이외에는 전혀 공통점을 가지지 않는다. 스미스와 리카도, 그리고 그들의 후계자들의 가치이론에서는 교환에서의 가치가 주도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이 이론들은 모든 가치현상을 교환에서의 가치(그들은 이것을 노동가치 혹은 생산비용가치로 이해한다)로부터 출발함으로써 설명하고자 시도한다. 현대의 가치이론으로서는 그들의 용어는 역사적 중요성만을 주장할 수 있으며 두 가지 교환가치 개념들의 혼동을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 이것으로 ‘객관적 교환가치’라는 표현의 계속된 사용에 대해 최근에 제기된 반대들에 대해 대답한 셈이 된다.⁸³⁾

만약 어떤 재화의 객관적 교환가치가 특정 수량의 다른 재화들을 교환에서 요구할 힘이라면 그 재화의 가격은 이 여타 재화


82) Helfferich, *Das Geld*, 6th ed.(Leipzig, 1923), pp.301f.

83) Schumpeter, *op. cit.*, p.109.

들의 특정 수량을 표시한다. 이로부터 우리는 가격의 개념과 객관적 교환가치의 개념이 결코 동일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가격과 객관적 교환가치가 동일한 법칙을 따르는 것은 사실이다. 가격의 법칙이 어떤 한 재화가 실제로 특정한 가격을 요구한다고 선언할 때, 그리고 왜 그런지 설명할 때, 물론 이 법칙은 그 재화가 이 가격을 요구할 수 있음을 시사하며, 왜 그런지를 설명한다. 가격의 법칙의 이해는 교환가치의 법칙을 이해하게 한다.”⁸⁴⁾

‘화폐의 객관적 교환가치’라는 용어로 우리는 특정한 수량의 화폐를 주고 그 대신 특정한 수량의 여타 경제재(經濟財)들을 획득할 수 있는 가능성으로 이해하게 된다. 화폐 한 단위의 교환가치를 그 어떤 다른 상품의 단위로 표현하고 화폐의 상품가격을 말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러나 실제 생활에서 이 용어와 그것이 나타내는 개념은 쓰이지 않는다. 왜냐하면 오늘날 화폐는 가격들의 유일한 계기(計器)이기 때문이다.

3. 화폐의 가치 이론에 개재된 문제들

 화폐이론은 화폐의 가치를 지배하는 원리와 상품의 가치를 지배하는 원리 사이의 근본적 차이를 반드시 감안하여야 한다. 상품의 가치에 관한 이론에서는 처음에는 객관적 교환가치에 아무런 주의도 기울이지 않아도 된다. 이 이론에서는 가치결정

84) Böhm-Bawerk, *op. cit.*, Part II, p.217.

과 가격결정의 모든 현상은 출발점으로서 주관적 가치로 설명될 수 있다. 화폐의 가치에 관한 이론에서는 그렇지 않다. 화폐는 여타 재화들과는 대조적으로 그 경제적 기능을 단지 화폐가 객관적 교환가치를 지니고 있는 경우에만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화폐의 주관적 가치에 대한 탐구는 먼저 그 객관적 교환가치에 대한 탐구를 필요로 한다. 다시 말해 화폐가치의 이론은 우리를 주관적 교환가치를 통해 객관적 교환가치로 돌아가게 한다.

분업과 생산물의 자유로운 교환에 기초하고 있는 현재의 경제 시스템 아래서 생산자들은 일반적으로 그들 자신을 위해 직접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에 공급한다는 생각에서 일을 한다. 결과적으로 그들의 경제적 계산은 자신들의 생산물들의 주관적 사용가치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주관적 교환가치에 의해 결정된다. 주관적 교환가치를 그리고 결과적으로 객관적 교환가치를 무시한 가치평가들, 그리고 단지 주관적 사용가치만을 고려한 가치평가들은 오늘날 가장 예외적일 뿐이다. 그들은 전반적으로 그 대상이 감상적 가치를 가진 경우에 한정된다. 어떤 물건들은 사람들에게 개인적 경험 혹은 그들이 기억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상기시키기 때문에 상징적 중요성을 부여받기도 한다. 그러나 이런 개인적 관심을 가지지 않은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그 물건들은 매우 낮은 가치를 가지거나 전혀 가치를 가지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다. 우리가 그런 물건들을 무시한다면 재화에 대한 인간의 가치평가는 그 재화의 교환가치에 근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 그래서 사용가치가 아니라

교환가치가 현대의 경제질서를 지배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교환가치의 가장 깊숙한 연원으로 우선 상품들의 주관적 교환가치, 다음으로 그 객관적 교환가치를 추적해 가면, 우리는 물건들이 받는 존중의 정도를 결정하는 것은 최종적으로는 그 물건에 대한 주관적 사용가치임을 발견할 것이다. 생산물과 교환하여 획득하는 상품들은 언제나 그 상품의 주관적 사용가치에 따라 가치평가가 이루어진다. 이 사실과는 아주 별개로, 가격과 객관적 교환가치의 결정에서 최종적 중요성을 가지는 유일한 가치평가는 주관적 사용가치에 근거한, 즉 그 생산물들이 상업의 채널들을 통해, 자신들의 소비를 위해 그 생산물들을 획득한 최종적 사람들에게 주는 사용가치에 근거한 가치평가이다.

화폐의 경우는 다르다. 화폐의 객관적 교환가치는 이 객관적 교환가치의 존재와 독립된 어떤 사용가치로 환원될 수 없다. 화폐 시스템의 기원에서, 화폐는 여전히 상품—궁극적으로 최종 구매자 혹은 소비자의 손에 도달하면서 유통을 멈추는—이다.⁸⁵⁾ 화폐의 역사에서 초기 단계에서는 짧지 않은 기간 동안 화폐로서 고용될 수 없게 가로막는 자연적 성질을 지닌 화폐상품들조차 있었다. 한 마리의 소 혹은 한 부대의 곡물은 영원히 유통될 수 없다. 만약 그 가치 중 화폐로서의 고용에 의존하지 않는 부분이 그 재료의 악화(부패)로 감소되지 않게 하려면, 조만간 소비를 위해 유통으로부터 빠져 나와야 한다. 한편, 발달된 화폐

85) Wieser, "Der Geldwert und seine geschichtlichen Veränderungen," *Zeitschrift für Volkswirtschaft, Sozialpolitik und Verwaltung* 13 (1904): 45

시스템에서 우리는 대량으로 끊임없이 유통되지만 산업에서 결코 소비되거나 사용되지 않는 상품화폐(commodity money)뿐만 아니라, 그 기초인 지불에 대한 청구권이 결코 행사되지 않는 신용화폐(credit money), 그리고 아마도 화폐 이외로는 전혀 사용되지 않는 법정화폐(fiat money)조차 발견한다.

대개의 저명한 경제학자들 중 많은 이들은 화폐의 가치와 화폐로 만들어진 물질의 가치가 단지 그 산업적 고용에만 의존한다는 사실을 당연하게 여기며, 아울러 만약 유용한 금속으로서의 화폐적 물질의 성질들이 어떤 사고를 당해서 혹은 여타 이유로 제거된다면, 예를 들어 오늘날의 금속화폐의 구매력 그리고 결과적으로 화폐로서의 계속된 고용의 가능성이 즉각 사라질 것이라는 사실도 당연하게 여긴다.⁸⁶⁾ 오늘날 이 의견은 더 이상 지지될 수 없다. 이 의견이 설명하지 못한 채 남겨 둔 너무나 많은 현상들이 있을 뿐 아니라 더 중요하게는 아무튼 이것이 경제적 가치이론의 근본적 법칙들에 위배되기 때문이다. 화폐의 가치가 그 물질의 비(非)화폐적 용도의 고용에 근거하고 있다고 단언하는 것은 진짜 문제를 전적으로 배제하는 것이다.⁸⁷⁾ 우리는 법정화폐(fiat money)—그 물질은 공식적 스탬프가 없다면 있을 때보다 훨씬 더 낮은 가치를 가진다—의 가능성을 설명해야 할 뿐만 아니라, 또한 다음의 질문에 대답하여야 한다. 상품화폐 물질의 화폐적 고용의 가능성이 그 효용에, 그리

86) 그래서 최근에 이르러까지도 그렇게 보았다. 이에 관해서는, Menger, *Grundsätze der Volkswirtschaftslehre*, Vienna 1871, p.259n.; 그리고 Knies, *op. cit.*, I, Bd., p.323.

87) Simmel, *Philosophie des Geldes*, 2d ed.(Leipzig, 1907), p.130.

고 결과적으로 그 가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가? 만약 그렇다면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가? 신용화폐의 경우에도 동일한 문제가 발생한다.

인류의 지배 아래 있던 금 스톡의 일부는 화폐적 목적을 위해 사용되었으며, 일부는 산업적 용도로 사용되었다. 용도의 변경은 언제나 가능하다. 금괴는 은행의 금고로부터 금세공인(金細工人)이나 도금공(淘金工)에게로 넘겨진다. 이들은 또한 직접 유통 중인 경화들을 거둬들여 그 경화들을 녹이기도 한다. 다른 한편, 금으로 만들어진 물건들은, 고가의 금으로 된 예술품조차도, 불리한 시장의 조건들이 지금(地金)의 가격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판매하기가 불가능해지면 주조소(鑄造所)로 보내진다. 화폐로 쓰인 장식품이나 그 소유자가 자신의 손을 떠날 때까지 보석 장신구로 달고 다니던 경화(硬貨)를 떠올리면 알 수 있듯이, 하나의 동일한 조각의 금속이 심지어 두 목적을 동시에 수행할 수도 있다.⁸⁸⁾

화폐가치의 기초에 대한 탐구들은 화폐적 물질의 상품으로서의 성질로부터 야기하는 결정요인들을 배제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이 결정요인들은 화폐의 가치를 여타 상품들의 가치로부터 구별해 주는 특이성은 전혀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상품화폐의 가치는 화폐이론에서 단지 이것이 화폐의 특이한 경제적 지위에 의존하고, 교환의 공통 매개물로서의 기능에 의존하는 한

88) 그러나 일반적으로 예술품, 보석, 그리고 귀금속으로 만들어진 여타의 물건들은 상품화폐의 기능을 수행하는 금속의 스톡으로 간주되지 않아야 한다. 그것들은 1차 재화들이다. 이 재화들과 관련해서 금괴나 주화와 같은 것들은 고차재로 간주되어야 한다.

에 있어서만 중요하다. 상품으로서의 성질로부터 야기되는 화폐적 물질의 가치의 변화들은 결과적으로 단지 그 변화가 그것을 화폐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 더 혹은 덜 적합하게 할 가능성이 있는 한에 있어서만 감안되어야 한다. 이와는 별개로 화폐이론은 그 산업적 유용성으로부터 도출되는 화폐적 물질의 가치를 주어진 것으로 다루어야 한다.

상품화폐의 재료 물질은 이것이 화폐로 혹은 다른 용도로 사용되더라도 동일한 가치를 가질 것이다. 금의 가치변화가 화폐로서의 용도에서 나오든 아니면 상품으로서의 용도로부터 나오든 어느 경우에도 전체 스톡의 가치는 균일하게 변화한다.⁸⁹⁾

신용화폐(credit money)와 법정화폐(fiat money)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이 화폐들에서는 화폐의 표지(標識)를 달고 있는 물질은 본질적으로 그 화폐의 가치결정에 중요하지 않다. 일부 상황들 아래에서는 그것은 개별 주화 혹은 은행권의 총교환가치의 상당한 부분을 함유하는 상대적으로 높은 교환가치를 가지고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 주화나 은행권의 화폐적 특성들에 근거하지 않은) 이 가치는 화폐적 특성에 근거한 가치가 사라지는 순간에, 즉 상업에 참여하는 개인들이 그 문제의 주화나 은행권을 교환의 공통된 매개물로서 사용하기를 멈추는 순간에 실질적으로 중요해진다. 이런 경우가 아닐 때, 화폐적 표지가 새겨진 주화들이나 은행권들은, 다른 조각의 동일한 물질들이 어떤 특별한 특성들에 의해 두드러지지 않는 한 이 다른 조각보다 더 높은

89) Wieser, "Der Geldwert und seine geschichtlichen Veränderungen," p.46.

교환가치를 가질 것임에 틀림없다.

다시 한 번 신용화폐의 경우에 화폐로 사용되는 청구권은 유사하게 화폐로 사용되지 않는 동일한 종류의 다른 청구권과는 다른 교환가치를 가진다. 오스트리아-헝가리에서 통화개혁 이전에 화폐로 유통되던 100굴덴의 은행권들은, 예를 들어 100굴덴의 명목가치를 가진 정부증권에 비해 비록 후자가 이자를 받고 전자는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더 높은 교환가치를 가졌다.

금이 화폐로 사용되었을 때까지 금은 단지 장식적 용도로 사용될 가능성으로 인해 그 가치를 평가받았다. 만약 금이 화폐로 사용된 적이 없었다면, 혹은 만약 금이 그렇게 사용되던 것이 중단되었다면, 오늘날 금의 가치는 오로지 산업에서 금이 유용한 정도에 의해서만 결정될 것이다. 그러나 금을 사용할 추가적인 기회들은 금을 존중하는 원래의 이유들에 추가적인 이유를 제공하였다. 금은 부분적으로 이것이 교환의 공통 매개물로 사용될 수 있었기 때문에 가치를 평가받기 시작하였다. 결과적으로 금의 가치가 상승한 것, 혹은 적어도 다른 이유로 인해 벌어질 수 있었던 가치의 감소가 상쇄된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오늘날 주요한 현대 화폐물질인 금의 가치는, 한편으로는 화폐적 용도와 다른 한편으로는 산업적 용도라는 두 가지 용도의 가능성 모두에 기초하고 있다.⁹⁰⁾

90) 200년도 더 전에 자신의 시대를 훨씬 앞섰고 천재적 통찰력을 지니고 있었던 존 로(John Law)는 다음과 같은 진실을 이미 파악하고 있었다. “금속으로 사용되는 은(銀)은 평가된 가치로 교환되고, 통화로 사용되는 은은 고유한 가치에 의해 지불된다는 견해는 합리적이다. 은(銀)이라는 새로운 통화의 사용은 교환에서 발생하는 불이익과 불편을 해소하였고,

현재의 화폐가치 중 어느 정도가 화폐적 고용에 의존하며 어느 정도가 산업적 고용에 의존하는지 말하기는 불가능하다. 화폐제도가 처음 확립되었을 때, 귀금속의 가치에 기반한 산업적 기초가 더 중요했을 것이지만, 경제적 삶의 화폐적 조직화가 진전되면서 화폐적 고용이 점차 더 중요해졌다. 오늘날 금의 가치는 대부분 그 화폐적 고용에 의해 지지되고 있으며, 금의 비(非)화폐화는 분명 금 가격에 압도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⁹¹⁾ 1873년 이후 은의 가격의 급락은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이 금속의 비(非)화폐화에 따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리고 1914년에서 1918년 사이에 많은 국가들이 금을 은행권과 재무성 증권으로 교체

이로써 은은 통화적 가치를 띠게 되었다. 이에 따라 수요가 증가하면서, 은은 통화로서 사용되는 수요증가에 상응하는 수준만큼 추가적 가치를 지니게 되었다. 이렇게 발생한 추가적 가치는 금속으로서 교환되었던 은의 가치와는 달리, 더 이상 예측할 수 없는 성질을 띠게 되었다. 이는 은이 어떤 용도로 사용되느냐에 따라 각기 다른 가치가 파생되고, 수량에 비례하는 금속으로서의 수요에 따라 더 큰 가치를 띠거나 혹은 반대 방향으로 가치가 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통화로서 은이 가지는 추가적 가치는 고유한 목적으로 사용된다는 특성에서 기인한다. 다시 말해, 이는 은이 통화로 사용됨에 따라 추가 수요가 발생하여 획득하게 된 가치이다. 만약 금속으로서 은의 가치와 화폐로서 은의 가치를 가늠할 수 있다면 모든 종류의 가치는 예측 가능하게 될 것이다. 그 까닭은 그 어떤 것도 용도와 수량에 비례한 수요만을 고려하여 가치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다.”(*Considerations sur le numéraire et le commerce*, ed. Daire, Économistes financiers du XVIIIe siècle, 2nd. ed.[Paris, 1851]), pp.447f. 그리고 다음 문헌을 더 참고할 것. Walras, *Théorie de la monnaie* (Lausanne, 1886), p.40; Knies, *op. cit.*, Vol.1, p.324. 가치의 객관적 이론가들은 화폐가치이론의 이 근본적인 원리를 이해하지 못했다. 이것은 마르크스가 위에 언급한 존 로의 주장들에 직면해서 보여 준 이해의 부족으로 가장 잘 설명된다(Marx, *Das Kapital*, 7th ed. (Hamburg, 1914) Vol.1, p.56, n.46(E. and C. Paul 역).

91) Heyn, *Irrtümer auf dem Gebiete des Geldwesens*(Berlin, 1900), p.3; Simmel, *op. cit.*, pp.116ff.

했을 때, 금본위제를 유지했던 국가들로 금이 흘러가게 되면서 금의 가치는 크게 하락했다.


법정화폐(fiat money)와 신용화폐(credit money)의 제작에 사용된 물질의 가치도 또한 모든 다른 용도뿐만 아니라 화폐적 용도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명목화폐(token coins)의 생산은, 예를 들어 오늘날 은(銀)의 가장 중요한 용도 가운데 하나이다. 다시 한 번 니켈주화의 주조가 50여 년 전에 시작되었을 때, 니켈의 가격은 매우 가파르게 상승했다. 그래서 1873년 영국 주조소(the English Mint)의 소장은 만약 니켈주조가 계속된다면 단지 니켈비용만으로도 니켈주화의 액면가를 초과할 것이라고 우려했다.⁹²⁾ 그러나 만약 우리가 이런 종류의 용도를 화폐적 용도가 아니라 산업적 용도로 간주하기를 선호한다면, 그런 분류가 가능한 까닭은 명목화폐(token coins)는 화폐가 아니라 화폐대용물이며 결과적으로 화폐가치의 변화와 화폐물질의 가치변화 사이의 특이한 상호작용이 이 경우들에서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화폐가치에 관한 이론의 과제는 화폐의 객관적 교환가치의 결정을 지배하는 법칙들을 자세히 밝히는 것이다. 이 가치가 이 물질의 화폐적 용도가 아니라 여타 용도들에 달려 있는 한에 있어서는 화폐이론은 스스로 상품화폐가 만들어지는 물질의 가치의 결정에 관심을 둘 필요는 없다. 법정화폐의 제작에 사용되는 물질의 가치결정에도 화폐이론은 마찬가지로 관심을 둘 필요가 없다. 화폐이론은 단지 이 교환가치가 그 물질의 화폐적 기능에 달려 있

92) Jevons, *Money and the Mechanism of Exchange*, 13th ed.(London, 1902), pp.49f.

는 한에 있어서만 화폐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논의한다. 다른 형태들의 가치는 화폐의 가치이론에 있어 아무런 특별한 문제가 되지 못한다. 화폐의 주관적 가치에 대해, 여타 경제재들의 주관적 가치들에 대해 경제학이 가르치는 것과 조금이라도 다른 그 어떤 것도 언급될 것이 없다. 그리고 화폐의 객관적 사용가치에 대해 알아야 할 중요한 모든 것은 다음의 한 문장으로 요약될 수 있을 것이다. 화폐의 객관적 사용가치는 화폐의 객관적 교환가치에 의존한다.

I. 화폐의 객관적 교환가치에서의 계속성의 요소

1. 화폐의 주관적 가치평가의 객관적 교환가치의 존재에 대한 의존성

 현대 가치이론에 따르면, 가격은 시장에서 상품과 가격재화들(price-goods)에 대한 주관적 가치평가들의 상호작용의 결과이다. 처음부터 끝까지 가격은 주관적 가치평가의 산물이다. 재화는 그것들을 교환하는 개인들에 의해 그 주관적인 사용가치들에 따라 가치를 부여받으며, 그들의 교환비율은 공급과 수요 양자가 정확한 수량적 균형을 이루는 범위 안에서 결정된다. 멩거와 뵘바베르크에 의해 언급된 가격의 법칙은 이 교환비율에 대한 완전한, 수치적으로 정확한 설명을 제공한다. 이것은 모든 직접 교환의 현상들을 남김 없이 설명한다. 쌍방향 경쟁 아래, 시장가격은 그 상한선이 실제 구매자들 중 최저가 구매자와 배제된 잠재적 판매자들 중 최고가 판매자의 가치평가에 의해 정해지며, 그 하한선은 실제 판매자들 중 최저가 판매자와 배제된 구매자들 중 최고가 구매자의 가치평가에 의해 정해진다.

이 가격의 법칙은 직접교환에서와 마찬가지로 간접교환에서도 똑같이 유효하다. 화폐의 가격은 여타 가격과 마찬가지로 마지막 분석으로는 구매자들과 판매자들의 주관적 가치평가들에 의해 결정된다. 그러나 이미 말한 것처럼, 화폐의 주관적 사용가치는 화폐의 주관적 교환가치와 일치하는데, 다른 아닌 화폐로 구매될 수 있는 물건들의 예상된 사용가치이다. 화폐의 주관적 가치는 화폐가 교환될 수 있는 재화들의 한계효용으로 측정되어야 한다.⁹³⁾

이로부터 도출되는 사실은 화폐의 가치평가는 화폐가 어떤 객관적 교환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가정에 근거해서 가능하다는 점이다. 그와 같은 집결지는 만족과 ‘쓸모없는’ 화폐 간 간격의 연결이 가능해지기 전에 필요하다. 화폐 자체와 어떤 인간의 욕구 간에는 아무런 직접적 연결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개인들은 화폐의 효용의 개념, 결과적으로 화폐의 가치라는 개념을 어떤 특정한 구매력을 가정함으로써만 획득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추측은 화폐와 상품들 사이의 시장에서 당시에 지배적인 교환비율의 표현 이외의 그 어떤 것도 될 수 없다.⁹⁴⁾

일단 화폐와 상품들 사이에 어떤 한 교환비율이 시장에서 확립되면, 이것은 그 비율이 유지되던 기간을 넘어서 계속 영향력을 행사한다. 그 비율은 화폐의 미래 가치평가의 근거로 작용한

93) 제7장 제2절과 다음을 참고. Böhm-Bawerk, *Kapital und Kapitalzins*, Part II, p.274; Wieser, *Der natürliche Wert*, p.46(영역본, *The Theory of Natural Value*).


94) Wieser, “Der Geldwert und seine Veränderungen,” *Schriften des Vereins für Sozialpolitik*, 132:513.

다. 그래서 화폐의 과거의 객관적 교환비율은 현재와 미래의 화폐에 대한 가치평가에 일정한 중요성을 지닌다. 오늘날의 화폐 가격은 과거의 화폐가격들, 그리고 그 이전의 가격들과 연계되어 있으며, 내일의 가격들과 내일 이후의 가격들과도 연계되어 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화폐가치의 계속성 요소의 문제를 설명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그것은 단지 설명을 연기할 뿐이다. 오늘 화폐가 가진 가치를 과거로 추적해 가는 것은 화폐가 어제 가진 가치를 ‘어제 바로 전날’ 화폐가 가진 가치로 추적하고, 그리고 또 그 전날로 계속 추적하는 것은, 처음에 무엇이 화폐의 가치를 결정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다. 화폐사용의 기원에 대한 고려와 화폐의 가치—그것의 화폐적 기능에 의존하는—의 특별한 구성요소들에 대한 고려는 이 질문에 명백한 대답을 제시한다. 화폐의 첫 번째 가치는 분명히 화폐로 사용된 재화들이 처음으로 교환의 공통적 매개물로 사용되었을 때, (화폐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인간의 욕구들을 충족시키는 적합성 덕분에) 지녔던 가치였다. 개인들이 소비를 위해서가 아니라 교환의 매개로 사용하기 위해 어떤 대상을 획득하기 시작할 때, 그들은 그 대상들을 (시장이 이미 그것들에게 산업적으로 유용하다는 이유로, 그리고 그것들을 교환의 매개로 사용할 가능성을 추가적인 고려로서만 부여한) 객관적 교환가치에 따라서 가치평가를 하였다. 화폐의 최초의 가치는 그 화폐적 물질의 상품가치와 연결되어 있었다. 그러나 화폐의 가치는 그 이후 산업적 용도—화폐가 만들어지는 그 물질의 가치를 결정하는—에 의존하는 요인들뿐만 아니라 화폐

로서의 용도로부터 귀결되는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았다. 산업적 목적을 위한 물질로서의 공급과 수요뿐만 아니라 교환의 매개로서의 사용을 위한 공급과 수요가, 금이 처음으로 화폐로 사용되었을 시점 이후로는 금의 가치에 영향력을 미쳤다.⁹⁵⁾

2. 화폐로 봉사할 수 있기 전, 화폐적 기능과 독립된 가치의 필요성

 만약 화폐의 객관적 교환가치가 항상 화폐와 여타 재화들 간의 기존의 시장 교환비율에 연계되어 있어야 한다면(그렇지 않으면 개인들은 화폐의 가치를 추정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을 수 없다), 이로부터 도출되는 것은, 그것이 화폐로서의 사용이 시작되는 순간 이미 여타 용도에 근거해서 객관적 교환가치를 지니고 있지 않는 한, 어떤 물건이 화폐로 쓰일 수 없다는 점이다. 이 사실은 화폐의 기원을 내재적으로는 가치가 없는 물건들에 가상의 가치를 부여하기로 한 일반적 합의로부터 도출하는 이론들을 기각하게 해 주며,⁹⁶⁾ 아울러 화폐사용의 기원에 관한 멩거의 가설을 확증해 준다.

기존의 교환가치와의 연계는 상품화폐뿐만 아니라 신용화폐와 법정화폐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필요하다.⁹⁷⁾ 어떤 법정화폐

95) Knies, *Geld und Kredit*(Berlin, 1885), Vol.1, p.324.

96) Locke, *Some Considerations of the Consequences of the Lowering of Interest and Raising the Value of Money*, 2d ed.(London, 1696), p.31.


97) Subercaseaux, *Essai sur la nature du papier monnaie*(Paris, 1909), pp.17f.

도 만약 이 조건을 만족시키지 않았더라면 결코 존재할 수 없었을 것이다. 신용화폐 혹은 법정화폐로 간주되어야 할지 의심스러운 고대와 현대의 여러 종류의 화폐들 가운데 대표적인 순수한 법정화폐들이 실제로 있었다고 가정해 보자. 그런 화폐는 두 가지 방식 가운데 하나의 방식으로 존재하게 되었음에 틀림없다. 그것은 이미 유통되고 있던 화폐대용물들, 즉 요구하면 화폐로 지불되는 청구권들이, 청구권으로서의 특성을 박탈당했지만 여전히 상업에서 교환의 매개물로 사용되고 있었기 때문에 존재하게 되었을 수 있다. 이 경우 가치평가의 출발점은 그것들이 청구권으로서의 특성을 박탈당할 때 지니고 있던 객관적 교환가치에 있었다. 다른 가능한 경우는 한때 상품화폐로 유통되었던 경화들이 자유주조(free coinage)의 중단으로 인해, 태환의 의무가 법률적으로나 실질적으로 아무에게도 지워지지 않고 또 누군가에게 그런 의무가 맡겨질 것으로 기대할 아무런 근거도 없는 상태에서 법정화폐로 변형된 경우이다. (이 자유주조의 중단은 더 이상의 주조가 전혀 없었기 때문이거나 아니면 주조가 단지 재무부를 대신해서만 지속되었기 때문일 수 있다.) 여기에서 그 가치평가를 위한 출발점은 자유로운 주조가 중지된 시점에 그 경화들의 객관적 교환가치이다.

어떤 한 경제체가 화폐로서의 기능을 시작하기 전에 그것은 이미 화폐적 기능과는 어떤 다른 이유 때문에 교환가치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화폐로서 이미 기능하고 있는 그런 화폐는 그 교환가치의 원래의 근원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가치를 유지하고 있을 수 있다. 그렇게 되면 그 가치는

이제 전적으로 교환의 공통 매개물로서의 기능에만 기초하게 된다.⁹⁸⁾

3. 시장교환비율의 결정에서 기존 가격들의 중요성

 위에서 언급한 것으로부터 도출되는 중요한 결론은 역사적으로 지속적인 요소가 화폐의 객관적 교환가치에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다.

화폐의 과거가치는 현재의 가치가 넘겨받으며 현재가치가 그것을 변형한다. 화폐의 현재가치는 미래로 넘겨지며 이번에는 현재가치가 변형된다. 이 점에서 화폐의 교환가치의 결정과 여타 경제재의 교환가치의 결정이 대비된다. 모든 과거의 교환비율들은 여타 경제재들의 상호 교환비율들의 현재의 실제 수준에 관한 한 별 상관이 없다. 만약 우리가 내부를 숨기는 화폐적 베일 아래로 재화들 사이의 실질적인 교환비율들을 꿰뚫어 본다면 우리가 어떤 계속성을 관찰하게 될 것임은 사실이다. 실제 가격의 변동은 일반적으로 천천히 발생한다. 그러나 이 가격의 안정성은 가격결정 요인들의 안정성에 그 원인이 있으며, 가격결정의 법칙 그 자체에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다. 가격들이 천천히 변화하는 것은 인간의 주관적 가치평가들이 천천히 변화

98) Simmel, *Philosophie des Geldes*, 2d ed.(Leipzig, 1907), pp.115f.; 그러나 무엇보다도 Wieser, "Der Geldwert und seine Veränderungen," p.513을 참고.

하기 때문이다. 인간의 필요들, 그리고 그 필요를 충족시키는 재화의 적합성에 대한 인간의 의견들도, 소비를 위해 가용한 재화들의 스톡 혹은 사회적 분배의 방식이 그렇게 자주 갑작스럽게 변하지 않듯이, 그렇게 자주 그리고 갑작스럽게 변하지 않는다. 오늘날의 시장가격이 어제의 가격과 그렇게 다른 적이 별로 없다는 사실은 어제의 가격을 결정했던 상황들이 하룻밤 사이에 크게 변하지 않았고, 그래서 오늘날의 가격이 거의 동일한 요인들의 결과라는 사실에 의해 설명된다. 만약 가격의 급작스럽고 이상한 변동들이 시장에서 일반적으로 관찰된다면, 객관적 교환가치는 소비자와 생산자 양자에 의해 실제로 부여되는 정도로 그 중요성을 달성하지 못했을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가격의 관성을 언급하는 것에 반대할 수 없다. 물론 우리는 물리학으로부터 차용한 용어의 사용으로 인해 경제 시스템을 마치 ‘기계적’ 시스템, 즉 개인들의 주관적 가치로부터 잘못 추상화한 그런 시스템이라고 오해하게 할지 모른다는 경각심을 초기 경제학자들의 오류들로부터 타산지석처럼 배워 망각하지 말아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와 현재 가격들 사이의 그 어떤 인과론적 관계를 암시하는 설명도 단연코 거부해야 할 것이다.

가치평가의 변화에 의해 필요해질, 그리고 수요와 공급의 변화에 의해 야기될 가격들의 변화가 연기될 때, 그리고 수요와 공급의 관계에서의 작고 임시적인 변화들이 이에 상응하는 가격 변화를 전혀 초래하지 않을 때, 가격의 변화를 반대하는 제도적 힘들이 작동하고 있음은 부인할 수 없다. 이런 의미에서 가격의

관성을 언급하는 것은 허용될 수 있다. 종가(終價)가 다음 시장의 거래의 출발점을 형성한다는 언급⁹⁹⁾조차도 만약 그것이 위에서 제시된 의미로 이해된다면 수용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어제의 가격을 결정한 일반적 조건들이 밤새 조금만 변경되었다면 오늘의 가격은 어제와 별로 다르지 않을 것이고, 사실상 어제의 가격을 출발점으로 삼더라도 별로 부정확하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와 오늘의 가격들은 경제재들(화폐를 포함하지 않은)의 상대적 교환비율에 관련되는 한, 그 어떤 인과적 관계를 지니지 않는다. 맥주의 가격이 어제 비쌌다는 사실이 오늘의 가격에 관한 한, 가장 작은 중요성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단지 금주운동의 일반적 승리가 초래할 알코올음료의 가격들에 대한 효과를 생각하기만 하면 된다. 시장활동에 관심을 쏟는 사람은 누구나 재화들의 교환비율의 변화를 매일 의식하고 있으며, 경제현상에 매우 익숙한 사람은 그 누구도 가격의 일정성이라는 가정을 가지고 가격변화를 설명하려는 이론을 받아들이기는 거의 불가능할 것이다.

첨언하면, 가격들의 결정을 그들의 상정된 관성(inertia)으로 돌리는 것은 쾰비이디네크(Zwiedineck)가 그의 이 가정에 대한 변명에서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듯이, 출발부터 가격들의 궁극적 원인들을 설명하려는 희망을 포기하고 이차적 원인들로부터의 설명에 만족하려는 것임을 언급해 둘 필요가 있다.¹⁰⁰⁾ 존재했다

99) Schmoller, *Grundriss der allgemeinen Volkswirtschaftslehre*(Leipzig, 1902), Vol.2, p.110.


100) Zwiedineck, "Kritisches und Positives zur Preislehre," *Zeitschrift für die gesamte Staatswissenschaft*, Vol.65, pp.200ff.

고 보일 수 있는 (안정적인 교환비율을 보이는) 최초의 교환거래 유형들에 대한 설명—그 해결이 경제사(經濟史) 연구자의 과제이지만 지금까지 별로 기여된 것은 없는 과제—은 당시 갑작스런 가격변동을 상쇄시키는 힘이 지금에 비해 더 강했음을 보이는 것임을 단서 없이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만약 경제재들의 오늘 독일 주식거래소에서 지배적인 교환비율들(화폐가격이 아니라)이 헤르만(Hermann) 혹은 바르바로사(Barbarossa) 시절에 유효했던 가격들과 어떤 종류의 인과적 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혹시라도 믿는 사람이 있다면, 이 초기의 가격과 현재의 가격들 사이에 어떤 유형의 연관성이 있다는 주장은 명쾌하게 거부되어야 한다. 만약 과거의 모든 교환비율들이 인간의 기억으로부터 삭제된다면, 시장-가격-결정의 과정은 모든 사람이 스스로 새로운 가치평가의 척도를 구축해야 할 것이기 때문에 분명 그런 기억을 가지고 있을 때에 비해 더 어려워질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이다. 사실 전 세계의 사람들은 매일 매시간 모든 가격들이 귀결되어 나오는 작동과정에 참여하고 있다. 즉, 사람들은 모두 매일 매시간 욕구의 충족을 위한 조건들로서 재화들의 특정 수량에 의해 향유되는 상대적 중요성에 대한 결정에 참여하고 있다.

재화들의 화폐가격이 화폐적 요인들에 의해 결정되는 한에 있어서, 역사적으로 계속적인 구성요소가 그들 속에 포함되어 있다. 그 구성요소가 없이는 가격들의 실제 수준을 설명할 수 없게 된다. 이 구성요소도 역시 시장에 참여하는 개인들의 주관적 가치평가로, 비록 이 가치평가들이 원래 이 재화들의 화폐적

효용에 근거하지 않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전적으로 설명될 수 있는 교환비율들로부터 도출된다. 시장에 의한 화폐의 가치평가는 단지 과거에 그 화폐가 지녔던 가치로부터 출발할 수 있을 뿐이며, 이 관계는 화폐의 객관적 교환가치의 새로운 수준에 영향을 준다. 역사적으로 전달된 가치는 역사적 내용이었던 것을 고려하지 않은 채 시장에 의해 변경된다.¹⁰¹⁾ 그러나 이것은 오늘의 화폐의 객관적 교환가치의 출발점일 뿐만 아니라 교환가치의 결정에 있어 핵심적인 요소이다. 각 개인은, 그가 오늘 필요한 화폐수량의 추정치를 형성할 수 있으려면 어제 시장에서 결정된 화폐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고려하여야 한다. 화폐에 대한 수요와 그 공급은 그래서 과거의 화폐가치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그러나 그 수요와 공급은 이번에는 그것들이 균형에 이르게 될 때까지 화폐의 가치를 수정한다.

4. 화폐에 대한 한계효용이론의 적용

 화폐의 객관적 교환가치의 결정에 대한 연구는 언제나 우리를 과거 어떤 시점, 즉 화폐의 가치가 교환의 매개물로서의 사용에 의해 결정되지 않았고 단지 다른 기능들에 의해 결정되던 시점으로 돌아가게 한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앞에서 보였는데,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주관적 가치이론의 근거 위에 완전한 화폐의 가치이론과 한계효용의 독특한 원칙을 발전시키는 길을

101) Wieser, "Der Geldwert und seine Veränderungen," p.513.

마련하였다.

지금까지 주관주의 학파(Subjectivist School)는 이에 성공하지 못했다. 사실 그 문제에 조금이라도 관심을 기울인 소수의 주관주의 학파 사람들 가운데 그 불가능성을 보여 주려고 실제로 시도했던 일부 사람들이 있었다. 주관주의 가치이론은 그 앞에 놓인 과제 앞에 무기력했다.

화폐의 가치에 관한 전체 문제를 다루려고 시도했다고 인정 받아야 할 화폐이론으로는, 그 이외의 것들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평가하든 상관없이 두 가지가 있다.

객관적 가치이론들은 생산비용으로부터 화폐의 가치를 도출함으로써 형식적으로 자신들의 가치이론과 일치되어 예외적이지 않은 화폐이론을 그들의 시스템 속으로 도입하는 데 성공하였다.¹⁰²⁾ 이 화폐이론의 기각은 단지 객관적 가치이론 일반의 단점들, 즉 현대학파의 이론에 의해 제압된 이유를 제공한 단점들 탓으로만 볼 수 없다. 이 근본적인 결함과는 별개로 화폐가치의 생산비용이론은 손쉬운 비판의 대상이 되는 측면을 지니고 있었다. 그 이론은 분명 상품화폐의 이론은 될 수 있었지만(비록 단지 형식적으로만 정확했더라도) 신용화폐와 법정화폐의 문제를 다룰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상품화폐의 가치에 대한 완전한 설명을 시도했다는 점에서는 하나의 완전한 화폐이론이었다.

102) Senior, *Three Lectures on the Value of Money*(London, 1840; 1931), pp.1ff.; *Three Lectures on the Cost of Obtaining Money*(London, 1830; 1931), pp.1ff.

다른 유사하게 완전한 화폐가치이론은 다반자티(Davanzati)의 이름과 함께 연상되는 유형의 화폐수량설이다.¹⁰³⁾ 이 이론에 따르면 인간의 욕구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모든 사물들은 관습적으로 모든 화폐금속과 동등하게 취급된다. 이로부터 전체에 맞는 것은 부분에서도 맞으므로, 상품단위들과 화폐단위들 사이의 교환비율이 도출될 수 있다. 여기에서 우리는 사실들에 전혀 부합하지 않으므로 어떤 방식으로든 사실들에 의해 지지되지 않는 하나의 가설에 직면한다. 오늘날 다시 한 번 그 사실을 보여주는 것은 시간낭비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반자티가 처음으로 문제 전체를 제시하려고 시도했으며, 또 화폐와 여타 경제재들 간 기존의 교환비율의 변화뿐만 아니라, 그 비율의 기원에 대해서도 설명하는 이론을 시도했다는 사실은 간과되지 않아야 할 것이다.

다른 유형들의 화폐수량설들은 그렇지 않았다. 이것들은 모두 암묵적으로 특정한 화폐가치가 주어진 것으로 가정하고, 그 문제를 더 탐구하기를 아예 거부한다. 그 이론들은 화폐와 상품들의 교환비율을 결정하는 것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단지 무엇이 이 비율의 변화를 야기하는지를 설명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 이 점에 있어 화폐수량설은 가격 그 자체를 설명하려고 시도하지 않고 단지 가격변화의 법칙

103) Davanzati, *Lezioni delle monete*, 1588(in *Scrittori classici italiani di economia politica, Parte Antica*(Milan, 1804), Vol.2, p.32. 로크와 특히 몽테스키외가 이 견해를 공유하고 있다. 이에 관해서는 다음을 참고. Montesquieu(*De l'Ésprit des lois*, edition Touquet[Paris, 1821], Vol.2, pp.458f.); Willis, "The History and Present Application of the Quantity Theory,"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4(1896): p.419ff.

을 확립하는 데 만족하던, 여러 일반적인 가치이론들(예를 들어 많은 유형의 공급과 수요 원칙)과 유사하다.¹⁰⁴⁾ 이런 형태의 화폐수량설들은 사실상 화폐가치의 문제에 공급과 수요의 법칙을 적용한 데 불과하다. 그들은 화폐이론에 이 원칙의 모든 강점들을, 그리고 물론 약점들도 함께 도입하고 있다.¹⁰⁵⁾

1870년 이후의 경제학의 혁명은 아직 이 문제에 대해 완전하게 만족스런 해결에 더 이상 성공하지 못하고 있다. 물론 이것은 경제학의 진보가 화폐이론 일반과 화폐의 가치이론이라는 특정 분야에 전혀 흔적을 남기지 않았다는 의미는 아니다. 화폐의 본질과 가치에 대한 더 깊은 이해로 가는 길을 마련했다는 것은 주관적 가치이론이 베푼 많은 서비스 가운데 하나이다. 멩거의 연구는 그 이론을 새로운 반석 위에 올려놓았다. 그러나 지금까지 하나의 문제가 충분한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다. 멩거나 그를 따르는 많은 연구자들 중 누구도 화폐가치의 근본문제를 해결하려고 별로 시도하지 않았다. 넓게 말해서 그들은 전통적인 견해들을 확인하고 발전시키고 여기저기에서 전통적인 견해들을 더 올바르게 정확하게 상술하고자 몰두했지만, 다음의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았다. “무엇이 화폐의 객관적 교환가치의 결정요인인가?” 멩거와 제본스(Jevons)는 그 문제를 전혀 다루지 않았다. 카버(Carver)¹⁰⁶⁾와 킨들리(Kinley)¹⁰⁷⁾는 이 문제의 해결에

104) Zuckerkandl, *Zur Theorie des Preises*(Leipzig, 1889), p.124.

105) Wieser, “Der Geldwert und seine Veränderungen,” p.514.

106) Carver, “The Value of the Money Unit,”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1(1897): p.429f.

107) Kinley, *Money*(New York, 1909), pp.123ff.

진정으로 중요한 어떤 것도 기여하지 않았다. 왈라스(Walras)¹⁰⁸⁾와 케메러(Kemmerer)¹⁰⁹⁾는 화폐의 주어진 가치를 가정하고 화폐 가치의 변화의 이론을 발전시켰을 뿐이다. 케메러가 그 문제의 해결에 매우 근접했으나 지나치고 말았던 것은 사실이다.

비저(Wieser)는 종전의 이 문제를 다룬 것이 불완전하다는 점을 명백하게 언급하고 있다. 그의 화폐수량설 비판에서 비저는 과거 형태의 공급과 수요의 법칙은—그것을 화폐의 문제에 적용한 것이 화폐수량설인데—매우 부적절한 내용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가 그렇게 주장한 까닭은 과거 형태의 공급과 수요의 법칙이, 가치가 진정으로 결정되는 방식이나 주어진 시점에서 그 수준에 대해서는 전혀 설명하지 않으며, 더 이상의 설명 없이 가치가 수요 혹은 공급의 변동의 결과로 움직이게 될 방향—즉, 공급과는 반대방향으로, 그리고 수요와는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것—을 언급하는 것으로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더 나아가 이렇게 주장한다. 그 문제를 그렇게 부적절하게 다루는 화폐의 경제적 가치이론에 만족하기는 이제 더 이상 가능하지 않고, 상품들—원래 종전의 공급과 수요의 법칙이 설명하려고 했던 대상이었던—에 적용된 그 과거의 공급과 수요의 법칙은 이제 파기된 상태이므로, 화폐의 경우에 적용될 수 있는 더욱 엄밀한 법칙이 탐색되어야 한다.¹¹⁰⁾ 그러나 비저는 스스로

108) Walras, *Théorie de la Monnaie*(Lausanne, 1886), pp.25ff.

109) Kemmerer, *Money and Credit Instruments in Their Relation to General Prices*(New York, 1907), pp.11ff.

110) Wieser, "Der Geldwert und seine Veränderungen," pp.514ff.

그 해결이 그의 탐구의 대상이라고 언급했던 문제를 다루지 않고 있다. 그의 주장의 다음 단계에서 비저는 교환의 매개로서의 화폐의 공급과 수요의 개념들은 그의 목적에는 무용지물이라고 선언하고, 어떤 경제공동체에 존재하는 화폐소득과 실질소득 간의 관계를 언급함으로써 화폐의 객관적 교환가치(objektive innere Tauschwert des Geldes)¹¹¹⁾의 변동을 설명하려고 시도하는 이론을 제시한다. 화폐소득과 실질소득 사이의 비율에 대한 언급은 화폐의 객관적 교환가치의 변동을 설명하는 데 봉사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비저는 그것을 완전한 화폐이론으로 진화시키려는 시도를 아무 곳에서도 하지 않고 있다. 사실 널리 인정되었듯이 비저처럼 공급과 수요의 요인들을 배제한다면, 그런 시도를 하더라도 실패할 것이 확실하지만 말이다. 구(舊) 화폐수량설이 가치의 실제 결정에 대해, 혹은 어떤 시점에 수립되는 수준의 결정에 대해, 그것이 아무 것도 단언하지 않고 있다고 그가 구(舊) 화폐수량설에 대해 제기하는 바로 그 비판은 그 자신의 원칙에 대해서도 가해질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것은 화폐의 구매력에 있어서의 역사적 요소를 밝혀냄으로써 화폐의 주관적 가치이론의 발전을 위한 기초를 놓은 사람이 바로 비저(Wieser)이기에 이 점은 더욱 두드러진다.

주관적 가치이론에 의해 제공된 불만족스런 결과들은 이 원칙, 특히 한계효용의 중요성에 관한 이 이론의 제안이 화폐문제를 다루는 수단으로는 결함이 있음에 틀림없다는 의견을 정당

111) 제8장 제6절 참고.

화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충분히 특징적이게도 이런 의견을 처음 표시한 사람은 새로운 학파의 대표자인 빅셀(Wicksell)이었다. 빅셀은 가치이론에 대한 모든 현대적 연구의 기초, 즉 한계효용의 개념에 놓여 있는 원리가 하나의 상품과 다른 상품의 교환비율의 결정을 설명하는 데에는 매우 적합할지 모르지만, 화폐와 여타 경제재들의 교환비율들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는 한계효용이 실질적으로 전혀 중요하지 않거나 기껏해야 부차적인 중요성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빅셀은 이 단언에서 한계효용이론에 대한 어떤 유형의 반대도 밝혀내지 못한 것 같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화폐의 객관적 교환가치는 결코 화폐와 여타 경제재들이 교환되는 시장과정에서 의해서 결정되지 않는다. 만약 어떤 한 단일 상품 혹은 집단의 상품들의 화폐가격이 시장에서 잘못 평가된다면, 그 결과 나타나는 단일 상품 혹은 그 집단의 상품들의 공급과 수요, 생산과 소비의 잘못된 조정은 조만간 교정을 필요로 할 것이다. 만약 다른 한편으로 모든 상품 가격들 혹은 평균적인 가격수준이 어떤 이유로 상승하여야 하거나 하락하여야 한다면, 그런 상품시장 환경에서는 하나의 반응을 불러올 수 있는 요인이 아무 것도 없다. 결과적으로, 만약 어떤 가격평가에 대해 너무 높다거나 너무 낮다는 어떤 반응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이런저런 방식으로 상품시장의 외부로부터 기원했음이 틀림없다. 그렇다면 빅셀은 그의 주장을 펼쳐나가면서 화폐가격들을 만들어 내는 규제자(regulator)를 상품시장과 광의의 화폐시장과의 관계에서 찾아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원료, 노동, 토지의 사용, 그리고 여타 생산수단에 대한

수요에 영향을 주고, 그래서 간접적으로 상품가격들의 상향 혹은 하향 이동을 간접적으로 결정하는 요인은, 화폐이자율(*Darlehnszins*)과 자연 혹은 균형이자율(*natürliche Kapitalzins*) 간의 비율이다. 여기에서 자연이자율이란 만약 실질 자본을 그 자체로 화폐의 매개 없이 직접 빌렸다면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되었을 이자율로 이해하면 된다.¹¹²⁾

빅셀은 그의 이 주장이 화폐의 객관적 교환비율의 결정이론을 제공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사실상 그가 증명하고자 한 모든 것은 대부시장으로부터 상품시장으로 화폐의 객관적 교환가치가 너무 높게 상승하거나 너무 낮게 하락하는 것을 막는 힘들이 작동하고 있다는 것일 뿐이다. 그는 결코 대부에 대한 이자율이 어떤 방식으로든 이 가치의 실제 수준을 결정한다고 단언한 적이 없다. 사실 이렇게 단언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화폐가격들의 수준이 “너무 높다”거나 혹은 “너무 낮다”고 말한다면, 우리는 먼저 실제 수준이 비교되어야 할 이상적 수준이 어떻게 확립될 수 있는지 언급해야만 한다. 만약 이 균형의 위치가 먼저 설명되지 않는다면, 어떤 교란이 있을 후 다시 균형의 위치로 돌아온다고 보여 주는 것으로는 결코 충분하지 않다. 의심의 여지없이 이것이 핵심적 문제이며, 그 해결이 다른 해결들로 직접 우리를 이끌어 갈 것이다. 이 해결이 없이는 더 이상의 연구는 성과가 없게 된다. 왜냐하면 균형상태는 단지 처음 그것을 확립하고 그것을 계속해서 재

112) Wicksell, *Geldzins und Güterpreise*(Jena, 1898), pp.ivff, 16ff.

확립시키는 그런 힘들에 의해 유지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만약 대부시장의 상황들이 화폐와 여타 경제재들 사이에 존재하는 교환비율의 탄생에 대해 아무런 설명도 제공하지 않는다면, 그 상황들이 왜 이 비율이 변화하지 않는지를 설명하는 데에도 도움을 줄 수 없을 것이다. 화폐의 객관적 교환가치는 화폐가 상품으로 그리고 상품이 화폐로 교환되는 시장에서 결정된다. 그 결정을 설명하는 것이 화폐의 가치이론의 과제이다. 그러나 빅셀은 “상품들의 교환의 법칙은 그 속에 화폐가격들의 절대적 수준을 결정할 수 있는 아무 것도 포함하지 않고 있다”¹¹³⁾는 의견을 가지고 있다. 이는 이 분야에서 과학적 탐구의 가능성을 부인하는 셈이다.

헬페리히(Helfferich)도 역시 한계효용이론을 화폐의 문제에 적용하는 데 극복할 수 없는 장애물이 있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다. 그 까닭은 한계효용이론은 재화의 교환가치를 개인에게 주는 효용의 정도에 근거하려고 시도하는 반면, 화폐가 그 개인에게 주는 효용의 정도는—화폐는 오로지 그것이 교환가치를 가지는 경우에만 효용을 가질 수 있고 효용의 정도는 그 교환가치의 수준에 의해 결정되므로—그 교환가치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화폐는 주관적으로 그것을 주고 획득할 수 있는 소비 가능한 재화들의 수량에 따라, 혹은 지불을 하기 위해 필요한 화폐를 획득하기 위해 주어져야 할 여타 경제재들의 수량에 따라 그 가치가 부여된다. 어떤 개인에게 화폐의 한계효용—즉, 주어진 수량

113) *Ibid.*, p.35.

의 화폐를 가지고 획득할 수 있는, 혹은 필요한 화폐를 위해 포기해야 할 (재화들로부터 도출되는) 한계효용¹¹⁴⁾은 어떤 화폐의 교환가치를 이미 전제하고 있다. 그래서 후자는 전자로부터 도출될 수 없다.

화폐의 객관적 교환가치의 결정에 있어 역사적으로 전수되어 온 가치들의 중요성을 깨달은 사람이라면 이 외관상의 순환논리로부터 탈출하는 데 별 어려움을 느끼지 않을 것이다. 개인에 의한 화폐적 단위의 가치평가가 시장에서 화폐와 여타 경제재들 사이의 어떤 교환가치가 이미 존재하고 있다는 가정 아래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은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로부터 화폐의 객관적 교환가치의 결정에 대한 완전하고 만족스런 설명이 한계효용이론에 의해 제공될 수 없다고 추론하는 것은 잘못이다. 화폐의 화폐적 효용에만 전적으로 의지해서는 한계효용이론이 화폐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설명할 수 없는 것은 사실이다. 그리고 그 설명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보여 주었듯이 화폐적 기능에는 전혀 근거하지 않고 화폐로 쓰일 물건의 여타 용도들에 근거하는 원래의 교환가치로 되돌아가야 하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런 사실들이 결코 한계효용이론을 기각하는 것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이것이 정확하게 우리가 논의 중인 화폐의 객관적 교환가치의 본질과 기원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어떤 화폐이론이 화폐와 상품들 사이의 교환비율을 순전히 그 화폐의 화폐적 기능에 의존해서, 그리고 화폐가치의 역사적

114) Helfferich, *Das Geld*, 6th ed.(Leipzig, 1923), p.577.

지속성의 요소의 도움을 받지 않고 설명하기를 요구하는 것은 화폐의 본질과 화폐이론의 적절한 과제에 반하는 요구이다.

화폐 그 자체로서의 가치의 이론은 화폐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단지 이것이 화폐의 가치이기를 멈추고 어떤 한 상품의 가치에 불과한 지점으로까지만 추적할 수 있다. 이 지점에서 그 이론은 모든 더 이상의 탐구를 가치의 일반이론에 넘겨주어야 한다. 그러면 가치의 일반이론이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더 이상 어려움에 봉착하지 않을 것이다. 화폐의 주관적 가치평가가 이미 존재하는 객관적 교환가치를 전제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전제되어야 할 그 가치는 설명되어야 할 가치와 동일하지 않다. 전제되어야 할 것은 어제의 교환가치이며 오늘의 교환가치의 설명에 어제의 교환가치를 사용하는 것은 (순환논리에 빠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매우 적절하다. 오늘 시장에서 지배적인 화폐의 객관적 교환가치는 시장에 참여하는 개인들의 주관적 가치평가들의 영향 아래 어제의 것으로부터 도출된다. 이렇게 되는 방식은 마치 어제의 것이 이번에는 주관적 가치평가의 영향 아래 전날에 화폐가 보유했던 객관적 교환가치들로부터 도출된 것과 마찬가지로이다.

만약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계속 과거로 나아간다면, 우리는 마침내 화폐의 객관적 교환가치 속에서 교환의 공통된 매개물로서의 화폐의 기능에 근거한 가치평가로부터 발생하는 구성요소를 더 이상 발견할 수 없는 시점에 도달할 것임에 틀림없다. 그 시점에서는 화폐의 가치는 화폐로서보다는 다른 어떤 용도로 유용한 어떤 대상의 가치에 다름 아닐 것이다. 그러나 이 시점은

이론의 수단적 개념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간접교환이 시작될 순간에 실제로 등장했던 경제사(經濟史)의 한 현상이다.

시장에서 재화를 개인적 소비가 아니라 진정으로 원하던 재화로 다시 교환하기 위해 획득하는 것이 통상적이기 이전에는 각 개별 상품은 단지 그것의 직접적 효용에 근거한 주관적 가치 평가에 의해 주어진 가치가 부여되었을 뿐이다. 사람들이 어떤 재화들을 간접교환에서 사용할 가능성으로 인해 종전보다 더 높게 평가하기 시작한 것은, 그것들을 교환의 매개물로 사용하기 위해 획득하는 것이 관습적이 된 이후였다. 개인이 그것들을 가치 있게 여긴 까닭은 무엇보다 먼저 그것들이 통상적 의미에서 유용했기 때문이며, 그리고 추가적으로는 그것들이 교환의 매개물로 사용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두 종류의 가치평가들은 모두 한계효용의 법칙을 따른다. 화폐가치의 원래 출발점이 주관적 가치평가들의 결과에 불과한 것과 마찬가지로 화폐의 오늘날의 가치도 그렇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헬페리히(Helfferich)는 여전히 한계효용이론을 화폐에는 적용할 수 없다는 또 다른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 경제 시스템을 하나의 전체로 볼 때, 한계효용의 개념은 특정 수량의 재화들이 주어져 있을 때 단지 어떤 욕구들이 만족될 수 있으며, 단지 어떤 집합의 효용들만이 제공될 수 있다는 사실에 기초해 있다. 주어진 욕구들과 주어진 수단들의 집합 아래에서 한계효용의 정도가 역시 결정된다. 한계효용이론에 따르면, 이렇게 결정된 한계효용의 정도가—교환에서 어떤 재화와 동등한 것으로 제공된—여타 재화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 재화의 가치를 고정한

다. 재화들에 대한 수요 중에서 주어진 공급으로 만족될 수 없는 부분이 배제되는데 그 까닭은 그 부분은 그 재화의 한계효용에 상응하는 한계효용을 줄 수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더 작은 한계효용을 주는 것이 배제되는 방식으로 재화들의 가치가 고정된다. 이제 헬퍼리히는 화폐를 제외한 어떤 재화들의 제한적 공급량의 존재는 그 자체로 그 효용의 한계를 아울러 암시하기에 충분한 반면, 화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며 한계효용이론의 적용에 반대한다. 주어진 수량의 화폐의 효용은 개인의 관점에서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로서도 직접적으로 그 화폐의 교환 가치에 달려 있다. 여타 재화들과의 관계에서 그 단위의 가치가 높을수록 동일한 화폐를 수단으로 지불될 수 있는 여타 재화들의 수량도 더 클 것이다. 재화의 가치는 일반적으로 그 재화들의 주어진 공급으로부터 획득 가능한 효용들의 한계로부터 발생하는데, 공급의 제한에 의해 배제되는 효용의 정도에 따라 그 가치가 보통 더 높은 반면, 그 공급 자체의 총효용은 그 가치의 증가에 의해 증대될 수 없다. 그러나 화폐의 경우에는 주어진 공급 그 자체의 총효용은 그 단위의 가치의 증가에 의해 추가적으로 증대될 수 있다.¹¹⁵⁾

이 주장의 오류는 그것이 화폐의 효용을 개인의 관점 대신 공동체의 관점으로부터 간주한다는 점에서 발견될 수 있다. 모든 가치평가는 가치가 부여되는 대상의 교환에서 처분할 위치에 있는 어떤 사람으로부터 나오지 않을 수 없다. 오로지 두 경제제


115) *Ibid.*, p.578.

사이에서 선택을 하는 사람들만이 어떤 하나를 다른 것보다 선호함으로써 가치에 대한 판단을 형성할 수 있다. 만약 우리가 사회 전체의 관점으로부터의 가치평가에서 출발한다면, 우리는 암묵적으로 어떤 한 사회화된 경제조직—거기에서는 교환도 없고 책임 있는 공식적 조직의 가치평가만이 존재하는—의 존재를 가정하는 셈이다. 그와 같은 사회에서 가치평가의 기회들은 생산과 소비의 통제에서, 예를 들어 어떤 생산재들을 사용하는 대체적인 방법들이 존재할 때 그것들을 어떻게 사용할지 결정하면서 나타날 것이다. 그러나 그와 같은 사회에서 화폐의 여지는 전혀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그와 같은 조건들 아래에서 교환의 공통적 매개물은 아무런 효용을 가질 수 없을 것이며, 결과적으로 아무런 가치도 가지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화폐의 가치를 다룰 때 공동체 전체의 관점을 채택하는 것은 비논리적이다. 화폐의 가치에 대한 모든 고려는 분명히 교환이 행해지는 사회의 상태를 전제하여야 하며, 그와 같은 사회 안에서 독립적인 경제 주체로서 행동하는 개인들을, 즉 물건들의 가치를 평가하는 개인들을 그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¹¹⁶⁾

116) 앤더슨(M. B. Anderson)박사는 그의 뛰어난 책, *The Value of Money* (New York, 1917)의 100-110면에서 위에 전개된 이론에 대해 이것이 논리적 분석을 하지 않고 단지 시간적으로 후퇴한다고 반대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제기할 수 있었던 모든 날카로운 반대들은, 상품들 사이에 존재하는 교환비율에서 역사적 구성요소를 찾으려는 주장에 반대하는 것이며, 나도 그 주장에 확실하게 반대한다(제8장 제3절 참고). 그러나 앤더슨 박사는 나의 이론의 논리적 근거를 인식하고 있다. 그는 이렇게 선언하고 있다. “화폐적 고용이 아닌 다른 어떤 원천으로부터의 가치가 화폐적 고용의 본질적인 전제조건이다”(op. cit., p.126).

5. 화폐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움직이는

‘화폐적’ 그리고 ‘비화폐적’ 영향력

 이제 화폐가치의 문제에 대한 첫 부분이 해결되었으므로, 마침내 다음의 단계로 나갈 계획을 진전시킬 수 있게 되었다. 우리는 더 이상 화폐의 객관적 교환가치의 기원을 설명하는 데 관심을 기울이지 않아도 된다. 이 과제는 전술한 탐구의 과정에서 이미 수행되었다. 우리는 이제 화폐와 여타 경제재들 사이의 기존의 교환비율들의 변화를 지배하는 법칙들을 확립하여야 한다. 화폐가치 문제의 이 부분은, 비록 논리적으로 먼저 다루어 져야 하는 것은 다른 부분인 화폐가치의 기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초창기부터 경제학자들이 몰두했던 분야였다. 다른 많은 이유들도 있지만 바로 이런 취약점으로 인해, 화폐와 여타 경제재들의 교환비율의 변화에 대해 지금까지 이룩한 성과는 그렇게 많지는 않다. 물론 화폐가치의 문제 중 이 부분은 아울러 첫 부분에 비해 훨씬 더 복잡하다.


화폐가치의 변화의 속성에 대한 탐구에서, 화폐와 여타 경제재들을 연결시키는 교환비율의 결정요인들을 두 가지 종류, 즉 그 비율의 화폐적 측면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결정요인들과 상품 측면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결정요인들로 구분하는 것이 보통이다. 이 구분은 매우 유용하다. 이 구분이 없으면 사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모든 시도들은 희망이 없는 것으로 기각되고 말았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구분의 진정한 의미는 망각되지 말아야 한다.

상품들 사이의 교환비율들—그리고 상품들과 화폐 사이의 교환비율에 대해서도 자연히 마찬가지로이지만—은 교환비율의 양 조건들에 영향을 주는 결정요인들로부터 귀결된다. 그러나 재화들 사이의 기존의 교환비율들은 교환되는 대상들의 두 집합 중 한 집합에만 연결된 결정요인의 변화에 의해 수정될 수 있다. 비록 어떤 재화의 가치평가를 결정하는 모든 요인들이 그대로 이더라도 그것의 다른 재화와의 교환비율은, 만약 이 두 번째 재화의 가치평가를 결정하는 요인들이 변한다면, 바뀔 수 있다. 만약 두 사람 중 내가 A를 B보다 더 좋아하더라도, 나의 A에 대한 감정이 변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만약 내가 B와 종전과 달리 매우 친밀한 우정을 느끼게 되면, 나의 선호는 역전될 수 있다. 재화와 인간들 사이의 관계도 비슷하다. 오늘 한 잔의 차(茶)를 한 방울의 키니네에 비해 선호하는 사람도, 비록 그가 차를 좋아하는 마음이 줄지 않았더라도 밤새 신열(身熱)이 나게 되면—키니네는 신열에 효과가 있다—내일 그 가치평가를 다르게 할 수 있다. 가격을 결정하는 요인들은 언제나 교환되는 재화들 양 집단에 모두 영향을 주는 반면, 기존의 가격들을 단순히 수정하는 요인들은 때로는 한 집단의 재화들에만 그 영향이 제한될 수 있다.¹¹⁷⁾

117) Menger, *Grundsätze der Volkswirtschaftslehre*(Vienna, 1923), pp.304ff. 그의 이 독일어 판본 책에서, 위의 단락에 이어 다음의 설명이 나온다. 즉, 멩거를 따르는 독일 저술가들은 보통 “화폐 측면에서의 가격들의 결정요인들의 변화가 화폐와 상품들 사이의 교환비율에 미치는 속성과 정도에 관한 질문”을 화폐의 *innere objektive Tauschwert*의 문제로서 언급한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시간과 공간을 통해 나타나는 화폐의 객관적 가치의 변화와 관련된 문제”는 “화폐의 *äussere objektive Tauschwert*의

II. 화폐의 공급과 수요 간 비율변화에 따른 화폐의 객관적 교환가치의 변동

6. 화폐수량설

 역사적으로 전수된 화폐의 객관적 교환가치(*der geschichtlich iiberkommene objektive Tauschwert des Geldes*)는, 화폐가 만들어진 재료 물질의 산업적 용도뿐만 아니라 그 화폐적 용도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 이것은 오늘날 어떤 경제학자도 거의 부인하지 않는 명제이다. 사실 아주 최근에 이르기까지 일반인의 의견은 반대되는 믿음에 의해 형성되었다. 단순한 관찰자에게는 귀금속으로 만들어진 화폐는, 귀금속 조각이 ‘내재적으로’ 가치를 지닌 물건이었으므로 ‘건전한 화폐’이고, 지폐는 그 가치가 단지 ‘자의적’이므로 ‘나쁜 화폐’였다. 그러나 이런 의견을 지닌 비전문가조차 상업거래에서 화폐(지폐)를 산업적 용도 때문이 아니라 그것의 객관적 교환가치—대개 그것의 화폐적 고용에 의존하는—때문에 받아들인다. 그는 금화를 산업적 사용가치, 예를 들어 그것을 보석으로 사용할 가능성 때문이 아니라 주로 그것의 화폐적 효용 때문에 가치가 있다고 판단한다. 물론 누가 어떤 행동을 하는 것과 그가 스스로에게 왜 자신이 그런 행동을 하는지

문제”로 언급한다. 그러한 구분은 영국 용어에서는 보통 쓰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이 영역분에서는 그 구분을 생략하였다. 여기서부터 앞으로는, ‘화폐의 객관적 교환가치’가 언급될 때마다 그것은 따로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는 한, 전자(*the innere exchange value*)를 의미한다. H.E.B.]

를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완전히 별개의 것이다.¹¹⁸⁾

화폐와 그 가치에 대한 일반적 견해들의 단점들에 대한 판단은 관대해야 한다. 왜냐하면 심지어 이 문제에 대한 과학의 태도도 언제나 오류에서 벗어나 있었던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다행스럽게도, 지난 몇 년 사이에 통속적인 화폐이론에 점진적이고도 확실한 변화가 있었다. 이제 화폐의 가치가 부분적으로는 그 화폐적 기능에 의존한다는 점이 일반적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것은 화폐본위제에 대한 일대 논쟁이 시작되면서 화폐정책의 문제들에 커다란 관심이 쏠렸던 덕분이었다. 과거의 이론들은 불만족스러웠다. 화폐의 가치가 부분적으로 그것의 화폐적 기능으로부터 기원한다는 가정을 불러들이지 않고서는 오스트리아나 인도의 통화 시스템의 현상들을 설명할 수 없었다. 이 견해를 공격했던 무수한 저술들이 지닌 단순성으로 인해, 그리고 이 저술들이 가치이론에 대한 그 어떤 유형의 지식도 없는 상태에서 저술되었기에, 그런 지식이 행사했을 제약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웠기 때문에, 경제학자들은 우발적으로 그 저술들을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할지 모른다. 그러나 이 저술들은 최소한 깊이 뿌리박힌 편견들을 뒤흔들고 가격의 문제에 대한 일반적 관심을 자극하는 서비스를 하였다고 할 수 있다.

현대 화폐 시스템의 특이한 현상들을 다른 방식으로 설명하려는 시도가 없었던 것이 아님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런 시도들은 하나같이 성공적이지 못했다. 그래서 특히 로린(Laughlin)의

118) Wieser, *Über den Ursprung und die Hauptgesetze des wirtschaftlichen Wertes*, op. cit., pp.iii.

이론이 특별하게 화폐적인 기능과 연관된 화폐가치의 특별한 측면들을 설명하는 데 실패한 것은 불행한 일이다. 매우 정확하게 로린은 화폐대용물들의 특이성으로 일정하고도 즉각적인 화폐로의 태환성(兌換性)을 강조한다.¹¹⁹⁾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명목화폐의 이름을 1893년에서 1899년 사이의 루피와 현금지급이 중지된 시절의 러시아 루블과 오스트리아 굴덴에 적용하고 있는데, 이것을 보면 그가 근본적 논점에서 오류에 빠진 것 같다. 그는 즉각 금으로 태환되지 않는 한 조각의 종이 가치가 어떤 가치든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젠가 태환될 수 있을 가능성에 근거해서 설명한다. 그는 불태환지폐를 임시적으로 배당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지만 그 주식이 여전히 미래의 배당금의 가능성 때문에 일정한 교환가치를 가질 수 있는 회사의 주식지분에 비교한다. 그리고 그는 그와 같은 지폐의 교환가치의 변동은 결과적으로 그 궁극적 태환의 변화하는 전망에 근거하고 있다고 말한다.¹²⁰⁾

우리는 가장 단순하게 실제 사례를 통해 이 결론의 오류를 드러낼 수 있다. 이를 위해 로린도 역시 사례로 사용한 오스트리아의 화폐의 역사를 골라보자. 1859년부터 계속 오스트리아 국립은행(Austrian National Bank)은 은행권을 즉각 은(銀)으로 태환해 줄 의무로부터 면제되었으며, 아무도 국가가 언제 1866년 발행된 지폐를 상환해 줄 것인지 혹은 상환은 해 주는지를 알 수 없게 되었다. 오스트리아-헝가리 뱅크(Austro-Hungarian Bank) 측에서

119) Laughlin, *The Principles of Money*(London, 1903), pp.513f.

120) *Ibid.*, pp.530f.

현금지급을 실제로 재개함에 따라 금속화폐로의 이행이 완성된 것은 1890년대 후반에 이르러서였다.

이제 로린은 이 기간의 오스트리아 통화의 가치를 은행권의 금속 상품화폐로의 미래의 태환 전망에 근거해서 설명하려고 시도한다. 그는 그 가치의 근거를 처음에는 은(銀)으로 태환될 것이라는 예상에서, 그리고 나중에는 금(金)으로 태환될 것이라는 예상에서 발견하고 있으며, 그 구매력의 부침을 최종적인 태환 가능성이 변화한 데 따른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¹²¹⁾ 이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사실은 아주 극적으로 예시될 수 있다. 1884년—이 해는 무작위로 선택된 것이다—에, 5퍼센트 오스트리아 정부채권은 비엔나 주식거래소에서 평균비율 95.81에서, 즉 액면가보다 아래인 4.19퍼센트에서 거래되었다. 여기에서 시가는 오스트리아 지폐 굴덴의 단위로 표현되었다. 그 정부채권은 5퍼센트의 이자를 주는 오스트리아 정부에 대한 청구권을 나타낸다. 그래서 채권과 은행권들은 동일한 채무자에 대한 청구권들이었다. 사실 이 정부채권들은 되돌려 받을 수 없었다. 즉, 채권자 측에서 상환받을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자가 그 채권들에 지불되는 것을 볼 때, 이것이 그들의 가치를, 이자가 지불되지 않는 (그리고 마찬가지로 상환될 수 없는) 통화 은행권과 비교할 때, 나쁘게 할 수 없을 것이다. 게다가 채권들에 대한 이자는 지폐로 지불될 수 있으며, 만약 정부가 채권들을 상환했다면, 정부는 지폐에 대해서도 그렇게 할 수 있었을 것이

121) *Ibid.*, pp.531ff.

다. 사실 문제의 채권들은 통화 은행권들이 금으로 태환되기 훨씬 이전인 1892년 자발적으로 상환되었다. 이제 의문이 제기된다. 5퍼센트의 이자를 주는 정부채권이 무(無)이자수익의 통화 은행권보다 높지 않게 가치평가가 이루어지는 일이 도대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가? 이것은 예를 들어 사람들이 그 통화 은행권들이, 그 채권이 상환되기 이전에 금으로 태환될 것으로 기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될 수 없다. 그와 같은 예상을 했을 가능성을 보여 주는 것이 전혀 없다. 매우 다른 상황이 그 문제를 결정하였다.

통화 은행권(currency notes)은 교환의 공통 매개물이며—그것들은 화폐이다—그리고 결과적으로 그것들이 국가에 대한 청구권으로서 지니고 있는 가치 이외에도 화폐로서의 가치도 가지고 있었다. 통화 은행권의 청구권으로서의 가치만으로는 그것들의 실제 교환가치 중 상대적으로 큰 부분에 대해서조차 충분한 기초가 되지 못했다는 점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그 청구권의 상환일자는 사실상 매우 불확실하였고, 아무튼 매우 먼 장래였다. 청구권으로서의 통화 은행권들은 그것들이 상환될 것이라는 기대가 부여하는 가치보다 더 높은 교환가치를 가지고 있기는 불가능하였다. 그래서 은의 자유로운 주조가 중단된 이후, 지폐 굴덴(그리고 우발적으로 은 굴덴)은 그것이 태환이 이루어지기 직전의 시기에 유통되던 평균비율을 초과하는 비율로 태환되지 않을 것임은 거의 분명하였다. 아무튼 1892년 8월 2일의 통화규제법(the Currency Regulation Law)에 의해 태환비율이 법률적으로 결정된 이후, 그 통화 은행권의 태환은 이것보다 더 높은 비율로

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정해졌다. 그렇다면 크로네, 반(半) 굴덴(half-gulden)의 금(金) 가치가 아직 태환의 날짜가 알려지지 않았던 1892년 후반에 벌써 대략 이 비율로 변동될 수 있었던 것일까? (그 지불일자가 불확실한 미래인 고정된 합계액에 대한 청구권은 보통 그것이 지정하는 합계액보다 더 높지 않게 가치가 부여된다.) 앞의 질문에 대해 로린의 이론은 대답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오로지 화폐적 기능도 역시 가치에 기여한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에만 만족스런 설명이 가능하다.

화폐와 여타 경제재들 사이에 존재하는 교환비율에 영향을 미치는 화폐 측면으로부터 발생하는 힘들의 수량적 중요성을 결정하려는 지금까지 이루어진 시도들은 화폐수량설의 사상의 계보를 따랐다.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화폐수량설의 모든 주장자들이 화폐가치가 단순히 비화폐적, 산업적 고용에 의해서만이 아니라 그 화폐적 기능에 의해서도, 그리고 단지 그 화폐적 기능에 의해서만 결정된다는 것을 깨달았음을 말하려는 것이 아니다. 많은 화폐수량설의 지지자들은 이 점에 대해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었으며 화폐의 가치가 단지 그 화폐적 물질의 산업적 고용에만 의존한다고 믿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 질문에 대한 개념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았다. 진정한 해결책에 접근한 사람은 더욱이 별로 없었다. 이 저술가들 중 일부를 어떤 집단으로 분류해야 할지 결정하기가 어려울 때가 많다. 그들의 용어는 애매할 때가 많고, 이론들이 모순될 때가 드물지 않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화폐수량설의 지지자들이 화폐적 물질의 가치 결정에서 화폐적 기능의 중요성을 인식했다고 가

정하고 이 관점으로부터 그들 이론의 유용성을 비판해 보자.

경제재들 사이의 교환비율의 결정요인들이 처음으로 탐구되었을 때, 일찍이 가격이 매겨지는 과정에서 그 중요성이 부인되지 않았던 두 가지 요인들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었다. 재화의 가용한 수량의 변화와 가격들의 변화 사이의 잘 알려진 관계를 간과하기는 불가능하였다. 그래서 곧바로 만약 그 가용한 수량이 감소하면 재화의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는 제안이 형성되었다. 마찬가지로, 가격의 결정에서 총거래량의 중요성이 역시 인식되었다. 그래서 가격 결정의 기계론적 이론—아주 최근까지도 우리 과학(경제학)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했던 공급과 수요의 원칙—이 등장하였다. 모든 가격들에 대한 설명들 가운데 이것이 가장 오래된 것이다. 우리는 이것을 그저 잘못된 것으로 기각할 수는 없다. 이에 대한 유일한 유효한 반대는 이것이 가격들의 최종적인 결정요인들로 더 깊게 분석하지 않았다는 것뿐이다. 수요와 공급이라는 단어들에 주어진 내용에 따라 이 이론이 옳기도 하고 옳지 않기도 하다. 만약 사람들로 하여금 사거나 팔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모든 요인들이 고려된다면 이 이론은 옳다. 만약 공급과 수요가 단순히 수량적 의미에서만 이해되고 비교된다면 그것은 옳지 않다.¹²²⁾

상품들의 상호적 교환비율들을 설명하기 위해 구축된 이 이론을 취해서, 이것을 상품과 화폐의 상대적인 가치들의 변동에도 역시 적용하는 것이 예상되는 당연한 단계였다. 사람들이 화폐

122) Zuckerkandl, *op. cit.*, pp.123ff.

가치가 변동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기 시작하고, 화폐를 단순히 불변의 가치척도로 생각하기를 포기하자, 그들은 이 변동들도 역시 수요와 공급의 수량적 변화를 통해 설명하기 시작하였다.

화폐수량설에 대한 통상적인 비판은 (자주 과학적 탐구의 확실한 징표여야 하는 객관성과 어울리지 않을 정도로 분개의 감정이 함께 표출되는 경우가 많지만) 그것이 과거의 불안정한 유형의 화폐수량설에 대해 가해진 한에 있어서는 쉬운 과제를 가지고 있었다. 화폐가치의 변화가 화폐수량의 변화에 비례해야 한다는, 그래서 예를 들어 화폐수량의 두 배의 증가가 가격들도 2배로 증가시킬 것이라는 가정이 사실과 일치하지 않으며, 이론적으로 어떤 방법으로도 확립될 수 없음을 증명하기는 어렵지 않았다.¹²³⁾ 화폐의 총수량과 화폐의 총스톡을 동등하게 간주하는 단순한 유형의 화폐수량설의 지지 불가능성을 보여 주기는 더욱더 단순하였다.

그러나 이런 모든 반대들은 그 원칙의 핵심을 건드리지 못하고 있다. 상당수 저술가들이 다른 조건이 동일할 때(*ceteris paribus*)라는 가정 아래에서만 화폐수량설의 유효성을 주장했지만, 이런 사실로부터 화폐수량설을 논박하거나 그 한계를 보여 줄 수는 없다. 그들이 이 가정이 결코 충족된 적이 없으며 결코 충족될 수 없다고 언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가정을 근거로 화폐수량설을 비판할 수는 없다.¹²⁴⁾ “다른 조건들이 동일할 때”라는

123) Mill, *Principles of Political Economy*(London, 1867), p.299.

124) Cf. 인도 통화위원회(the Indian Currency Committee)에서의 마셜(Marshall)의 언급. “Report”(London, 1898-99; Q. 11759), in *Official Papers*(London, 1926), p.267.

가정은 모든 과학적 원칙의 자명한 부가조건이며, 이 조건이 없
이 가능한 경제법칙은 없다.

화폐수량설에 대한 그와 같은 피상적 비판에 대해 화폐수량
설은 승리를 구가하며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었으며, 수 세기를
통해 일부 사람들로부터는 저주를 받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들
로부터는 논박할 수 없는 진리로 칭송을 받기도 하였다. 아무튼
화폐수량설은 언제나 과학적 논의의 가장 중심에 있었다. 화폐
수량설은 한 사람의 힘으로는 정복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문
헌에서 다루어졌다. 그러나 이런 저술들의 과학적 수확은 얼마
되지 않았다. 그 이론은 ‘옳다’거나 ‘그르다’는 식으로 선고를 받
았으며, 비록 우발적인 상황들이 야기하는 변화들을 제거하려는
과학적 조심성을 발휘하는 경우는 별로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통계적 데이터들(대개 불완전하고 부정확하게 이해된 것들)은 그 이
론을 증명하거나 부인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다른 한편 가치이
론의 근거 위에서 행해진 연구는 별로 시도되지 않았다.

만약 우리가 화폐수량설에 대한 공정한 평가에 도달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현대적 가치이론의 조명 아래 그것을 고려해야
한다. 현대 가치이론의 핵심은 화폐의 공급과 그에 대한 수요
양자 모두가 그 가치에 영향을 준다는 명제에 있다. 이 명제는
아마도 가격들에 있어서의 커다란 변화들을 설명하는 충분히
훌륭한 가설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대의 가치이론은 화폐
의 가치에 대한 완전한 이론을 포함하지는 않고 있다. 이것은
가격들에서의 변화의 원인을 묘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
은 문제를 철저히 남김없이 다루기에는 부적합하다. 그 자체


로 이것은 화폐의 가치이론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이것은 일반적 가치이론의 기초를 필요로 한다. 공급과 수요의 원칙, 생산비용이론, 그리고 주관적 가치이론은 하나씩 연결되어 화폐수량설의 기초들을 제공했어야 했다.

만약 우리가 논의에서 화폐수량설에 내포된 단지 하나의 근본적인 개념, 즉 한편으로는 화폐의 가치의 변동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화폐의 수요와 공급 간 관계의 변동 사이에 어떤 연계가 존재한다는 개념을 사용한다면, 그 이유는 이것이 역사적 관점으로부터 그 이론적 내용의 가장 정확한 표현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그 이론에서 진리의 핵심—현대적 연구자들조차 유용하다고 인정할 수 있고 인정해야 하는—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비록 경제이론의 역사가(경제학사 연구자)라면 이런 형식화가 부정확하다고 보고 이를 논박하는 인용구들을 제공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것이 화폐수량설에서 가치 있고 화폐가치이론을 위한 주춧돌로서 유용한 것에 대한 정확한 표현을 포함하고 있음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이 명제를 넘어서서는 화폐수량설은 우리에게 아무 것도 제공할 수 없다. 무엇보다 화폐수량설은 화폐가치의 변화 메커니즘을 설명하는 데 실패하고 있다. 화폐수량설의 일부 해설자들은 이 질문에 손을 대지 않고 있다. 다른 이들은 그것을 다루는데 부적합한 원리들을 채용하고 있다. 화폐문제에 대한 관찰을 통해 우리는, 어떤 종류의 관계들이 화폐의 가용한 스톡과 화폐의 필요성 사이에 사실상 존재하고 있음을 알고 있다. 이제 문

제는 가치의 근본적 법칙들로부터 이 관계들을 추론해 내고, 그래서 마침내 그들의 진정한 중요성을 이해하는 것이다.

7. 화폐의 스톡과 화폐에 대한 수요

 공급과 수요가 균형의 위치에 도달될 때까지 서로 수용되고 양자가 수량적으로 그리고 질적으로 서로 일치하는 과정은 바로 시장에서의 흥정이다. 그러나 공급과 수요는 단지 연결된 현상들 속에서의 연결고리일 뿐이다. 그 연결고리의 한쪽 끝이 시장에서 이런 가시적인 현상들을 가지고 있는 반면, 다른 한쪽 끝은 인간의 마음속에 깊게 닿을 내리고 있다. 공급과 수요가 표현되는 강도(強度)는, 결과적으로 양자가 일치하는 그 교환비율의 수준은 개인들의 주관적인 가치평가에 달려 있다. 이것은 화폐를 제외한 여타 경제재들 사이의 직접교환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한편으로는 화폐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상품들 사이의 교환비율에 대해서도 사실이다.

오랫동안 화폐에 대한 수요는 객관적 요인들에 의해 결정되며, 주관적 고려들과는 독립적인 수량이라고 믿어져 왔다. 어떤 한 경제공동체에서의 화폐에 대한 수요는, 한편으로는 어떤 주어진 기간에 지불되어야 할 상품들의 총량에 의해,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화폐의 유통속도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생각되어 왔다. 화폐 문제를 간주하는 방식의 바로 그 출발점에 오류가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방식의 오류는 멩거에 의해 처음으

로 성공적으로 공략되었다.¹²⁵⁾ 공동체의 화폐에 대한 수요로 시작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 화폐에 대한 수요가 존재하는 유일한 종류의 공동체인 개인주의적 경제공동체(individualistic economic community)도 그 자체가 경제주체는 아니다. 그것은 그 개인 구성원들이 화폐를 수요하는 한에 있어서만 화폐를 수요한다. 경제공동체의 화폐에 대한 수요란 그것을 구성하는 개인 경제주체들의 화폐에 대한 수요의 합계에 불과하다. 그러나 개인 경제주체들로서는 총거래량/유통속도(Total Volume of Transactions / Velocity of Circulation)라는 공식을 이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우리가 어떤 한 개인의 화폐에 대한 수요를 묘사할 수 있으려면, 화폐를 수령하고 지불하는 그와 같은 개인에 영향을 주는 고려들로부터 출발해야 한다.

모든 경제주체는 그가 전망하는 사업적 필요와 개인적 필요를 충족하기에 충분하게끔 교환의 공통 매개물의 스톡을 보유하여야 한다. 필요한 수량은 개인적 상황들에 달려 있다. 그것은 그 개인의 관습과 습관, 그리고 사회 전체의 생산과 교환의 조직 양자 모두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그러나 이 객관적 요인들 모두는 언제나 개인의 동기로서만 그 문제에 영향을 준다. 그들은 결코 그의 화폐수요의 실제 수량에 직접적 영향을 줄 수 없다. 여기에 경제적 삶의 모든 분야들에서와 마찬가지로, 오로지 결정적인 것은 개별 경제주체들의 주관적 가치평가들뿐이다. 두 사람의 그와 같은 경제주체-객관

125) Menger, *Grundsätze*, pp.325ff.; Helfferich, *Das Geld*, pp.500ff.

적 경제상황들은 동일할지라도—에 의해 보유된 구매력의 스톡(저장)의 정도는, 만약 그와 같은 구매력 저장의 유·불리점들이 서로 다른 주체들에 의해 다르게 평가된다면 매우 다를 수 있다.

어떤 한 개인에 의해 보유된 현금잔고(cash balance)는 결코 완전히 화폐만으로 구성될 필요는 없다. 만약 요구불로 지불되는 화폐에 대한 안전한 청구권이 상업적으로 화폐에 대한 대용물로서 고용된다면, (그 대용물들이 화폐 대신 법적 자격을 갖추고 받아들여진다면) 그러면 그 개인들의 화폐의 스톡은 이 대용물들의 상응하는 스톡으로 완전히 혹은 부분적으로 대체될 것이다. 사실 예를 들어 (소액결제를 위해) 다양한 화폐단위들을 손에 들고 있을 필요성과 같은 기술적 이유들로 인해 화폐대용물의 보유는 때로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다. 이로부터 우리는 광의의 혹은 협의의 화폐에 대한 수요를 말할 수 있음을 도출할 수 있다. 전자는 개인의 화폐와 화폐대용물들에 대한 전체 수요를 포함한다. 후자는 단지 그의 정화(正貨)에 대한 수요만을 포함한다. 전자는 문제의 경제주체의 의지에 의해 결정된다. 후자는, 만약 우리가 위에서 언급한 화폐단위의 문제를 무시한다면, 개인적 영향으로부터 상당히 독립적이다. 이것과는 별개로 개인이 보유한 현금잔고의 어느 만큼을 화폐대용물들로 구성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은, 그가 이자를 주는 화폐대용물들, 예컨대 매우 드는 경우이지만 이자수령 은행권 혹은 은행예금들을 획득할 기회를 가질 때 중요할 뿐이다. 모든 여타 경우들에서는 그에게는 완전히 관심 밖의 일일 뿐이다.

개인의 화폐의 수요와 화폐의 스톡은 전체 공동체의 수요와 스톡의 기초이다. 사용되는 화폐대용물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면, 사회의 화폐에 대한 수요와 사회의 화폐의 스톡은 단지 개인이 수요하고 보유하는 것들의 각각의 합계들에 불과하다. 그러나 이 상황은 화폐대용물의 출현으로 달라진다. 협의의 사회적 화폐수요는 더 이상 협의의 개인의 화폐수요의 합계가 아니며, 광의의 사회적 화폐수요는 결코 광의의 개인의 화폐수요의 합계가 아니다. 개인들의 현금잔고에서 화폐로 기능하는 화폐대용물의 일부만이 화폐대용물이 현금화될 수 있는 장소, 즉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지만 보통 그 화폐대용물을 발행한 곳에 '상환기금'으로서 보유된 화폐로 "그 지불이 담보되고 있다." 우리는 상응하는 일정 금액의 화폐의 비축을 통해 그 지불이 완전하게 보호되는 화폐대용물들을 지칭하여 화폐증서(Money-Certificates)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이런 식의 보호가 되지 않은 화폐대용물들을 지칭하여 신용수단(Fiduciary Media)¹²⁶⁾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것이다. 신용수단이라는 용어는 이 책의 제3부에서 다룰 문제들을 고려하여 선택한 것인데 그 적절성은 그곳에서 드러날 것이다. 그 적절성은 법률적 의미에서의 은행기법이라는 조명 아래 이해되어서는 안 된다. 이 용어는 경제학적 주장을 하기 위해 고안되었기 때문이다.

단지 가장 희귀한 경우에만 어떤 특별한 화폐대용물들이 즉각 화폐증서나 신용수단 중 하나의 집단으로 분류될 수 있다.

126) 부록 B 참고.

이런 분류는 오로지 특정한 화폐대용물 전체 종(種) 자체가 완전하게 화폐에 의해 보호되거나 아니면 전혀 화폐에 의해 보호되지 않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모든 여타 화폐대용물들의 경우에는, 즉 그 전체 수량이 부분적으로는 화폐에 의해 보호되고 부분적으로는 화폐에 의해 보호되지 않는 그런 경우에는, 단지 상상으로 일정한 약수 부분이 두 집단의 각각에 속하는 것으로 다루는 것이 가능할 뿐이다. 이것은 특별히 새로운 어려움을 내포하지 않는다. 만약 예를 들어 유통 중인 은행권이 있는데 그 중 1/3은 화폐로 보호되는데 비해 2/3는 그렇지 않다면, 각 개별 은행권은 그중 2/3은 신용수단으로 그리고 1/3은 화폐증서로 간주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한 공동체의 광의의 화폐에 대한 수요는 개인들의 화폐와 화폐대용물의 수요의 합계일 수 없음은 분명하다. 왜냐하면 화폐증서들에 대한 수요와 여기에 은행과 다른 곳에 있는 이 화폐증서들에 대한 보증으로 봉사하는 화폐에 대한 수요를 함께 합하는 것은 동일한 수량을 중복 계산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어떤 한 공동체의 광의의 화폐에 대한 수요는 개별 경제주체들의 정화(正貨)와 신용수단(담보를 위한 수요를 포함해서)에 대한 수요들의 합계이다. 그리고 어떤 한 공동체의 협의의 화폐에 대한 수요는 개별 경제주체들의 화폐와 화폐증서들(이번에는 담보를 위한 수요를 포함하지 않고서)에 대한 수요들의 합계이다.

이 제2부에서 우리는 신용수단의 존재를 잠시 무시하고 개별 경제주체들의 화폐에 대한 수요들이 오로지 화폐와 화폐증서들에 의해서 충족될 수 있다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경제 공동체

전체의 화폐에 대한 수요가 단지 정화(正貨)에 의해서만 충족될 수 있다고 가정한다.¹²⁷⁾ 우리는 이 책의 제3부에서 신용수단의 창출과 유통으로부터 야기되는 중요하고도 어려운 문제들을 검토하는 데 전념할 것이다.

화폐에 대한 수요와 그것의 화폐 스톡과의 관계가 화폐의 객관적 교환가치의 변동에 대한 설명의 출발점이다. 화폐수요의 본질에 대한 이해의 실패는 화폐가치의 변화의 문제를 파악하려고 시도하면서 그 출발점에서부터 실패하는 것을 의미한다. 만약 개인의 관점이 아니라 공동체의 관점에서부터 화폐의 수요를 설명하려고 시도하는 공식으로부터 출발한다면, 우리는 화폐의 스톡과 모든 경제활동의 기초인 개인의 주관적 가치평가들의 관계를 발견하는 데 실패할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 만약 우리가 개별 주체의 관점에서부터 접근한다면 이 문제는 별 어려움 없이 해결된다.

화폐 스톡이 화폐에 대한 수요를 초과할 때 어떤 개인이 어떤 방식으로 행동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긴 설명이 필요하지 않다.¹²⁸⁾ 그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돈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그의 손에 쓸모없이 놓여 있는 여분의 화폐 스톡을 처분하기 위해 구매할 것이다. 만약 그가 사업가라면 아마

127) 이 가정과 통화화폐에 의해 설명된 '순수 금속통화'의 원칙과의 관계의 검토는 은행학파가 그 원칙에 가한 비판에 대한 논의를 필요하게 한다. 이 책의 제3부의 신용수단과 청산 시스템에 관한 부분에서의 언급이 이런 필요를 충족시켜 줄 것이다.

128) 영역본에 오류가 있어 이를 바로 잡았다. 원문에는 개인의 화폐에 대한 수요가 그의 화폐 스톡을 초과할 때라고 되어 있으나, 바로 아래에 설명된 상황은 오히려 반대 상황임을 알 수 있다. (역자 주)

도 사업을 확장할지도 모른다. 만약 이 화폐의 용도가 그에게 열려 있지 않다면, 그는 이자를 낳는 증권들을 구매할지도 모른다. 혹은 아마도 그는 소비재들을 구매하기로 결정할지 모른다. 그러나 아무튼 그는 시장에서의 적합한 행동을 통해 그의 구매력의 준비금 규모가 너무 크다고 간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표현할 것이다.

그리고 그가 보유한 화폐 스톡이 그의 화폐에 대한 수요에 비해 더 적은 사람은 정확하게 반대 방향으로 행동할 것이다.¹²⁹⁾ 만약 어떤 한 개인의 화폐 스톡이 감소한다면(그의 재산 혹은 소득이 동일하게 유지된 채), 그는 판매와 구매의 적합한 행동을 통해 바람직한 수준의 구매력 준비금에 도달하기 위해 조치를 취할 것이다. 화폐의 부족은 화폐를 얻기 위해 상품들을 처분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을 의미한다. 교환을 통해 상품을 처분해야 하는 사람은 그 상품을 교환해서 교환의 공통 매개물을 획득하기를 선호할 것이다. 다만 교환의 공통 매개물의 획득이 너무나 큰 희생을 필요로 할 경우에만 그는 다른 경제재, 즉 교환의 공통 매개물보다는 시장성이 낮지만 그가 처분하려는 상품보다는 높은 시장성을 가진 재화로 교환하는 것에 만족할 것이다. 현재와 같은 시장의 조직, 즉 한편으로는 화폐의 시장성과 다른 한편으로는 여타 경제재들 사이에 큰 간격이 존재하는 그런 조건 아래에서는, 화폐 이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교환의 매개물로 전혀 간주되지 않는다. 단지 예외적인 상황들 아래에서

129) 여기에서도 각주 36)과 마찬가지로 이유로 이를 바로 잡았다. (역자 주)

만 어떤 다른 경제제가 이 서비스를 하지 않을 수 없게 압박을 받을 것이다. 위에서 언급한 경우에 모든 판매자는 그가 획득한 그 재화, 즉 화폐에 비해 처분하기가 더 어려운 재화를 다시 그가 실제 소비하려는 상품과 교환해야 하는데, 그는 이때 입게 될 새로운 손실을 피하기 위해 다른 상황이었다라면 요구했을 수량보다 더 작은 수량의 화폐를 기꺼이 수용할 것이다.

화폐에 대한 사회적 수요라는 잘못된 개념으로부터 출발한 과거 이론들은 이 문제에 대한 해결에 결코 도달할 수 없었다. 그들의 유일한 기여는, 그 공동체의 처분 아래 있는 화폐 스톡의 증가가, 화폐에 대한 수요는 변함없을 때, 화폐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감소시킨다는 명제, 그리고 일정한 가용 스톡 아래 수요의 증가가 그 반대의 효과를 가진다는 명제 등을 언급한 것으로 제한되고 있다. 변뜩이는 기지로 화폐수량설의 고안자들은 이미 이것을 인식하였다. 우리는, 화폐에 대한 수요의 수량을 주는 공식(거래량÷유통속도)이 그 구성요소들로 감소되었을 때, 혹은 화폐의 스톡이라는 개념에 엄밀한 정확도를 부여하고자 시도했을 때, 이것이 신용수단의 본질과 거래의 청산에 대한 잘못된 이해 아래에서 시도되는 한에 있어서는, 그것을 진전이라고 부를 수 없다. 화폐이론의 이 부분의 핵심 문제에 대해서는, 이론가들이 주관적 가치평가들이 화폐의 스톡과 화폐에 대한 수요 사이의 비율의 변화에 의해 영향을 받는 방식을 보여 줄 수 없었기 때문에 아무런 접근도 시도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 과제는 필연적으로 이 이론들의 힘이 미치지 않는 것이었다. 그래서 과거의 이론들은 이 결정적 논점에서 무너지게

된다.¹³⁰⁾

최근에 비저는 화폐의 객관적 교환가치의 변동의 이론에 대한 출발점으로서 ‘집합적인 개념의 화폐에 대한 수요’에 반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는 화폐가치에 대한 한 연구에서 우리는 화폐에 대한 총수요에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예를 들어 세금을 지불할 화폐에 대한 수요는, 단지 세금 지불자들로부터 세금 수령자들에게로 구매력을 이전할 뿐이고 화폐의 가치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대부거래에서 자본과 이자를 지불하고 선물과 유산을 주는 것은 단지 사람들 사이의 구매력의 이전을 포함하고 있을 뿐이며, 그 구매력의 증가 혹은 감소를 포함하지는 않는다. 화폐가치의 기능적 이론은, 그 문제를 언급함에 있어 화폐의 가치가 결정되게 하는 요인들만 고려해야 한다. 화폐의 가치는 교환의 과정에서 결정된다. 결과적으로 화폐의 가치에 대한 이론은 교환의 과정에 들어가는 그 수량들만 고려해야 한다.¹³¹⁾

그러나 비저의 이 반대들은 세금을 지불할 때, 자본과 이자를 지불할 때, 그리고 선물과 유산을 줄 때 행해지는 화폐의 양도조차도 교환의 경제적 범주에 들어간다는 사실에 의해 반박된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비저의 좁은 교환 개념을 받아들이


130) 그렇지 않았더라면 주관주의 가치이론을 택했을 연구자들이 이런 오류에 빠진다는 것은 놀랍다. 예를 들어 다음을 보라. Fisher and Brown, *The Purchasing Power of Money*, New York 1911, pp.8ff.

131) Wieser, “Der Geldwert und seine Veränderungen,” pp.515ff.

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그의 주장에 반대하여야 한다. 그 가치(비저는 분명 객관적 교환가치를 의미하고 있다)가 교환의 과정에서 결정되는 것은 화폐에만 특이한 것이 아니다. 여타 모든 경제재들의 경우에도 이 점은 마찬가지이다. 모든 경제재들에 대해서도 가치이론이 어떤 수량들, 즉 교환과정에 개재된 것들만 탐구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옳다. 그러나 경제학에는 교환의 과정에 개입되지 않는 수량과 같은 그런 것은 없다. 경제학적 관점에서는 어떤 수량이든, 그것은 이런저런 교환의 과정에 관련된 개인들의 가치평가에 영향을 주는 관계들만을 가지고 있을 뿐이다.

이것은, 가치가 단지 비저가 의도하는 좁은 의미의 교환과 관련하여 발생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사실이다. 그러나 교환거래들에 참여하는, 그래서 결과적으로 화폐를 획득하거나 처분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화폐적 단위를 순전히 그들이 그것을 다른 교환(비저의 협의의 의미에서)의 행위들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만을 고려하여 가치를 두는 것이 아니라, 이에 더해 그들이 세금들을 내거나 빌린 자본을 이전하거나 이자를 지불하기 위해 그리고 선물을 주기 위해 화폐가 필요하기 때문에 화폐에 가치를 둔다. 그들은 이 모든 목적에 대해 화폐가 준비될 필요성을 판단하고서 그들의 화폐 보유고의 구매력 수준을 고려한다. 그리고 화폐에 대한 필요성의 정도에 대한 판단이 그들이 시장에 갈 때 준비할 화폐에 대한 수요를 결정하는 바로 그것이다.

8. 화폐수요가 그대로거나 화폐수량보다 적게 증가할 때 화폐수량 증가의 결과

 순전히 개인적인 이유들로 인해 발생하는, 개인의 화폐에 대한 수요와 화폐 스톡 사이의 비율의 변화들은 일반적으로 시장에서 매우 큰 수량적 영향을 줄 수 없다. 대부분의 경우, 그 변화들은 전적으로 혹은 적어도 부분적으로 시장에서 다른 개인들로부터 나오는 반대 방향의 변화들에 의해 상쇄될 것이다. 그러나 화폐의 객관적 교환가치의 변화는 단지 다른 방향으로 상쇄하는 힘에 의해 취소되지 않은 한쪽 방향으로 하나의 힘이 작동하는 경우에만 발생할 수 있다. 만약 어떤 한 개인의 관점에서 화폐의 스톡과 그 수요 사이의 비율을 변화시키는 원인들이 단순히 그 특정 개인에만 관계되는 우발적이고 개인적인 요인들로만 구성되어 있다면, 대수의 법칙에 따라 이 원인에서 발생하는 힘들은 시장에서 양방향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며 서로의 힘들을 상쇄할 것이다. 개별 경제주체들이 더 많을수록 상쇄가 완전해질 확률은 더 클 것이다.

공동체 전체에서 개인의 화폐 스톡과 그의 화폐에 대한 수요 사이에 존재하는 비율을 변화시키는 종류의 교란이 일어나면, 상황은 달라진다. 그와 같은 교란은 물론 개인의 주관적 가치평가들을 변화시키지 않고서는 효과를 가질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 교란들은, 그것들이 많은 수의 개인들의 주관적 가치평가들에, 비록 동시에 그리고 같은 정도가 아니라 하더라도, 영향을 주어서 화폐의 객관적 교환가치에 어떤 결과적 영향이 반

드시 있게 된다는 의미에서 사회적 경제현상이다.

화폐의 역사에서 특히 중요한 부분이, 화폐에 대한 수요가 변화하지 않거나 적어도 (화폐의 공급과) 동일한 정도로 증가하지 않은 반면, 화폐의 스톡이 증가한 결과로 발생했던 화폐의 객관적 교환가치의 변동들에 의해 형성되었다. 이 변동들은 사실상 처음 경제학자들의 관심을 끌었던 것이다. 화폐수량설이 제안된 것도 이 변동들을 설명하기 위해서였다. 모든 저술가들은 이 변동들을 가장 철저히 다루었다. 그러므로 이 변동들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이 변동들을 어떤 중요한 이론적 논점들을 밝혀 내는 데 사용하는 것은 아마도 정당화될 수 있을 것이다.

새로운 화폐는 언제나 어떤 개별 경제주체들이 처분할 수 있는 화폐의 스톡을 증가시킨다. 화폐 스톡의 증가가 어떤 방식으로 발생하든, 예를 들어 그 증가가 상품화폐가 만들어지는 재료의 생산 혹은 수입의 증가로부터 기인했다 아니면 법정 혹은 신용화폐의 발행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든, 우리가 화폐 스톡의 증가를 어떤 식으로 묘사하고 싶든, 이 점은 변함이 없다. 한 공동체에서의 화폐 스톡의 증가는 언제나 일부 개인들의 화폐 소득의 증가를 의미한다. 그러나 그것이 반드시 그 공동체의 처분 아래 있는 재화들의 수량의 동시적인 증가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다시 말해 국민 배당의 증가를 반드시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법정화폐 혹은 신용화폐의 수량의 증가가 사회의 처분하에 있는 재화들의 스톡의 증가로 간주될 수 있는 경우는 오로지 상품화폐에 의해 충족되었을 화폐에 대한 수요를 그 증가된 법정화폐 혹은 신용화폐가 충족시켰을 때뿐이다. 왜냐하면 상품화

폐가 필요했더라면, 이를 만들 재료들이 다른 재화의 생산에 쓰이지 않거나 다른 재화를 주고 확보되어야 했지만 이 경우에는 상품화폐의 필요성이 감소해서 그만큼 그럴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만약, 다른 한편으로 법정화폐 혹은 신용화폐의 새로운 발행이 없었던 것이 상품화폐의 수량의 증가와 관계가 없었다면, 화폐의 증가는 사회의 소득이나 부의 증가로 간주될 수 없을 것이다.

어떤 공동체의 화폐 스톡의 증가는 언제나 일부 경제주체들에 의해 보유된 화폐의 수량의 증가를 의미한다. 이 경제주체들이 법정화폐나 신용화폐의 발행자들인지 혹은 상품화폐가 만들어지는 재료의 생산자들인지 그 여부는 상관이 없다. 이 사람들에게는 화폐에 대한 수요와 그 스톡 사이의 비율은 변화하였다. 그들로서는 화폐가 상대적으로 남아돌고 여타 경제재들이 상대적으로 모자라게 되었다. 양 상황들의 즉각적인 결과는 그들에게 화폐단위의 한계효용이 감소하는 것이다. 이는 반드시 시장에서의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그들은 구매자로서 더 강한 입장에 있게 된다. 그들은 이제 원하는 대상에 대한 그들의 수요를 시장에서 종전에 비해 더 강하게 표현할 것이다. 그들은 획득하고자 하는 상품들에 대해 더 많은 돈을 제시할 수 있다. 해당 재화들의 가격상승과 화폐의 객관적 교환가치의 상대적 하락은 그 명백한 결과일 것이다.

그러나 이 가격상승은, 결코 처음으로 새로운 화폐를 처분할 수 있게 된 사람들이 원하는 재화들의 시장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이에 더해 이 재화들을 시장에 가져온 사람들은 그

들의 소득과 화폐의 비례적 스톡이 증가할 것이고, 그래서 이번에는 그들이 원하는 재화들을 종전에 비해 더 강하게 수요하는 위치에 있게 될 것이고, 이 재화들 역시 그 가격이 상승할 것이다. 그래서 가격들의 증가는, 비록 감소하는 효과를 나타내면서 이기는 하지만, 모든 상품들이 일부는 더 많이 또 일부는 더 적은 정도로 가격상승에 도달할 때까지 계속될 것이다.¹³²⁾

화폐수량의 증가가 모든 개인들의 소득의 증가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반대로 추가적 수량의 화폐가 마지막으로 도달하는 그 공동체의 일부 집단들의 경우, 화폐수량의 증가로 인해 야기된 화폐가치의 감소의 결과 소득은 감소된다. 이 집단들의 소득감소는 반대 방향의 경향을 시작시킨다. 이 경향성은 다른 집단들의 소득의 증가로 인한 화폐가치의 감소의 경향을 비록 완전히 무력화시키지는 못하지만 그 일부를 상쇄시킨다.

기계론적인 화폐수량설의 지지자들은, 가격들의 결정이 화폐수량의 증가에 의해 영향을 받는 방식에 대한 그들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을수록, 화폐수량의 증가가 궁극적으로 모든 경제재 가격들의 균일한 상승을 초래한다고 믿을 가능성이 더 높을 것이다. 화폐의 수량이 상품들의 가격들에 영향을 주는 메커니즘에 대한 철저한 이해는 그들의 이런 관점을 완전히 지지할 수 없도록 만들 것이다. 화폐의 증가된 수량은 먼저 오로지 제한된

132) Hume, *Essays*, ed. Frowde(London), pp.294ff.; Mill, *op. cit.*, pp.298ff.; Cairnes, *Essays in Political Economy, Theoretical and Applied*(London, 1873), pp.57ff.; Spiethoff, "Die Quantitätstheorie insbesondere in ihrer Verwertbarkeit als Haussetheorie," *Festgaben für Adolf Wagner* (Leipzig, 1905), pp.250ff.

수의 경제주체들에 의해 수령되기 때문에, 가격의 증가는 우선 이 사람들에 의해 수요되는 재화들에만 벌어질 것이다. 더 나아가 화폐수량의 증가가 주는 영향력은 나중의 여타 재화들에 비해 이 재화들에 대해 더 클 것이다. 가격들의 상승이 더 멀리 퍼져나갈 때, 만약 화폐수량의 증가가 단지 하나의 일시적 현상에 불과하다면, 이 재화들의 가격의 차별적인 증가가 완전하게 유지되기는 불가능할 것이다. 어느 정도의 조정이 발생할 것이다. 그러나 모든 가격들이 동일한 비율로 증가하는 그런 식의 완전한 조정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가격상승 이후의 상품들의 가격은 그런 일이 있기 이전의 상품들 간의 비율과 동일한 관계를 맺지는 않을 것이다. 화폐의 구매력 저하는 서로 다른 경제재들에 대해 균질적이지 않을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해 흄(Hume)이 모든 영국인이 기적적으로 다섯 조각의 금을 밤새 더 가지게 되었다는 가정에 근거해서 주장을 펼치고 있음은 언급될 필요가 있다.¹³³⁾ 밀(Mill)은 이 가정에 대해 각 상품들에 대한 수요의 균질적 증가가 초래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정확하게 언급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밀은 “만약 소비에 대한 공동체의 집합적인 욕구와 성향들이 종전과 마찬가지로 유지된다면” 모든 상품들의 가격의 균질적 상승과 화폐수량의 증가에 비례한 가격들의 증가가 가능하다고 믿는다. 밀은 흄에 비해 덜 자의적이지 않게 이렇게 가정한다. “모든 이가 소유하는 모든 파운드 혹은 실링 혹은 페니 각각에, 추가적으로

133) Hume, *op. cit.*, p.307.

또 하나의 파운드, 실링 혹은 페니가 갑자기 더 보태진다.”¹³⁴⁾ 그러나 밀은 비록 그 공동체의 각 구성원으로서 화폐의 스톡과 총부(富)의 비율이 동일하여 보완적 화폐수량의 추가가 개인들의 상대적 부에 변화를 가져오지 않는다고 가정하더라도 이 경우에도 가격이 균일하게 상승하지는 않을 것임을 간파하지 못하고 있다. 왜냐하면 심지어 이런 거의 불가능한 경우에도 화폐수량의 모든 증가가 필연적으로 수요의 조건들에 변화를 야기할 것이고, 이 변화가 다시 개별 경제재들의 가격에 불균등한 증가를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모든 상품이 더 강하게 수요되는 않을 것이며 더 강하게 수요되는 것들 모두가 같은 정도로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이다.¹³⁵⁾

화폐수량의 변화가 화폐의 객관적 교환가치와 역(逆)으로 비례적인 변화를 초래한다는, 예를 들어 화폐수량을 2배로 늘리면 화폐의 구매력이 절반으로 준다는 널리 퍼진 믿음에는 그 어떤 정당화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저런 방법으로—어떤 방법일지 상상하기는 정말 어렵지만—모든 개인의 화폐 스톡이 여타 재산 보유자들에 대한 그의 상대적 지위가 변하지 않는 방식으로 증가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이에 이어 발생하는 화폐의 객관적 교환가치의 변동은 화폐수량의 변동에 비례적이지 않을 것임을 증명하기는 어렵지 않다. 사실, 어떤 개인이 그의 처분하에 있는 화폐수량의 변동에 대해

134) Mill, *op. cit.*, p.299.

135) Conant, *What determines the Value of Money?*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Vol. XVIII, 1904), pp.559ff.

그 가치를 평가하는 방식은 결코 이 변동의 수량에 직접적으로 의존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화폐의 객관적 교환가치의 비례적 변동이 있을 것이라고 결론을 내리기를 원한다면, 그렇다고 가정해야 한다. 만약 화폐 a 단위의 보유자가 추가적 b 단위를 받는다면, 그가 총 스톡 $a+b$ 에 대해 종전의 스톡 a 에 대한 종전의 가치평가와 정확하게 동일한 가치평가를 할 것이라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그는 이제 더 큰 스톡을 처분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그가 종전에 가지고 있던 것보다 각 단위에 더 적은 가치를 부여할 것이다. 그러나 얼마나 더 적게 부여할 것인지 개별 상황에 따라, 각 개인마다 다른 주관적 가치평가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똑같이 부유하고, 각자 화폐 스톡 a 를 보유하고 있는 두 개인이 있다면, 그들의 화폐 스톡이 b 단위만큼 증가하더라도, 그들은 각자의 화폐에 대한 가치추정도 동일하게 변화시키지는 않을 것이다. 각 개인의 처분하에 있는 화폐수량이 두 배 증가하면, 결과적으로 그가 각 화폐단위에 부여하는 교환가치도 절반 하락한다고 가정하는 것만큼 터무니없는 것도 없을 것이다. 예를 들어 100크로넨의 화폐 스톡을 지니는 습관을 가진 개인을 상상하고, 추가적인 100크로넨이 어떤 사람에 의해 이 개인에게 지불되었다고 해 보자. 이 사례를 고려해 보기만 해도, 화폐수량의 변동에 대해 화폐의 구매력의 균일한 비례적 효과를 부여하는 모든 이론의 완전한 비현실성을 보기에 충분하다.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들이 한꺼번에 화폐수량의 유사한 증가를 경험한다고 가정하는 것은 위의 사례에 본질적인 수정을 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화폐수량의 변동이 역(逆)비례적으로 구매력의 변동을 초래한다고 가정하는 사람들의 주장의 오류는 그 출발점에 있다. 만약 우리가 정확한 결론에 도달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각각의 개인들의 가치평가들로부터 출발하여야 한다. 우리는 화폐수량의 증가 혹은 감소가 개인들의 가치척도에 어떤 방식으로 영향을 주는지 검토하여야 한다. 그 까닭은 재화들의 교환비율의 변동이 진행되는 것은 바로 오로지 이 가치척도들로부터이기 때문이다. 화폐수량의 변동이 화폐의 구매력에 비례적 효과를 가진다는 이론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주장에서 처음 가정은 화폐단위의 가치가 두 배가 되면 그 공동체의 처분하에 있는 화폐 스톡의 절반이 종전에 전체 스톡이 만들어 내던 것과 동일한 효용을 만들어 낼 것이라는 명제이다. 이 명제의 정확성은 논란의 여지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증명하고자 했던 것을 증명하지는 않는다.

우선, 화폐의 총 스톡의 수준과 화폐단위의 가치의 수준은 화폐의 사용으로부터 획득되는 효용에 관한 한 완전히 상관없는 일이다. 사회는 언제나 화폐의 사용으로부터 획득할 수 있는 최대의 효용을 향유하고 있다. 그 공동체의 처분하에 있는 화폐의 절반은, 비록 화폐단위의 가치의 변동이 화폐 스톡의 변동과 비례적이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 전체 스톡과 동일한 효용을 생산할 것이다. 그러나 이로부터 화폐수량의 배증이 화폐의 객관적 교환가치의 절반의 하락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그와 같은 비례적 변동을 야기할 수 있는 힘들이 개별 경제주체들의 가치평가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이 드러나야

할 것이다. 이것은 결코 증명될 수 없다. 사실 그 반대일 가능성이 있다. 우리는 이미 개별 경제주체들에 의해 보유된 화폐수량의 증가가 동시에 그들의 소득 혹은 부의 증가를 내포하는 경우에 이에 대한 증명을 이미 제공하였다. 그러나 화폐수량의 증가가 그 개별 경제주체들의 부나 소득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에도, 그 효과는 여전히 동일하다.

어떤 한 사람이 그의 소득의 반을 이자수취 증권의 형태로 받고, 반을 화폐의 형태로 받는다고 가정하자. 그리고 그는 소득의 $\frac{3}{4}$ 을 저축하는데, 저축은 그 증권들을 유지하고 현금으로 수령하는 소득 중 반을 현재 소득에 지불하고 나머지 반을 증권을 더 구매하는 데 쓴다. 이제 그의 소득의 구성에 변화가 발생해서 $\frac{3}{4}$ 을 현금으로 받고 $\frac{1}{4}$ 을 증권으로 받는다고 가정하자. 지금부터 이 사람은 현금수령의 $\frac{2}{3}$ 를 이자수취 증권들의 구매를 위해 사용할 것이다. 만약 증권들의 가격이 상승하거나 혹은 마찬가지로이지만 만약 증권들의 이자율이 하락한다면, 어떤 경우이건 그는 증권을 구매하려는 의사가 작아지고 그렇지 않았더라면 증권의 구매를 위해 사용했을 화폐의 총액을 감소시킬 것이다. 그는 아마도 약간 증가된 화폐보유고의 이점(利點)이 그 증권들의 획득으로부터 얻을 수 있었을 이점을 능가함을 발견할 것이다. 두 번째 경우에 그는 의심의 여지없이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하고자 할 것이다. 더 정확하게는 첫 번째 경우에 비해 더 높은 가격에 더 많은 증권을 구입하고자 할 것이다. 그러나 그는 확실히 증권의 한 단위에 대해 두 번째 경우에 첫 번째 경우보다 기꺼이 두 배의 가격을 지불하려고 하지는 않을 것이다.

화폐수량설의 초기 대표자들에 관한 한, 화폐수량의 변동이 그 구매력에 역비례적인 효과를 준다는 가정은 그래도 변명의 여지가 있다. 만약 교환가치에 근거해서 시장의 가치현상을 설명하려고 시도하면 길을 잃기 쉽다. 그러나 스스로를 주관적 가치이론에 입각한 이론가들로 여기는 사람들이 유사한 오류에 빠질 수 있다는 점은 잘 설명되지 않는다. 여기에서 그 책임은 오로지 시장과정에 대한 기계론적 개념으로 돌려질 수 있을 뿐이다. 그래서 피셔와 브라운—그들의 화폐수량설은 기계적인 것이고 화폐의 가치가 결정되는 법칙을 수학적 등식으로 표현하고자 시도했다—조차도 화폐수량과 그 수요 사이의 비율의 변동이 화폐의 객관적 교환가치의 비례적 변동을 초래한다는 결론에 필연적으로 도달하고 있다.¹³⁶⁾ 어떻게 그리고 어떤 경로들을 통해 이것이 발생하는지는 공식에 의해 밝혀지지 않는데 그 까닭은 그 공식은 교환비율의 변동을 야기하는 데 결정적인 유일한 요인, 즉 개인들의 주관적 가치평가들에서의 변동에 대해 아무런 관련도 지우지 않기 때문이다.

피셔와 브라운은 그들 결론의 정확성을 증명하기 위해 세 가지 예들을 제시하고 있다. 먼저, 그들은 정부가 화폐의 단위를 변경한다고, 예를 들면 종전에 절반 달러(half-dollar)라는 화폐단위가 이제 올-달러(whole-dollar)로 불리게 되었다고 가정하면서 출발한다. 이 화폐단위의 변경은 유통되는 달러의 숫자의 증가를 초래하고 새로운 달러로 고려된 가격은 예전의 가격들보다 2

136) Fisher and Brown, *op. cit.*, pp.28ff., 157ff.

배 높아질 것임은 분명하다고 그들은 말한다. 피셔와 브라운은 지금까지는 옳을 수 있다. 그러나 그들이 나아가서 내리는 결론들은 그렇지 않다. 그들의 사례가 실제로 다루는 것은 화폐수량의 증가가 아니라 단지 그 명칭의 변경일 뿐이다. 이 사례에서 ‘화폐’로 지칭된 것이 실제로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그것은 달러의 재료인가, 신용 달러 배후의 청구권인가, 화폐로 사용되는 명목화폐(token)인가, 아니면 단지 달러라는 단어인가?

피셔와 브라운의 두 번째 사례도 정확하지 않게 이해되기는 마찬가지이다. 그들은 정부가 각 달러를 둘로 나누고 새로운 달러를 각 반쪽으로부터 주조한다는 가정으로부터 출발한다. 여기에 다시 벌어졌던 모든 것은 단지 이름의 변경이다.

세 번째 사례에서 그들은 적어도 화폐수량의 진정한 증가를 다루고 있다. 그러나 이 사례는 우리가 약간은 자세하게 다룬 바 있는 흙이나 밀의 사례들처럼 인위적이고 오해를 불러오기는 마찬가지이다. 그들은 정부가 모든 사람에게 그들이 이미 보유한 각 달러에 대해 추가적으로 1달러를 준다고 가정한다. 우리는 이미 이 경우에서조차 화폐의 객관적 교환가치의 비례적 변화가 수반되지 않음을 드러내 보인 바 있다.

피셔가 어떻게 그의 기계론적인 화폐수량설을 유지할 수 있었는지 설명해 주는 것은 단지 하나뿐이다. 그에게 화폐수량설은 화폐가치에 특유한 원칙으로 보였다. 사실 그는 이것을 곧바로 여타 경제재들의 가치의 법칙과 대비시키고 있다. 만약 세계의 설탕 스톡이 1백만 파운드에서 1억 파운드로 증가하더라도 100파운드가, 1파운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가치를 가지지는 않


을 것이라고 피셔는 말한다. 피셔에 따르면 이런 점에서 특이한 것은 화폐가 유일하다. 그러나 이 단언의 증명을 제시하지는 않고 있다. 피셔와 브라운이 화폐가치에 대한 그들의 기계적인 공식에 부여한 정당화만큼 충분한 정당화를 가진 채, 어떤 상품의 가치에 대한 유사한 공식이 만들어질 수 있으며, 유사한 결론이 유도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를 아무도 시도하지 않은 이유는 단순히 그리고 유일하게 그와 같은 공식이 대개의 상품들의 수요곡선들에 대한 우리의 경험과 너무나 분명하게 모순되어 한 순간도 유지될 수 없을 것이라는 상황에 의해 설명된다.

만약 우리가 두 정태적인 경제체제들—한 체제에서는 화폐의 수량이 다른 체제에 비해 두 배인 점을 제외하고는 완전히 똑같은—을 비교한다면, 한 체제 속의 화폐단위의 구매력은 틀림 없이 다른 체제의 화폐단위의 반과 같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로부터, 화폐수량의 배증이 화폐단위의 구매력의 절반 하락으로 이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없다. 왜냐하면 화폐수량의 모든 변동은 그 정태경제체제에 동태적인 요인을 불러들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시작된 변동의 효과들이 끝났을 때 도달할 정태균형의 새로운 위치는 그 추가수량의 도입이 있기 전에 존재했던 것과 동일한 것일 수 없다. 결과적으로 새로운 균형 상태에서는 화폐수요의 조건들도 역시, 화폐단위의 일정한 교환 가치가 주어질 때, 다를 것이다. 만약 배증된 화폐수량의 각 단위의 구매력이 절반이 되었다면, 그 단위는 새로운 상황 아래의 각 개인에게는 화폐수량의 증가가 있기 전에 그 정태 시스템에서 지녔던 것과 동일한 중요성을 가지지 않을 것이다. 화

폐단위의 가치의 반비례적 효과를 화폐수량의 변동으로 돌리는 모든 사람들은 오로지 정태적 조건들에서만 적합한 분석방법을 동태적 조건들에 적용하고 있는 셈이다.

또한 마치 가치의 결정에 영향을 주는, 문제되는 특성이 화폐에 특유한 것처럼, 화폐수량설을 생각하는 것은 전적으로 부정확하다. 화폐수량설의 초기 혹은 후기 지지자들은 대부분 이 오류에 빠졌다. 화폐수량설에 대해 가해진 맹렬하고도 흔히 공정하지 못했던 공격들은, 그 대변자들에게 책임이 있는 이 오류와 여타 유사한 종류의 오류를 이해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 공격들을 검토해 볼 때, 그 정체가 더 분명하게 드러날 것이다.

9. 화폐수량설에 대한 일부 반론들에 대한 재반론

 우리는 이미 화폐수량설에 대해 가해진 반대들 중 하나, 즉 화폐수량설은 다른 조건들이 일정할 때(*ceteris paribus*) 유효할 뿐이라는 반대를 검토하였다. 우리의 결론들의 확정성에 대한 반대로서 마찬가지로 지지될 수 없는 것이 추가적 화폐수량이 저장(*hoarding*)될지¹³⁷⁾ 모른다는 가능성에 대한 언급이다. 이 주장은 화폐수량설의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그것은 화폐수량설 반대론자들의 무기창고에서 가장 날카로운 무기 가

137) *hoarding*은 케인스학파에서 퇴장(退藏)이라고 번역되기도 하나, 이것이 화폐수요의 표현임을 강조하기 위해 저장이라고 번역하였다. 이와 관련해서는 라스바드 저(권용덕·김이석 역) 『인간·경제·국가』의 화폐에 관한 부분 참고.

운데 하나였다. 통화학파(Currency Theory)에 대한 반대론들 가운데, 화폐저장 가능성은 현금을 절약하는 지불방법들의 탄력성에 관한 명제에 이어 곧바로 등장한다. 그 내용에 관한 한 화폐저장의 가능성도 역시 이 탄력성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여기에서 그것을 별개로 다룰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화폐저장에 대해 현재의 위치에서 말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은 신용수단의 원칙에 대해 집중하는 이 책의 제3부에 포함된 주장들에 비추어 봄으로써 적절한 조명을 받게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플라르턴(Fullarton)에게 화폐저장(hoarding)은 단골 만능장치(*deus ex machina*)이다. 그것들은 화폐의 과잉 수량을 흡수하고, 유통될 필요가 발생할 때까지 그 수량이 유통과정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막아준다.¹³⁸⁾ 그래서 그것들은 시장에서 화폐의 수요의 변동에 맞게 화폐의 썰물과 밀물을 수용해 주는 일종의 저수지가 되어 준다. 화폐저장고 속에 수집된 화폐의 총액은 상업세계가 화폐의 객관적 교환가치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그들을 필요로 하는 순간을 기다리며 거기에서 놓고 있다. 그리고 화폐에 대한 수요가 감소할 때 이 안정성을 위협할지 모르는 화폐총액은 유통과정으로부터 빠져 나와 다시 이 화폐저장고 속으로 돌아와 다시 불러 나갈 때까지 조용히 잠을 잔다. 이것은 암묵적으로 화폐수량설의 근본적 정확성을 가정하는 셈이다.¹³⁹⁾ 그러

138) Fullarton, *On the Regulation of Currencies*, 2nd edn., London 1845, pp.69ff., 138f.; Wagner, *Die Geld- und Kredittheorie der Peelschen Bankakte*, Vienna 1862, pp.97ff.

139) 다른 곳에서 또한 명시적으로 언급되고 있다. Fullarton, *op. cit.*, pp.57f.;

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폐수량설이 묘사하는 과정에서 벗어나려는 것을 방지하는 그 어떤 원리가 경제체제 속에 내재되어 있는 것처럼 단언하고 있다.

그러나 플라르턴과 그의 추종자들은 불행하게도 화폐수요의 변동이 저장의 메커니즘을 작동하도록 만드는 방식을 설명하지 않았다. 명백히 그들은 거래 당사자들의 의지가 그 문제에 연관되어 있음을 참작하지 않고 진행하기 위해 이것을 가정하였다. 그와 같은 견해는 시장거래를 순전히 기계적인 것으로 파악하는 데 있어 가장 단순한 형태의 화폐수량설조차 능가하고 있다. 화폐의 수요의 문제에 대한 가장 피상적인 수준의 연구만 하더라도, 이 화폐저장의 원칙을 지지할 수 없다는 것을 드러내 보이기 어렵지 않을 것이다.

우선, 경제학적 관점에서는 놓고 있는 화폐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모든 화폐는, 화폐보유고 속에 들어 있든 혹은 문자 그대로 유통 중에 있든 (즉, 우리가 고려하는 바로 그 순간 보유자가 바뀌는 과정에 있든) 화폐적 기능의 수행에 정확하게 동일한 방식으로 헌신하고 있다.¹⁴⁰⁾ 사실 교환에 내놓은 화폐는 즉각 거래의 한 상대방의 소유로부터 다른 상대방의 소유로 이전되며, 실제로 움직이고 있는 일정 기간은 발견될 수 없기 때문에, 모든 화폐는 어떤 개인이나 다른 개인의 현금보유고 속에 쉬고 있다고 간주되어야 한다. 그 공동체의 화폐 스톡은 개인들의 스톡의 합계이다. 심부름하는 중인 화폐

Wagner, *op. cit.*, p.70.

140) Knies, *Geld und Kredit*, II Band, I Halfte, Berlin 1876, pp.284ff.

(errant money)와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한 순간이라도 어떤 사람의 스톡의 일부를 형성하고 있지 않는 화폐는 존재하지 않는다. 모든 화폐는 말하자면, 누군가의 스톡에 궁극적인 사용을 언제든 할 수 있는 상태로 들어 있다. 이것은 화폐에 대한 수요가 다음 번에 발생해서 그 해당 합계의 화폐가 지불되어 나가는 순간이 얼마나 빨리 찾아오느냐와는 상관없는 문제이다. 그 구성원은 적어도 적정하게 번영하고 있는 그런 모든 가계 혹은 가족에서 그 수준이 항상 보충을 통해 유지되는 최소한의 화폐보유고가 존재한다. (객관적 조건들 이외에 개별 경제주체들에 영향을 주는 주관적인 요인들이 개인의 화폐수요의 수량을 결정하는 것을 도와준다는 사실은 이미 언급되었다.) 화폐의 축적이라고 불리는 것은 부를 사용하는 하나의 방식이다. 미래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미래에 아마도 발생할지 모를 재화들—교환을 통해 획득해야 하는—에 대한 긴급한 수요를 어려움 없이 충족시킬 수 있는 기회를 유지하기 위해, 사람들이 그들의 부(富)를 사용하는 방식을 (하나의 방식으로부터 다른 방식으로) 쉽게 변화시킬 수 있는 형태로 그의 소유물들 가운데 다소간을 보유하는 것은 현명한 처사이다. 시장이, 모든 혹은 적어도 어떤 경제재들이 너무 불리하지 않은 조건으로 언제나 팔릴 수 있는(즉, 화폐로 전환될 수 있는) 그런 발전단계에 도달하지 않은 한에 있어서는, 이 목표는 오로지 적합한 규모의 화폐 스톡을 보유함으로써만 달성될 수 있다. 시장이 더 활동적이 될수록 이 스톡은 더 줄어들 수 있다. 현재에서는, 큰 시장이 형성되어 있어서 적어도 정상적인 시기에는 지체 없이 그리고 상당한 손실 없이 현금화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증

권들을 보유하는 것은 어느 정도 대규모 현금의 보유를 불필요하게 만들 수 있다.

저장의 목적을 위한 화폐에 대한 수요는 다른 목적을 위한 화폐에 대한 수요와 분리될 수 없다. 화폐를 저장하는 것은 다른 시대나 다른 장소에서 다른 경제주체들에게 일반적이었던 수준보다 더 큰 화폐 스톡을 보유하는 관습에 불과하다. 사회적 관점 혹은 개인적 관점에서 모든 상관없이 그 저장된 화폐총액은 늘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들은 그 어떤 다른 화폐들과 마찬가지로 정도로 화폐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키는 데 봉사하고 있다. 이제 은행학파의 원칙(the Banking Principle)의 고수자들은 저장 목적을 위한 수요는 탄력적이며, 이 수요는 다른 목적을 위한 화폐에 대한 수요의 변동들에—화폐에 대한 총수요, 즉 저장 목적들을 위한 수요와 여타 수요들을 합한 것이 그 화폐단위의 객관적 교환가치에 어떤 변동도 일어나지 않도록 스스로 화폐의 기존 스톡에 적응하는 그런 방식으로—순응한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이 견해는 완전히 잘못된 것이다. 사실 저장 목적들을 위한 수요를 포함해서 화폐에 대한 수요의 조건들은 화폐의 공급상황들로부터 독립적이다. 반대 명제는 오로지 단지 화폐의 수량과 이자율 사이의 관계를 가정할 때에만—즉, 화폐에 대한 수요와 그 공급 간 비율의 변화들로부터 야기되는 변동들이 다른 정도로 1차 재화들과 고차 재화들의 가격들에 영향을 주어서 이 두 집단의 재화들의 가격들 사이의 비율이 변한다고 단언할 때에만—지지될 수 있다. 이자율이 화폐의 더 크거나 더 작은 수량에 달려 있다는 견해에 기초하는 이 명제의

지지 가능성의 문제는 제3부에서 다시 제기될 것이다. 거기에서 신용수단을 발행하는 은행들의 현금보유고들이, 이 신화적인 화폐저장이 그렇지 않듯이, 이런 식으로 완충기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 줄 기회도 역시 있을 것이다. 그 보유고로부터 언제든지 상업 세계가 그 추가적인 필요량을 공급할 수 있거나 그 잉여들을 그 속에 집어넣을 수 있는 그런 화폐 ‘보유고 가게’(reserve store)와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화폐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안정화시키는 데 있어서의 화폐저장의 중요성의 원칙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지지자들을 잃었다. 오늘날 그 지지자들은 별로 없다. 딜(Diehl)이 이 집단의 회원으로 보이지만, 단지 외관상 그런 것일 뿐이다. 딜은 플라르턴이 통화학과의 이론들에 대해 가한 비판에 대해 그것이 사실이라고 동의한다. 다른 한편, 그는 화폐보유고들이 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유통되는 화폐에 의해 봉사되는 것과는 다른 목적들에 봉사하고 있을 뿐이기 때문에 ‘활동성이 없는’ 그리고 ‘잠자는’ 등의 플라르턴의 표현들은 화폐보유고에 잘못 적용되었다고 물리선다. 그는 또한 그와 같은 보유고들에서의 화폐총액과 지불 목적으로 사용된 총액들은 선명하게 구분될 수 없으며 동일한 총액들이 지금 하나의 목적에 그리고 또 지금 다른 목적에 봉사하고 있다는 것에도 동의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리카도에 반대하고 플라르턴을 지지한다. 딜은 이렇게 말한다. 그 보유고로부터 취해진 총액이 다시 그 공동체에 현존하는 화폐의 스톡들로부터 대체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즉각적으로 발생할 필요는 없다. 그것이 필요할 때까지 오랜 기간이 지

날지 모른다. 그리고 아무튼 리카도가 유통 중인 화폐의 수량과 상품들의 가격들 사이에 존재한다고 가정하는 기계적인 연계는, 화폐저장에 대해서조차도 받아들일 수 없다.¹⁴¹⁾ 딜은 왜 그 보유고로부터 취한 총액이 대체될 때까지 긴 기간이 지나야 하는지를 아주 자세하게 보여 주지 않는다. 그러나 그는 플라르틴에게 가해진 비판의 근본적 정확성을 시인한다. 만약 우리가 그것을 화폐수량의 변화가 스스로를 시장 전체를 통해 화폐의 객관적 교환가치의 변동으로 드러낼 때까지 시간이 지날 수 있고 지나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면, 그가 하고 있는 유일한 유보를 승인하는 것은 가능하다. 화폐의 추가적 수량의 유입이 가져올 개인들의 화폐 스톡의 증가는 틀림없이 개인들의 주관적 가치 평가에 변화를 초래할 것이고, 이것이 즉각 일어나며, 그리고 즉각 시장에 영향을 주기 시작한다는 사실은 부인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 어떤 한 개인의 화폐에 대한 수요의 증가—그의 화폐 스톡은 그대로일 때—혹은 그의 화폐 스톡의 감소—그의 수요는 그대로일 때—는 시장에서, 모든 것이 한꺼번에 일어나지는 않을지라도, 화폐의 객관적 교환가치의 증가로 표현될 수밖에 없는 주관적 가치평가들에서의 변화를 당장 초래할 것임에 틀림없다. 화폐수량의 모든 변동이 개인들이 그의 화폐 필요량의 정도에 대한 판단을 점검하게 만들 것이고, 이것이 화폐 스톡을 감소시키는 경우에는 그의 수요의 감소를 초래하고,


141) Diehl, *Sozialwissenschaftliche Erläuterungen zu David Ricardos Grundsätzen der Volkswirtschaft und Besteuerung*, 3 Aufl., Leipzig 1922, 2 Teil, p.230.

그리고 이것이 스톡을 증가시키는 경우에는 화폐수요의 증가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은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와 같은 한정 혹은 확대가 반드시 발생할 것이라는 가정은, 화폐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안정된 수준으로 유지시키는 정도로 발생할 것이라는 가정은 말할 것도 없고, 아무런 논리적 근거도 없다.

더 강력한 반대는 화폐수량설의 실질적 중요성의 부정이다. 그것은 화폐수량에서의 변동들을 상쇄시키고 그 변동들이 영향을 발휘하지 못하게 하는 경향성을 현재와 같은 화폐, 지불, 신용 시스템 때문으로 돌리는 것에 암시되어 있다. 화폐의 변동하는 유통속도, 그리고 지불방법의 탄력성이 가격들의 움직임을 가능한 한 최대한 화폐수량의 변동과 독립적일 수 있게 만들었다. (지불방법의 탄력성은 신용체제와 은행조직과 금융기법의 진보적 발전, 즉 지불방법들이 팽창 혹은 위축된 사업세계에 적응될 수 있게 하는 용이성에 의해 가능해졌다.) 그런데 이것이 특히 화폐와 그 대응물들 사이에, 즉 화폐 스톡과 거래량, 지불액 사이에, 아무런 수량적 관계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들을 한다. 만약 그와 같은 상황에서 우리가 여전히 화폐수량설을 유지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화폐수량설을 통화 화폐뿐만 아니라 “그것을 모든 유형의 유통 가능한 화폐대응물들뿐만 아니라 은행 시스템의 모든 거래 혹은 화폐지불을 대신하는 계약에서의 두 당사자들 사이의 약속을 통틀어서 모든 화폐를 모조리 포용하여야 한다.”고 말들을 한다. 이것이 그 이론을 실제로는 거의 무용지물로 만들 것이지만 그 이론의 이론적 보편성을 확보해 줄 것이란 점은 인정되고 있다. 그리고 이것이 거의 불가해한 문제들, 즉 신용이 등장하는 조건

들의 문제, 그리고 신용이 가치와 가격들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의 문제를 야기한다는 점은 부인되지 않고 있다.¹⁴²⁾ 이에 대한 대답은, 신용의 탄력성의 문제가 논의되고 있는 이 책의 제 3부에 포함되어 있다.¹⁴³⁾

10. 화폐수량설의 추가적인 적용들

 일반적으로 화폐수량설은 화폐의 스톡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반면 화폐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면 어떤 결과들이 발생하는지를 탐구하는 데 이용되지 않았다. 그와 같은 연구에는 아무런 역사적 동기가 존재하지 않았다. 그 문제는 활발하게 연구된 적이 없었다. 그 문제에 대답함으로써 경제정책의 논쟁적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시도하는 것에 대한 일말의 정당화도 이루어진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경제사는 우리에게 화폐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해 왔음을 보여 준다. 화폐에 대한 수요의 발전의 특징적 측면은 그 강화에 있다. 인구와 번영의 증가뿐만 아니라 노동의 분업과 그 결과 나타난 교환거래—점차 더 간접적이 되고 화폐에 사용에 더 의존하게 된—의 성장은 화폐수요의 강화를 초래하는 데 기여하였다. 화폐에 대한 수요의 증가를 초래한 경향들은 그 전쟁을 앞선 연도들에서 너무나 강해져서, 화

142) Spiethoif, *op. cit.*, pp.263ff.; Kemmerer, *op. cit.*, pp.67 if.; Mill, *op. cit.*, pp.316ff.

143) 이 책 17장 3절 참고.

폐 스톡의 증가가 실제보다 훨씬 더 강했더라도 화폐의 교환가치는 거의 확실하게 증가할 정도였을 것이다. 화폐수요의 이런 증가가 신용의 비정상적으로 큰 팽창—확실히 광의의 화폐에 대한 수요를 증가했던—과 수반되었던 상황만이 이 기간 동안 화폐의 객관적 교환가치가 증가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실제로 감소했다는 사실을 설명할 수 있다. (이에 관한 다른 요인은 이 장에서 나중에 언급될 것이다.)

만약 우리가 기계론적인 화폐수량설을, 화폐 스톡은 변하지 않고 있는 반면 화폐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는 경우에 적용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모든 상품가격들에 산술적으로 화폐의 스톡과 이에 대한 수요의 비율의 변화에 비례하는 균일한 상승이 발생할 것이라고 결론을 내려야만 할 것이다. 화폐에 대한 수요는 그대로이면서 화폐 스톡이 증가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결과가 뒤따를 것으로 예상하여야 한다. 그러나 기계론적 화폐수량설은, 정태적 법칙을 동태적 분야에 잘못 이식하여 적용하는 데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경우에서와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부적절하다. 그 이론은 우리가 설명되기를 원하는 것을 설명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를 만족시킬 수 없다. 우리는 우리에게 어떻게 화폐 스톡은 그대로 유지되면서, 화폐에 대한 수요의 감소가 발생할 때, 이것이 어떻게 개별 경제주체들의 화폐에 대한 주관적인 가치평가들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그것이 다시 가격들에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 줄 수 있는 이론을 구축하여야 한다. 화폐 스톡이 그대로인 채 화폐에 대한 수요가 위축되면, 우선 이것은 일부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의 현금보유고가 필요에 비

해 너무 크다고 느끼게 할 것이다. 그러므로 그들은 필요보다 큰 잉여분을 가지고 구매자로서 시장으로 간다. 여기에서 가격들의 일반적 상승, 화폐의 교환가치의 감소가 작동되기 시작할 것이다. 그다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한 더 자세한 설명은 필요하지 않다.

이 경우와 매우 밀접하게 연관된 또 다른 경우에는 그 실제적 중요성이 비교될 수 없을 정도로 더 크다. 우리가 화폐에 대한 수요를 끊임없이 증가하는 것으로 생각하더라도, 특정한 종류의 화폐에 대한 수요는, 이 수요가 이 특정 종류의 화폐들의 교환의 일반적 매개물이라는 성격에 의존하는 한에 있어서는, 감소하거나 심지어 완전히 없어지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 이것이 우리가 여기에서 다루어야 할 모든 것이다. 만약 어떤 주어진 종류의 화폐가 그 화폐적 특성을 상실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것은 교환의 일반적 매개물로서의 사용에 의존하던 특별한 가치도 역시 상실하고 단지 그것의 다른 용도들에 따른 가치만을 보유할 것이다. 역사의 과정에서 교환의 공통 매개물들이 지속적으로 축소되는 과정에서 어떤 한 재화가 배제되었을 때 이런 일은 항상 일어났다. 일반적으로 말해, 이런 일은 크게 보아 우리가 많은 정보를 가지지 못한 시대에 발생했다. 그러나 최근 하나의 훌륭한 사례, 즉 은의 거의 완전한 비(非)화폐화가 있었다. 은(銀)은 종전에 널리 화폐로 쓰였으나 이 지위로부터 거의 완전히 추방되었으며, 그리 멀지 않은 시기에 아마도 단지 수 년 안에, 은은 화폐로서의 그 기능을 다할 것이다. 은의 비화폐화의 결과는 그 객관적 가치의 축소였다. 런던에서 은의 가격은

1870년의 평균 60 9/10 d.에서 1909년 평균 23 12/16 d.로 떨어졌다. 은의 가치가 떨어지게 되어 있었던 까닭은 그 사용 용도가 축소되었기 때문이다. 유사한 사례들이 신용화폐의 역사에서도 역시 제공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미국 남북전쟁에서 남부 주들의 지폐들은 북부 주들이 승리하는 정도에 비례해서 청구권으로서의 가치뿐만 아니라 화폐적 가치를 상실하였다. 이 지폐들도 그 한 사례로 언급될 수 있을 것이다.¹⁴⁴⁾

화폐수량설의 고수자들은 동일한 화폐 스톡 아래에서의 화폐에 대한 수요감소의 결과보다는 더 깊게, 동일한 화폐수요 아래에서의 화폐 스톡 감소의 문제, 그리고 동일한 화폐 스톡 아래에서의 화폐에 대한 수요증가의 문제에 몰두하였다. 두 질문에 대한 완전한 대답들이, 기계론적 화폐수량설에 따라 만약 그 문제들의 핵심을 포괄하는 것으로 보였던 이 이론의 일반 공식이 그 문제들에 적용된다면, 쉽게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믿어졌다. 두 경우 모두 화폐에 대한 수요가 그대로인 반면 화폐의 수량이 증가한 경우의 역(逆)으로 취급되었으며, 이로부터 이에 상응하는 결론들이 도출되었다. 신용화폐의 평가절하를 단순히 화폐수량의 급증에 의거해서 설명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졌다. 마찬가지로, ‘1870년대와 1880년대’의 불황을 화폐수량이 충분히 증가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화폐에 대한 수요의 증가에 의거해서 설명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졌다. 이 명제가 19세기 통화정책 대부분의 조치들의 근거에 놓여 있었다. 그 목표는 화폐의 가치


144) White, *Money and Banking Illustrated by American History*, Boston 1895, pp.160ff.

를 그 수량의 증가 혹은 감소를 통해 규제하려는 것이었다. 이 조치들의 효과는 이 특별한 유형의 화폐수량설의 정확성에 대한 귀납적 증거가 되는 것처럼 보였으며, 우연하게도 그 논리의 취약성을 감추게 하였다. 오로지 이런 추정만이 왜 유통량의 감소의 결과로 화폐가치가 증가되는 메커니즘을 규명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지지 않았는지를 설명할 수 있다. 여기에서 다시 고전적 화폐수량설은 위에서 우리가 주장한 것처럼 보완될 필요가 있다.

보통 화폐에 대한 수요의 증가는, 이것이 화폐와 상품들 사이의 교환비율에 어떤 효과를 주는지 확인하기 어려울 정도로 느린 것이 일반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의의 화폐에 대한 수요가 갑자기 비정상적으로 크게 증가하여 상품들의 가격들이 갑자기 하락하는 경우가 실제로 발생한다. 그와 같은 경우는, 일반 대중이 위기의 시기에, 신용화폐에 대한 신뢰를 잃어서 신용수단이 유통될 능력을 상실할 때 발생한다. 이런 종류의 무수한 사례들은 역사에 알려져 있으며 (그중 하나가 1907년 늦가을 미국의 경험이다.) 유사한 사례들이 미래에도 일어날 수 있다.

Ⅲ. 간접교환의 특이성에 따른 화폐의 객관적 교환가치의 특별한 원인

11. 생활고


 화폐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결정하는 이미 고려된 요인들은 특별한 특이성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이 결정요인들에 관한 한 화폐의 교환가치는 여타 경제재들의 교환가치와 전혀 다르게 결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화폐의 객관적 교환가치의 변동의 결정요인들 가운데에는 특별한 법칙을 따르는 여타 결정요인들도 존재한다.

생활고(dearness of living)만큼 광범위하게 제기된 불만은 없다. 자신이 살았던 ‘비싼 시절’에 대해 불평하지 않은 세대가 없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더 비싸진다는 사실은 단지 화폐의 객관적 교환가치가 하락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할 뿐이다. 이러한 단언에 대해 역사적, 통계적 테스트를 하기는 불가능하지는 않겠지만 매우 어렵다. 이 방향의 우리 지식의 한계는 화폐가치 변동의 측정 가능성 문제를 다루는 장에서 언급될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이 장(章)의 결론들을 예상하고 가격들의 역사에 대한 연구들로부터 혹은 그와 같은 연구들에서 채택된 방법들로부터는 아무런 지지를 예상할 수 없다는 것을 언급하는 데 만족해야 한다. 평균적인 사람들의 언급들, 비록 이 언급들이 자기기만에 근거하는 경우가 쉽게 발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비록 그 언급들이 개인의 주관적 가치평가들의 변동에 달려 있다

고 하더라도, 엄청난 분량의 통계적 출판물의 내용들에 의해 제 공될 수 있는 것보다, 화폐의 객관적 교환가치의 지속적인 하락 의 사실을 더 잘 확인해 줄 것이다.

연쇄적인 원인들—화폐의 객관적 교환가치에 이런 종류의 움 직임을 불러올 수 있고 또 어떤 상쇄적인 힘에 의해 그 원인들 이 취소되지 않는 한 그 움직임을 불러올 그런 연쇄적인 원인들 —이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만 확실성이 부여될 수 있 다. 이 길—원하는 목표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많 은 연구자들이 이미 밟고 지나갔다. 우리는 어떤 성공을 거두었 는지 살펴볼 것이다.

12. 바그너의 이론: 가격결정에 있어서 공급 측면의 수요 측면에 대한 영구적인 우위

 많은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그리고 일반적인 대중적 의견과 일치하게, 바그너는 화폐의 객관적 교환가치의 축소를 향한 경향성의 지배를 가정한다. 그는 이 현상이 공급 측면이 그것 자체의 획득적 이해를 추구하기에 거의 항상 더 강하고 더 유능하다는 사실에 의해 설명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심지어 실 제 카르텔, 경쟁(링), 연합체들(콤비네이션)과는 별개로, 그리고 개 별 판매자들 사이의 모든 경쟁에도 불구하고, 바그너는 공급 측 면이 그 반대의 수요 측면에 비해 더 강한 유대를 가지고 있다 고 주장한다. 그는 더 나아가 소매업을 하는 상인들은 소비자들

이 과거 가격들의 지속 혹은 가격의 감소에 관심을 가지는 것보다 더 가격들의 상승에 관심이 많다고 주장한다. 일반적으로 단지 특별한 그래서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고객들의 이해가 개재되는 데 비해 상인들의 소득의 수량은,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들의 전체 경제적 사회적 지위는, 대개 그들이 획득하는 가격들에 의존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가격들의 유지 혹은 상승의 경향성의 공급 측면에서의 성장—더 높은 가격의 방향으로의 영구적인 압력으로 작동하는—이 수요 측면에서의 반대 경향에 비해 더 열정적으로 그리고 더 일반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가격들은 확실히 판매를 유지하고 총이윤을 증대시키려는 목적으로 소매업에서 낮게 유지되고 감소되며, 경쟁이 자주 그렇듯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게 만들 수 있다. 그러나 바그너에 따르면, 장기적으로는 두 영향 가운데 어느 것도 더 높은 가격에 대한 이해와 노력—이것들이 사실상 더 높은 가격들에 대한 저항과 경쟁하고 이를 극복할 수 있게 한다—만큼 일반적으로 그리고 두드러지게 효과적일 수 없다. 이런 수요 측면에 대한 공급 측면의 영구적 우위에서 바그너는 가격들의 일반적 증가의 원인들 가운데 하나를 보고 있다.¹⁴⁵⁾ 바그너는 말하자면, 화폐의 객관적 교환가치의 가속적 하락을 도매가격들의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없고 단지 소매가격들의 결정에서만 영향을 주는 일련의 요인들 탓으로 돌리고 있다. 이제 소비재들의 소매가격들은 도매가격들의 움직임에 따라

145) Wagner, *Theoretische Sozialökonomik*, II Band, p.245.

빠르게 그리고 완전하게 대응해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무수한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것은 잘 알려진 현상이다. 그리고 소매가격들의 특이한 결정요인들 중, 소매가격들을 도매가격들에 상응하는 수준보다 더 높게 유지하는 경향이 있는 것들이 지배적이 된다. 예를 들어 소매가격은 도매가격의 상승보다는 감소에 더 천천히 반응한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조정이 일어나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간과하지 말아야 하며, 마찬가지로 비록 소비재의 소매가격이 생산재 가격의 뒤를 잇는다고 하더라도, 소비재의 소매가격들은 항상 생산재 가격들의 움직임에 참여한다는 사실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소매가격에 전혀 효과를 보이지 않는 것은 단지 도매업에서의 작고, 일시적인 움직임일 뿐이다.

우리가 수요 측면에 대한 공급 측면의 영구적인 우위의 존재를 기꺼이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이로부터 더 가격이 높아지는 일반적 경향성을 도출해 낼 수 있을지는 정말 의심스럽다. 그러나 바그너는 그와 같은 가정을 하지 않는다. 그리고 만약 그렇게 했다면, 그것을 지지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다. 사실 현대 상업의 발달은 소매가격이 도매가격과 제조가격에 더 빠르게 적응하는 경향성을 초래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멀티플스토어(multiple stores), 체인스토어(chain store), 그리고 코옵들(cooperative societies)은 도매가격의 움직임을 보부상들이나 소매상인들보다 더 밀접하게 따르고 있다. 왜 바그너가 자유경쟁의 개인주의적 시스템 혹은 거래의 자유가 주어진 상태에서 이 경향성을 공급 측면의 수요 측면에 대한 우위로부터 야기하는 가

격들의 일반적 상승과 연결시켜야 하는지, 그리고 그와 같은 체제 아래에서 가장 그 경향성이 분명하며 가장 큰 힘과 용이성으로 이런 경향성이 작동하고 있다고 선언하는지는 정말 불가해한 일이다. 이런 단언에 대해 아무런 증명도 제시되지 않고 있는데 아마도 이는 바그너의 경제적 자유주의에 대한 무관심의 결과일 것이다. 그런 증명은 쉽게 고안될 수 없었을 것이다. 거래의 자유가 더 발달할수록, 더 빠르게 그리고 더 쉽게 도매가격들의 움직임들, 특히 하향 움직임들이 소매가격들에 반영된다. 거래의 자유에 대해 입법적인 제약이나 여타 제약들이 소규모 생산자들과 소매업자들에게 유리한 지위를 부여하는 경우, 그 조정이 더 느려지고 때로는 완전한 조정은 심지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다.

이에 대한 현저한 사례가, 장인(匠人)과 가게주인들을 공장이나 대형 점포들과의 경쟁에서 유리하게 만들려는, 지난 세대에 오스트리아에서 나타난 시도 그리고 이 시도에 이어 1890년과 1914년 사이에 나타난 가격들의 상당한 상승이다. 바그너가 공급 측면의 수요 측면에 대한 영구적인 우위라고 부르는 조건들이 실제 증거에서 가장 강력했던 것은 자유경쟁 아래에서가 아니라 자유경쟁이 가장 큰 장애물들에 의해 저해되고 있는 상황들에서였다.

13. 비저의 이론: 자연경제와 화폐경제 간 관계변화가

화폐가치에 미치는 영향

여타 재화들로 측정되었을 때 그 가치에 그 어떤 큰 변화도 없으면서 재화들의 화폐가격이 증가하는 현상을 설명하려는 비저의 시도¹⁴⁶⁾도 완전히 만족스러운 것은 아니다. 비저는 실제 발생한 화폐가치의 변화의 대부분은 자연경제(Naturalwirtschaft)와 화폐경제(Geldwirtschaft) 사이의 관계에서의 변화들에 이유가 있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다. 화폐경제가 흥성할 때 화폐의 가치가 감소하고, 화폐경제가 쇠퇴할 때 화폐의 가치는 다시 증가한다. 화폐경제의 초기 단계에서는 대개의 욕구들은 여전히 자연경제의 방법에 의해 만족된다. 가정은 자급적이다. 가족은 자기 집에서 거주하며, 스스로 그 필요의 대부분을 생산하며, 그 생산물의 판매는 단지 보충적인 소득원일 뿐이다. 결과적으로 생산자의 생활비나 (결국 같은 것이지만) 그의 노동가치는 판매되는 생산물의 비용에 충분히 감안되지 않거나 전혀 감안되지 않는다. 포함된 전부는 사용된 원료들의 비용 그리고 특별히 제작된 도구들이나 여타 기구들의 마모—아무튼 광범위한 생산 조건들 아래에서는 대단한 것이 아닌—이다. 그것은 구매자도 마찬가지이다. 그가 구매를 통해 만족시키는 욕구들은 가장 중요한 욕구들 가운데 속하지 않으며, 그가 추정했을 사용가치들은 별로 크지

146) Wieser *Der Geldwert und seine geschichtlichen Veriinderungen*, pp.57ff.; *Der Geldwert und seine Veriinderungen*, pp.527ff.; *Theorie der gesellschaftlichen Wirtschaft(Grundriss der Sozialokonomik*, I, Abt., Tübingen 1914), pp.327ff.

않다.

그런 다음 이 모든 변화들이 점차 나타났다. 화폐경제 부문의 확장은 종전에는 포함되지 않았고 단지 '자연적·경제적' 원리로 다루어졌던 요인들을 비용계산으로 인도하였다. 화폐적 단위로 계산되는 비용들의 리스트가 점차 길어졌으며, 비용계산들 속에서 새로운 요소 각각은 이미 화폐로 표현된 요인들과 비교를 통해 추정되었고, 그 요인들 속에 추가되어 가격들을 상승시키는 효과를 가져왔다. 그래서 가격들의 일반적 상승이 일어났지만, 이것은 공급조건들에서의 변화들의 결과가 아니라 화폐가치의 하락으로서 이해되고 있다.

비저에 의하면, 오로지 화폐적 요인들에서 기인하는 상품가격들의 지속적 증가를(즉, 화폐의 공급과 그 수요 사이의 관계의 변동들) 설명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다면, 우리는 가격들의 일반적 수준의 변화를 설명하는 다른 이유를 찾아야 한다. 이제 그 가격 비율의 상품 측면에 속하는 요인들에 의해 야기된 상품가치들의 그와 같은 변동들에 의거해서 원인을 찾는 것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는 선조들이 그랬던 것에 비해 더 열악하게 재화들을 공급받고 있지는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비저에게 화폐의 구매력의 감소를 화폐경제—그것의 역사적 성취였던—의 확장으로 돌리는 설명 이외의 그 어떤 설명도 더 자연스럽게 보이지 않는 것 같다.

비저로서는 사실 새로운 진보의 각 기간에 화폐가치의 변화를 불러오도록 기여한 것이 바로 이 가격들의 비활동성(inertia)이다. 새로운 요인들이 생산과정—화폐경제에 의해 규제되는—의 일부

로 새로이 흡수될 때마다, 과거의 가격들이 이에 개재된 추가적 가치들의 수량만큼 증대되도록 만든 것이 틀림없이 가격의 비활동성이었다. 그러나 상품들의 화폐가격들이 더 높게 상승할수록 화폐의 가치는 틀림없이 상대적으로 더 낮게 떨어질 것이다. 재화가치의 증가는 그래서 성장하는 화폐경제 발전의 불가피한 징후로 보인다.

비저의 이 주장이 시장과 가격들의 결정요인들과 관련하여 중요한 논점들을 드러내고 있음은 부인할 수 없다. 이 논점들은 이를 끝까지 따라가면, 화폐 이외의 다양한 경제재들 사이의 교환비율들의 결정에 중요한 시사점을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저의 결론들이 화폐가격들의 결정에 관한 것인 한, 그 결론들은 심각한 결점들을 드러내고 있다. 아무튼 그의 주장이 정확하다고 수용될 수 있기 전에, 화폐 측면으로부터 유래하는 힘들이 아니라 오로지 상품 측면으로부터 나오는 힘들만이 여기에 개재되어 있음이 증명되어야 할 것이다. 변화가 발생한 것은 화폐에 대한 가치평가가 아니라 상품에 대한 가치평가였고, 그것이 그 교환비율의 변화로 나타났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일련의 추론 전체는 기각되어야 한다. 교환시설들의 발전은, 그 경제로의 새로운 참여자들은 그들이 처분하고자 하는 재화들의 주관적 가치평가를 높이는 것을 의미한다. 그들이 예전에는 오로지 개인적 용도의 대상으로서만 가치를 부여했던 재화들이 이제는 다른 재화들과의 교환 가능성으로 인해 추가적으로 가치를 부여받는다. 이것은 필연적으로 이 재화들을 보유하고, 이 재화들을 교환에 내놓은 사람들의 눈에 그들의 주

관적 가치의 상승을 포함하고 있다. 교환에서 처분될 재화들은 이제 더 이상 그 소유자들이 가지고 있었을 사용가치로서 가치를 부여받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 대신 교환으로 획득될 수 있는 재화들의 사용가치로서 가치를 부여받는다. 교환은 단지 양 당사자들 모두에게 유리할 때에만 발생할 것이기 때문에 후자의 가치는 언제나 전자의 가치보다 높다.

그러나 다른 한편—그리고 비저는 이것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교환에서 획득된 재화들의 주관적 가치는 점차 내려간다. 그것들을 획득하는 개인들은 더 이상 주관적 가치척도에 상응하는 중요성(Weitskala) 혹은 효용(Nutzenskala)을 부여하지 않는다. 그들은 그들에게 단지 그것들을 얻기 위해 양도하여야 했던 다른 재화들에 속하는 더 작은 중요성만을 부여한다.

이제 사과 하나, 배 하나, 레모네이드 한 잔을 소유한 사람의 가치척도가 다음과 같다고 해 보자.

1. 사과 1개
2. 케이크 1조각
3. 레모네이드 1잔
4. 배 1개

만약 이제 이 사람이 그의 배를 케이크 한 조각과 바꿀 기회가 주어진다면, 이 기회는 그가 그 배에 부여하는 중요성을 증대시킬 것이다. 그는 이제 그 배를 레모네이드 한 잔보다 더 높게 평가할 것이다. 만약 그가 배 한 개와 레모네이드 한 잔 중 하나를 포기해야 하는 선택에 직면한다면, 그는 레모네이드의

포기가 더 작은 희생이라고 간주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그의 케이크에 대한 감소된 가치평가에 의해 균형이 맞춰진다. 이 사람이 배, 사과, 레모네이드 이외에 케이크 한 조각도 가지고 있다고 해 보자. 만약 그가 케이크와 레모네이드의 손실 중 어느 것을 감수할 수 있는지 질문을 받는다면, 그는 아무튼 케이크를 잃기를 선호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는 그의 가치척도에서 레모네이드보다 더 아래에 위치한 배를 양도함으로써 손실을 만회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교환의 가능성은 모든 개인의 경제적 의사결정에 재화들의 객관적 교환가치에 대한 고려들을 끌고 들어온다. 원래의 사용가치 척도는 유도된 2차의 교환가치와 사용가치의 척도로 대체된다. 이 2차 가치척도에는 경제재들이 그들의 사용가치뿐만 아니라 교환으로 그 경제재들 대신 획득될 수 있는 재화들의 가치에 따라서 그 순위가 매겨진다. 그럼으로써 재화들의 순위가 반전되고, 중요성의 순서가 변화된다. 그러나 만약 하나의 재화가 더 높게 위치가 정해진다면, 그렇다면 틀림 없이 어떤 다른 것은 더 낮게 위치가 정해진다. 이는 의심의 여지가 있을 수 없다. 이는 단순히 가치척도의 속성 바로 그 자체에서 기인한다. 가치척도란 다름 아니라 가치평가의 대상에 대한 중요성의 순서대로 주관적 가치평가들을 정돈하는 것이다.

교환분야의 확장은 주관적 가치들에 대해서와 마찬가지로 객관적 교환가치에 대해서도 동일한 효과를 미친다. 여기에서 한 쪽 측면에서의 가치의 증가가 모두 다른 쪽 측면에서의 가치의 하락에 의해 상쇄될 것임은 분명하다. 사실 두 재화들 사이의 교환비율이 양자 모두 더 값비싸지는 방향으로 변화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다. 그리고 이것은 화폐가 개재된다고 해서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화폐의 객관적 교환가치가 변화를 겪었다고 단언될 때, 교환 분야의 확장이란 단순한 사실과는 별개로 이에 대한 어떤 특별한 원인이 제시되어야 한다. 그러나 아무도 이런 것을 보여 준 적은 없었다.

비저는, 경제사가(經濟史家)의 방식을 따라, 자연경제(自然經濟)와 화폐경제(貨幣經濟)를 대비하면서 시작하고 있다. 이 용어들은 모든 이론적 연구의 불가결한 기초인 과학적 추상화를 제공하지 못한다. 교환이 없는 상태와 교환에 근거한 사회의 대비가 의도된 것인지, 혹은 직접교환의 조건들과 화폐의 사용에 기초한 간접교환의 조건들의 대비가 의도된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다. 비저가 교환이 없는 상태를 화폐를 통한 교환의 상태와 대비하고자 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것은 분명 자연경제와 화폐경제라는 용어들이 경제사가들에 의해 사용되는 의미이다. 그리고 이 정의(定義)는 화폐제도의 완전한 발전에 따른 경제사의 실제 전개와 상응한다. 오늘날 새로운 지리적 지역들 혹은 소비의 새로운 분야들이 교환의 범위 속으로 편입될 때, 교환이 없는 상태에서부터 화폐경제로의 직접적 이행이 나타난다. 그러나 이것은 언제나 그랬던 것은 아니었다. 그리고 아무튼 경제학자는 이에 대해 분명한 구분을 해야 한다.

비저는 여름휴가를 시골에서 보내는 습관이 있고 거기에서 더 싼 가격들을 발견하는 도회지인(townsmen)에 대해 이야기한다. 어느 해에 이 도회지 사람들이 휴가를 가서 그 가격들이 모두 더 높아진 것을 발견한다. 그동안 그 시골마을이 화폐경제의

범위 속으로 편입된 것이다. 농부는 이제 우유와 달걀 그리고 가금류들을 도시에서 판매하며, 여름 방문객들에게 시장에서 받기를 원하는 가격들을 요구한다. 그러나 비저는 여기에서 단지 그 과정의 절반만을 묘사하고 있다. 다른 절반은 도시에서 작동된다. 도시의 시장에 나온 그 시골마을의 새롭게 개척된 공급원으로부터의 우유, 달걀 그리고 가금류들은 가격의 하락 경향성을 보인다. 지금까지 자연경제였던 부분의 교환 시스템의 범위의 포함은 일방적인 가격상승이 아니라 가격을 고르게 만드는 효과를 초래한다. 교환경제의 범위가 얼마라도 축소되면 반대의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즉, 가격들의 차이들이 증대되는 내재적 경향성이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현상을 화폐의 객관적 교환가치의 변동에 대한 명제들을 입증하는 데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14. 화폐의 객관적 교환가치에 영향을 주는 힘으로서의 시장 메커니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들의 지속적 상승, 그리고 이것과 한 짝인 화폐가치의 하락은 화폐 측면으로부터 화폐의 속성과 화폐거래들에 의거하여 잘 설명될 수 있다.

현대 가격이론은 직접교환의 경우를 염두에 둔 모든 명제들을 언급하였다. 현대 가격이론이 간접교환을 그 고려의 범위 속에 포함하는 경우에도 교환의 공통 매개물, 화폐의 도움에 의존

하는 그런 종류의 교환의 특이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는다. 이것은 물론 현대 가격이론에 대한 반대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 이론이 직접교환에 대해 확립한 가격결정의 법칙들은 또한 간접교환의 경우에도 유효하며, 교환의 본질은 화폐의 사용에 의해 변경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폐이론가들은 가격의 일반이론에 추가적으로 중요한 기여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만약 잠재적 구매자가 잠재적 판매자에 의해 요구된 가격이, 그 재화에 대한 그의 주관적 가치평가들에 상응하지 않기 때문에 너무 높다고 생각한다면, 잠재적 판매자가 그의 요구수준을 낮추지 않으면 직접교환은 가능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화폐가 개입되는 간접교환에 의해서는, 심지어 그와 같은 감소가 없이도 거래가 일어날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한다. 어떤 상황들 아래에서는 잠재적 구매자는, 만약 그도 유사하게 그 자신이 처분해야 하는 재화나 서비스들에 대해 그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나은 가격을 기대할 수 있다면, 요구된 높은 가격을 지불하기로 결정할지 모른다. 사실 이것이 흔히 잠재적 구매자가 거래에서 가장 큰 잠재적 이득을 얻는 최선의 방법일 것이다. 물론 증권거래소에서 벌어지는 거래들의 경우나 혹은 개별 협상의 경우에서 처럼, 두 당사자 측이 즉각 가격의 결정에 협력하고 결과적으로 상품과 교환 매개물에 대한 그들의 주관적 추정치에 직접적인 표현을 할 수 있을 때,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 그러나 가격들이 판매자들에 의해 일방적으로 결정되고 구매자는 그 가격이 너무 높으면 구매를 자제하지 않을 수 없는 것처럼 비치는 경우들이 존재한다. 그와 같은 경우 구매자들의 구매 자제가 판매자에게

그가 너무 많이 요구했음을 암시할 때, 판매자는 가격을 다시 낮출지 모른다(물론 그렇게 함에 있어 너무 지나치거나 혹은 충분히 많이 요구하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나 어떤 조건들 아래에서는 서로 다른 절차가 이 우회적인 과정을 대체할 수 있다. 구매자는 요구된 가격에 동의하고 그가 다른 곳에서 스스로 판매할 재화의 가격을 더 높게 불러서 이를 만회하고자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식료품 가격의 상승은 노동자들로 하여금 더 높은 임금을 요구하게 만들 수 있다. 만약 기업가들이 노동자들의 요구에 응한다면, 이제 그들은 제품가격을 인상할 것이며, 그래서 식료품 생산자들은 아마도 제조업 생산물의 가격의 상승을 다시 식료품 가격의 새로운 인상의 이유로 간주할지 모른다. 그래서 가격들의 상승은 끝없는 연쇄 속에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아무도 그 시작이 어디이고 그 끝이 어디인지 혹은 무엇이 원인이고 무엇이 결과인지 지적할 수 없다.

현대 판매정책에서 '고정가격'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카르텔과 트러스트들 그리고 정부를 포함해서 모든 독점자들이 그들 제품의 가격들을 독립적으로 소비자들과 상의하지 않고 고정하는 것이 관습적이다. 그들은 구매자에게 가격들을 지시하는(prescribe) 것처럼 보인다. 이 점은 소매업에서도 자주 마찬가지인 듯이 보인다. 이제 이 현상은 우연한 것이 아니다. 이것은 조직화되지 않은 시장의 불가피한 현상이다. 비(非)조직화된 시장에서는 판매자가 구매자들 모두와 접촉하지 않으며 단지 개인들 혹은 개별 집단들과 접촉을 한다. 이 소수의 사람들과의 협상은 아무런 쓸모가 없을 것이다. 가격결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문제의 재화에 대한 이 소수의 사람들만의 가치평가가 아니라 모든 잠재적 구매자들의 가치평가이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판매자는 그의 의견으로 대략 그 가격이어야 한다는 수준에 가격을 고정하고(그가 너무 낮게 책정하기보다는 너무 높게 책정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은 이해할 만하다), 다른 판매자들이 어떻게 하는지 지켜 볼 것이다.

그가 홀로 가격들을 고정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들 모두에서, 그는 구매자들의 가치평가들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는 이 가치평가들에 대한 다소간 정확한 가정들을 만들 수 있으며, 시장과 구매자들의 심리에 대한 엄밀한 관찰을 통해 이에 상당히 놀라울 만큼 전문가가 된 상인들도 존재한다. 그러나 거기에 확실성은 존재할 수 없다. 사실 불확실한 미래과정의 효과들에 대해 추정을 해야 할 경우가 많다. 판매자들이 소비자들의 가치평가에 관한 신뢰할만한 지식에 도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시행착오(trial and error)의 방법이다. 그러므로 그들은 구매자들의 구매 자제가 너무 많이 올랐음을 보여 줄 때까지 가격을 올린다. 그러나 그 가격이 너무 높게 보일지 모르지만, 화폐의 현재가치가 주어져 있을 때, 만약 그가 마찬가지로 그가 ‘고정하는’ 가격이 상승할 것을 기대할 수 있다면, 그리고 이것이 구매를 자제하는 것—구매 자제가 오래 완전한 효과를 내지 못할지 모르며 그에게 다양한 불편을 초래할지 모른다—보다 더 빨리 그의 목표에 도달하도록 할 것이라고 믿는다면, 구매자는 이를 지불할지 모른다. 그와 같은 상황들에서 판매자는 그가 요구하는 가격의 합리성을 확인하는 유일하게

신뢰할 만한 방법을 박탈당한다. 그는 이 가격들이 지불되는 것을 보고, 그의 사업의 이윤들이 비례적으로 증가한다고 생각하고 단지 점차 화폐의 구매력의 감소가 그로 하여금 그가 획득한 이득의 일부를 박탈한다는 것을 발견한다. 가격들의 역사를 조심스럽게 추적했던 사람들은 그 현상이 무수히 반복된다는 것에 동의하지 않을 수 없다. 다른 재화들로 옮겨가는 가격 상승의 많은 부분이 화폐의 가치를 감소시켰으나 여타 재화들 사이의 교환비율을 의도한 정도까지 변화시키지는 않았음은 부인할 수 없다.

그 어떤 있을 수 있는 오해도 막기 위해서는, 이로부터 모든 가격상승이 이런 식으로 전가될 수 있다고 결론을 내리거나 그래서 아마도 (이런 식의 가격 전가를 통해-역자 삽입) 서로 다른 경제재들과 인간의 노력들 사이에 고정된 교환비율이 존재한다고 가정하는 것은 전혀 정당화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하게 언급할 필요가 있다. (이런 결론을 내리는 것과-역자 삽입) 일관되기 위해서 우리는 재화들의 화폐가격의 상승을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할 인간의 탐욕에 돌려야 할 것이다. 어떤 상품의 화폐가격의 상승은—비록 항상 그 화폐와의 교환비율이 변경되던 비율과 동일한 정도로는 아니라 할지라도—일반적으로 그 상품과 여타 상품들과의 교환비율을 수정하게 한다.

기계론적인 화폐수량설의 대표자들은 아마도 이 계열의 주장의 근본적 정확성을 인정할지 모르지만, 여전히 화폐의 공급과 그 수요 사이의 관계들의 변화로부터 시발되지 않은 종류의 화폐의 객관적 교환가치에서의 모든 변동이 자동적으로 스스로

교정해 나가는 성질을 띠고 있다는 데 대해서는 반대할지 모른다. 만약 화폐의 객관적 교환가치가 하락하면 화폐에 대한 수요는 반드시 상승한다. 왜냐하면 거래의 총량을 감당하기 위해 더 많은 화폐총액이 필요할 것이기 때문이다. 어떤 한 공동체의 화폐에 대한 수요를, 거래량을 유통속도로 나눈 몫으로 간주하는 것이 용인된다면, 이 반대는 정당화될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 내재된 오류는 이미 드러났다. 화폐에 대한 수요의 객관적 조건들—감당해야 할 지급의 회수와 규모와 같은—에 대한 의존성은 단지 개인들의 주관적 가치평가들이라는 매개물을 통한 간접적인 의존성일 뿐이다. 만약 상품들의 화폐가격이 상승했고 각 개별 구매가 이제 예전보다 더 많은 화폐를 필요로 하더라도, 이것이 반드시 개인들로 하여금 그들의 화폐 스톡을 증가하도록 하지는 않는다. 가격들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개인들이 화폐보유고를 늘릴 의사가 전혀 없어서 화폐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지 않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그들은 아마도 화폐소득을 증가시키려고 애쓸 것이다. 사실 이것이 가격들의 일반적 상승이 자신을 드러내는 하나의 방식이다. 그러나 화폐소득의 상승은 결코 화폐보유고의 상승과 동일하지 않다. 물론 개인들의 화폐에 대한 수요가 가격들과 함께 상승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이 일어날 것이라고 가정할 근거는 조금도 존재하지 않는다. 특히 그와 같은 증가가 화폐의 구매력의 감소가 완전히 상쇄되는 효과를 초래할 정도로 일어날 것이라고 가정할 근거는 조금도 없다.

어느 정도 정당화될 것 같지만 정반대되는 가정—즉, 가격의 상승에 의해 그 개인에게 강요된 불필요한 지출의 역제가 현금


보유고의 필요수준에 관한 의견의 수정을 가져올 것이고 그래서 귀결되는 의사결정이 보유할 화폐수량의 증가가 아니라 확실히 감소일 것이라는 가정—도 마찬가지로 위험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 다시 이것은 동태적인 요인들(dynamic agencies)을 통해 초래된 변동의 문제임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정태상태—기계론적 화폐수량설의 고수자들에게 그 주장이 유효할 수 있었을—는 개별 상품들 사이의 교환비율들이 필연적으로 수정된다는 사실에 의해 교란된다. 어떤 조건들 아래에서는, 시장의 기법은 이 수정이 화폐와 여타 경제재들 사이의 교환비율 간으로도 확장되는 효과를 지닐지 모른다.¹⁴⁷⁾

IV. 핵심주제를 벗어난 약간의 산책

15. 화폐단위의 크기와 그 분할이 화폐의 객관적 가치에

미치는 영향

 우리는 화폐단위의 크기가 화폐와 여타 경제재들 사이의 교환비율의 결정에 일정한 영향을 행사한다는 단언에 종종 마주친다. 이런 연관 속에서 큰 화폐단위는 상품들의 화폐가격을 높이는 경향이 있는데 비해 작은 화폐단위는 화폐의 구매력을 높이는 경향이 있다는 의견이 표출되고 있다. 이런 종류의 고려들

147) 나의 다음의 논문 참고. “Die allgemeine Teuerung im Lichte der theoretischen Nationalalökonomie,” *Archiv für Sozialwissenschaft* 37: 563ff.

은 오스트리아에서 1892년 통화규제의 시기에 상당한 부분을 담당하였으며 새로운 크로네(krone) 혹은 반 굴덴(half-gulden)이 예전의 더 큰 단위의 굴덴을 대체하게 하는 데 결정적이었다. 이런 단언이 소매가격들의 결정에 대한 것인 한에 있어서는, 이런 주장은 그렇게 심각하게 유지되기 어렵다. 그러나 소매업의 경우 화폐단위의 규모는 널리 인정되듯이 어느 정도 중요성을 가지고 있지만 과장되지 말아야 한다.¹⁴⁸⁾

화폐는 무한정 가분하지 않다. 기술적 이유들로 인해 편리하게 실제 화폐물질로 표현될 수 없는 부분적 총액을 표현하는 데 화폐대용물의 도움을 받는다고 하더라도(현대 명목주화의 시스템에서는 완벽해진 방법), 사업의 빠르고 안전한 거래의 필요에 적응된 형태로 화폐단위의 모든 원하는 부분을 상업에 제공하기는 거의 불가능한 것 같다. 소매업에서 사사오입은 어쩔 수 없이 사용되지 않을 수 없다. 덜 가치 있는 상품들의 소매가격들은—그리고 이런 가격들 중에 일상적으로 쓰이는 가장 중요한 물품들과 편지의 수송이나 철도와 전차의 승객수송 서비스의 가격들이 있다—반드시 가용한 주화들에 어떤 방식으로든 적용되어야 한다. 주화제조는 그 성격상 어떤 원하는 정도로도 더 세분될 수 있는 상품들의 경우에는 단지 무시될 수 있을 뿐이다. 그렇게 세분될 수 없는 상품들의 경우에는, 독립적인 판매로 내놓은 상품들의 소량의 가격들은 가용한 주화들의 하나 혹은 그 이상의 가치와 일치하여야 한다. 그러나 상품들의 양 집단들의 경

148) Menger, *Beiträge zur Währungsfrage in Österreich-Ungarn*(Jena, 1892), pp.53ff.


우에는 소매를 위한 계속적인 세분은 가용한 주화에서 소액이 더 이상 표시될 수 없다는 사실로 인해 방해받을 수 있다. 만약 주화의 최소단위 금액이 너무나 커서 어떤 상품의 가격을 정확하게 표현할 수 없을 정도라면, 한편으로는 그 상품 몇 단위들을,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 혹은 약간 더 많은 주화들을 서로 교환함으로써 이 문제는 조정될 수 있을 것이다. 과일, 채소, 달걀과 그 외 유사한 상품들의 소매시장에서, 두 개에 3헬러, 5개에 8헬러 등과 같은 가격들은 일상적 현상이다. 이에도 불구하고 표현할 수 없는 사각지대가 상당히 많이 존재한다. (1/27900kg의 금과 동등한) 독일 제국의 통화 10페니히(pfennigs)는 오스트리아 크로네 통화로 표현될 수 없었다. (11/328000kg의 금과 동등한) 11헬러는 너무 작고 (3/82000kg의 금과 동등한) 12헬러는 너무 많았다. 결과적으로 그렇지 않았더라면 두 국가들에서 동등하게 유지되었을 가격들 사이에 조그만 차이들이 존재하지 않을 수 없었다.¹⁴⁹⁾

이 경향성은, 특별히 공공 재화와 서비스들의 가격들이 보통 경화들로 표현될 수 있는 화폐단위들의 일부로 표현될 뿐만 아니라 그 주화제조의 화폐단위(denomination)에 가능한 한 근사하게 상응하는 수량으로도 표현된다는 상황으로 인해 더 강화된다. 모든 사람들이 소매가격들에서 나타나는 ‘사사오입’을 향한 경향성에 익숙한데, 이것은 거의 전적으로 화폐와 화폐대용물들의 단위로 인한 것이다. ‘정수(整數)’ 지불이 관습인 경우의 가격

149) 예를 들어 국제우편연맹(International Postal Union)의 회원국들의 숫자 우표 가격들(letter-postage rates).

들과 관련해서는 이 주화(coinage)의 단위의 중요성이 더 커진다. 이것의 대표적인 사례가 톱, 수수료(fee) 등이다.

16. 방법론적 코멘트

 이 책의 초판에 대한 서평¹⁵⁰⁾에서, 로츠(Walter Lotz) 교수는 필자가 1879~1892년 사이의 오스트리아 은 굴덴의 가치에 대한 로린(Laughlin)의 설명에 대해 제기했던 비평을 다루고 있다.¹⁵¹⁾ 한편으로는 주관적 가치이론에 근거한 현대 경제이론에서 문제를 개념화하고 풀어나가는 것과 다른 한편으로는 역사적으로 그리고 사회정치적으로 지향된 슈몰러(Schmoller)와 브렌타노(Brentano) 학파의 경험현실주의적 취급 아래에서의 이런 개념화와 문제해결 방식의 차이를 사례로 보여 주는 너무나 훌륭한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 있어서, 그의 주장들은 특별히 흥미롭다.

로츠 교수에 의하면 나의 주장들이 어떤 가치가 있다고 인정받을지 여부는 ‘선호의 문제’라는 것이다. 그는 나의 주장들을 “인상적이라고 느끼지” 않는다. 그는 나중에 “로린이 그의 주장들을 최소한 매우 그럴듯하게 만드는 정보를 언급할 때까지” 처음에는 로린의 견해에 동의할 수 없었다고 말하고 있다. 로린은 사실 로츠에게 “1880년대에 그가 비엔나의 지도적인 고위 금융

150) *Jahrbücher für Nationalökonomie und Statistik*, 3d Series, Vol.47, pp.86-93.

151) 제8장 제6절 참고.

가로부터 지폐 굴덴이 궁극적으로 어떤 비율 혹은 다른 비율로 태환이 될 것이라고 사람들이 여기고 있다는 정보를 받았다.”고 말하였다. 로츠 교수는 여기에 다음을 추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확실히 지폐 굴덴과 은 굴덴의 유통이 수량적으로 대단히 과도하지 않고 적절한 것, 그리고 이 지불수단들이 그들의 명목 가치로 일반 은행들(public banks)에 의해 수용되는 것도 또한 중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엔나의 대표적인 고위 금융가(the leading house of Viennese high finance)가 나름대로 이유를 가지고서 예측하는 미래에 대한 예상들은 오스트리아 지폐 굴덴의 국제적 가치평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없다. 결과적으로 이 정보의 관점에서 폰 미제스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무게를 로린의 주장에 부여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있을 것이다.”

비엔나의 지도적 고위 금융가(金融家)가 로린에게 했다는, 그리고 로린에 의해 로츠 교수에게 전해진다는 신비한 의사소통은 공개된 비밀(secret de Polichinelle)이었다. 1880년대 오스트리아와 헝가리의 신문들에, 특히 「노이에 프레이에 프레스」(*Neue Freie Presse*)에 나타났던 화폐분위제의 문제에 관한 무수한 논문들은 언제나 오스트리아-헝가리가 금분위제로 이행할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이 단계를 위한 준비는 일찍이 1879년에 은의 자유주조 정지에 의해 이미 이루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의 증명—누구도(적어도 나는) 부인하지 않는—은 우리가 관심을 가진 문제를—로츠 교수는 아마도 풀 수 있다고 가정하는 것 같지만—결코 풀지 못한다. 그것은 단지 우리가 풀어야 할 문제를 알려줄 뿐이다. 그 굴덴이 ‘궁극적으로’ 금으로 ‘어떤 비율로’ 태

환되었다는 사실은 왜 그 당시에 특정 수준이었으며 그보다 높거나 낮지 않았는지 설명하지 않는다. 만약 굴덴이 금으로 태환될 것이었다면, 그리고 국채 증서들(National Debt certificates)이 금으로 태환될 것이었다면, 어떻게 이자를 얻는 국채(National Debt Bonds)가 이자를 주지 않는 굴덴 지폐들과 주화 굴덴들보다 더 낮게 평가될 수 있었는가? 이것이 우리가 설명해야 할 문제이다. 명백히 우리의 문제는 단지 로츠 교수에게서는 끝난 시점에서 단지 시작하고 있을 뿐이다.

로츠 교수가 지폐 굴덴과 은(銀) 굴덴의 유통이 “수량적으로 매우 적정하다.”(너무 크지 않다)는 사실도 또한 중요하다고 기꺼이 인정하고 있음은 사실이다. 그리고 그는 추가적으로 제3의 설명, 즉 이 지불수단이 재무부에 의해 그 명목가치대로 받아들여졌다는 설명의 유효성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설명들의 상호 관계는 애매한 채 그대로 남아 있다. 아마도 로츠 교수에게 첫 번째와 두 번째 설명은 서로 화해되기 어렵다는 생각이 미쳐 떠오르지 않았을 수 있다. 왜냐하면 만약 굴덴이 단지 금으로의 궁극적 태환에 대한 고려만으로 가치를 부여받았다면, 더 많은 혹은 더 적은 굴덴이 유통되는지는, 말하자면 전환에 필요한 가용 펀드(기금)가 특정 수량으로 제한되지 않는 한, 아무런 차이가 없다고 가정해도 무방할 것이기 때문이다. 세 번째 설명 시도는 완전히 설득력이 없다. 굴덴의 ‘명목가치’(nominal value)는 단지 다시 한 번 ‘그 굴덴’이며 이슈인 바로 그 논점은 그 굴덴의 구매력을 설명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로츠 교수가 여기에서 경제과학의 문제를 풀기 위해 채택한

그런 유형의 절차는 필연적으로 실패로 끝날 것이다. 사업가들의 견해를 수집하고—그 사업가들이 ‘대표적’ 인물들이거나 ‘지도적’ 가문에 속한다고 하더라도—이 견해들을 일반 대중에게 ‘한편으로는’, ‘다른 한편으로는’ 등을 집어넣거나, 여기저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를 산발적으로 넣어서 제공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사실들’의 수집은 과학이 아니다. 과학과는 거리가 멀다. 사업가들의 견해에 권위적인 중요성을 부여하는 것에 아무런 근거가 없다. 경제학으로서는, 이 견해들은 경제학이 연구하고 평가하여야 할 재료이다.

사업가가 어떤 것을 설명하려고 시도하는 순간, 그는 다른 어떤 사람과 마찬가지로 ‘이론가’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실제 상인 혹은 농부의 이론들이기 때문에 이를 특별히 선호해야 할 아무런 이유도 존재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생산비용의 변동으로 가격의 변동을 ‘설명’하는 사업가들의 무수한 단언들을 제시한다고 해서 고전학파의 생산비용이론이 증명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오늘날 자료의 쓸모없는 축적에 바빠 문제들의 언급과 해결에, 특히 경제학적인 이해를 잃어버린 많은 사람들이 있다. 지금이야말로 경제학은 은행가 X와 재벌 Y에게 경제상황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물어보는 것이 생업인 리포터의 일과는 다른 것임을 상기할 필요가 언제보다 더 큰 시점이다.

제9장 화폐의 객관적 교환가치가 지역적으로 동일하지 않은 문제

1. 지역 간 가격관계들

☺ 우선 다양한 종류의 화폐들이 함께 고용될 가능성을 무시하고 주어진 어떤 지역에서는 한 종류의 화폐가 교환의 공통 매개물로 배타적으로 봉사하고 있다고 가정하자. 서로 다른 종류의 화폐들의 상호 교환비율의 문제는 다음 장의 주제가 될 것이다. 이 장에서는—그 안에서 거주자들은 상호 교역을 하고 하나의 재화를 공통된 교환의 매개물로 사용하는—어떤 규모의 격리된 지리적 영역을 상상해 보자. 우리는 이 지역을 여러 국가로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해도 무방하며, 하나의 큰 국가의 일부 혹은 특정한 개별 국가로 생각해도 무방하다. 그것은 아무런 차이가 없다. 서로 다른 국가들에서의 화폐의 법적 개념의 차이들로 인해 일반적 공식을 수정해야 한다는 사실을 언급할 필요성은 우리 주장의 나중 단계에 이르기 전에는 없을 것이다.

모든 다른 측면들에서는 비슷한 구성을 지니고 있는 두 경제 재라고 하더라도, 만약 둘 다 같은 장소에서 곧바로 소비될 것이 아닌 경우에는, 같은 종(種)의 일원으로 간주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이미 언급하였다. 많은 목적들을 위해 이들을 고차재

와 저차재로서의 관계를 가진 서로 다른 종(種)으로 간주하는 것이 더 편리하다.¹⁵²⁾ 오로지 화폐의 경우에만 어떤 상황들에서는 그 공간상의 위치를 무시해도 무방하다. 화폐의 효용은, 여타 경제재들과는 대조적으로, 지리적 거리의 한계들로부터 어느 정도 자유롭기 때문이다. 수표와 청산 시스템, 그리고 여타 제도들은 화폐를 운송의 애로사항이나 그 비용과 다소 독립적으로 화폐를 가용(可用)케 하는 경향이 있다. 그들은 예를 들어 영국 은행(Bank of England)의 금고 속에 저장된 금이 세계 어느 곳에서든 교환의 공통된 매개물로 사용될 수 있게 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 우리는 쉽게 은행권 혹은 청산소(clearing house) 제도의 광범한 사용을 통해 공간상의 위치를 전혀 변경하지 않은 화폐충액을 수단으로 삼아 모든 이전거래들을 가능케 하는 화폐적 조직을 상상할 수 있다. 만약 우리가 더 나아가 모든 거래들에 수반되는 비용이 두 계약 상대방 사이에 그리고 그 상대방 중 어느 한쪽과 화폐가 존재하는 장소 사이의 거리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가정한다면, (이 조건이 어떤 경우에는, 예를 들어 우체국우편환 오더(postal-order) 그리고 우편환 오더(money-order) 서비스에 대해 부과되는 수수료에서는 이미 실현되고 있음은 잘 알려져 있다.) 화폐의 지리적 상황의 차이를 무시하는 것은 충분히 정당화될 수 있다. 그러나 여타 경제재들에 대해서는 화폐의 경우에 상응하는 추상화가 인정될 수 없다. 어떤 제도도 브라질의 커피가 (운송비용 없이) 유럽에서 곧바로 소비되게 만들 수는 없을 것이다. ‘유럽의 커피’라는 소비재가 ‘브라질 커피’라는 생산재로부터

152) 제5장 제1절 참고.


만들어지기 전에, 이 생산재는 먼저 ‘운송 수단’이라는 보완재와 결합되어야 한다.

화폐의 지리적 위치에 따른 차이를 이런 식으로 고려하지 않더라도 무방하다면, 우리는 다음과 같은 화폐와 여타 경제재들 사이의 교환비율의 법칙을 얻게 된다. 당장 소비될 수 있는(그 용어 ‘소비’가 상업과 기술에서 보통 이해되고 있는 그런 의미에서) 모든 경제재는 그 경제재가 위치하고 있는 장소에서의 소비재로서의 주관적 사용가치, 그리고 소비를 위해 운송되었을 장소에서의 생산재로서의 주관적 사용가치를 가지고 있다. 이 가치들은 서로 독립적으로 그 기원을 가지고 있다. 화폐와 상품들의 교환비율의 결정을 위해서는 소비재로서의 주관적 사용가치와 생산재로서의 주관적 사용가치 둘 다 중요하다. 어떤 장소에서의 어떤 상품의 화폐가격은—완전히 무제한적인 교환을 가정하고 운송 중 걸린 시간으로부터 발생하는 차이를 무시한다면—운송의 화폐적 비용을 감안한 여타 장소들에서의 가격과 동일할 것이다.

이제 이 공식에 화폐의 운송비용을 포함하는 것에 더 이상의 어려움이나 더 이상의 요인—은행가와 교환 달러가 큰 비중을 두는 요인, 즉 필요할지도 모를 재(再)주조(re-coinage)로부터 발생하는 비용들—은 존재하지 않는다. 더 이상 자세하게 열거할 필요가 없는 이 모든 요인들은, 전신환율(cable rate) 등의 환율에 결합적 영향—그 영향의 결과 우리의 계산에서 양의 혹은 음의 수치로 포함되어야 할—을 미친다. 비록 동일한 경화(硬貨)들이 양 장소들에서 모두 법정통화인지는 상관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있을 수 있는 오해를 피하기 위해 우리가 여기에서 단지 동종의

화폐가 사용되고 있는 장소들 사이의 교환비율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다시 한 번 명시적으로 언급할 필요가 있다. 서로 다른 종류의 화폐들 사이의 교환비율의 문제처럼 지금 여기에서 논의하고 있는 문제와는 본질적으로 다른 문제들은 다음 장까지는 취급되지 않을 것이다.

2. 화폐구매력의 지역적 차이

 방금 설명한 지역 간 가격관계의 법칙과는 대조적으로 화폐 구매력의 지역적 차이에 대한 일반적 믿음이 존재한다. 화폐의 구매력이 같은 시점에서 서로 다른 시장에서 다를 수 있다는 단언은 계속되고 있고, 이 단언을 지지하려는 통계적 데이터들이 계속 제시되고 있다. 이 경우에서처럼 비전문가적 대중 심리에 깊이 뿌리박힌 경제적 의견도 별로 없을 것이다. 여행자들은 보통 개인적 관찰을 통해 획득한 단편적인 지식으로서 이런 의견을 고향으로 가지고 오는 습관이 있다. 20세기 초에 독일로부터 오스트리아에 오는 대부분의 방문객들은 독일에서의 화폐의 가치가 오스트리아에서보다 더 높다는 데 의심을 갖지 않았다. 우리의 가장 대표적인 상품화폐인 금의 객관적 교환가치가 세계 여러 곳에서 다른 수준을 가지고 있다는 잘못된 의견이 심지어 경제학 문헌에서조차 하나의 사실로 확립되어 유통되고 있다.¹⁵³⁾

153) Senior, *Three Lectures on the Cost of Obtaining Money*, pp.1ff.

우리는 이 의견의 어디에 오류가 있는지 이미 살펴보았고 여기에서 불필요하게 자세히 반복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그 오류란 경제재의 속성에서 위치적 요인의 설명을 생략한 것인데, 이런 개념들의 혼돈에 대해 비난받아야 할 것은 경제학적 문제를 조악한 물질주의로 개념화하던 과거의 유산, 즉 이런 개념의 혼동이다. 모든 단언된 화폐구매력의 지역적 차이들은 쉽게 이런 식으로 설명될 수 있다. 독일과 러시아에서의 화폐구매력의 차이를, 밀의 가격이 이 나라들에서 서로 다르다는 사실로부터 도출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왜냐하면 러시아의 밀과 독일의 밀은 서로 다른 두 종류의 재화를 대변하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우리가 관세창고 혹은 보세창고(excise warehouse)에 발이 묶인 재화, 그리고 이 재화와 기술적 의미에서는 동일한 종(種)이지만 관세 혹은 세금이 이미 지불된 재화, 이 두 재화를 경제학적 의미에서 동일한 종(種)의 재화에 속한다고 간주한다면, 어떻게 터무니없는 결론들에 도달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렇다면 우리는 화폐의 구매력은 빌딩에서 빌딩으로 옮길 때마다, 어떤 도시의 한 구역에서 다른 구역으로 옮길 때마다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가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물론 만약 상업적 용어를 유지하기를 선호하는 사람들이 재화의 외적 특성들에 따라 재화들의 종류를 구별하는 게 더 낫다고 본다면,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할 수는 없다. 용어상의 질문들에 대해 다투는 것은 한가한 일일 것이다. 우리의 관심사는 단어들이 아니라 사실들이다. 그러나 만약 우리의 의견으로는 별로 적합하지 않은 이런 형식의 표현이 채택된다면, 재화들이 당장 소비될 수

있는 곳에 위치하는지, 그 장소들의 차이에 근거한 구분을 충분히 감안하도록 유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 단지 운송비용을 감안하고 관세와 간접세를 감안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예를 들어 간접세의 효과—그것의 부담도 대개 이전될 수 있는—도 계산 속에 포함되어야 한다.

위에서 우리가 제시한 용어의 사용이 더 낫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우리의 용어가 더 분명하게 다음의 사실들을 강조하기 때문이다. 첫째, 화폐의 구매력이 세계를 통해 동일한 수준이 되는 경향성을 보인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둘째, 흔히 화폐의 구매력이 지역적으로 차이가 있다고 흔히 단언되지만, 그 차이의 거의 대부분은 각 지역에서 공급되고 수요되는 상품들의 질에서의 차이로 설명이 되고, 그 나머지 차이는 공급되고 수요되는 화폐의 질적 차이에 기인하는 작은 부분으로 거의 무시할 수 있을 정도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그 경향성의 존재 자체는 거의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그 경향성이 행사하는 힘과 중요성은 다양하게 추정되고 있으며, 여타 모든 상품과 마찬가지로 화폐가 언제나 가장 높은 가치를 가지고 있는 시장을 찾아 나선다는 과거 고전학파의 명제는 잘못된 것이라고 말해지고 있다. 비저는 이런 연관 속에서 교환에 개재된 화폐적 거래들은 상품거래들에 의해 유도된다고 말하였다. 그에 의하면, 화폐적 거래들은 부수적 움직임—단지 주요 움직임의 완성을 허용하는 데 필요한 정도까지만 진행되는—을 구성한다. 그러나 비저는 상품들의 국제적 이동은 오늘날에도 국내 교역에 비해 눈에 띌 정도로 작다고 선언한다. 그래

서 가격들의 이전된 국내 균형(transmitted national equilibrium of prices)이 유지되지 않고 무너지는 것은, 그 가격들이 국제가격인 상대적으로 소수인 상품들로 한정된다. 상대적으로 얼마 안 되는 상품들—그 가격이 국제가격인—에 대해서 깨어진다. 결과적으로 화폐의 이전된 가치는 여전히 대부분 예전만큼 중요하다. 생산과 노동의 국내적 조직화—오늘날 여전히 지배적인—대신에 완전한 세계적 조직화가 확립될 때까지 그것은 다르지 않을 것이다(예전만큼 계속 중요할 것이다). 그러나 완전한 국제적 조직화가 일어날 때까지는 긴 시간이 걸릴 것이다. 현재로서는 생산의 주요 요소인 노동은 여전히 모든 곳에서 국내적 제한규정들 아래 놓여 있다. 한 국가는 외국의 기술과 조직의 진보를 오로지 그 국민적 특성들이 허용하는 정도까지만 채택하며, 일반적으로 해외에서의 일의 기회를 쉽게 이용하지 않지만, 국가 안에서는 기업가들과 임금노동자들은 상당한 정도로 여기저기로 이동한다. 결과적으로 모든 곳에서의 임금들은 국내적 수준—그 수준에서 임금은 역사적으로 결정되고 있는데—으로 유지되며 그래서 비용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국내적으로 이 역사적 수준에서 결정된다. 그리고 대부분의 여타 비용요소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말할 수 있다. 전체적으로 보아, 화폐의 이전된 가치는 향후의 비용들과 가치들을 산출하는 사회적 계산들의 근거가 된다. 그동안 국제적 계약들은 여전히 국내 생산방법들을 최선의 세계수준으로 높일 정도로 충분히 강력하지 못했으며, 화폐의 이전된 국내 교환가치상의 차이를 없앨 정도가 되지 못했다.¹⁵⁴⁾

154) Wieser, "Der Geldwert und seine Veränderungen," p.531f.

약간은 너무 많이 생산비용이론적인 풍미를 풍기고 있으며 확실히 주관적 이론의 원리들과 화해될 수 없는 이 주장들에 동의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아무도 생산비용이 서로 다른 지역들에서 크게 다를 것이라는 사실에 대해 다투려고 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상품들의 가격과 화폐의 구매력에 영향을 행사한다는 점은 부정되어야 한다. 그 정반대의 결론이 가격이론의 원리들로부터 너무나 명백하게—즉, 어떤 특별한 증명을 추가적으로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날마다 시장에서 너무나 분명하게 실례로서 드러나고 있다—도출된다. 가장 값싼 공급을 찾는 소비자와 가장 높은 가격의 판매를 추구하는 판매자는 그 지역시장의 한계들로부터 가격을 해방시키려고 애쓴다는 점에서 서로 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다. 구매하려는 의사를 지닌 구매자들은, 구매하려는 재화의 가격이 해외에서 더 싸다면, 국내 생산비용에 대해 별 상관을 하지 않는다. (그리고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해외보다 더 높은 생산비용으로 생산하는 생산자들은 보호관세를 요구한다.) 서로 다른 국가들에서의 노동임금들의 차이는 상품들의 가격수준에 영향을 줄 수 없다는 사실은 고임금 수준을 지닌 국가들조차도 더 낮은 수준의 임금을 지닌 시장들에 상품을 공급할 수 있는 상황에 의해 가장 잘 증명된다. 기술적으로 동일한 상품들의 지역적인 가격격차는 한편으로는 소비를 위해 이들을 준비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운송비용, 소매비용 등)의 차이에 의해 설명이 되며, 다른 한편으로는 상품과 인간의 이동성을 제한하는 물리적인 그리고 법적인 장애물들에 의해 설명이 된다.

3. 생활비의 지역적 차이

 화폐의 구매력의 지역적 격차에 대한 단언과 생활비의 지역적 격차에 대한 광범한 믿음 사이에는 어떤 연계가 존재한다. 어떤 지역에서는 다른 지역들에서보다 더 싸게 ‘살 수’ 있다고 가정되고 있다. 우리가 오스트리아 크라운이 1913년에 85페니히보다 더 가치가 작았다고 말하든지, 혹은 독일에서보다 오스트리아에서 ‘생활’이 더 어렵다(비싸다)고 말하든지, 두 가지의 말은 동일한 것으로 귀착된다고 가정할지 모른다. 그러나 이것은 정확하지 않다. 두 명제는 결코 동일한 것이 아니다. 한 곳에서의 생활비가 다른 곳보다 더 비싸다는 의견은 결코 화폐의 구매력이 다르다는 것을 내포하지 않는다. 화폐와 여타 경제재들의 교환비율이 완전히 똑같다 하더라도, 서로 다른 장소에서 어떤 개인은 같은 수준의 만족을 획득하는 데 동일하지 않은 비용이 드는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 특정 장소에서의 주택이, 동일한 개인이 다른 곳에서라면 의식하지 않았을 욕구들을 일깨우는 경우에 특히 그럴 개연성이 크다. 그와 같은 욕구들은 그 속성상 사회적일 수도 물리적일 수도 있다. 그래서 부유계층의 영국인은, 해외에서는 일련의 사회적 의무들을 완수할 것이 요구될 것이기 때문에 아마도 자국에서 생활비를 덜 쓰면서 살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대도시에서 사는 것이 시골에서 사는 것보다 생활비가 더 들 것이다. 너무나 많은 향락의 가능성이 있는 시내 중심가에서 가깝기에 시골에서라면 알지 못했을 욕망과 욕구들을 자극할 것이기 때문이다. 극장, 콘서트, 예술품 전

시장, 그 외 오락을 즐길 수 있는 장소를 자주 방문하는 사람들은—자연히 이런 점을 빼고는 유사한 상황에서 살지만—이런 유흥 없이 사는 사람들에 비해 더 많은 돈을 지출할 것이다. 인간의 물리적 욕구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말할 수 있다. 열대지역에서 유럽인들은, 온대지역에서는 필요하지 않았을, 건강보호를 위한 일련의 예방조치들을 취해야 한다. 그 기원이 지역적 상황에 달려 있는 그런 모든 욕구들은 그 충족을 위해 일정한 스톡의 재화들—다른 조건들이었다라면 다른 욕구들의 충족에 쓰였을—을 필요로 하며, 결과적으로 그것들은—주어진 스톡의 재화들이 제공하는—만족의 정도를 감소시킨다.

그래서 서로 다른 지역에서 생활비가 다르다는 언급은 단지 동일한 개인이 서로 다른 장소에서 동일한 스톡의 재화들로부터 동일한 정도의 만족을 확보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할 뿐이다. 우리는 이 현상에 대한 하나의 이유를 방금 들었다. 그러나 이 이외에도, 생활비의 지역적 격차에 대한 믿음이 또한 화폐구매력의 지역적 차이에 대한 언급에 의해 지지되고 있다. 이 견해의 부정확성을 증명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다. 독일에서의 화폐의 구매력과 오스트리아에서의 화폐의 구매력의 차이를 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이는 마치 산 정상에 있는 호텔에서 부과하는 가격과 알프스의 골짜기에서 부과하는 가격들 사이의 차이들로부터 화폐의 객관적 교환가치가 두 상황에서 다르다고 결론을 내리고 화폐의 구매력이 해발 고도에 반비례하여 변한다는 것과 같은 명제를 제안하는 것과 다름없다. 화폐의 구매력은 모든 곳에서 동일하다. 단지 공급된 상품들이 동일하지 않을

뿐이다. 그들은 경제적으로 의미가 있는 하나의 질적 측면—그 것들을 바로 소비할 수 있는 그 장소의 위치—에서 다르다. 그러나 비록 동일한 종류의 화폐가 사용되는 어떤 한 단일한 시장 지역의 모든 곳에서 완전히 유사한 구성을 지닌 경제체들과 화폐 사이의 교환비율들이 언제나 서로 같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모든 외관상의 예외들은 그 상품들의 공간적 성격의 차이로 설명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위치(位置)상의 차이로 인해 (그래서 경제적 질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상품들의 가격격차는 어떤 상황들 아래에서는 생활비의 차이가 존재한다는 단언에 대한 주관적 정당화가 될 수도 있다. 건강상의 이유로 자발적으로 칼스바트(Karlsbad)를 방문한 사람은 주택과 음식의 높은 가격으로부터 칼스바트에서 다른 곳에서도 같은 정도의 만족을 동일한 수량의 화폐로부터 얻기는 불가능하며, 그래서 결과적으로 칼스바트의 생활비가 비싸다고 추론하는 것은 잘못이다. 이 결론은 가격들이 비교되고 있는 상품들의 질적 측면에서의 차이를 감안하지 않고 있다. 그 방문객이 칼스바트에 온 것은 바로 이런 질적 차이로 인한 것이고 바로 그것이 그에게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그가 칼스바트에서 동일한 만족에 대해 더 많이 지불해야 한다면, 이것은 그가 그 상품들에 대해 지불하면서 치료효과가 있는 온천에 바로 인접한 곳에서 그것들을 누릴 수 있게 해 주는 것에 대한 가격을 또한 지불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의 직업상 칼스바트에 단지 묶여 있을 뿐인 사업가, 노동자, 관리들로서는 경우가 다르다. 온천과의 근접성은 그들 욕구들의 만족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으며 그래서 이로 인해 그들

이 구매하는 모든 재화와 서비스에 대해 추가적인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것은, 이로부터 아무런 추가적인 만족을 얻지 못하고 있으므로, 그들에게 그렇지 않았더라면 누릴 수 있었을 가능성이 축소되는 것처럼 비친다. 만약 그들이 그들의 생활수준을 인근 도시에서 동일한 지출로 도달했을 생활수준과 비교한다면, 그들은 온천수 근방에서의 생활비가 다른 곳들에서보다 정말 더 비싸다는 결론에 도달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다른 곳과 동일한 생활수준을 달성할 수 있을 만큼 거기에서 충분히 높은 화폐소득을 확보할 수 있다고 믿는 경우에만 그 값비싼 온천수 근방으로 그들의 활동무대를 옮길 것이다. 그러나 도달 가능한 만족의 기준들을 비교함에 있어서 온천수 근방에서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다는 이점이 그들의 눈에 아무런 가치가 없어 보일 때는 이를 감안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종류의 임금, 완전한 이동성의 가정 아래에서는, 여타 생활비가 싼 지역들에서보다 온천수 지역에서 더 높을 것이다. 이 사실은 계약임금들에 적용되는 한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것은 공무원 봉급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사실이다. 정부는 ‘생활비가 비싼’ 지역에서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 피고용인들에 대해, 이들이 생활비가 싼 지역에서 생활할 수 있는 다른 공무원들과 비슷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특별 보너스를 지불한다. 노동자들도 마찬가지로 비싼 생활비에 대해 더 높은 임금으로 보상받아야 한다.

이것은 또한 “생활비가 독일에서보다 오스트리아에서 더 든다.”는 문장—두 나라에서 화폐의 구매력에 차이가 없다고 하더

라도 어떤 의미를 지닌 문장—의 의미에 대한 실마리가 된다. 두 지역에서의 가격의 격차는 동일한 속성의 재화들에 관한 것이 아니다. 동일한 재화라고 가정된 것들은 실은 본질적 측면에서 서로 다르다. 그들은 서로 다른 장소에서 소비에 가용한 상태에 있다. 한편으로는 물리적 요인들,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적 요인들이 이 구분으로 하여금 가격의 결정에 결정적 중요성을 가지게 만든다. 오스트리아인으로서 오스트리아인들 사이에서 오스트리아에서 일할 기회를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오스트리아에서 일하도록 양육되었고 돈을 벌고 있고 언어적 장벽, 국내 관습, 경제적 조건 등으로 인해 다른 곳에서는 생활비를 벌 수 없는 사람—이 국내와 해외 상품가격들을 비교하여 국내에서 생활비가 더 비싸다고 결론을 내리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는 그가 지불하는 모든 가격의 일부가 오스트리아에서 그의 만족을 충족시킬 수 있는 특권에 대해 지불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주거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독립적인 연금수령자는 그의 출생국가에서 동족들 사이에서 약간은 더 제한된 만족을 주는 삶을 택할지, 아니면 외국에서 이방인들 사이에서 외관상 더 풍성한 만족을 주는 삶을 택할지 결정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그러나 대개의 사람들은 그와 같은 선택을 하는 수고에서 면제된다. 대개는 고국에 머물지 않을 수 없고 이민은 선택의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이다.

요약하자면, 상품과 화폐 사이에 존재하는 교환비율은 모든 곳에서 동일하다. 그러나 사람들과 그들의 욕구는 어디에서나 동일하지 않다. 상품들도 마찬가지로 그렇지 않다. 오로지 이

구분들이 무시될 경우에만, 화폐의 구매력의 지역적 격차를 언급할 수 있거나 다른 지역에 비해 특정 지역의 생활비가 비싸다고 말할 수 있을 뿐이다.

제10장 서로 다른 종류의 화폐 사이의 교환 비율

1. 서로 다른 종류의 화폐가 공존할 이중적 가능성

두 종류의 화폐 사이의 교환비율의 존재는, 경제주체들이 여러 화폐들을 동시에 교환의 공통된 매개물로 함께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제로 한다. 각 지역은 그 지역이 화폐로서 사용하는 상품을 주고, 그 대신 다른 지역에서 화폐로 사용하는 상품을 획득한 다음, 그 획득된 화폐적 상품을 화폐가 아닌 방식으로 사용하고 있는, 그러나 이 이외에는 전혀 서로 연계되지 않은 두 경제지역을 상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사례는 오로지 화폐적 고용으로부터만 발생하는 서로 다른 종류의 화폐들 사이의 교환비율을 보여 주는 경우는 아니다. 만약 우리의 탐구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이 장(章)에서도 우리는 상품화폐가 만들어진 재료의 비화폐적 용도들을 무시하거나, 혹은 적어도 비화폐적 용도는 오로지 우리의 문제와 연결된 모든 과정들을 완전히 명확하게 하기 위해 비화폐적 용도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 곳에서만 그렇게 할 것이다. 이제 화폐적 재료의 산업적 용도의 효과와는 별개로, 두 종류의 화폐들 간의 교환 비율은 오로지 그 두 종류가 동시에 병렬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 한해서만 확립될 수 있다는 단언은 통상적인 견해가 아니다. 말하자면 지배적인 견해는 다음의 두 가지 경우를 구별한다. 먼저 둘 혹은 그 이상의 종류의 국내 화폐가 병렬적 기준에서 함께 존재하는 경우, 그리고 다음으로 국내에서 배타적으로 사용되는 화폐가 해외에서 사용되는 화폐와 다른 종류인 경우이다. 비록 두 종류의 화폐들 간의 교환비율의 결정에 관한 한, 두 경우는 아무런 이론적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통상적인 견해는 이처럼 두 가지 경우들을 별개로 다루고 있다.

만약 어떤 한 금본위 국가와 은(銀)본위인 다른 국가가 상업적 거래관계를 가지고 있고, 특정 경제재들에 대해 하나의 통합된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면, 교환의 공통된 매개물은, 금본위제 국가의 주민들의 경우에는 이것이 금이고, 은(銀)본위 국가의 주민들의 경우에는 이것이 은이라고 말한다면, 이것은 명백히 옳지 않다. 이와는 반대로, 경제학적 관점에서는 금과 은 둘 다 각 지역의 화폐로 간주되어야 한다. 1873년까지 (영국은 금본위제, 독일은 은본위제였지만) 영국 상품을 구매하려는 독일 사람들로서는 금은 교환의 매개물이었으며, 이 점은 독일 상품을 구매하려는 영국 구매자들에게 은이 교환의 매개물이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옳았다. 영국의 철강제품과 자신의 곡물을 교환하기를 원하는 독일 농부는 금과 은이라는 수단이 없이는 그렇게 할 수 없었다. 독일인이 영국에서 금을 받고 판매하고 다시 금으로 구매하거나, 영국인이 독일에서 은을 받고 판매하고 은으로 구매하는 예외적인 경우들이 발생할지 모른다. 그러나 이것은 두 지역의 거주자들로서는 여전히 두 귀금속의 화폐적 특성을 더 분명하

게 보여 주는 것일 뿐이다. 한번만 사용된 화폐 혹은 여러 번 사용된 화폐가 교환의 매개물로서 이용되었는지는 상관없이, 여기에서 유일하게 중요한 점은 국제무역 관계의 존재가 관련된 단일 지역들 각각의 화폐가 모든 여타 지역들에서도 또한 화폐가 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사실이다.

국내 거래에서 주요 역할을 수행하는 화폐가 대부분의 교환들에서의 수단이며, 소비재의 소비자들과 판매자들 사이의 거래에서 그리고 대부거래들에서 지배적이며, 법률에 의해 법정화폐로 인정받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상대적으로 거래에서 별로 사용되지 않는 화폐가 소비자들의 구매에서 소비자들에 의해 거의 사용되지 않으며, 대부계약의 수단으로 기능하지 않으며 법정화폐가 아니라는 사실, 이 두 가지 사실 사이에는 중요한 차이점들이 존재하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 통상적 견해에서는 전자(前者)만이 국내 화폐이며 후자는 외국 화폐이다. 비록 우리가 현재 몰두하고 있는 문제를 이해하는 길을 차단하지 않으려면, 우리는 이런 구분을 받아들일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른 맥락에서는 이 구분이 커다란 중요성을 지니고 있음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화폐의 객관적 교환가치의 변동의 사회적 효과를 다루는 장(章)에서 이 문제로 다시 돌아올 것이다.

2. 서로 다른 종류의 화폐 사이의 정태적 혹은 자연적 교환비율

 둘 혹은 그 이상의 서로 다른 종류의 화폐 사이의 교환비율

에 대해서는, 그 화폐들이 동일한 국가에서 함께 동시에 사용되든지(병렬기준) 혹은 외국 화폐와 국내 화폐로 통상 불리고 있는 상관없이, 결정적인 것은 개별 경제재들과 개별 종류들 사이의 교환비율이라는 점이다. 서로 다른 종류의 화폐가 그것들 각자와 다른 경제재들 사이에 존재하는 교환비율에 상응하는 비율로 교환된다. 만약 1kg의 금이 m kg의 특정 종류의 상품과 교환되고 1kg의 은이 동일 종류의 재화 $m/15.5$ kg과 교환된다면, 금과 은의 교환비율은 15.5에서 결정될 것이다. 만약 어떤 교란이 두 종류의 화폐 사이의 이 비율—우리가 정태적 혹은 자연적 비율이라고 부를—을 변경하는 경향이 있다면, 이것을 다시 확립시키려는 경향이 있는 자동적인 힘들이 작동하기 시작할 것이다.¹⁵⁵⁾

각국이 다른 나라에서 사용되는 것과는 다른 어떤 한 종류의 화폐만으로 국내 교역을 하고 있는 두 국가의 경우를 고려해 보자. 만약 서로 다른 통화들을 가진 두 지역의 주민들이, 예전에는 상품들을 화폐의 개입 없이 직접 교환하고 있다가 이제 거래에서 화폐를 사용하기 시작한다면, 그들은 두 종류의 화폐의 교환비율의 근거를 각 종류의 화폐와 상품들 사이의 교환비율에 둘 것이다. 금본위제 국가와 은본위제 국가가 1미터의 옷감이 1부셀의 밀로 교환된다는 거래조건으로 직접 옷감과 밀을 교환해 왔다고 해 보자. 원산지 국가의 옷감의 가격이 1미터당 금 1

155) 리카도로부터 유래된 위에 제시된 이론은 오늘날 카셀(Cassel)에 의해 특별히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다. 그는 그 정태적 교환비율에 대해 구매력 패리티라는 명칭을 사용한다. 다음을 참고. Cassel, *Money and Foreign Exchange After 1914*(London, 1922), p.181f.

그램이고, 밀의 가격은 부셸당 은 15그램이라고 해 보자. 만약 국제무역이 화폐적 기초로 이루어진다면, 은으로 표시된 금의 가격은 15에서 확립되어야 한다. 만약 더 높은 수준에서, 예를 들어 16에서 금의 가격이 정해졌다면, 화폐수단을 통한 간접교환은 밀의 소유자의 관점에서는 직접교환에 비해 불리했을 것이다. 밀 1부셸로 직접교환에서라면 1미터 전체를 얻었을 것인데 비해 간접교환에서는 단지 15/16 미터의 옷감을 얻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만약 금의 가격이 15보다 낮은 어떤 수준에서, 예컨대 은 14그램에서 정해지면, 유사한 불리함이 옷감의 소유자에게 발생할 것이다. 이것은 물론 서로 다른 종류의 화폐 사이의 교환비율이 실제로 이런 방식으로 진전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이것은 역사적인 설명이 아니라 논리적인 설명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금과 은 두 귀금속에 있어, 그들 간 상호 교환비율은 화폐적 지위의 진전과 함께 서서히 정착되었다.

만약 두 지역들의 거주자들 사이에 직접교환(바터)의 관계 이외에는 아무런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어느 한 쪽 지역민에 유리한 그런 균형은 발생할 수 없다. 계약 당사자 중 일방에 의해 제시된 상품과 서비스 수량의 객관적 교환가치들은, 현재재화 혹은 미래재화가 관련된 것인지와 상관없이, 동일하여야 한다. 각각은 다른 것의 가격이다. 이 사실은 비록 그 교환이 더 이상 직접적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교환의 하나 혹은 그 이상의 매개물을 통해 이루어지더라도 결코 변하지 않는다. 재화와 서비스의 탁송에 의해서가 아니라 화폐의 이전에 의해 청산되는 지불수지 흑자는 오랫동안 단순히 국제무역의 결과로서만 간주

되어 왔다. 이런 견해 속에 내재된 오류를 드러낸 것은 고전학과 경제학의 위대한 업적들 가운데 하나이다. 고전학과 경제학은 국제적인 화폐이동은 교역상태의 결과가 아님을 입증하였다. 국제적인 화폐이동은 유리하거나 불리한 무역수지의 결과가 아니라 원인이라는 것을 입증하였다. 귀금속들은 개인들 사이에, 그래서 국가들 사이에 개인들의 화폐수요의 강도에 따라 분배되어 있다. 그 어떤 개인이나 국가도 필요한 것보다 더 적은 화폐를 가지고 있다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 공동체가 필요로 하는 수량을 가지도록 보장하기 위해 화폐의 국제적인 이동을 규제하려는 정부 조치들은 곡물 혹은 철강 혹은 또 다른 것들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한 간섭만큼이나 불필요하다. 이 주장은 중상주의 이론에 치명적 타격을 가하였다.¹⁵⁶⁾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가들은 여전히 화폐의 국제적 분포의 문제에 크게 영향을 받고 있다. 수백 년 동안 중상주의에 의해 체계화된 마이다스(Midas) 이론은 상업정책에 관한 조치를 취할 때 정부들이 따른 규칙이었다. 흄, 스미스, 리카도의 저술에도 불구하고 예상보다 훨씬 깊게 이것이 여전히 사람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다. 불사조처럼, 중상주의는 그것이 불탄 재료부터 다시 또 다시 소생하고 있다. 그리고 정말 객관적 주장으로 이를 극복하기는 거의 불가능할 정도이다. 왜냐하면 이 이론을 따르는 제자들 속에는 엄청난 수의 반(半)교육된 사람들이 있는데,

156) Senior, *Three Lectures on the Transmission of the Precious Metals from Country to Country and the Mercantile Theory of Wealth* (London, 1828), pp.5ff.

이들은 아무리 간단한 주장이더라도 이 이론에 반하는 주장에 대해서는, 특히 그 주장이 그들로부터 오랫동안 소중히 간직한 환상을 박탈하려고 위협하는 경우에는, 전혀 수긍하려 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일반 대중의 (비전문적) 의견들이 입법가들, 언론들—심지어 기술적인 저널들—그리고 사업가들의 경제정책에 대한 논의에서 지배적일 뿐 아니라, 과학적 문헌에서도 여전히 대부분의 공간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그저 개탄스러울 뿐이다. 이에 대한 비판은 신용수단들의 속성과 가격들의 결정과 관련된 중요성에 관한 불명확한 개념들에 쏟아져야 한다. 처음에는 영국에서 그런 다음 여타 모든 국가들에서 신용(은행권)지폐의 발행을 제한하는 것을 지지하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든 이유들은 현대 저술가들에 의해 결코 제대로 이해된 적이 없었다. 그들은 이 이유들에 대해 단지 이차적 혹은 삼차적으로 간접적으로만 희미하게 알고 있었을 뿐이다. 그들이 일반적으로 그것들의 보유를 일반적으로 탄원하거나 원리가 그대로 보존된 방식으로만 수정을 요구한다는 사실은, 단지 그들이 전체적으로 스스로를 의심할 바 없이 정당화해 왔던 제도를 어떤 시스템—그 시스템의 효과들을 그들이 (그들에게는 시장현상은 풀 수 없는 수수께끼 같았는데) 자연스럽게 가장 잘 예견할 수 없었던—으로 교체하기를 꺼리는 마음을 표현한 것일 뿐이다. 이 저술가들이 오늘날 은행 정책에서 동기를 탐색할 때, “귀금속의 국내 스톡의 보호”라는 슬로건에 의해 특징지어지는 동기 이외에는 다른 아무 것도 발견할 수 없었다. 우리는 이 책의 제3부에서 은행권의 발행을 제한하는 은행법의 진정한 의미를 다룰 것이므로, 이 견해들에 대해

서 여기에서는 좀 더 가볍게 넘길 수 있을 것이다.

화폐는 이자율이 가장 높은 곳으로 흘러 들어가지 않는다. 화폐를 끌어들이는 국가가 최고 부국이라는 것도 사실이 아니다. 개별 경제주체들 사이의 배분이 그 한계효용에 달려 있음은 모든 여타 경제재에서와 마찬가지로 화폐에 대해서도 사실이다. 먼저 영토나 국가와 같은 모든 지리적 그리고 정치적 개념들로부터 완전히 추상화하고 화폐와 상품들이 하나의 통합된 시장 영역 안에서 완전히 자유롭게 이동될 수 있는 상태를 상상해 보자. 더 나아가 청구권의 청산이나 상호 균형에 의해 상쇄되지 않는 모든 지불들이 신용수단의 양도가 아니라 화폐의 이전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가정해 보자. 이 가정은 다시, 비록 신용수단이라는 우리의 정확한 개념의 도움으로 영국 통화학파의 애매성과 단점들을 회피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들의 ‘순수한 금속통화’(purely metallic currency)의 가정과 유사하다. 우리들의 이 가정에 상응하는 어떤 상황에서는, 모든 경제재—물론 화폐를 포함하—는, 어떤 한 개인이 취할 수 있었던 더 이상의 교환행위가 그에게 어떤 이득, 어떤 주관적 가치의 상승도 가져다주지 않을 때, 개인들 사이의 균형의 위치가 도달되는 방식으로 배분되는 경향이 있다. 그와 같은 균형에서는, 화폐 총 스톡의 개인들 간 배분은 상품들의 총 스톡의 배분에서와 정확하게 마찬가지로 개인들이 화폐에 대한 각자의 수요를 시장에서 표현하는 강도에 따라 이루어진다. 화폐와 여타 경제재들 사이의 교환비율에 영향을 미치는 힘들이 교란될 때마다 이에 상응하는 변화가 화폐의 분배에 새로운 균형이 도달될 때까지 나타나게 된다.

이것은 개인들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통합된 특정 지역의 모든 개인들에 해당되는 사실이다. 어떤 국가가 보유하는 재화들과 이 국가가 수요하는 재화들이란 단지 그 국가를 구성하는 모든 사적·공적 경제주체들—그 속에 정부가 물론 중요하고 지배적 위치 이상을 차지하고 있지만—이 보유하는 재화들과 수요하는 재화들의 총합이다.

무역수지는 화폐이동의 원인이 아니라 무역과 동시에 일어나는 부수물(附隨物)일 뿐이다. 왜냐하면 만약 우리가 화폐거래들의 형식이 숨기고 있는 재화의 교환이라는 속성의 베일을 벗기고 내부를 들여다보면, 국제무역의 경우에조차 상품과 상품들이 화폐라는 도구를 통해 교환되고 있음이 명백하게 드러난다. 한 사람의 개인이 하고 있는 것과 똑같이 어떤 한 경제공동체 속의 (집합적으로 취급된) 모든 개인들도 최종 분석을 해 보면 화폐를 획득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화폐가 아닌 경제재를 획득하고자 함을 알 수 있다. 지급수지의 상태가 (한 국가로부터 다른 국가로 그 국가의 각 주민들 측에서 화폐의 가치에 대한 추정이 변하지 않은 상태에서) 화폐의 이동을 불가피하게 하는 그런 상황이라면, 균형을 회복하려는 (시장) 작동들이 유발된다.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보다 더 많은 돈을 수령한 사람들은 그 잉여분을, 생산재 혹은 소비재를 구매하든, 가능한 한 빨리 서둘러 지출할 것이다. 다른 한편 자신이 보유한 화폐의 스톡이 그들이 필요한 수량에 비해 모자라는 사람들은 구매를 줄이든지 아니면 소유한 상품들을 처분해서 화폐 스톡을 증가시키려고 할 것이다. 이 이유들로 인해 발생하는 당해 국가들의 시장들에서 가격변동들은 언

제나 지불수지의 균형을 회복시킬 거래들을 야기할 것이다. 화폐수요의 조건들에서의 변동에 의존하지 않는, 지불수지의 흑자 혹은 적자는 단지 일시적일 수 있을 뿐이다.¹⁵⁷⁾

그래서 화폐의 국제적 이동은, 그것들이 일시적 성격이어서 곧 반대 방향으로의 이동에 의해 그 효과가 없어지는 것이 아닌 한에 있어서는 언제나 화폐에 대한 수요의 변화에 의해 야기된 것이다. 이제 이로부터 도출되는 결론은 신용수단이 사용되지 않는 나라는 결코 여타 국가들로 그 나라의 화폐 스톡을 잃을 우려에 빠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화폐의 부족과 화폐의 초(超)과잉은 한 개인에 있어서나, 한 국가에 있어서나 더 이상 영구적인 경험이 될 수 없다. 궁극적으로 그것들은 동일한 경제 재화를 공통된 교환의 매개물로 사용하는 모든 경제주체들 사이에 일관되게 퍼져나가며, 자연스럽게 화폐의 객관적 교환가치에 대한 효과들은 마침내 모든 경제주체들에 대해 같은 방향일 것이다. (화폐의 객관적 교환가치에 대한 효과는 화폐 스톡과 화폐수요 간 조정을 초래한다.) 어떤 한 국가 안에서 유통되는 화폐수량을 증가시키는 경제정책 조치들은, 그 화폐가 다른 국가들에서도 유통되는 한, 그리고 오로지 이 조치들이 화폐에 대한 상대적 수요를 변화시키는 경우에만 성공적일 수 있다. 신용수단의 사용으로 근본적으로 변화한 것은 아무 것도 없다. 신용수단의 사용에

157) Ricardo, "Principles of Political Economy and Taxation," in *Works*, ed. McCulloch, 2d ed.(London, 1852), pp.213ff.; Hertzka, *Das Wesen des Geldes*(Leipzig, 1887), pp.42ff.; Kinley, *Money*(New York, 1909), pp.78ff.; Wieser, "Der Geldwert und seine Veränderungen," *Schriften des Vereins für Sozialpolitik* 132: 530ff.

도 불구하고 협의의 화폐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지 않고) 그대로 인 한, 화폐에 대한 수요는 마찬가지로 방식으로 자신을 드러낼 것이다.

국제무역의 고전학파의 원리에는 많은 공백들이 존재한다. 그 원리는 국제교역 관계들이 대개 현재재들의 거래로 한정되고 있을 때 구축되었다. 그래서 그 주요 참조대상이 그런 재화들이었으며, 서비스의 국제적 거래 가능성과 현재재화를 미래재화로 교환할 가능성은 설명에서 제외되어 있었음은 결코 놀랄 일이 아니다. 여기에서 필요한 확장과 수정 작업은 다음 세대에 남겨졌는데, 이 현상들에게도 적용될 동일한 원리를 일관되게 적용하기만 하면 되었기 때문에 그 작업은 한층 더 용이할 수 있었다. 고전학과 원리는 국제 금속화폐에 의해 제시된 문제들의 부분에 남겨졌다. 신용화폐가 내용이었던 부분은 만족스럽지 못했으며 이 결함은 아직 완전히 제거되지 못하고 있다. 이 문제는 너무나 화폐체제의 기술적(technical) 관점에서 다루어진 반면, 재화의 교환이론의 관점에서는 별로 다루어지지 못했다. 만약 후자의 관점이 채택되었더라면, 화폐의 운송에 의해 수정될 필요가 있을 무역수지의 발생 없이 서로 다른 통화를 지닌 두 지역 사이의 무역수지는 항상 균형에 있을 것이라는 명제에 대한 탐구를 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¹⁵⁸⁾ 만약 우리가 금본위제 국가와 은본위제 국가를 예로 든다면, 한 국가의 화폐가 다른 국가에서 비화폐적 용도에 사용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을

158) 만약 해외화폐가 그 평가절상의 예상에 따라 획득된다면, 일시적인 교란은 가능하다.

것이지만 그와 같은 가능성은 자연스럽게 배제되었음에 틀림없다. 법정화폐(fiat money)를 가진 두 국가들 사이의 관계들은 그런 연구를 위해 택할 수 있는 최선의 사례일 것이다. 만약 금속화폐가 사용되고 있다고 가정함으로써 단지 우리의 사례를 더 일반화하고자 한다면, 금속화폐의 화폐적 사용만이 고려되어야 한다. 이렇게 되면 재화와 서비스들은 단지 다른 재화와 서비스들로 지불될 수 있을 뿐임이 즉각적으로 명백해진다. 그래서 최종적 분석을 해 보면 (재화와 서비스는 결국 여타 재화와 서비스로 지불되기 때문에) 화폐로의 지불에 관련된 질문은 더 이상 존재할 수 없음도 명백하다.

제11장 화폐의 객관적 교환가치와 그 변화의 측정 문제

1. 문제의 역사

☺ 화폐의 객관적 교환가치와 그 변화를 측정하는 문제는 그 중요성에 비해 훨씬 더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만약 이 문제와 관련해 만들어진 모든 항목의 수치, 도표, 곡선이 그 의도를 수행할 수 있었다면, 이를 작성하기 위해 지출된 엄청난 노동력이 헛되지 않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사실 이런 노력들로부터 기대된 것은 바로 화폐의 객관적 교환가치의 문제와 연결된 어려운 문제의 해결이었다. 그러나 그런 도움을 받기를 기대할 수 없다는 사실은 그 방법들이 발견된 직후 이미 너무나 잘 알려지고 있다.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지수를 계산하는 방법의 개선은 여전히 가장 열정적으로 추구하고 있다. 그리고 이 방법들이, 다른 경제연구에는 그렇지 않았더라면 부인되는 상당한 평판을 달성할 수 있었다. 이런 사실들은 수수께끼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이 사실은 인간 정신의 특이성을 감안하면 설명이 가능해진다. 뤼케르트(Rückert)의 『브라만의 지혜』(*Weisheit des Brahmanen*)에 나오는 왕처럼, 비전문가는 언제나 과학적 연구의 결과를 몇 마

디의 말로 요약하는 공식을 찾는 경향이 있다. 그와 같은 요약으로 가장 간단하면서 가장 충만한 것은 바로 숫자로 된 것이다. 그래서 속성상 수치적 요약이 가능하지 않는 경우에서조차 간단한 수치적 언급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 사회과학 연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결과들조차 대중들의 관심을 일깨우지 못하는 데 비해, 어떤 수치들도 이들의 관심을 일깨운다. 사회과학의 역사는 일련의 낱자들이 되고, 사회과학의 경제학은 통계적 데이터의 수집이 된다. 문외한들이 경제학에 대해 가장 많이 제기하는 반대 주장은 바로 경제학적 법칙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런 반대에 대응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지면, 그런 법칙의 사례를 지적하고 설명하라는 주문이 거의 예외 없이 이루어진다. 이런 주문은, 시스템들의 한 부분이, 비록 그에 관한 연구가 전문가 측의 수년의 사고들을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단 몇 분 안에 초보자에게도 이해되도록 만들 수 있다고 오해하는 데서 비롯된다. 통계 조각들을 들먹거리야 경제이론가들은 이런 종류의 질문들 앞에서 그의 위신을 지킬 수 있다.

경제학에서 위대한 이름들은 다양한 체계의 지수와 연상되고 있다. 사실 이 특별하게 어려운 문제에 최선의 두뇌들이 매력을 느끼는 것은 자연스런 일이었다. 그러나 결과는 허망했다. 자세히 검토해 보면 우리는 다양한 지수 방법들의 발명자들이 스스로 얼마나 그들의 시도들을 중요하지 않게 여겼는지, 일반적으로 얼마나 공정하게 그런 방법들의 중요성을 추정할 줄 알았는지 파악할 수 있다. 화폐이론과 화폐정책의 구체적 과제들을 수행하기 위해 얼마나 이런 지수들이 무용한지 보여 주는 수고를 자청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그 지수방법들을 창안했던 바로 그 사람들의 저술들로부터 자신의 무기를 대부분 고를 수 있을 것이다.

2. 문제의 속성

 화폐단위의 객관적 교환가치는 그 어떤 개별 상품의 단위로도 표현될 수 있다. 우리가 여타 교환 가능한 재화들의 화폐가격을 말하는 습관이 있는 것처럼 정확하게 마찬가지로, 우리는 역으로 화폐의 상품가격(commodity price of money)을 말할 수 있으며, 화폐로 교환되는 상품들의 수만큼 많은 화폐의 객관적 교환가치의 표현이 존재할 수 있다. 그러나 이 표현들은 우리에게 특별히 알려 주는 바는 없다. 그 표현들은 우리가 풀고자 하는 의문들에 대해 해답을 제공하지는 않는다. 화폐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측정하는 문제에는 두 부분이 존재한다. 첫째, 우리는 화폐의 객관적 교환가치의 변동이라는 사실을 수치적으로 보여 주어야 한다. 그리고 난 다음, 화폐측면에 놓여 있는 화폐의 구매력의 변동의 증거를 생산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을 특별히 참고하면서, 우리는 특정한 가격의 이동들의 원인들에 대한 수량적 검토를 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관한 질문에 대답하여야 한다.¹⁵⁹⁾


159) Following Menger를 따라서 우리는 이 두 문제 중 첫 번째 문제를 화폐의 the *äussere* objective exchange value의 측정 문제, 두 번째 문제를 화폐의 *innere* objective exchange value 측정의 문제로 부를 것이다. 제8장 각주 25) 참고.

첫째로 언급한 문제가 관계되는 한에 있어서는, 그 해결은 불변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지닌 재화나 재화들의 복합체의 존재를 가정해야 한다는 점은 자명하다. 그와 같은 재화들이 상정될 수 없다는 사실은 더 이상 자세히 밝힐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그와 같은 종류의 재화가 존재를 상정하는 것이 가능한 것은 오로지 모든 재화들과의 모든 교환비율들이 변화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야 하기 때문이다. 그 시장의 교환비율들이 근거하고 있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기초들을 가지고서는, 이 가정은 결코 재화들의 자유로운 교환에 근거하고 있는 사회질서에서는 결코 사실일 수 없다.¹⁶⁰⁾

어떤 것을 측정한다는 것은, 어떤 하나의 수량이 다른 수량에 대한—불변의 혹은 불변이라고 가정된—비율을 결정하는 것이다. 측정하고자 하는 그 속성의 불변성, 혹은 적어도 그와 같은 불변성 가정의 정당성은 모든 측정의 필수조건(*sine qua non*)이다. 오로지 이 가정이 허용될 수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측정의 대상인 변동의 정도를 결정할 수 있다. 그래서 만약 측정하는 척도와 측정될 대상 사이의 비율이 변화하면, 이것은 후자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원인들이 언급될 수 있을 뿐이다. 화폐의 객관적 교환가치에 발생하는 두 가지 종류의 변화를 측정하는 문제는 동행한다. 만약 그 하나가 해결 가능하다면 다른 것도 해결할 수 있다. 그 하나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하면 이는 또한 다른 것도 해결할 수 없다는 증명이 된다.

160) Menger, *Grundsätze der Volkswirtschaftslehre*, 2d ed.(Vienna, 1923), pp.298ff.

3. 지수를 계산하는 방법들

 지금까지 화폐의 객관적 가치를 측정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루어진 거의 모든 시도들은, 만약 대단히 많은 수의 상품들의 가격동향들이 특별한 계산방법에 의해 결합된다면, 그 가격동향들의 결정요인들의 상품 측면에 작용하는 효과들이 대개 상쇄되며 결과적으로 그와 같은 계산이 가격동향들의 그 결정요인들의 화폐 측면에 작용하는 효과의 방향과 크기를 발견하는 것이 가능하게 할 것이라는 생각으로부터 출발하였다. 그와 같은 가정은, 만약 서로 다른 경제재들 사이의 교환비율들이 그들 사이에 일정하다면, 정확한 것으로 판명될 것이고 그 도움으로 다른 의문들이 원하는 결과로 우리를 이끌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런 가정은 유지될 수 없으므로, 최소한 어느 정도 얻어진 결과들의 중요성에 대한 개념을 얻고자 모든 종류의 자의적인 가설들에 의존하는 피난처들이 마련되었다. 그러나 이렇게 하는 것은 통계학의 안전한 근거를 포기하고 그 어떤 믿을 만한 (화폐의 가치를 지배하는 모든 법칙들에 대한 완전한 이해에 의해서만 마련될 수 있을 그런) 지침이 없는 그런 영역으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길을 잃지 않을 수 없다. 화폐의 객관적 교환가치의 결정요인들이 다른 방식으로 만족스럽게 해명되지 않는 한, 통계적 재료들의 뒤엉킨 실타래를 푸는 길을 안내해 줄 유일하게 가능한 안내자가 없게 된다. 그러나 심지어 가격들과 그 변동들의 결정요인들에 대한 탐구, 그리고 이 결정요인들을 각각의 요인들로 분리하

는 것이 완전한 정확성을 지닌 채 성취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가격들에 대한 통계적 연구는 여전히 가장 지원이 필요한 바로 그곳에서 스스로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내던져질 것이다. 다시 말해 여타 다른 경제연구 분야들에서와 마찬가지로, 화폐이론에서도 우리는 별개의 요인들의 수량적 중요성을 결정할 수 없다. 가격들의 결정요인들에 의해 행사되는 영향을 서로 다른 각각의 요인들 간에 수치적으로 배분하여 귀속(歸屬)시킬 수 있는 단계에 우리는 결코 도달할 수 없을 것이다. 가격들의 모든 결정요인들은 개인들의 주관적 추정이라는 매개를 반드시 통과한 다음 비로소 효과를 드러낸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특정 요인이 개인들의 주관적 추정치에 주는 영향의 크기는 결코 예측될 수 없다. 결과적으로, 가격들에 대한 통계적 조사연구 결과들의 평가는, 그 조사들이 확립된 이론적 결론들에 의해 지지를 받을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대체로 그 연구자의 대강의 추정에 의존한 상태를 벗어날 수 없다. 이런 지수와 관련된 연구의 환경은 그 연구들의 가치를 크게 감소시키지 않을 수 없다. 어떤 조건들 아래에서는, 지수들은 가격의 역사와 통계에 대한 탐구에 조력자로 아주 유용한 서비스를 할 수도 있다. 그러나 화폐의 속성과 가치에 관한 이론을 확장하는 방법으로서는 이와 관련된 연구는 불행하게도 별 중요성을 가지지 않는다.

4. 비저의 지수 수치 계산방법의 정교화

최근 비저(Wieser)는 특히 포크너(Falkner)에 의해 채택된 지수를 계산하는 예산적 방법(budgetary method)의 개선에 해당하는 새로운 제안을 하였다.¹⁶¹⁾ 명목임금이 변하지만 동일한 실질임금을 나타내고 있을 때, 과거와 다르게 동일한 실질가치를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혹은 화폐단위의 실질가치의 단위에 대한 비율이 변하기 때문에 화폐의 가치는 변화하였다는 견해에 기초하고 있다. 다른 한편 화폐의 가치는, 명목임금이 증가하거나 하락하지만 실질임금이 정확하게 그것들과 함께 평행해서 움직일 때, 변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된다. 만약 화폐소득과 실질소득 사이의 대비가 명목임금과 실질임금 사이의 대비로 대체된다면, 그리고 그 공동체 속의 개인들의 총합이 한 개인 대신 대체된다면, (총실질소득의 상응하는 변동들에 수반되는) 그와 같은 총화폐소득의 변동들이 화폐가치의 변동을 전혀 가리지 않는다고 말해지고 있다—비록 동시에 재화들의 가격들이 공급의 변화된 조건들에 따라 변했다고 하더라도. 오로지 동일한 실질소득이 서로 다른 화폐소득에 의해 표현될 때, 화폐의 구체적 가치가 변하였다. 그래서 화폐가치를 측정하기 위해, 몇 가지 유형적인 종류들의 소득이 선택되고 각각에 상응하는 실질지출—즉, 그 소득들이 지출된 각 종류의 물건의 수량—이 결정되어야 한

161) 포크너(Falkner)의 방법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고. Laughlin, *The Principles of Money*(London, 1903), pp.213-21; Kinley, *Money*(New York, 1909), pp.253ff.

다. 이 실질지출에 상응하는 화폐지출도 또한 특정한 기초연도에 대해 모두 보여져야 한다. 그 결과가 전국적인 하나의 평균을 구해 낼 가능성일 것이라고 주장되고 있다. 이렇게 구한 평균은, 시장에서 매년 결정되는 것으로서, 기준으로 선택된 실질임금에 화폐적 표현을 제공해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래서 불변의 실질가치가 불변의, 더 높은 혹은 더 낮은 화폐적 표현을 해마다 가졌는지 발견될 것이고 그렇게 해서 화폐가치 변동의 어떤 한 측정치가 획득될 것이다.¹⁶²⁾

이 방법—지수들을 계산하는 모든 방법들 가운데 가장 완벽에 가깝고 가장 깊이 심사숙고된 방법—을 고용하는 데 있어서의 기술적 어려움들은 확실히 극복할 수 없다. 그러나 심지어 이 어려움들을 정복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방법은 원래 의도된 봉사의 목적을 결코 달성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것은 여타 모든 방법들을 정당화시킬 수 있었을 것과 동일한 가정—즉, 화폐를 제외한 개별 경제체들 사이의 교환비율들이 동일하다는 가정과 단지 화폐와 여타 경제체들 각각 사이의 교환비율만이 변동할 수 있다는 가정—아래에서만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것은 자연히 모든 사회제도들, 인구, 부와 소득의 분포 그리고 개인들의 주관적 가치평가들의 불변성을 가정하게 될 것이다. 모든 것이 변화할 수 있는 상태에서는 그 가정은 완전히 붕괴한다.

162) Wieser, "Über die Messung der Veränderungen des Geldwerts," *Schriften des Vereins für Sozialpolitik* 132(Leipzig, 1910), pp.544ff. 로웨(Joseph Lowe)는 일찍이 1822년에 벌써 유사한 제안을 했던 것 같다. 여기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고. Walsh, *The Measurement of General Exchange Value*(New York, 1901), p.84.

비저가 이 점을 놓쳤을 리 없다. 왜냐하면 그는, 그 공동체를 구성하는 여러 계층과 소득의 유형들이 점차 변화한다는 사실, 그리고 시간의 경과 속에서 특정 종류의 소비들은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으며 새로운 종류의 소비가 시작된다는 사실을 감안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다기 때문이다. 짧은 기간들에 대해서는, 비저는 이것이 아무런 특별한 어려움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견해, 즉 양(兩) 예산 집합들에 들어가지 않는 지출들을 배제함으로써 총합들의 비교 가능성을 유지하는 것은 쉽다는 견해를 지니고 있었다. 긴 기간들에 대해서는 비저는 마셜의 연쇄방법(chain method)—충분한 수의 일시적 유형들을 언제나 포함시키고 어떤 주어진 유형과의 비교 그리고 즉각 앞서거나 그것의 뒤를 따르는 것으로의 비교로 제한하는 방법—을 추천한다. 그러나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 어려움을 없애기는 어렵다. 역사 속으로 더 과거로 나아갈수록 우리는 더 많이 배제하여야 한다. 궁극적으로 생존의 가장 기본적인 필요들을 만족시키는 데 봉사하는 실질임금의 부분들만이 남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제한된 범위 안에서조차 예를 들어 20세기 의류와 10세기의 의류 사이의 비교는 불가능할 것이다. 역사적으로 전형적인 소득유형들을 파악해서 추적하기는 더욱 힘들 것이다.(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사회를 다양한 계층들로 구분해야 한다.) 사회적 변화의 과정은 끊임없이 소득유형의 수를 증가시킨다. 그리고 이것은 결코 단순히 하나의 유형을 더 많은 유형으로 세분했기 때문이 아니다. 그 과정은 더 복잡하다. 하나의 집단에 속한 것은 나누어지며 다른 집단들 혹은 그 일부와 가장 복잡한 방식으로 서로 뒤섞인다. 예

를 들어 우리는 과거의 어떤 유형의 소득에다가 현대의 공장 노동자의 소득을 비교할 수 있겠는가?


그러나 비록 우리가 이 모든 고려들을 무시하더라도 여전히 여타 어려움이 발생할 것이다. 실질소득의 동일한 부분의 주관적 가치평가들이 시간이 경과하면서 변하는 것은 상당히 가능하거나 심지어 일어날 개연성이 가장 높다. 생활방식, 기호, 개별 경제재의 객관적 사용가치에 대한 의견의 변화는 단기에 있어서조차 여기에서 아주 큰 변동을 불러일으킨다. 만약 우리가 소득이 이 부분들의 화폐적 가치의 변동들을 추정하면서 이를 감안하지 않는다면, 새로운 원천에서 비롯된 오류가 발생하여 우리의 결과에 근본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다른 한편 그것들을 감안하는 것에는 전혀 아무런 근거도 존재하지 않는다.

모든 지수 시스템들은, 그것들이 단순히 숫자들을 만지작거리려는 것 이상으로 화폐이론에 대해 더 큰 중요성을 가지게 하려는 의도로 만들어진 한에 있어서는, 일정 수량의 화폐의 효용을 측정하려는 생각에 근거하고 있다.¹⁶³⁾ 그 목적은 1그램의 금이 오늘날 이것이 과거의 특정 시점과 비교할 때 더 유용한지를 결정하려는 것이다. 객관적 사용가치에 관한 한, 그와 같은 조사는 아마도 결과들을 만들지 모른다. 우리는 원한다면, 예를 들어 한 조각의 빵이 언제나 객관적 의미에서 동일한 효용을 언제나 가지고 있고 언제나 동일한 식료품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소설을 써야 할지 모른다. 우리가 이런 소설이 허용될 수 있는지

163) Weiss, *Die moderne Tendenz in der Lehre vom Geldwert*, *Zeitschrift für Volkswirtschaft, Sozialpolitik und Verwaltung*, Vol.19, p.546.

여부에 대한 질문 속으로 들어갈 필요는 전혀 없다. 왜냐하면 확실히 이것이 지수방법들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이다. 지수들의 목적은 문제의 특정 화폐의 주관적 중요성을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불변의 가치체계를 지닌 영원한 인간이라는 매우 불투명하고 부적절한 가공의 상태에 의존해야 한다. 수 세기를 통해 추적되어야 할 비저의 전형적 소득들은 이 가공의 상태를 그것의 제한성으로부터 해방시키고 이를 세련되게 만들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시도조차도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만들 수 없으며 필연적으로 실패하지 않을 수 없다. 비저의 지수체계는 지수체계들 가운데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완벽한 발전을 대변하고 있으며, 이것도 어떤 실질적 결과를 낳지 못한다는 사실은 이런 지수체계를 만들려는 사업 전반에 드리운 운명이다. 비저의 지수체계만이 이런 운명을 비껴갈 수 없었음은 물론이다. 만약 그가 그것에 특별하게 강조하는 것을 게을리하였다면, 이것은 아마도 그의 관심이 이 풀 수 없는 문제를 푸는 길을 찾는 데 있었다기보다는 통상적인 방법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추출해 내고자 하는 데 있었던 상황으로 인한 것일 것이다.

5. 지수체제의 실질적 유용성

 화폐가치의 변동을 측정하려고 제안된 방법들을 (정확한 이론으로) 수용할 수 없음은 사실이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지수

측정치들을 오로지 경제정책의 실질적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편의 하나로만 (제한적으로) 사용한다면, 이론적 결함들을 지나치게 부각시킬 필요는 없을 것이다. 비록 지수들이 (경제학)이론이 반드시 충족해야 할 요구조건들을 충족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지수의 근본적 약점들과 그 지수들이 실제로 결정되는 방법들의 부정확성에도 불구하고, 지수들은 여전히 정치가들의 일상적인 업무에 유용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만약 우리가 서로 인접한 시점들 사이의 비교 이외에는 다른 목표가 없다면, 그리고 우리가 이 수치들로부터 어떤 ‘거친’ 어림셈과 결론들을 내릴 수 있다면, 이 수치를 계산하는 모든 방법 속에 내재된 오류들은 어쩌면 무시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예컨대 화폐가치의 변동의 시기에, 주식시장의 가격동향과, (상품들의 가격들에 표현된) 화폐구매력의 변화동향 사이에 놓여 있는 시간적 격차를 확장하는 것은 어느 정도까지는 허용될 수 있을 것이다.¹⁶⁴⁾

마찬가지로 우리는 통계적으로 월별로 구매력의 변동을 추적할 수 있을 것이다. 특정한 목적들을 위한 이 모든 계산들의 실용적 유용성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그것들은 그 가치를 상당히 최근의 사건들에서 증명한 바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계산들에 대해 실제로 행사할 수 있는 것들보다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음을 경계해야 한다.

164) 이 책의 제12장 제4절 참고.

제12장 화폐의 객관적 교환가치 변동의 사회적 귀결

1. 현재재와 미래재의 교환

☝ 화폐의 객관적 교환가치의 변동은 소득과 재산의 분배에 교란을 야기하는데, 이는 한편으로는 개인들이 화폐가치의 변동성을 간과하기 쉽기 때문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화폐가치의 변동은 모든 경제재와 서비스들에 균질적으로 그리고 동시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이다.

수백 년 혹은 수천 년 동안, 사람들은 화폐의 객관적 교환가치가 화폐적 요인들에 의해 유발될 수 있음을 알아채는 데 완전히 실패하였다. 그들은 가격들의 모든 변동을 완전히 상품적 측면으로부터만 설명하고자 하였다. 이 가정에 대해 처음으로 공격을 한 것은 보댕(Bodin)의 위대한 업적이었으며, 이런 가정은 학문적 문헌으로부터 빠르게 사라졌다. 그러나 이 가정은 오랫동안 비전문가 집단의 의견을 지배하였다. 그러나 오늘날 여기에서도 아주 흔들리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들이 현재재를 미래재에 대해 교환할 때, 그들은 화폐의 객관적 교환가치의 변동을 그들의 가치평가 속에서 고려하지 않는다. 대부자들과 차입자들은 미래에 있을 화폐의 교환가치의

변동을 감안하는 습관 속에 있지 않다.

현재재화들이 미래재화들에 대해 교환되는 거래들은 미래의 의무(부채)가 화폐가 아니라 여타 재화로 달성되어야 할 때에도 발생한다. 이보다 더 흔한 거래 방식은 계약들이 미래의 특정 시점까지는 어느 당사자에 의해서도 계약이 이행될 필요가 없고 그 시점에 당사자들이 계약을 이행해야 하는 종류의 것이다. 그와 같은 거래들은 위험을 내포하고 있으며, 이 사실은 모든 계약자들에게 잘 알려져 있다. 어떤 사람이 옥수수, 면화 혹은 설탕 선물(先物, futures)을 구매할(판매할) 때 혹은 어떤 사람이 석탄, 철강, 혹은 목재에 대한 장기계약을 할 때, 그는 그 거래에 내포된 위험을 잘 의식한다. 그는 조심스레 가격들의 미래 변동의 확률을 가늠해 보고 때로는 현대 주식증권거래 기법들이 개발해온 보험이나 헤지거래의 방법을 통해 불확정적인 요인을 감소시키는 조치들을 취하기도 한다.

화폐가 포함된 장기계약을 맺으면서 계약 당사자들은 일반적으로 투기적 거래에 참여하고 있음을 의식하지 않는다. 개인들은 화폐가 그 가치에 있어 안정적이라는 믿음—즉, 최소한 화폐적 결정요인들에 관한 한 화폐의 객관적 교환가치가 쉽게 변동하지 않는다는 믿음—에 기초해서 거래를 한다. 이 사실은 화폐의 객관적 교환가치의 문제에 관한 법률 시스템의 태도에서 가장 명백하게 드러난다.

법률에서 화폐의 객관적 교환가치는 안정적이다. 때로는 법률 시스템이 화폐의 교환가치의 안정성이라는 가상의 소설(小說)을 채택하고 있다고 단언되기도 한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르

다. 가공물을 구축하는 데 있어, 법률은 우리로 하여금 어떤 실제 상황에 대해 이것에다 실재하지 않는 요소들을 더 보태어 생각하거나 혹은 실재하는 요소들을 마치 실존하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여 이것을 실제 상황과는 다른 것으로 상상하기를 요구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렇게 변형된 상황에만 적용될 수 있는 법률적 금언들을 실제 상황에 적용하기 위해서이다. 그렇게 하는 목적은 직접적인 적용을 할 수 없을 때 유추를 통해 사건을 판결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이다. 법률적 가공물들의 모든 속성은 이 목적에 의해 결정되며, 그것들은 이 목적이 요구하는 한에 있어서만 유지된다. 입법자와 판사는 언제나 가공적인 상황이 현실에 그대로 상응하지는 않음을 인지하고 있다. 그래서 법률적 사실들이 체계적으로 분류되고 서로 연관될 수 있는 것은 바로 판결에서 채택되는 소위 도그마적인 가공물로 인한 것이다. 여기에서 다시 한 번 확인할 것은 사람들이 그 상황을 존재하는 것처럼 간주하고 있을 뿐이지, 실제로 존재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¹⁶⁵⁾

법의 화폐에 대한 태도는 이런 가공물의 경우와 상당히 다른 문제이다. 법률가들은 완전하게 화폐가치의 문제에 익숙하다고 할 수 없다. 그들은 교환가치의 변동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 화폐가치의 안정성에 대한 순진한 통속적 믿음은 모든 애

165) Dernburg, *Pandekten*, 6th ed.(Berlin, 1900), Vol.1, p.84. 소설의 주요한 특징들 가운데 하나는 그것이 가공의 것이라는 명시적인 의식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고. Vaihinger, *Die Philosophie des Als ob*, 6th ed.(Leipzig, 1920), p.173; English trans., *The Philosophy of "As If"*(London: Kegan Paul, 1924).

매성을 가진 채 법률 속에 허용되고 있으며, 갑작스런 화폐가치의 대규모 변동이라는 역사적인 명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명분조차도 이 주제에 대한 법의 태도를 비판적으로 재검토하게 하는 동기로 작용하지 못하고 있다. 민법체계는, 보댕이 화폐의 구매력의 변동을 화폐 측면으로부터 그 영향력을 행사하는 원인들로 추적하는 시도를 했을 때 이미 완성되었다. 이 문제에 있어, 보댕 이후의 현대적인 경제학자들은 법률에 아무런 흔적을 남기지 못했다. 그래서 현재 법률에서는 화폐가치의 불변성은 하나의 가공물이 아니라 사실로 취급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률은 화폐가치의 문제에서 본질적인 문제가 아닌 부수적인 질문들에 전념하고 있다. 법률은 어떻게 기존의 법적 채무들과 그 채무의 성격이 하나의 통화에서 다른 통화로의 이행에 의해 영향을 받는지의 문제를 철저히 다룬다. 초기에는, 법체계는 왕의 주화 품질의 훼손 문제에 관심을 집중하였고, 나중에는 국가들의 (처음에는) 신용화폐와 금속화폐 사이의 변화된 정책들, (그 다음에는) 금과 은에 대한 변화된 정책들에 의해 야기된 문제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관심을 집중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률가들의 손에 의해 이 질문들이 받은 취급은 화폐의 가치가 끊임없는 변동 아래 있다는 사실의 인식에까지는 이르지 못하였다. 사실 그 문제의 속성과 문제가 다루어진 방식은 처음부터 이런 인식에 이르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그 문제는 화폐가치의 변동에 대한 법률의 태도의 문제로서가 아니라, 왕과 국가가 현존하는 채무관계를 변경시키고 그래서 기존의 권리들을 파괴하는 권력의 문제로 다루어졌다. 한

때 이것은 화폐의 법적 유효성(legal validity)이 그 나라 지배자의 인증에 의해 결정되는지 아니면 그 주화의 금속 함량에 의해 결정되는지의 문제를 야기했으며, 나중에는 만약 그 화폐가 법정 화폐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법률의 명령인지 사업세계의 자유로운 사용인지에 대한 문제를 야기하였다. 사적 재산권과 획득된 권리들의 보호의 원칙들에 근거하고 있는, 일반 대중의 의견에 따른 대답은 두 경우에 마찬가지로 전개되었다. “그 어떤 계약에서도 우리는 계약된 바로 그것을 상환해야 한다. 그렇게 해서 말하자면, 되돌려줄 화폐총액이 공통되게 결정될 수 있어야 한다.”(Prout quidque eontraetum est, ita et solvi debet; ut cum re eontraximus, re solvi debet, veluti cum mutuum dedimus, ut Tetro pecuniae tantundem solvi debeat.)¹⁶⁶⁾ 이와 관련한 단서—즉, 거래가 시작될 당시에 화폐로서 통용되던 것을 제외하고는 그 어떤 것도 화폐로 간주되지 않는다는 단서, 그리고 그 채무가 금속으로 뿐 아니라 계약에 명시된 통화로 지불되어야 한다는 단서—는 당시 일반의 견해—즉, 공동체의 모든 계급들에 의해 특히 거래 자들에 의해 정확한 화폐로 간주된 것만을 화폐로 간주하며, 주화에서 본질적인 것은 그 금속 함량이며 공인(公印)은 무게와 순도에 대한 권위를 가진 인증의 의미만을 지닌다는 견해—를 따랐

166) L. 80, *Dig. de solutionibus et liberationibus* 46, 3. *Pomponius libro quarto ad Quintum Mucium*. See further Seidler, “Die Schwankungen des Geldwertes und die juristische Lehre von dem Inhalt der Geldschulden,” *Jahrbücher für Nationalökonomie und Statistik*(1894), 3d series, Vol.7, pp.685ff.; Endemann, *Studien in der romanisch-kanonistischen Wirtschafts- und Rechtslehre bis gegen Ende des 17 Jahrhunderts* (Berlin, 1874), Vol.2, p.173.

다. 사업상의 거래들에 쓰이는 주화들을 동일한 무게와 순도를 지닌 여타 금속 조각들과 조금이라도 다르게 취급해야 한다는 생각은 아무에게도 떠오르지 않았다. 사실 본위제가 금속본위제 이었다는 것은 이제 그 어떤 의심의 대상도 아니다.

화폐단위로 된 계약에서 의무의 완수에서 오로지 화폐의 금함량만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견해는, 주조당국들에 의해 상술된 명목주의 원칙(nominalist doctrine)에 대항한 것으로 당시 지배적인 견해였다. 이 견해는 주조의 금속 함량을 안정화시키기 위해 취해진 법적 조치들 속에 확연히 드러나며, 17세기 말—통화들이 체계적인 화폐본위제도로 발전하던 시기—이래 그 견해는 동일한 금속으로 된 서로 다른 주화들 사이의 교환비율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었을 뿐 아니라, 두 가지 귀금속을 하나의 화폐체제 속에 결합시키고자 했던 (명백하게 성공적이지 못했던) 시도들에 대해서도 그 기준이 되었다. 신용화폐의 출현조차도, 그리고 그것이 제기한 문제들도 법조계의 관심을 화폐가치의 질문으로 돌릴 수 없었다. 종이화폐의 체제는 그 종이화폐가—종이화폐가 원래는 그것과 동등했었고, 나중에는 이를 종이화폐가 대체했던—그 금속화폐와 계속 동등성을 유지하기만 한다면, 그리고 만약 그 금속 함량 혹은 그 청구권의 금속의 가치가 채무계약에서 결정적이라면 법의 정신에 일치하는 것으로 간주되었다.

그러나 심지어 금속화폐의 교환가치도 변동될 수 있다는 사실은, 최소한 금에 관한 한 (그리고 오늘날에는 그 어떤 여타 금속은 고려할 필요가 없다) 명시적인 법적 인식과 일반 대중의 의견 속에 계속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비록 경제학자들에게는 이 사실이 3

세기 이상 잘 알려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고려하는 단 하나의 법률적 금언도 존재하지 않는다. 화폐가치의 안정성에 대한 순진한 믿음에 따라 법률은 일반 대중의 의견과 완전한 일치를 이루고 있다. 법률과 일반의 의견 사이에 어떤 종류의 차이라도 발생하게 되면, 어떤 반응이든 반응이 필연적으로 등장하게 된다. 법률 가운데 정의롭지 못하다고 느껴진 부분에 대해 반대하는 운동이 시작된다. 그와 같은 갈등들은 언제나 일반 대중의 의견이 그런 법률에 승리하면서 종식되는 경향이 있다. 궁극적으로 지배적인 계층의 견해들이 법률에 구현된다. 화폐가치의 문제들에 대한 법의 태도에 대한 반대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는 곳이 아무 데도 없다는 사실은, 이 문제에 관한 법률의 내용들이 일반의 의견에 반대될 수 없음을 명백하게 보여 준다. 다시 말해 법률뿐만 아니라 일반 대중의 의견도 화폐가치의 안정성에 관해서는 가벼운 의심으로 고심한 적도 없었다. 사실 이 점에 관해서는 의심으로부터 너무나 자유로워서 엄청나게 긴 세월 동안 화폐는 가치의 척도로 간주되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화폐로 이 행이 완수되는 신용거래에 들어갈 때, 그에게는 화폐구매력의 미래의 변동을 감안하여야 한다는 생각이 떠오르지 않았다.

화폐와 여타 경제재들 사이의 교환비율이 변동하면, 화폐단위로 맺은 신용거래를 했던 당사자들이 감당하고자 했던 원래의 위치가 아울러 변동한다. 화폐구매력의 증가는 채무자에게 불리하고 채권자에게 유리하다. 화폐구매력의 감소는 반대의 의미를 지닌다. 만약 계약의 당사자들이 현재재를 미래재와 교환했을 때 화폐가치의 예상되는 변동을 감안했다더라면, 이런 결과들이

초래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 변동들의 크기나 방향에 대해 예측할 수 없음은 사실이다.)

오로지 서로 교환비율이 크게 변할 수 있는 둘 혹은 그 이상의 화폐들이 존재함으로써 그 문제에 대해 (일반 대중의) 관심이 쏠릴 때에만 비로소 화폐구매력의 변동성이 감안된다. 미래에 있을 수 있는 환율의 변동은 모든 종류의 신용거래들의 조건에 충분히 반영되고 있음은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다. 이런 유형의 고려가 반영되는 부분은, 한 종류 이상의 화폐가 사용되는 국내의 거래에서 그리고 서로 다른 통화들을 사용하는 국가들 사이의 무역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이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 그러나 그와 같은 경우들에 있어서도 화폐가치의 변동성에 대한 감안이 이루어지는 방식이 화폐가치가 안정적이라는 상정과 양립 불가능하지 않은 것일 수 있다. 어떤 한 종류의 화폐의 가치의 변동성이 측정되는 것은 다른 종류의 화폐의 단위로 측정된 그 등가물이지만, 이 다른 종류의 화폐의 가치 자체는 안정적이라고 가정된다. 그 가치 안정성이 문제가 되는 통화의 변동성은 금의 단위로 측정된다. 그러나 금 통화들도 마찬가지로 그 가치가 변동될 수 있다는 사실이 감안되어야 한다. 개인들은, 그들이 인지하는 한에 있어서는 그들의 거래에서 화폐의 객관적 교환가치의 변동성을 감안한다. 그러나 개인들은 모든 종류의 화폐에 대해서가 아니라 단지 특정한 종류의 화폐에 대해서만 이를 인식하고 있다. 오늘날 주요 교환의 공통 매개물인 금이 가치에 있어 안정적이라고 간주되고 있다.¹⁶⁷⁾

167) 초판에 대한 서평에서(*Die Neue Zeit*, 30th year, Vol.2, pp.1024-1027),

화폐의 객관적 교환가치의 변동이 예측되는 한에 있어서는, 그 변동이 신용거래들의 조건에 영향을 준다. 만약 화폐단위의 구매력이 장차 하락할 것으로 예측된다면, 채무자들은 채무자가 거래의 종료시점에 상환하는 화폐의 총액이 원래 빌려 준 총액에 비해 더 작은 구매력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는 사실에 대비할 것임에 틀림없다. 채무자들은, 사실상 전혀 빌려 주지 않고 그들의 돈으로 다른 재화들을 구매하는 편이 더 나을 수도 있다. 채무자들은 그 반대일 것이다. 만약 그들이 자신들이 빌린 돈으로 상품들을 구매하고 이 상품들을 일정 시간이 흐른 후 판매한다면, 채무자들은 자신들이 돌려줘야 할 총액보다 더 높은 잉여를 가질 것이다. 신용거래는 그들에게 이득을 줄 것이다. 결과적으로 지속된 평가절하가 예상되는 한에 있어서는 돈을 빌려주는 사람은 더 높은 이자율을 요구할 것이고, 돈을 빌리는 사람들은 더 높은 이자율을 지불할 의사가 있을 것이라는 것은 별로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다. 다른 한편, 만약 화폐가치가 상승할 것으로 예측된다면, 이자율은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 비

힐퍼딩(Hilferding)은 위의 주장들을 “단지 우스운 것”이라고 비판하였다. 아마도 마르크의 평가절하로 힘들었던 독일 국민들과 이런 감정이 배제된 유형의 유머를 공유하기를 예상하는 것은 너무 심한 것일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이 단지 한두 해 전에도 심지어 그 문제를 더 잘 이해했던 것 같지는 않다. 피셔(Fisher)는 다음에서 전형적인 설명들을 제공하고 있다. (*Hearings Before the Committee on Banking and Currency of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67th Cong., 4th sess., on H.R. 1788 [Washington, D.C., 1923], pp.5ff., 25ff.) 독일의 최근의 화폐·경제 정책이, 금과 관련해서 마르크의 평가절하를 다룰 자격을 갖추지 못한 힐퍼딩과 하벤슈타인(Havenstein)과 같은 사람들의 손에 달려 있었던 것은 독일로서는 불운이다.

해 더 낮을 것이다.¹⁶⁸⁾

그래서 만약 화폐의 교환가치의 변동이 발생하는 방향과 그 정도가 예측될 수 있었다라면, 그 변동은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의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없었을 것이다. 앞으로 벌어질 구매력의 변화는 원래의 신용거래의 조건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을 것이다.¹⁶⁹⁾ 그러나 이 가정은, 금 화폐에 대비한 신용화폐 혹은 법정화폐의 가치변동에 관한 한, 가장 불완전한 방식으로만 유효하기 때문에, 채무계약에서 이루어진 미래 화폐가치의 변동에 대한 감안은 필연적으로 부적절하지 않을 수 없다. 제1차 세계대전 발발 후의 크고 빠른 금 가치의 변동을 경험한 이 후인 오늘날에서조차도 경제활동에 관심을 가진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마도 사실상 이론경제학에 익숙한 극소수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금의 가치가 변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 완전히 무지하다. 금 통화들의 가치는 여전히 안정적이라고 간주되고 있다.

최선의 화폐조차도 그 가치가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 경제학자들은, 신용거래의 조건—즉, 현재재가 미래재와 교환되는 조건—을 해결하는 데 있어, 오늘날 일반적인 관행인, 교환의 매개물은 단지 하나의 재화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재화들의 묶음”으로 하기를 추천한 바 있다. 그 ‘묶음’ 속에, 비록 실제로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이론적으로는 모든 재화들을 포함시키는 것이 가능하다. 비록 이 제안이 채택되었더라도 화폐는 여전히

168) Knies, *Geld und Kredit*(Berlin, 1876), Vol.2, Part I, pp.105ff.; Fisher, *The Rate of Interest*(New York, 1907), pp.77ff., 257ff., 327ff., 356ff.

169) Clark, *Essentials of Economic Theory*(New York, 1907), pp.541ff.

현재재의 교환을 위한 매개물로 사용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신용거래들에서 변제되지 않은 채무는 그 계약에서 명시한 화폐의 명목적인 총액을 지불함으로써가 아니라 그 계약이 이루어질 당시 원래 총액이 지녔던 구매력을 지닌 화폐를 기준으로 한 총액이 지불됨으로써 해소되었을 것이다. 그래서 만약 그 계약 기간 중 화폐의 객관적 교환가치가 상승한다면, 이에 상응하는 더 작은 화폐총량이 지불될 것이다. 만약 그것이 하락한다면 이에 상응하여 더 큰 총액이 지불될 것이다.

화폐가치변동의 측정 문제에 관해 위에서 전개된 논증들은 이들 제안들이 근본적으로 부적절함을 보여 준다. 만약 다양한 경제재들의 가격이, 각 경제재의 상대적 수량이 감안되지 않은 채 패리티 계수들의 결정에서 동등한 비중이 주어진다면, 치유책을 찾아야 하는 해악이 오히려 악화될지 모른다. 만약 밀, 호밀, 면화, 석탄, 철과 같은 상품들의 가격변동이, 후추, 아편, 다이아몬드, 혹은 니켈과 같은 상품들의 가격변동과 동등한 중요성을 부여받는다면, 그 기준표(Tabular Standard)의 확립은 장기계약들의 내용이 현재보다 더 불확실해지도록 하는 효과를 초래할 것이다. 비록 개별 상품들이 그 중요성에 따른 효력을 가지는 소위 가중평균이 사용된다고 하더라도,¹⁷⁰⁾ 생산과 소비의 조건들이 변화하는 순간 여전히 마찬가지로 결과들이 뒤이어 나타날 것이다. 생산의 조건들이 끊임없이 변화할 수 있는 것과 꼭 마찬가지로 인간에 의해 서로 다른 경제재들에 부여된 주관적

170) Walsh, *The Measurement of General Exchange Value*(New York, 1901), pp.80ff.; Žižek, *Die statistischen Mittelwerte*(Leipzig, 1908), pp.183ff.

가치들은 끊임없는 변동 속에 맡겨져 있다. 그러나 과거와의 연결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것들이 변화하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패리티 계수들을 결정하는 데 이 사실을 감안하기는 불가능하다.

오늘날 기존 채무관계들에서의 화폐가치의 변동의 효과를 언급하면서 곧바로 최근 유럽의 역사를 특징짓는 인플레이션 괴물과도 같은 실험의 결과들을 연상하는 것은 당연한 부분이 있다. 모든 국가들에서 이 기간의 후반 동안 법학자들은, 기존의 법률을 수단으로 하여 혹은 새로운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채권자들에게 가해진 손실을 만회시키는 것이 가능했는지 혹은 여전히 가능한지 여부의 문제를 철저하게 논의하였다. 이 논의들에서, 화폐의 평가절하의 결과로 빚어진 채무계약 내용의 변동이 법 자체가 그 문제에 대해 취한 태도로 인한 것이었다는 사실은 보통 간과되었다. 말하자면 법체계가 책임이 없었던 어떤 불편함에 대해 법체계가 그 치유책을 마련하기 위해 불러 내간 그런 것이 아니다. 어떤 불편함—정부가 평가절하를 초래했던 그 상황—이라고 느껴졌던 것은 바로 법체계 자체의 태도였다. 제1차 세계대전 발발 이전에 유통되던—‘마르크’라는 명칭 이외에는 금 화폐와 전혀 공통점이 없던—불태환 은행권이 금 화폐와 함께 법정 지불수단이라는 법적 원칙이, 국가로 하여금 국가 소득의 한 원천으로 새로운 화폐를 창출하는 국가의 권력을 악용하도록 허용해 준 법적 규칙들의 전체 체계의 일부분이다. 은행들이 은행권들을 태환해 줄 의무를 없애고 은행들에게 정부에 새로운 은행권을 발행하여 대부를 해 주도록 의무화한

법률들이 이 법 규칙 전체 체계로부터 분리되어 연상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법 원칙도 그렇게 될 수 없다.

법학자들과 사업가들이 화폐의 평가절하가 모든 종류의 채무 관계에 매우 큰 영향을 행사한다고 단언할 때, 그리고 그것이 모든 종류의 사업을 더 어렵게 하거나 심지어 불가능하게 한다고 단언할 때, 또 그것이 언제나 아무도 원하지 않으며 모두가 불공정하다고 느끼는 결과들을 만들어 낸다고 단언할 때, 우리는 자연히 그들에 동의한다. 전적으로 화폐사용에 기초하고 있고 모든 회계가 화폐단위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회질서 속에서는 화폐체제의 파괴는 모든 교환의 기초를 파괴하는 것과 다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해악은 한사람의 개인들, 개인들의 집단들, 혹은 그 공동체의 계층들로부터 평가절하의 부담을 제거하기 위해 고안된 자의적인 법률들에 의해 상쇄될 수 없다. 만약 우리가 평가절하의 치명적인 결과들을 원하지 않는다면, 그런 평가절하를 초래한 인플레이션적인 정책에 반대하기로 결심해야 한다.


화폐적 채무들은 금으로 청산되어야 한다거나 그 명목수량에 따르지 말아야 한다는 제안이 이루어지고 있다. 만약 이 제안이 채택되었더라면, 빌린 각 마르크에 대해 상환의 시점에서, 그 채무계약이 이루어졌던 시점에서 1마르크로 구매할 수 있었던 것과 동일한 중량의 금을 살 수 있는 총액이 지불되어야 했을 것이다.¹⁷¹⁾ 그와 같은 제안들이 이제 제기되고 있고 사람들의

171) Mängel, *Geldentwertung und Gesetzgebung*(Berlin, 1923), p.24.

승인을 얻고 있다는 사실은, 국가주의가 이미 그 효력을 상실하고 있으며 인플레이션 정책들의 종식이 불가피하게 가까워지고 있음을 보여 준다.¹⁷²⁾ 불과 수년 전이었다면, 그와 같은 제안은 조롱을 받았거나 아니면 대역죄로 낙인이 찍혔을 것이다. (그런데 종이화폐의 법정 지불수단으로서의 자격은 그것의 시장가격으로 제한되어야 한다는 개념을 강제하는 첫 단계가 취해진 것은 예외 없이 국고(國庫)에 유리한 방향일 때였음은 매우 특징적이다.)

무제한적인 인플레이션 정책의 결과를 피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단지 한 가지뿐이다.—모든 인플레이션적인 조치들의 폐기. 기준표의 제안자들이 금속통화를 대체하는 ‘상품 통화’라는 수단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고 어빙 피셔가 화폐구매력의 안정화 제안들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는 금의 가치의 변동을 처리하는 문제와는 서로 다른 문제이다.

2. 경제계산과 회계

 가치가 안정된 혹은 가치척도로서의 화폐라는 단순한 개념은 또한 화폐단위로 경제계산이 수행되게 하는 데 기여하였다.

여타 측면들에서조차 회계는 완벽하지 않다. 회계에서 언급하는 정확성이란 단지 착각일 뿐이다. 회계가 다루는 재화들과 권리들의 가치평가들은 언제나 대개 불확실하고 알려지지 않은 요인들에 의존하는 추정치들에 근거하고 있다. 이 불확실성이

172) (이 모두가 1924년에 저술된 것임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H.E.B.)

그 가치평가의 재화 측면으로부터 발생하는 한에 있어서는, 법에 의해 승인된 상업적 관행은 가능한 한 가장 큰 조심성을 가지면서 그런 어려움을 넘고자 시도한다. 이런 목적으로 상업적 관행은 자산들에 대해서는 보수적인 추정치를, 부채에 대해서는 조금 과장된 추정치를 요구하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사업가는 사업의 성공에 대한 자기기만으로 자기를 파산케 하는 우를 범하지 않고 그의 채권자들도 보호받게 된다.

그러나 회계에는 화폐가치 자체의 변동에 따라 변하는 속성으로부터 야기하는, 회계상의 가치평가가 불확실해짐으로써 발생하는 단점들 역시 존재한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 사업가, 회계사, 그리고 상업법정(commercial court)은 하나같이 이런 단점이 있음을 의심해 보지 않는다. 그들은 화폐를 가격과 가치의 척도라고 간주하고, 기꺼이 화폐단위들을 마치 길이, 넓이, 열용량, 중량의 단위들을 사용할 때와 다르지 않게 간주한다. 그리고 만약 경제학자가 이 절차의 의심스런 성격에 대해 그들의 관심을 환기시키는 일이 벌어진다면, 그들은 심지어 그 경제학자의 논점을 이해하지도 못한다.¹⁷³⁾

173) 1892년 3월 비엔나, 오스트리아 통화의 규제안의 마련을 위해 임명된 통화자문위원회(the Currency Inquiry Commission)의 한 세션에서 칼 멩거는 이렇게 언급하였다.

“나는 이렇게 추가하고 싶다. 입법자들뿐 아니라 일상생활을 하는 우리 모두는, 화폐의 구매력의 변동을 무시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다. 심지어 당신들과 같은 유명한 은행가들, 신사들도 혹시라도 주식자본을 대변하는 화폐총액이 그 구매력에 있어 늘어났는지 혹은 줄었는지에 대해 질문을 던지지 않으면서 연말에 대차대조표를 만든다.”

보덴크레디트안스탈트(Bodenkreditanstalt)의 이사이자 당시 오스트리아 최고의 은행가였던 테어도어 폰 타우지히(Theodor von Taussig)조차

경제계산에서 화폐가치의 변동을 이처럼 간과하는 것은 이윤과 손실에 대한 계산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만든다.

만약 화폐가치가 하락하면, 화폐의 가치하락을 감안하지 않는 통상의 회계방식은 겉보기에 이윤이 나는 것처럼 비칠 수 있다. 그 까닭은 회계에서는 판매로 받은 (더 낮은 가치를 지닌) 화폐의 총량이 더 높은 가치를 지닌 화폐로 계산된 생산비용에 비교되기 때문이며, 또 회계는 더 높은 가치의 화폐로 표현된 원래 추정된 장부가치들로부터, 더 작은 가치의 화폐로 추정된 항목들을 감가상각으로 삭제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윤으로 잘못 간주된 것은 자본의 일부가 되지 못하고, (경제계산상의 오류가 없었

멩거의 이 언급을 이해하지 못했다.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

“대차대조표는 한 회사나 개인의 재산 혹은 자산을 그 부채들에 대비하여—양자 모두 수용된 가치측정 수단, 즉 화폐기준, 즉 오스트리아에서는 굴텐으로 표현된—놓은 것이다. 이제 나는 우리가 그 기준(동질적이라고 가정했던)으로 된 재산과 부채를 표현할 때 어떻게, 일반적으로 그렇듯이 측정될 대상의 변동을 감안하지 않고, 측정기준의 변동을 감안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

타우지히는 쟁점이 재화의 가치의 추정과 감가해야 할 정도와 관련된 것이며, 화폐적 청구권과 화폐적 채무들의 대조가 아니라는 점을, 혹은 이윤 혹은 손실 회계는, 절망적으로 부정확하지만 않다면, 화폐가치의 변동을 감안해야 한다는 점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멩거는 그의 대답에서 이 점을 제기할 기회를 가지지 못했다. 왜냐하면 멩거는 그의 언급이, 타우지히가 이해하려는 것처럼, 은행 이사들 측의 부정직한 관행에 대한 비난으로 이해되지 않도록 하는 데 관심을 가졌기 때문이다.

멩거는 이렇게 추가적으로 언급하였다.

“나는 단지 은행의 이사들(나는 심지어 은행장들조차도 그렇다고 말했다)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일상생활에서 화폐가치의 변동을 감안하지 않는 실수를 한다는 것을 지적하였을 뿐이다.” (Cp. *Stenographische Protokolle über die vom 8. bis 17. März 1892 abgehaltenen Sitzungen der nach Wien einberufenen Währungs-Enquete-Kommission*[Vienna 1892], pp.211, 257, 270).

더라면 발생하지 않았겠지만) 그 기업가에 의해 소비되거나 소비자에게 가격인하의 형태로 이전되거나, 노동자에게는 더 높은 임금으로 그리고 정부에게는 (겉보기의 소득이나 이윤을 과세하여 발생한) 정부의 과세소득으로 이전된다. 아무튼 화폐의 평가절하가 자본회계를 왜곡시킨다는 사실로 인해 자본의 소비가 초래된다. 어떤 조건들 아래에서는 그렇게 귀결된 자본의 파괴와 소비의 증가가, 다른 사실, 즉 그 평가절하가 또한 예를 들어 채무자들에게 (소비되지 않고 저장되는) 진정한 이윤들을 야기한다는 사실에 의해 부분적으로 상쇄될지 모른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그 평가절하에 의해 유발된 자본의 파괴를 부분적으로 만회하는 정도를 넘어설 수 없다.¹⁷⁴⁾ 그 평가절하로 유발된 잘못된 계산의 결과로 너무나 싸게 팔리는 상품들을 소비하는 소비자들이 필연적으로 평가절하된 화폐가 국민 통화로서 사용되는 지역의 주민인 것은 아니다. 통화의 평가절하로 인해 발생하는 가격인하는, 그 나라의 화폐의 가치가 하락하지 않거나 적어도 상승속도가 느린 국가들로의 수출을 장려한다. 안정적 가치를 지닌 통화의 단위로 계산을 하는 기업가들은 고객들에게 그의 자본의 일부를 유사 선물로 줄 준비가 된 기업가들과 경쟁할 수 없다. 1920년과 1921년에 오스트리아에 상품을 판매한 네덜란드의 상인들은 그 상품들을 원래 팔았던 가격보다 훨씬 싼 가격으로 되사들일 수 있었다. 왜냐하면 오스

174) 다음의 나의 책 참고, *Nation, Staat und Wirtschaft*(Vienna, 1919), pp.129ff. 이 절문들을 다루는 일련의 저술들이 그 이후 독일과 오스트리아에서 출현하였다.


트리아 거래자들은 자신들이 실제 들어간 비용에 비해 더 낮은 가격에서 팔고 있음을 알아채는 데 완전히 실패했기 때문이다.

그 경우의 진정한 상황이 인식되는 한에 있어서는, 수출의 증가에 대해 단순한 증상주의적 방식으로 즐거워하고 화폐의 평가절하에서 환영하는 ‘수출 프리미엄’을 주는 것으로 보는 것이 관습적이다. 그러나 일단 그 프리미엄이 흘러나오는 원천이 그 공동체의 자본이라는 사실이 발견되고 나면, 이제 그런 ‘팔아넘기기’ 절차는 보통 덜 호의적으로 간주된다. 다시 한 번 수입국들에서는 일반 대중의 태도가 ‘덤핑’에 대한 분노와 유리한(값싼) 구매조건에 대한 만족 사이에서 동요한다.

통화가치의 하락이 은행권의 발행에 의해 수행된 정부의 인플레이션의 결과인 곳에서는, 모든 회계를 그 대신 안정적 화폐로 실행함으로써 경제계산에 대한 재앙적인 효과를 피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나 그 평가절하가 금의 평가절하인 한에 있어서는, 그와 같이 탈출할 수 있는 쉬운 길은 존재하지 않는다.¹⁷⁵⁾

3. 단지 한 종류의 화폐가 사용될 때 화폐가치의

변동에 따른 사회적 귀결

 만약 우리가 현재재의 미래재의 교환을 무시하고 당분간 현재재와 현재 화폐 사이의 교환만 고려한다면, 우리는 (오로지 상품 측면으로부터만 유래하는) 어떤 한 상품가격의 격리된 변동의

175) 아래의 제20장 제12절 참고.

효과들과 (화폐 측면으로부터 유래하는) 화폐와 경제재 일반의 교환 비율의 변동의 효과들 사이의 근본적 차이를 한꺼번에 관찰할 것이다. 한 상품의 가격의 변동이 개인들 사이의 재화의 분배에 영향을 주는 까닭은 기본적으로는 그 상품이 (만약 교환거래에서 그것이 일부를 차지한다면) 정의상(ex definitione) 그것에 대한 그들의 수요에 비례하여 개인들 사이에 분배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한 경제 안에는 그것을 생산하는 경제주체 (거래자들을 포함하여 생산이라는 단어의 가장 넓은 의미에서) 그리고 그것을 판매하는 경제주체들이 존재하고 있으며, 그리고 단지 그것을 구매하고 그것을 소비하는 경제주체들이 존재한다. 그리고 이 특정한 재화와 (화폐를 포함한) 여타 재화들 사이의 교환비율의 교란으로부터 어떤 결과가 초래되는지는 명백하다. 이 결과들로부터 누가 이득을 보고 누가 손실을 보는지도 분명하다.

화폐의 경우에는 그 결과들이 서로 다르다. 화폐에 관한 한, 모든 경제주체들은 어느 정도까지는 딜러들이다.¹⁷⁶⁾ 모든 각각의 경제주체는 시장에서 그의 화폐에 대한 수요를 표현할 수 있는 정도와 강도에 상응하는 화폐 스톡을 유지한다. 만약 모든 스톡의 화폐의 객관적 교환가치가 순간적으로 그리고 동등한 비례로 상승하고 감소될 수 있었더라면, 만약 한꺼번에 모든 재화와 서비스의 화폐가격들이 균일하게 상승하고 하락할 수 있었더라면, 개별 경제주체들의 상대적 부(富)는 영향을 받지 않았을 것이다. 화폐가치의 변화에 이은 화폐적 계산은 더 크거나

176) Ricardo, *Letters to Malthus*, ed. Bonar(Oxford, 1887), p.10.

더 작은 수치로 행해졌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전부이다. 화폐가치의 변동은 그 날짜나 중력 혹은 측정하는 척도의 변동이 주는 중요성 말고는 아무런 중요성도 없었을 것이다.

화폐가치의 변동의 결과로서 발생하는 사회적 교란들은 전적으로 이 가정이 결코 유효하지 않다는 상황으로부터 발생한다. 화폐의 객관적 교환가치의 결정을 다루는 장에서 화폐가치의 변동은 언제나 어떤 주어진 지점에서 출발하여 점차 전체 공동체를 통해 퍼져 나간다는 것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것만이 왜 그와 같은 변동들이 소득의 사회적 분배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한다.

상품 측면으로부터 발생하는 시장교환 비율의 변동은 또한 일반적으로 모두 한꺼번에 완성되는 것이 아님은 사실이다. 그 변동들도 어떤 특정한 지점에서 출발하여 크고 작은 속도로 퍼져 나간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이런 유형의 가격변동들도 가격들에서의 변동들이 한꺼번에 일어나지 않고 점진적으로 일어난다는 사실로 인한 결과들이 뒤를 이어 나타나게 한다. 그러나 이것들은 오로지 한정된 숫자의 경제주체들만, 즉 딜러나 생산자로서 문제의 상품의 판매자들인 사람들만이 현저한 정도로 직면하게 되는 결과들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것은 어떤 상품의 객관적 교환가치가 변동한 결과들의 전부가 아니다. 생산이 증가한 반면 수요에는 변화가 없어서 석탄의 가격이 하락할 때, 예를 들어 도매 딜러들로부터 과거에 높은 가격에 공급을 받았으나 이제는 새로운 낮아진 가격에서만 그것들을 처분할 수 있게 된 소매상들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석탄의

생산증가에 의해 야기된 모든 사회적 변화가 설명된 것은 아니다. 석탄 공급의 증대는 공동체의 경제적 지위를 개선시킨다. 석탄가격의 하락은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의 소득과 재산을 재정렬하는 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국민의 배당과 국민의 부가 증가했음을 의미한다. 많은 이들이 누구도 잃지 않았던 것을 이제 누리게 되었다. 그러나 화폐의 경우에는 사정이 다르다.

우리가 고려해야 할, 화폐가치의 감소의 원인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화폐에 대한 수요는 그대로이거나 하락하는 상황—혹은 그 수요의 증가가 적어도 화폐 스톡의 증가보다는 적은 상황—에서 이루어진 화폐 스톡의 증가이다. 이 화폐 스톡의 증가는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추가적 수량의 화폐의 원래 소유자로부터 시작되며 이 사람들과 거래를 하는 사람, 그리고 또 그 사람과 거래하는 사람에게로 점차 옮겨간다. 화폐에 대한 낮아진 주관적 가치평가는, 이 추가적 수량의 화폐를 보유하게 된 사람들이 종전에 비해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하기로 동의할 의사를 나타내면서, 사람에게서 사람으로 전달된다. 더 높은 가격들은 증대된 생산과 높아진 임금을 초래하며, 이 모든 것이 일반적으로 경제적 번영의 신호로 간주되기 때문에, 화폐가치의 하락은 경제적 복지를 증대시키는 예외적으로 효과적인 수단으로 간주되고 언제나 간주되어 왔다.¹⁷⁷⁾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견해이다. 왜냐하면 화폐수량의 증가는 사람들이 처분할 수 있는 소비재 스톡의 증가를 가져오지 않기 때문이다. 그 효과는 사람들 간

177) Hume, *Essays*, ed. Frowde(London), p.294ff.

경제재 분배의 변경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어떤 경우에도, 215면(제8장 넷째 구절에 법정화폐와 신용화폐 수량증가가 재화스톡의 증가로 간주될 수 있는 경우가 묘사되어 있다)에 언급된 우연적인 상황을 별개로 하면, 이것이 사람들이 보유하는 재화의 총량 혹은 그들의 복지를 직접 증대시킬 수 없다. 이 결과가 간접적으로—분배에 어떤 식의 변화이든 변화가 있으면, 이는 생산에도 또한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간접적으로—초래될 수 있음은 사실이다. 즉, 재분배가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발생한 계층들이 그들의 추가적으로 얻은 화폐를, 화폐가 줄어들게 된 사람들이 축적했었을 수준보다 더 많이 자본을 축적하는 데 사용하게 될 때 이런 간접적 방식으로 생산이 늘어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여기에서 우리의 관심사가 아니다. 우리의 관심사는 화폐가치의 변동이 분배에 대한 효과 이외의 여타의 경제적 중요성이 있는냐는 것이다. 만약 그것이 아무런 여타의 경제적 중요성이 없다면, 번영의 증가는 단지 겉모습에 불과할 뿐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 공동체의 일부의 희생을 통해 다른 일부에 혜택을 줄 수 있을 뿐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문제는 그렇게 되어 있다. 화폐가치의 하락에 의한 비용은 그 화폐가 최후로 도달되는 계층들이나 국가들이 부담하게 되어 있다.

예를 들어 새로운 금 광산이 어떤 한 고립된 국가에서 개장했다고 가정해 보자. 그 광산으로부터 흘러나와 상업세계로 흘러들어 가는 추가적 수량의 금은 처음에는 광산 소유주에게서 거래를 통해 그 사람과 거래하는 사람들의 수중으로 가게 될 것이다. 만약 우리가 전(全) 공동체를 네 집단, 즉 금광 소유자들,

사치재 생산자들, 여타 생산자들, 농업인들로 도식적으로 분류한다면, 첫 두 집단은 화폐가치의 감소로부터 유발되는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며, 그중에서도 전자가 후자보다 더 큰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셋째 집단에 도달하는 순간, 상황은 변한다. 두 집단의 증가된 수요의 결과로 인해 이 집단이 얻은 이윤은 이미 어느 정도 사치재들의 가격들의 상승—그것이 여타 재화들에 영향을 미칠 무렵 그 평가절하의 완전한 효과를 경험하게 될—에 의해 상쇄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넷째 집단으로서는, 그 전체 과정은 오직 손실만을 초래한다. 농부들은 모든 공산품들에 대해 자신들이 농산품 가격의 증가를 통해 보상을 받기 이전에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해야 할 것이다. 마침내 농산품 가격들이 증가할 때 농부들의 경제적 곤경의 시기는 끝날 것임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들이 전던 손실들을 만회해 줄 정도로 이윤을 확보하는 것은 더 이상 가능하지 않을 것이다. 다시 말해, 그들은 그들의 증가된 수입을 사용하여 화폐가치의 과거 수준에 상응하는 가격으로는 상품들을 구매할 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전 공동체를 통해 가격의 상승이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농부들이 여전히 예전 가격으로 그들의 생산물을 판매하지만 다른 사람들의 제품들에 대해서는 새로운 높은 가격을 지불하였을 때 그들이 겪은 손실은 보상되지 않은 채 남게 된다. 광산 소유자들과 이들과 가장 가깝게 연결된 집단이 누린 이윤의 원천을 구성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바로 화폐가치의 변동과정에서 마지막으로 발생하는 이 (농부) 집단들의 손실들인 것이다.

화폐의 객관적 교환가치의 변동이 서로 다른 재화와 서비스들에 동시에 동일한 정도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사실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과 부의 분배에 대한 효과들은, 관련된 화폐가 금속화폐이든 법정화폐 혹은 신용화폐이든 아무런 차이가 없다. 통화권(通貨券, currency note) 혹은 불태환 은행권의 발행을 통해 화폐가 진행될 때, 처음에는 단지 일부 경제주체들만이 혜택을 보며 추가적 화폐는 단지 점차 전 공동체를 통해 퍼져 나간다. 만약 예를 들어, 전시(戰時)에 지폐의 발행이 있었다면, 그 지폐는 먼저 전쟁 계약자들의 주머니로 들어갈 것이다. “그 결과, 이 사람들의 어떤 물품들에 대한 수요는 증가할 것이고, 이 물품들의 가격과 판매도 그럴 것이지만, 특히 사치재 품목들이 그럴 것이다. 그래서 이 물품의 생산자들의 지위도 개선될 것이며, 이들의 여타 상품들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고 그 가격들과 판매들도 그럴 것이며, 이 과정이 계속 끊임없이 배증된 숫자의 물품들로 이어져 마침내 모든 물품들에 이를 것이다.”¹⁷⁸⁾ 이 경우 예전과 마찬가지로, 인플레이션으로 이득을 보는 사람이 있고 이로 인해 손실을 입는 사람이 있다. 더 빨리 그의 화폐소득을 새로운 가치에 조정할 위치에 있을수록, 그에게 이 과정이 유리할 것이다. 어느 사람들, 집단들, 계층들이 여기에서 더 나은 결과를 얻을지, 더 나쁜 결과를 얻을지는, 각 개별 경우의 실제 데이터에 달려 있으며, 이에 대한 정보가 없이는 우리는 이에 대해 판단할 수 없다.

178) Auspitz and Lieben, *Untersuchungen über die Theorie des Preises* (Leipzig, 1889), p.65.

이제 고립된 국가의 사례를 벗어나 화폐수량의 증가에 따른 화폐가치의 하락으로부터 발생하는 국제적 움직임에 관심을 돌려보자. 여기에서도 그 과정은 마찬가지로이다. 가용 재화의 수량은 증가하지 않았으며, 단지 그 분배만이 변화한다. 새로운 광산들이 위치해 있는 국가와 그 국가와 직접 거래하는 국가들이 더 유리한 지위에 있다. 그들은, 국내에 이미 화폐가치의 하락이 발생한 시점에도 여전히 여타 국가들로부터 상품들을 과거의 낮은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기 때문이다. 새로운 흐름의 화폐가 가장 마지막 도착하는 국가들은 궁극적으로 다른 국가들의 증가된 복지의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그래서 유럽은 새로 발견된 미국, 호주, 그리고 남아프리카의 금 광맥들이 이 국가들에서 엄청난 부를 불러일으켰을 때 나쁜 거래를 했다. 수년 전 처녀림과 광야 외에는 아무것도 없던 곳에 밤새 궁전들이 솟아올랐다. 초원들을 가로질러 철로들이 놓였다. 조금 전만 하더라도 벌거벗은 유목민들이 살던, 그리고 많은 경우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물품도 예전에는 가지지 못했던 사람들이 있던 그런 지역에 시장이 형성되었다. 이 모든 부(富)가 새로운 식민주의자들, 운 좋은 채광업자들에 의해 예전의 산업국가들로부터 수입되었으며 수령되는 것만큼이나 자유롭게 지출된 금으로 지불되었다. 이 상품들에 대해 지불된 가격들이 화폐의 예전 구매력에 상응하였을 수준보다 더 높았음은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격들은 변화된 상황들을 완전하게 감안할 정도로 높지는 못했다. 유럽은 선박과 철도, 금속제품과 섬유류, 가구와 기계를 수출하였으며 그 대가로 유럽은 모든 화폐적 거래를 위해 이미 충

분히 존재하였기 때문에 별로 필요하지 않았거나 전혀 필요 없던 금을 수령하였다.


여타의 원인으로 초래된 화폐가치의 감축도 거의 유사한 효과를 가진다. 화폐가치 변동의 경제적 귀결은, 화폐가치 변동의 원인들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부터 사람에게로, 계층으로부터 계층으로, 그리고 국가로부터 국가로 천천히 진행되는 과정(過程)상의 속성에 의해 결정된다. 만약 우리가 특별히 이 책 제2부의 제8장에 묘사한 것처럼 가격을 올리는 판매자들의 행동으로부터 야기되는 화폐가치의 변동을 고려한다면, 우리는 이로 인해 초래되는 화폐가치의 점진적 감축이 가격들의 상승을 시작하는 집단들의 동기들 가운데 하나임을 발견할 것이다. 가격의 상승을 시작한 집단들은 다른 집단들이 궁극적으로 가격을 올리면 이것은 그만큼 자신들을 불리하게 만든다. 그러나 앞의 집단들이 높아진 가격을 받았던 시점은 그들이 구매하는 물건들의 가격들이 여전히 낮은 수준이었을 때였다. 이것이 그들이 누린 영구적인 이익이다. 이 이익은 자신들의 재화와 서비스의 가격을 가장 나중에 올리는 집단들의 손실과 균형을 맞추고 있다. 왜냐하면 이들은 이미 자신들이 판매하는 것에 대해 여전히 낮은 가격을 받고 있을 때 높아진 가격을 지불해야 했기 때문이다. 궁극적으로 그들도 자신들의 가격을 올릴 때, 그들은 이렇게 한 마지막 사람들이어서 공동체의 다른 계급들의 비용으로 자신들의 예전에 발생한 손실을 만회할 수 없다. 일반적으로 노동의 가격은 최초의 가격상승 단계에서의 가격상승에 동참하지 않기 때문에, 임금노동자들은 이런 상황에 처하

게 되는 데 익숙한 편이다. 여기에서 노동자들이 잃은 것을 기업가들이 얻는다. 오랫동안 공복(公僕)들은 유사한 상황에 처해 있었다. 그들의 엄청난 불평들은 부분적으로 이 사실에 기초해 있다. 그들의 화폐임금은 쉽게 상승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대개 가격들의 지속적 상승의 비용을 부담해야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이 상황은 공복들의 노조방식의 조직화로 인해 변화하였다. 이 조직화가 그들로 하여금 봉급의 인상에 대한 더 빠른 반응을 보장하도록 만들어 주었기 때문이다.

화폐가치의 평가절하에서 옳았던 명제의 역(逆)도 화폐가치의 상승에 대해 성립한다. 화폐의 평가절상은 화폐의 평가절하와 마찬가지로, 전 공동체를 통해 균질적으로 한꺼번에 갑자기 발생하지 않으며, 일반적으로 단일 계층에서 출발하여 점차 전 공동체로 퍼져 나간다. 만약 그렇지 않았더라면, 그리고 만약 화폐가치의 상승이 거의 동시에 전체 공동체에서 발생한다면, 여기에서 우리의 관심을 끄는 특별한 종류의 경제적 결과는 수반되지 않을 것이다. 예를 들어, 어떤 한 나라의 신용발생 기관들의 파산이 공황(panic)으로 몰아가고 있으며, 모든 사람이 현금을 수중에 넣기 위해 상품들을 어떤 가격에라도 기꺼이 팔고자 하는 반면, 다른 한편 크게 인하된 가격이 아니면 구매자들을 찾을 수 없다고 가정해 보자. 그와 같은 패닉(공황)의 결과로 초래될 화폐가치의 상승이 모든 사람들과 상품들에 균일하게 그리고 동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상상할 수는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화폐가치의 상승은 단지 점진적으로 퍼져 나간다. 그들이 구매하는 상품에 대해서는 예전의 높은 가격을 지불해

야 하는 반면, 판매하는 상품들에 대해서는 예전보다 더 낮은 가격에 스스로 만족하는 사람들 중 첫 번째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바로 화폐가치의 상승으로 손실을 보는 사람들이다. 그러나 그들이 판매하는 상품들의 맨 나중에 가격을 낮추어도 그동안 다른 물건들의 가격하락의 이득을 취했던 사람들이 바로 그 변화로 이윤을 얻은 사람들이다.

4. 두 종류의 화폐 간 교환비율의 변동에 따른 결과들

 화폐가치 변동의 결과들 가운데 경제학이 주로 관심을 가지는 것은 서로 다른 두 종류의 화폐 사이의 교환비율의 변동의 결과이다. 이 관심은 화폐 역사의 사건들로 인해 야기되었다. 19세기 국제무역이 과거에는 꿈꿀 수 없던 방식으로 발전하였으며 국가들 사이의 경제적 유대는 예외적으로 밀접하였다. 이제 상업적 관계들이 더 활발해지기 시작한 바로 그때 개별 국가들의 화폐적 기준들은 더 다양해지기 시작하고 있었다. 상당 수 국가들이 다소간의 길고 짧은 기간에 신용화폐로 이동해 갔으며, 부분적으로는 금과 부분적으로는 은에 기초했던 여타 국가들은 곧바로 어려움에 빠지게 되었다. 왜냐하면 수 세기 동안 단지 아주 느리게 변하던 이 두 가지 귀금속의 가치 사이의 비율이 갑자기 날카로운 변동을 보이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최근의 몇 년 동안 이 문제는 더구나 전쟁과 전후 시기들의 화폐적 사건들에 의해 더 큰 실제적 중요성을 가지게 되었다.

1 kg의 은이 10퀸탈(quintal)¹⁷⁹⁾의 밀과 교환되고 있었으며, 예컨대 매장량이 풍부한 새로운 광산의 발견으로 은의 객관적 교환가치가 절반으로 되자, 은 1kg이 더 이상 밀 5부셸(bushel)¹⁸⁰⁾ 이상을 구매할 수 없게 되었다고 가정해 보자. 서로 다른 종류의 화폐 사이의 자연적인 교환비율에 관해 말했던 것으로부터, 여타 종류의 화폐단위로 표현된 은의 객관적 교환가치도 이제 절반으로 되었을 것이다. 만약 예전에는 15kg의 은으로 1kg의 금을 구매할 수 있었다면, 이제 동일한 금의 구매를 위해 은 30kg이 필요할 것이다. 은의 객관적 교환가치는 절반이 된 반면 상품들에 대비한 금의 객관적 교환가치는 불변인 채 유지되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제 이런 은의 상품에 대한 구매력 변화는 한꺼번에 발생하지 않고 점진적으로 나타날 것이다. 어떤 지점에서 시작하고 외부로 점차 퍼져나가는 방식과 이 과정의 결과들에 대한 설명이 이미 충분히 이루어졌다. 지금까지 우리는, 이 결과들이 동일한 화폐기준을 지닌 어떤 한 지역 내부에서 발생하는 한에 있어, 이 결과들을 검토하였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여타 종류들의 화폐가 사용되는 지역들 내부에서의 상업적 관계들에 내포된 추가적 결과들에 대해 추적하여야 한다. 전자의 경우에 사실로 판명된 다음과 같은 사실은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예측될 수 있다. 즉, 만약 그 화폐의 객관적 교환가치의 변동이 균일하게 동시에 전체 공동체에 발생했다라면, 그와 같은 사회적 결과들은 전혀 나타나지 않았을 것이다. 이 변동들이 언제나 하나가 나타

179) 무게의 한 단위로 미터법에서는 100kg, 미국에서 100lb., 영국에서 112lb.

180) 부셸: 곡물, 과일 등의 중량단위; 8갤런, 약 36리터.

나고 그 후 다른 하나가 나타난다는 사실이 그런 현저한 경제적 효과들이 발생하는 단 하나의 이유이다.

주어진 종류의 화폐의 객관적 교환가치의 변동은, 이 변동이 (두 지역들 사이의 상업적 관계들의 대상이거나 혹은 적어도 가격들에 적절한 변화가 있으면 그런 대상이 될 수 있는) 상품들에 영향을 줄 때까지는 이것과 다른 종류의 화폐 사이의 교환비율의 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 상황이 발생하는 시점은—화폐의 객관적 교환가치의 변동으로부터 귀결될—두 지역들의 상업적 관계들에 대한 효과를 결정한다. 이 효과는, 국제무역에 관련된 상품들의 가격들이 여타 상품들의 가격들보다 먼저 혹은 이후에 화폐의 새로운 가치에 얼마나 적응하는지 그 정도에 따라 달라진다. 현대적인 화폐 시스템 아래서는 이런 조정은 보통 주식시장에서 먼저 이루어진다. 외환시장과 증권시장에서의 투기적 활동이 서로 다른 종류의 화폐들 사이의 환율에서 다가올 변동을 예측하는 시점은, 화폐가치의 변동이 결코 그 공동체 전체를 관통하지 않았고 이제 금방 시작되었을 뿐 아니라 아무튼 무역에서 결정적 역할을 하는 상품들에 영향을 미치기 이전인 시점이다. 적시에 그 과정을 제대로 파악하고 그에 따라 행동하지 못한 사람은 서툰 투기자(speculator)이다. 그러나 환율의 변동이 벌어지는 순간, 이 변화는 모든 재화와 서비스들의 가격들이 화폐의 이 새로운 객관적 교환가치에 적응될 때까지 특이한 방식으로 무역에 영향을 준다. 이 사이에 서로 다른 가격과 임금들 사이의 차이들은 어떤 사람은 받고 어떤 사람은 내주는 기금이 된다. 한마디로 우리는 여기에서 다시 한 번 재분배에 직면해

있는데, 이 재분배가 영향을 미치는 지역이, 객관적 교환가치가 변화하고 있는 그 재화가 국내 화폐로 고용되고 있는 지역으로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경계를 넘어선다는 점은 유의할 만하다. 이것이 화폐가치의 변동으로부터 유래하는 유일한 종류의 결과라는 점은 분명하다. 재화의 사회적 스톡은 전혀 증대되지 않았다. 분배될 수 있는 총량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변하지 않았다.

특정 종류의 화폐의 객관적 교환가치의 완성되지 않은 변동이 외환으로 표현되는 순간, 화폐의 구매력이 증가하거나 감소하느냐에 따라 수출업자 혹은 수입업자에게 새로운 이윤을 얻을 기회가 열리게 된다. 화폐가치가 감소하는 전자의 경우를 보자. 우리의 가정에 따르면, 국내 가격들의 변화는 아직도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수출업자들은 이 상황—즉, 그들이 판매하는 상품들이 이미 더 높은 가격들에 팔리는 반면, 그들 스스로 원하는 상품 및 서비스들과 특히 그들이 채택하는 원료와 개인적 생산요소들이 예전의 낮은 가격에서 여전히 구매될 수 있는 상황—으로부터 이득을 얻는다. 이 이득을 주머니에 넣는 그 ‘수출업자가 누구인지, 그 생산자인지, 혹은 수출상인지 여부는 우리의 현재 탐구에는 별 의미가 없다.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 것은 단지 주어진 상황에서 거래들이 누구에게는 이윤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는 손실을 가져다준다는 점이다.

아무튼 수출업자는 그의 이윤을 외국의 수입업자와 외국 소비자들과 함께 누린다. 그리고 그 수출업자가 보유하는 이윤은 단지 겉보기일 뿐, 실질적이지 않은 그런 경우도 심지어 가능하

다.—그것은 수출무역이 어떻게 조직되어 있느냐에 달려 있다.

그래서 그 결과는 언제나 외국 구매자들의 이득—어떤 경우에는 국내 수출업자들과 공유하는—이 전적으로 국내에서 감당해야 할 손실들에 의해 상쇄될 수 있다는 것이다. 화폐적 회계의 왜곡을 통한 수출의 장려는 화폐가치의 감소로부터 발생하는 ‘수출장려금’에도 적용된다는 점은 명백하다.

1. 화폐정책의 정의¹⁸¹⁾

☉ 화폐의 객관적 교환가치의 변동에 따라 나타나는 경제적 귀결들은 그 공동체와 개인들의 삶에 너무나 중요한 영향을 준다. 그래서 국가는 재정적 목적으로 화폐문제들에 대한 국가의 권위를 활용하려는 시도를 포기하는 순간, 현대 경제공동체의 대규모 개발로 인해 국가가 시장에서 선택된 화폐의 종류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된 순간, 이제 체계적 방식으로 그 결과들에 영향을 주어서 특정 사회경제적 목표들을 달성하려고 발상하는 것은 명백한 다음 수순이었다. 현대의 통화정책은 본질적으로 새로운 것이다. 그것은 종전의 화폐분야에서 국가가 하던 활동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예전에는 화폐문제들에 있어, 시민의 관점에서 좋은 정부란 상업세계의 누구에게도 액면가 그대로 수용될 수 있는 주화들을 잘 공급하게끔 화폐주조 업무를 하는데 있었다. 그리고 화폐문제에 있어 나쁜 정부는—다시 한 번 시민의 관점에서—시민들의 이런 일반적 신뢰를 국가가 배반하

181) [저자는 *Geldwertpolitik*이라는 용어를 위의 절에서 정의된 기술적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 나는 이 특별한 의미에 대해 화폐정책(*monetary policy*)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통화정책(*currency policy*)은 *Währungspolitik*이라는 용어를 번역하기 위하여 사용하였다. H.E.B.]

는 것을 의미하였다. 그렇지만 당시 국가가 화폐를 변조하였을 때, 그것은 언제나 순전히 재정적 동기에서였다. 정부는 재정적 도움이 필요했다. 그것이 전부였다. 정부는 통화정책의 문제들에는 관심이 없었다.

통화정책의 문제들은 화폐의 객관적 교환가치에 대한 문제이다. 어떤 화폐 시스템의 속성이 통화정책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속성이 이 화폐가치의 특별한 문제들과 연관되어 있어야 한다. 화폐의 법적 그리고 기술적 특성들이 의미가 있으려면, 그런 특성들이 화폐의 객관적 교환가치에 영향을 줄 수 있어야 한다. 화폐정책의 조치들은, 그것들이 화폐의 객관적 교환가치에 어떤 방향의 영향을 주려고 의도된 것인지를 살피는 관점에서만, 이해될 수 있다. 화폐정책 조치들은 결과적으로 단지 단일 상품 혹은 단일 집단의 상품들의 화폐가격들만을 변화시키려는 의도를 가진 경제정책 조치들과는 대조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화폐의 객관적 교환가치와 연관된 모든 가치문제가 통화정책의 문제는 아니다. 통화정책의 갈등들 속에는, 주로 화폐가치의 변동 그 자체에 관한 것이 아닌 관심사들도 많이 존재한다. 은(銀)의 비화폐화(demonetization)와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금(金)과 은(銀) 두 귀금속 간의 상대 교환비율의 변동과 관계된 일대(一六) 투쟁에서, 은 광산의 소유자들과 복본위제(혹은 은본위제) 주창자들이 모두 동일한 동기에서 자신들의 주장을 제기한 것은 아니다. 후자는 상품가격들의 일반적 상승이 있게 만드는 화폐가치의 변화를 원했던 반면, 은 광산 소유자는 은에 대한 광범

한 시장을 확보함으로써, 아니 좀 더 정확하게는 다시 획득함으로써 단지 상품으로서의 은의 가격상승을 원했던 것뿐이다. 철광이나 원유 생산자들로서는 그들 사업의 수익성을 높이는 철광이나 원유의 시장의 확대가 그들의 이해관계에 부합하듯이, 은(銀) 광산의 소유자들도 그렇게 하는 것이 그들의 이해관계에 부합하였다. 이것이 가치문제인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은 상품가치의 문제, 즉 금속 은의 교환가치를 증가시키려는 문제이지, 화폐가치의 문제는 아니다.¹⁸²⁾

그러나 이 동기가 통화 논쟁에서 일정한 역할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은 매우 부차적인 역할에 머물렀다. 심지어 가장 중요한 은(銀) 생산지인 미국에서도, 은 사업가(철강왕에 대비된 은왕)의 관대한 실제적 격려가 복본위제 선동을 가장 강력하게 지원한 요인들 중 하나였다는 정도까지만 그 동기가 중요성을 지니고 있었다. 그러나 은 캠프에 합류한 새로운 참여자들 대부분은 은(銀) 광산의 가치가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 때문이 아니라, 화폐의


182) 예를 들어 인쇄업자, 석판 인쇄업자 등의 유사한 이해관계가 지폐의 생산에 일부 역할을 할지 모른다. 아마도 그와 같은 동기들이 벤저민 프랭클린(Benjamin Franklin)이 익명으로 1729년 필라델피아에서 출판한 그의 첫 번째 정치적 저술에서 지폐의 증대를 제안한 것과 관계가 있을 수 있다. "A Modest Inquiry into the Nature and Necessity of a Paper Currency"(in *The Works of Benjamin Franklin*, ed. Sparks[Chicago, 1882], Vol.2, pp.253-277). 그가 뉴저지 지폐를 인쇄하기 직전,—"그가 그의 자서전에서 밝히고 있듯이(*ibid.*, Vol.1, p.73)—그의 팸플릿이 펜실베이니아에서 '부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지폐를 발행하기로 한 결정으로 이끌었을 때, 그는 지폐를 발행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그는 이에 대해 자서전에서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매우 수익성이 좋은 일이었으며 나에게 커다란 도움이 되었다. 이것은 나의 저술할 수 능력으로 인해 얻은 또 다른 이득이었다"(*ibid.*, p.92).

구매력 하락에 대한 기대 때문에 여기에 합류하였다. 은 가치의 증가는 그들에게 관심사가 아니었으며, 그들은 화폐의 구매력 하락으로부터 기적적인 결과가 도출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만약 은(銀) 가격의 상승이 화폐로서의 은의 사용의 확대를 통한 것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예를 들어 새로운 산업적 용도에 대한 수요의 창출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었다면, 은(銀) 광산의 소유자들은 화폐로서의 사용 확대 못지않게 만족했겠지만 은(銀) 통화를 주창했던 농부와 산업가들은 아무튼 이로부터 이득을 보지는 못했을 것이다. 그리고 의심의 여지없이 그들은 그들의 충성을 여타 통화정책들로 옮겨갔을 것이다. 그래서 많은 국가들에서, 지폐 인플레이션주의가 부분적으로는 복본위제의 선구자로서, 또 부분적으로는 복본위제와 결합되어 주창되었다.

그러나 비록 통화정책에 관한 질문들이 결코 화폐가치에 관한 질문들을 넘어서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진정한 정체는 때로는 비전문가들로부터 숨겨진 채 위장되기도 하였다. 여론은 화폐의 성격과 그 가치에 대한 잘못된 견해에 의해 지배되고 있으며, 그래서 오해로부터 나온 슬로건들이 명확하고 정확한 개념들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화폐와 신용체제의 섬세하고 복잡한 메커니즘은 불명료성에 싸여 있다. 주식시장의 절차는 미스터리며, 은행들의 기능과 중요성은 제대로 된 이해를 미꾸라지처럼 피해가고 있다. 그래서 서로 다른 이해관계자들의 갈등 속에서 제시되는 주장들이 자주 논점을 완전히 놓치는 것은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암호 같은 구절들은 아마도 그 말을 한 사람조차 그 의미를 알기 어렵게 표현되어 있어, 그 의도가 잘


드러나지 않는다. 예들 들자면, 미국인들은 “우리 조상들의 달러”라고 말하고 오스트리아인들은 “우리의 귀한 옛 굴덴 은행권”이라고 말한다. “보통 사람들의 화폐였던 은이 귀족들의 화폐인 금에 대항하여 맞섰다.”고 암호처럼 적혀 있다. 많은 평민 권리 옹호자들이, 많은 열정적인 강연에서 “불행으로 쇠약해 가는 비참한 인류를 구제하기 위해 광명 세상으로 나올 때를 깊은 은광 속에 묻혀 몸을 숨긴 채 기다리는” 은을 목소리 높여 칭송하였다. 그리고 일부는 금을 악(惡)의 원리 자체의 화신(化身)과 다르지 않다고 간주하였다. 이에 반해 다른 이들은 더욱 열광적으로 부강한 국가들의 유일한 화폐로서 자격을 유일하게 지닌 반짝이는 노란 금속 금을 찬양하였다. 논쟁의 양상은 사람들이 경제재의 분배를 두고 논쟁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귀 금속들이 서로 간에 그리고 종이에 대항해서 시장에서의 왕권을 얻으려고 투쟁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올림픽 투쟁, 즉 신들 사이의 투쟁과 같은 격렬한 투쟁이 화폐의 구매력을 변경시키는 문제가 아닌 다른 어떤 것에 의해 촉발되었다고 주장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2. 화폐정책의 수단들

 국가가 활용할 수 있는 화폐정책의 주요 수단은 화폐 종류의 선택에 대한 영향력의 발휘이다. 우리는 위에서 주조의 통제자로서 그리고 화폐대용물의 발행자로서의 국가의 지위는 현

대에 와서 국가로 하여금 교환의 공통 매개물에 대한 개인들의 선택에 대해 결정적인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 주었음을 보여 주었다. 만약 국가가 그 공동체로 하여금—국가 통화정책의 이유들로 인해 원하는—특정 종류의 화폐를 수용하도록 이 힘을 체제적으로 사용한다면, 국가가 실제로 어떤 한 화폐정책 수단을 실행하는 것이다. 한 세대 이전에 금본위제로의 전환을 완성한 국가는 화폐정책의 동기들로부터 그렇게 한 것이다. 그들은 은본위제도 혹은 신용화폐 본위제도를 포기한 까닭은 그들이 은 혹은 신용화폐의 가치의 움직임이 그들이 따르는 경제정책에 적합하지 않음을 인식하였기 때문이다. 그들이 금본위제를 채택한 까닭은 그들이 금의 가치의 움직임이 상대적으로 그들의 화폐정책을 수행하기에 가장 적합한 것으로 간주하였기 때문이다. 만약 어떤 한 나라가 금속본위제를 가지고 있다면, 그 나라가 스스로 수행할 수 있는 유일한 통화정책 조치는 다른 종류의 화폐로의 이전이다. 신용화폐와 법정화폐에 관한 정책은 그렇지 않다. 이 정책과 관련해서는 국가는 화폐의 수량을 증대시키거나 감소시킴으로써 화폐의 객관적 교환가치의 움직임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그 조치는 극도로 세련되지 못하며 그 결과의 정도도 미리 예견될 수 없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 강렬한 효과로 인해 그것은 쉽게 적용할 수 있고 또 일반인들에게 평판이 좋다.

3. 인플레이션주의

 인플레이션주의(inflationism)는 화폐 수량의 증가를 추구하는 화폐정책이다.

순진한 인플레이션주의는 화폐의 증가가 화폐의 구매력을 감소시킬지 모른다는 의구심도 품지 않은 채 화폐수량의 증가를 요구한다. 더 많은 화폐를 원하는 이유는 이 관점에서는 단순히 풍부한 화폐는 부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화폐를 찍어내라! 국가가 화폐를 ‘창조하게’ 하라, 그리고 가난한 자를 부유하게 만들고, 그들을 자본가의 사슬로부터 자유롭게 하라! 모든 이들을 부유하게, 결과적으로 행복하게 만들 기회를 날려 보낸다면, 얼마나 어리석은가! 국가의 화폐를 창조할 권리가 바로 그런 기회를 제공한다. 특히 이렇게 하지 않는 것이 단지 부자들의 이해에 역행하기 때문이라면 얼마나 나쁜 짓인가! 인색기를 통해 부를 창조하는 것은 국가의 권력 밖의 일이라고 단언하는 경제학자들은 얼마나 사악한가! 너희들 정치가들이여, 철도를 건설하고 싶은데 국고가 바닥나 있어 불평하고 있느냐? 그래 그렇다면 자본가들로부터 대부를 받으려고 빌지 말고 너의 철도가 너의 부채에 대한 이자와 할부금을 지불할 수 있도록 해 줄 만큼 충분한 수입을 주는지 열심히 계산하라. 화폐를 창출하라, 당신들은 당신들 스스로를 도와라.¹⁸³⁾

183) 최근 자동차 제조업자 헨리 포드, 발명가 에디슨, 그리고 미국 상원의원 래드(Ladd) 등이 제기한 이런 순진한 인플레이션 제안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고. Yves Guyot, *Les problèmes de la déflation*(Paris, 1923), pp.281f.

다른 인플레이션주의자들은 화폐수량의 증가가 화폐단위의 구매력을 감소시킨다는 것을 잘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화폐가치에 대한 인플레이션의 효과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확보하고자 노력한다. 그들은 통화가치의 하락(depreciation)을 원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채권자를 희생해서 채무자를 유리하게 하기를 원하며, 수출을 장려하고 수입이 어려워지게 만들고자 하기 때문이다. 또 다른 사람들이 통화가치 하락을 추천하는 까닭은 그들은 그것이 생산을 자극하고 기업하려는 의욕을 장려하는 속성이 있다고 가정하기 때문이다.

화폐의 가치하락은 그것이 예상되지 못한 경우에만 채무자를 유리하게 할 수 있다. 만약 인플레이션 조치들과 화폐가치의 하락이 예상된다면, 돈을 빌려 주는 사람들은 발생할 수 있는 그들의 자본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더 높은 이자율을 요구할 것이고, 돈을 빌리려는 사람들은 자본계정에서 이득을 예상하고 있으므로 더 높은 이자를 지불할 의사가 있을 것이다. 우리가 설 명했듯이, 화폐의 가치하락의 정도를 예견하기는 결코 가능하지 않으므로 비록 더 높은 이자를 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개별 경우들에서 어떤 채권자들은 손실을 볼 수도 있고 어떤 채무자들은 이득을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그 어떤 인플레이션 정책이건 상관없이, 그것이 갑작스럽게 그리고 예기치 못하게 그 효과를 내지 않는 한, 화폐수량을 증가 시킴으로써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관계를 후자에게 유리하게 변경시키기는 불가능할 것이다.¹⁸⁴⁾ 돈을 빌려 주는 사람들은,

184) 이것은 일찍이 1740년에 이미 윌리엄 더글라스(William Douglass)에 의해

손실을 회피하기 위해, 그 가치가 자신의 국가의 통화보다 더 안정적인 통화로 대부분 해 주든지 아니면 그들이 요구하는 이자율에 화폐가치의 예상되는 절하와 그로 인해 예상되는 손실, 그리고 발생할 가능성은 적지만 예상보다 더 큰 추가적 평가절하의 위험에 대한 프리미엄을 계산한 보상액 이상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느낄 것이다. 신용을 추구하던 사람들은 이 추가적 보상을 지불하기를 거절하고 싶지만, 대부시장에서의 공급감소가 그들에게 이를 지불하도록 압력을 행사할 것이다.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인플레이션이 있던 시기에 저축은행들이 화폐의 구매력의 변동이라는 변화된 조건들에 이자율을 조정하고자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축예금이 감소했다.

앞 장에서 우리는 이미 화폐의 가치인하가 생산을 자극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류임을 설명하였다. 만약 통화가치를 인하한 어떤 경우의 특정 조건들이 가난한 사람들로 부터 부자에게로 부가 이전되는 효과를 낸다면, 저축은(그리고 결과적으로 자본 축적이) 아마도 장려될 것이고 생산은 결과적으로 자극이 될 것이며 후손들의 복지는 증가할 것이다. 경제사의 초기 시대에 약간의 인플레이션이 때로는 이런 효과를 지녔을지 모른다. 그러나 자본주의의 발달이 화폐대부(은행과 저축은행의 예금들과 채권들, 특별히 보유자 채권(bearer bonds), 주택저당 채권(mortgage bond))를 더 많이 만들수록, 저축수단들이 더 중요해질수록, 통화가치의 절

그의 다음과 같은 익명의 글을 통해 종용되었다. *A Discourse Concerning the Currencies in the British Plantations in America* (Boston, 1740). 이와 관련해서 다음도 참고. Fisher, *The Rate of Interest*, p.356.

하는 필연적으로 저축동기를 감소시킴으로써 자본축적을 위태롭게 만들었다. 어떻게 화폐의 가치인하가 경제계산의 왜곡을 통해 자본소비가 귀결되게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통화가치 절하가 만들어 내는 겉보기의 붐이 하나의 환상인지, 그리고 어떻게 화폐가치의 절하가 정말 무역에 작용을 하는지는 마찬가지로 앞 장에서 이미 설명하였다.

세 번째 인플레이션주의자 집단은 인플레이션이 심각한 손실을 수반한다는 것을 부정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경제정책의 목표로 건전한 화폐 시스템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인플레이션이 커다란 해악임에도 불구하고 최대의 해악은 아니라고 생각하며, 국가가 어떤 상황들 아래에서는 더 작은 해악인 인플레이션을 가지고 더 큰 해악에 반대해되는 위치에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적에 대항해서 조국을 방어하거나, 기아로부터 굶주린 이들의 구제문제가 걸려 있을 때 그 비용이 얼마이든 통화를 발행하고 보자고 제안한다.

때로는 이런 종류의 조건부 인플레이션은, 인플레이션이 일종의 조세인데 특정한 상황 아래에서는 추천할 만한 것이라는 주장에 의해 지지되기도 한다. 일부 조건들 아래에서는, 이 주장에 따르면, 공공지출을 새로운 은행권의 발행으로 충당하는 것이 조세의 부담을 증대시키거나 기채하는 것보다 더 좋다고 한다. 이것은 전시(戰時)에 육군과 해군에 대한 지출이 충당되어야 할 때 제기된 주장이다. 그리고 이것은 독일과 오스트리아에서 전후에 인구의 일부에 대해 값싼 음식이 제공되어야 할 때, 철도 운영과 여타 공공사업의 손실이 충당되어야 할 때, 전쟁배상

금을 물어야 할 때 제기된 주장이다. 정부는 조세부담을 올리기를 꺼리거나 기채(起債)할 수 없을 때, 인플레이션으로부터 도움을 받고자 하였다. 이것이 사태의 진상이다. 다음 단계는 왜 그 두 가지 공공 목적을 위한 돈을 모으는 통상적 방법들이 채택될 수 없거나 채택되지 않는 것인지를 탐구하는 것이다.

높은 세금은 오로지 그 조세를 부담하는 주체들이 그 조세를 통해 만들어진 자원들을 지출하고자 하는 목적에 동의할 때에만 부과될 수 있다. 여기에서 총조세 부담이 더 커질수록, 그 공동체의 소수의 부유층에 대해서만 조세의 전체 부담을 지우기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에 대해 일반 대중을 속이기 더 어려워진다. 부자 혹은 재산에 대한 과세는 그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주며, 더 가난한 계층에게 그 최종적 결과들은 공동체 전체에 대해 부과되는 조세의 결과보다 더 가혹할 때가 많다. 이 시사점들은 아마도 세금의 수위가 낮을 때는 파악하기가 더 어렵겠지만, 세금의 수위가 높게 되면, 사람들이 이를 인식하지 않게 하기가 어렵다. 게다가 어떤 국가가 인플레이션을 추구하는 국가들에 의해 수행되는 것보다 더 심하게 주로 '소유에 대한 과세'에 의존하는 시스템을 수행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며, 추가적인 (부자에 대한) 과세는 이것이 일반 대중의 부담으로 귀착된다는 사실을 더 이상 감추기 어렵게 만든다. 그래서 이런 조세 귀착의 사실의 은폐가 대중의 지속적인 지지를 확보하는 데 반드시 필요하지만 더 이상 은폐할 수 없게 된다. 유럽의 호전적인 국민들조차, 만약 그들의 정부가 국민들 앞에 전비 지출명세서를 당시에 명백하고도 솔직하게 내어놓았다더라면, 아마도 훨씬

더 빨리 전쟁에 염증을 느꼈을 것임을 누가 의심하겠는가? 어떤 유럽 국가에서도 전쟁 지지 정당이 감히 대중에게 전비를 조달 하기에 어울릴 정도로 조세를 부과하지는 못했다. ‘건전화폐’(Sound Money)의 고전적인 국가인 영국에서조차, (지폐) 인쇄기들은 계속 돌아갔다. 인플레이션은 경제적 변영, 부의 증가의 외양을 보여 주고, 화폐로 이루어진 잘못된 계산들 그리고 자본의 소비를 숨겨 주는 커다란 이점을 가지고 있었다. 인플레이션은 기업가-자본가에게 유사 이윤들을 가져다주었으며, 그 유사 이윤들은 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어서 특별히 높은 세금이—일반 대중 혹은 실제 납세자 자신들조차도 자본의 일부가 그렇게 과세로 없어지고 있음을 알아보지 못한 채—부과되었다. 인플레이션이 사람들의 격노를 ‘투기자’와 ‘부당이득 모리배’에게 돌릴 수 있게 하였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은 자원을 파괴하고 인류를 죽이는 전쟁 정책의 뛰어난 심리적 자원임을 스스로 증명하였다.

전쟁이 시작한 것을 혁명이 계속하였다. 사회주의 혹은 반(半) 사회주의 국가는 지불되지 않는 사업들을 수행하기 위해, 실업자들을 보조하기 위해, 그리고 사람들에게 값싼 식료품을 제공하기 위해 화폐를 필요로 한다. 그러한 국가는 또한 과세를 통해 필요한 자원을 확보할 수 없다. 그래서 감히 국민들에게 진실을 말할 수 없다. 철도를 국가기관으로 운영한다는 국가사회주의 원칙은 만약 예를 들어 그 운영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특별세 부과가 제안된다면 곧 대중적 인기를 잃을 것이다. 그리고 독일과 오스트리아 국민들은, 만약 그들 스스로 그것들을 빵-조세의 형태로 공급해야 했다면, 빵을 값싸게 만드는 자원들이 어

다에서 오는 것인지 더 빨리 깨닫게 될 것이다. 마찬가지로, 대다수 독일 국민에 반대하여 ‘완수의 정책’(Policy of Fulfillment)을 하기로 결정한 독일 정부는 발권을 하는 것 이외에는 필요한 수단을 스스로 마련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리고 루르(Ruhr) 지방의 수동적인 저항이 엄청난 총액의 돈이 필요하게 만들었을 때, 이것들은, 다시 정치적 이유들로 인해, 단지 인쇄기의 도움을 받아 확보되어야 했다.

정부는 대부를 협상할 수 없고 감히 자세를 부과하기 어려울 때는 언제나 인플레이션적인 조치들에 의존해야 한다고 느낀다. 왜냐하면 만약 정부가 너무 일찍 그 정책의 재정적, 일반적 경제적 귀결들을 드러낸다면, 그 정부는 그 정책에 대한 일반 대중의 승인을 상실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은 그 결과를 숨겨야 하는 어떤 경제정책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심리적 자원이 되고 있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인플레이션은 대중적으로 인기 없는, 즉 반(反)민주주의적 정책의 수단이라고 불릴 수 있다. 왜냐하면 여론을 호도함으로써 인플레이션은 당시의 상황들이 명확하게 그들 앞에 드러난다면 사람들의 동의를 얻을 가망이 전혀 없는 정부 시스템의 지속적인 존재를 가능하게 해 주기 때문이다. 그것이 인플레이션의 정치적 기능이다. 그것은 왜 인플레이션이 언제나 전쟁과 혁명의 중요한 자원이 되어 왔는지, 그리고 왜 그것이 사회주의에 서비스하고 있음을 알게 되는지 설명해 준다. 정부들이 지출을 수입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발권을 통해 적자를 보충할 권리를 부당하게 사칭할 때, 그들의 이데올로기는 단지 가장된 전제

주의일 뿐이다.

인플레이션주의자들에 의해 추구된 다양한 목표들은 인플레이션적 조치들이 다양하고 특별한 방식으로 수행되기를 요구한다. 만약 통화가치 절하가 채권자의 희생 아래 채무자를 유리하게 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그 문제는 예기치 않게 채권자의 이익을 손상할 것이다. 우리가 보여 주었듯이 예상이 될 수 있는 정도까지는, 예견된 통화가치 절하는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관계를 변화시킬 수 없을 것이다. 화폐가치의 (예상된) 빠른 속도의 절하를 목표로 하는 정책은 채무자들에게 혜택을 주지 않는다. 만약 다른 한편, 통화가치의 인하가 '생산을 자극하기' 위해, 그리고 수출이 더 용이해지고 수입이 더 어려워지게 만들기 위해 필요하다면, 명심해야 할 점은 화폐가치의 절대적 수준—상품과 서비스들의 단위로 표현된 화폐의 구매력과 다른 종류의 화폐들에 대한 그 화폐의 교환비율—은 외부 (내부에서와 마찬가지로) 무역에서는 중요성이 없다는 사실이다. 화폐의 객관적 교환가치의 변동은 그것이 진행 중인 한에 있어서는 사업에 영향을 준다. 화폐의 가치절하가 무역에 미치는 '혜택을 주는 효과'는 그 가치절하가 모든 상품과 서비스들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에 있어서만 지속된다. 그 조정이 완결되고 나면, 이런 '유익한 효과들'은 사라진다. 만약 그런 효과들을 영구적으로 보유하기를 원한다면, 화폐의 구매력의 새로운 추가적 감소에 끊임 없이 의존해야 한다. 무수한 인플레이션주의 저술가들에 의해 잘못 가정되고 있는 것과는 달리 한 묶음의 조치들을 통해 화폐의 구매력을 낮추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단지 화폐가치의

연속적인 하락만이 그들이 염두에 두는 목표들을 영구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¹⁸⁵⁾ 그러나 이런 요구조건들에 상응하는 화폐 시스템은 실제로는 결코 실현될 수 없다.

물론 진정한 어려움은 연속적인 화폐가치의 인하로 인해 곧 너무 낮은 화폐가치가 되어 상업의 요구조건들을 더 이상 충족시킬 수 없게 된다는 사실에 있는 것이 아니다. 소수 계산 시스템은 오늘날 화폐 시스템들의 대부분에서 관행적이기 때문에, 일반 대중 중에서 더 계산에 밝지 못한 사람들조차도 더 높은 단위들의 시스템이 채택되었을 때 그 새로운 계산 시스템에서 별 어려움을 겪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화폐의 가치가 끊임없이 동일한 비율로 하락하고 있는 어떤 화폐 시스템을 매우 쉽게 상상할 수 있다. 이 화폐의 구매력이, 화폐 측에 놓여 있는 결정요인들의 변동을 통해, 1년 동안 연초에 비해 100분의 1만큼 줄어든다고 가정해 보자. 매년 새해 첫날에 그 화폐가치의 수준들은 감소하는 기하학적 수열을 이룰 것이다. 만약 우리가 첫해가 시작하는 날에 그 화폐의 가치를 100과 동등하다고 둔다면, 감소율은 0.99와 동등하고, n 번째 연말의 화폐의 가치는 $100 \times 0.99^{n-1}$ 이 될 것이다. 그와 같은 수렴하는 기하학적 진행은 무한수열을 보여줄 것인데, 수열의 각 요소는 언제나 다음 요소와의 비율이 100:99가 될 것이다. 우리는 쉽게 그와 같은 원칙에 기초한 화폐 시스템을 상상할 수 있을 것이다. 아마도 우리가 그 비율을 예를 들어 0.99에서 0.995, 심지어 0.9975로 증가시키면 더욱 쉽게 상

185) Hertzka, *Währung und Handel* (Vienna, 1876), p.42.

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명확하게 그런 화폐 시스템을 상상할 수 있을지라도, 그와 같은 시스템을 창출한다는 것은 확실히 우리의 능력범위 밖의 일이다. 우리는 화폐가치의 결정요인들을 알고 있다—아니 더 정확하게는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우리는 그 결정요인들을 우리 마음대로 쥐락펴락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렇게 하기 위해 필요한 가장 중요한 전제를 충족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즉, 화폐수량 변동의 결정요인들의 수량적 중요성을 알 정도는 아니다. 우리는 화폐의 공급과 수요의 비율의 어떤 특정한 수량적 변동들이 어떤 강도로 개인들의 주관적 가치평가들에 작동하는지, 또 주관적 가치평가들을 통해 간접적으로 그 (화폐)시장에 어떤 정도로 영향을 미치는지 계산해 낼 수 없다. 이것은 너무나 불확실해서 알 수 없는 문제이다. 화폐의 가치에 영향을 주는 어떤 수단을 고용하면서, 우리는 잘못된 분량의 약을 처방하는 위험을 안고 있다. 사실상 화폐의 구매력의 변동을 측정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으므로 이 점은 더욱 더 중요하다. 그래서 비록 대략 원하는 변화를 얻기 위해 우리가 작업해야 할 방향에 대해서는 우리가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여전히 그 길을 얼마나 더 가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아무 것도 말할 수 없다. 우리는 우리가 이미 어디에 있는지 발견할 수 없으며, 우리의 간섭이 무슨 효과들을 일으켰는지 혹은 실제 효과가 우리가 원하던 정도에 어느 정도로 비례하는지에 대해 아무것도 말할 수 없다.

이제 화폐가치에 대한 자의적인 영향력, 특히 화폐가치의 측

소의 경우에 정치적 영향력—즉 인간조직의 의식적인 간섭으로 부터 야기되는 영향력—을 지나치게 행사하는 데 따른 위험은 결코 과소평가되지 말아야 한다. 화폐가치의 큰 변동은 상업이—국가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화폐로부터 탈출하고 스스로 특별한 화폐를 선택하고자 하게 만드는 위험을 초래한다. 그러나 만약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개인들이 화폐의 구매력이 끊임없이 축소되고 있음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그에 따라 행동한다면, 사태가 이렇게까지 가지 않게 하면서 화폐가치의 변동의 모든 결과들이 배제되게 하는 것이 여전히 가능하다. 만약 모든 사업 거래들에서 그들이 화폐의 객관적 교환가치가 아마도 미래에는 어떤 것인지를 감안한다면, 신용과 상업에 대한 이 모든 효과들은 끝난다. 독일인들이 금의 단위로 계산하기 시작한 것에 비례하여, 추가적으로 이루어진 통화가치 인하는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관계를 변경시킬 수 없었으며 심지어 무역에 영향을 줄 수도 없었다. 금의 단위로 계산하는 것으로 넘어감으로써, 그 공동체는 스스로 정부의 인플레이션 정책으로부터 벗어났다. 그래서 그것이 이 인플레이션 정책을 좌절시켰으며, 궁극적으로 심지어 정부조차도 금을 계산의 기초로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인플레이션 정책을 수행하려는 모든 시도들 속에 필연적으로 내재된 위험은 과잉의 위험이다. 일단 화폐를 ‘값싸게 만드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가능하고, 허용될 수 있으며, 그리고 바람직하다는 원리가 인정되고 나면, 곧바로 이 원리를 어느 정도 수행할 것인지에 대해 가장 격렬하고 신랄한 논쟁이 발발할 것

이다. 이해 당사자들은 앞으로 취해야 할 조치들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이미 취한 조치들의 결과들에 대해 서로 다르게 볼 것이다. 어떤 인플레이션 조치도 격렬한 논쟁 없이 취해지기는 불가능하다. 사람들이 중용의 덕을 취하기는 실질적으로는 거의 불가능할 것이다. 그리고 심지어 인플레이션주의자들이 격리된 한 차례의 통화가치 인하조치의 유익한 효과들이라고 부르는 것을 확보하려고 시도하는 경우에도 이 애로사항들은 발생할 것이다. 말하자면 일련의 위기를 겪은 '생산'이나 채무자를 한 번의 통화가치 인하를 통해 지원하려는 경우에도, 동일한 문제들이 여전히 해결되어야 한다. 그것들은 화폐가치의 감소를 목표로 삼은 모든 정책에 수반할 것으로 감안되어야 할 애로사항들이다.

일관되게 그리고 끊임없이 지속된 인플레이션은 궁극적으로 붕괴된다. 화폐의 구매력은 계속 낮아질 것이고 마침내 궁극적으로는 완전히 사라질 것이다. 통화가치 하락의 끝없는 과정을 상상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이다. 우리는 화폐의 구매력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으면서 지속적으로 계속 낮아지고 가격들은, 은행권을 주고 상품들을 살 수 없을 정도가 되지 않으면서 가격들이 계속 높아지는 것을 상상할 수는 있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심지어 소매거래들조차도 수백 만, 수천 만 그리고 더 높은 숫자의 화폐단위로 이루어지는 상황으로 몰고 갈 것이다. 그러나 그 화폐 시스템 자체는 (상상 속에서는) 여전히 유지될 것이다.

그러나 그와 같은 상상의 상태는 가능성의 경계 속에 있기 어렵다. 장기적으로는, 지속적으로 그 가치가 하락한 화폐는 상업적 효용을 전혀 지니지 못할 것이다. 그것은 이연된 지불

(deferred payments)의 표준으로 사용될 수 없을 것이다. 현금으로 거래되지 않는 상품들 혹은 서비스들의 모든 거래들이 이루어 지려면 또 다른 매개물을 찾아야 할 것이다. 사실 계속 가치가 하락하는 화폐는 심지어 현금거래에서도 무용지물이 될 것이다. 모든 사람은 지속적인 손실의 원천인 현금 보유를 최소화하고자 한다. 들어오는 화폐는 가능한 한 빨리 지출되며, 가치가 낮아지는 화폐 대신 안정된 가치를 지닌 재화를 획득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구매들에서 심지어 그렇지 않았더라면 당시 시장 조건들에 상응하는 것보다 더 높은 가격들이 합의될 것이다. 전혀 필요하지 않거나 적어도 당시에는 필요하지 않는 상품들이 은행권을 보유하지 않기 위해 구매될 때에는 이미 은행권들을 교환의 일반적 매개물로서의 사용으로부터 밀어내는 과정이 시작되었다. 그것이 은행권들의 ‘비(非)화폐화’(demonetization)의 시작이다. 그 과정은 그 과정이 지닌 ‘공황 같은’ 성격으로 인해 더 빨라진다. 아마도 한 번, 두 번 아마도 서너 번 정도 일반 대중의 두려움을 진정시키는 것은 가능할지 모른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 일은 전 과정을 돌게 되며, 더 이상 되돌아갈 수 없게 된다. 일단 통화가치의 절하가 너무나 빠르게 진행되어 판매자들이 다시 가능한 한 재빨리 되사들인다 하더라도 상당한 손실을 예상하고 있다면, 그 통화의 통화로서의 지위는 이제 희망이 없어진다.

인플레이션이 급속했던 모든 나라들에서, 화폐가치의 하락이 화폐수량의 증가보다 더 빨리 발생했음이 관찰되고 있다. 만약 m 이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기 이전에 그 나라에 존재하는 명목화

폐의 수량을 나타내고, P 가 금의 단위로 표현된 당시의 화폐 한 단위의 가치를, M 이 그 인플레이션 동안 주어진 시점에서의 명목화폐 수량을, 그리고 p 가 그 시점에서의 금의 단위로 표현된 화폐 한 단위의 가치를 나타낸다고 해 보자. 그러면 단순한 통계적 연구들이 보여 준 것처럼 이들 사이의 관계는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mP > Mp$. 이것으로부터 그 화폐가 ‘너무 빨리’ 가치가 절하되었다는 것과 교환비율이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많은 이들이 이로부터 화폐수량설은 명백히 옳지 않으며 화폐의 가치절하는 그 수량의 증대에 따른 결과일 수 없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다른 이들은 그 원시적 형태로서의 화폐수량설의 진실성은 인정하지만, 총 금 가치가 그 인플레이션의 시작시점에서의 수준으로 회복될 때까지, 즉 $Mp = mP$ 가 될 때까지 화폐수량의 증가를 계속 허용할 가능성 혹은 심지어 그렇게 할 필요성을 주장하기도 하였다.

이 모든 것들 속에 숨겨진 오류를 밝히기는 어렵지 않다. 우리는 이미 언급된 사실, 즉 (금과 비율을 포함한) 환율들이 (상품들의 가격들에서 표현되는) 그 화폐단위의 구매력에 앞서 움직이고 그래서 금 가치가 아니라 상품들을 단위로 한 구매력—일반적으로 금 가치와 동일한 정도로 감소하지는 않는—이 (인플레이션) 조작의 기초로 채택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완전히 무시해도 될지 모른다. 왜냐하면 P 와 p 가 금의 단위가 아니라 상품들을 단위로 한 구매력으로 가치를 대변하는 형태로 계산하더라도 이것도 역시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mP > Mp$ 그러나 화폐가치의 절하가 진행되면서, 화폐(즉, 문제

가 되고 있는 그 화폐 종류)에 대한 수요는 점차 감소하기 시작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화폐를 손에 보유하는 시간의 길이에 비례해서 부(富)의 상실을 경험하게 되면, 사람들은 가능한 최대한 현금보유고를 감소시키려고 노력한다. 이제 만약 모든 개인은, 그의 상황들이 다른 측면들에서는 변화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더 이상 인플레이션이 시작되기 이전과 동일한 수준으로 현금보유를 유지하지 않고자 한다면, 오직 개인들의 수요의 총합일 수밖에 없는, 그 공동체 전체의 화폐에 대한 수요도 역시 감소한다. 상업세계가 점차 은행권 대신에 외국 화폐와 실제 금을 사용하기 시작함에 따라 개인들은 그들의 (현금)보유고의 일부를 외국 화폐와 금으로 보유하기 시작하고 더 이상 은행권으로 보유하지 않기 시작한다는 추가적인 사실도 있다.

화폐가치의 예상된 하락이 투기에 의해 예견됨에 따라, 그 화폐의 가치는 바로 지금의 화폐의 공급과 이에 대한 수요 사이의 관계에 상응하였을 수준보다 더 낮은 수준이 된다. 현재 유통 중인 화폐의 수량이나 화폐에 대한 현재의 수요에 상응하는 가격들이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미래 상황들에 상응하여 요구된다. 가게들이 이것 아니면 저것이라도 무엇이든 살 수 있을 때 사두려고 안달이 난 구매자들로 붐빌 때 지불되는 공황(恐慌) 가격들, 그리고 고정된 총액의 화폐를 대변하지 않는 외국 통화들과 증권들이 천정부지로 그 값이 뛰어오를 때 외환시장에서 나타나는 공황 환율들은 일련의 사건들이 우리 앞으로 빠르게 다가오고 있음을 미리 알려 준다. 그러나 사람들이 가상하고 있는 화폐의 미래 공급과 이에 대한 수요에 상응하는 가격들을 지불

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충분한 화폐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사업들이 은행권의 부족으로부터 고통을 당하고, 그때 이미 들어간 사업계획의 완수를 위해 충분한 은행권들이 존재하지 않는 일이 벌어진다. 교환비율을 변화시킴으로써 총수요와 총공급을 서로 조정되게 만드는 시장의 메커니즘은, 화폐와 여타 경제재들의 교환비율에 관한 한, 더 이상 기능하지 않는다. 기업들은 은행권의 부족으로부터 피부로 느낄 정도로 고통을 받는다. 이 나쁜 상태는, 일단 사태가 이 지경에까지 오게 되면, 어떤 방식으로든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은행권 발행을 추가적으로 증가시키는 것은 (많은 이들이 그렇게 하라고 추천하지만) 단지 상황을 악화시키는 데 불과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것이 그 공황의 확산을 가속화시킬 것이고 또한 통화 가치 절하와 통화의 유통 사이의 잘못된 조정을 강화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사업거래를 위한 은행권의 부족은 인플레이션이 진척된 단계에 왔다는 징후이다. 그것은 공황 구매와 공황 가격들의 반대 측면으로, (최종적으로는 경제적 재앙으로 나아갈) 일반 대중의 '황소 같은 공격성'의 반향이다.

상업을 이런 식으로 점차 무용지물이 되어 가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는 화폐로부터 해방시키는 것은 그 화폐를 화폐저장고에서 몰아내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알 수 없는 미래의 필요에 대해 교환성이 높은 재화를 자신들의 처분 아래 두기 위해 여타 화폐를 저장하기 시작한다.—아마도 귀금속 화폐와 외국 은행권들—예를 들어 러시아에서는 로마노프왕조의 루블 혹은 공산주의 헝가리의 '푸른' 화폐—그리고 때로는 더 높

은 가치를 가진 다른 종류의 국내 증서들(은행권)을 저장할 것이다. 그 까닭은 그것들은 그 국가에 의해 수량이 증대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서 아마도 그들은 주괴(鑄塊), 보석, 그리고 진주들, 심지어 그림들, 여타 예술품들, 그리고 우표들을 수집할 것이다. 이어지는 추가적인 조치는 외국 통화 혹은 금속화폐(즉, 모든 실제적 목적들로 보아, 금)를 신용거래에서 채택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국내 통화가 소매에서 사용이 중지될 때, 임금도 더 이상 아무 소용도 없는 종잇조각들로 지불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지불되어야 할 것이다.

미국에서 1781년에 그리고 프랑스에서 1796년에서처럼 극단으로까지 수행되었던 인플레이션 정책의 붕괴는 화폐 시스템을 붕괴시키지는 않았으나 자신의 정책의 유효성을 과대평가했던 그 국가의 신용화폐 혹은 법정화폐만을 붕괴시켰다. 그런 붕괴는 상업을 국가주의로부터 해방시키고 금속화폐를 다시 확립시킨다.

인플레이션주의의 정치적 목표들을 비판하는 것은 (경제)과학의 과제가 아니다. 채권자의 희생 아래 채무자를 유리하게 할 것인지, 수입을 방해하고 수출을 촉진시킬 것인지, 기업가들에게 부와 소득을 이전시킴으로써 생산을 자극시킬 것인지 등은 경제학이 대답할 수 없는 질문들이다. 오로지 화폐이론만을 수단으로 삼아서, 심지어 여타 경제학 도구들을 동원하더라도 정치적 목표들과 연관된 위의 질문들을 해명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인플레이션 정책의 가능성에 대한 우리의 비판적인 검토로부터 추론되는 세 가지 결론을 말할 수 있다.


우선 첫째, 인플레이션주의의 모든 목표들은 경제문제에 대한 여타 종류의 간섭으로도 성취될 수 있다. 바람직하지 못한 부작용도 없이 더 잘 성취될 수 있다. 만약 채무자들의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한다면, 지급유예(모라토리엄)가 선언되거나 대부를 상환할 의무가 완전히 제거될 수도 있다. 만약 수출을 장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 수출 프리미엄이 제공될 수 있다. 만약 수입이 더 어렵게 만들고 싶다면, 단순한 수입금지 혹은 수입관세 부과에 기댈 수 있다. 이 모든 조치들은 여러 계층의 국민들, 생산 부문들, 그리고 지역들 사이에 차별을 허용하는 것으로 인플레이션 정책으로는 할 수 없는 것들이다. 인플레이션은 부자들을 포함해서 채무자들을 유리하게 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포함해서 모든 채권자들에게 손실을 입힌다. 특별법에 의한 채무 부담의 조정은 (부자와 빈자 간) 차별화를 허용한다. 인플레이션은 모든 상품들의 수출을 촉진하며 모든 수입을 방해한다. 프리미엄(수출입 보조금), 관세, 그리고 금지는 차별적으로 채택될 수 있다.

둘째, 그 효과의 정도가 예견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인플레이션 정책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셋째, 계속된 인플레이션은 붕괴로 귀결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순전히 정치적 수단으로만 간주된다고 하더라도 인플레이션주의는 부적절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기술적으로 간주되었을 때, 그것은 나쁜 정책이다. 왜냐하면 그 목표를 완전하게 달성할 능력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며, 그리고 인플레이션주의는 그 목적이 아닌 혹은 적어도 언제나 그 목적의 일부가 아닌 결과들을 만들어 내기 때문이다. 인플레이션주의가 호의적

반응을 얻는 까닭은, 순전히 그 목적과 의도들에 관해 일반 대중의 의견이 가장 오랫동안 현혹될 수 있다는 상황 때문이다. 그 대중적 인기는, 사실 그 결과들을 충분히 이해하기 어렵다는 데 뿌리를 두고 있다.

4. 제약주의 혹은 디플레이션주의

 화폐의 객관적 교환가치의 상승을 목표로 하는 정책은, 실시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수단의 이름을 따라서 제약주의(restrictionism) 혹은 디플레이션주의(deflationism)라고 불린다. 이 호칭은 화폐가치의 상승을 목표로 하는 모든 정책들을 진정으로 포괄하지는 못하고 있다. 제약주의의 목표도 화폐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때 화폐수량을 증가시키지 않거나 충분히 증가시키지 않음으로써 도달될 수도 있다. 이 방법은 가치가 절하된 신용화폐 표준의 문제들에 직면해서 화폐의 가치를 상승시키는 방법으로 매우 자주 채택되었다. 그래서 화폐수량의 추가적인 증가가 정지되었으며, 그 정책은 화폐에 대한 증가된 수요의 화폐가치에 대한 효과들을 기다렸다. 아래의 논의에서, 광범한 관행을 따라서 우리는 화폐의 가치를 인상시키려고 취해진 모든 정책들을 언급하기 위해 제약주의와 디플레이션주의라는 용어들을 사용할 것이다.

인플레이션주의의 존재와 대중적 인기는 그것이 공공수입의 새로운 원천의 길을 터준다는 상황 때문이다. 정부들은 누군가에게 화폐정책의 관점에서 그들의 절차를 정당화하는 생각이

떠오르기 훨씬 이전에 재정적 동기에서 인플레이션(통화팽창)을 해 왔다. 인플레이션주의적인 주장들은 언제나 인플레이션적인 조치들이 국고에 어떤 부담도 부과하지 않을 뿐 아니라 실제로 국고에 자원들을 가져다준다는 사실로 인해 지지를 받아 왔다. 재정적 관점에서 보면, 인플레이션주의는 단지 가장 값싼 경제 정책이다. 그것은 또한 동시에 낮은 공공재정 상태에 대한 특별히 좋은 치유책이었다. 그러나 제약주의는, 만약 유통 중인 신용의 회수와 그 취소를 통해 (예를 들어 이자지불 채권들의 발행을 통해 혹은 과세를 통해) 실행된다면, 국고로부터 실제 부담을 요구한다. 그리고 화폐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시점에서 은행권의 발행을 금지함으로써 최소한 그것은 국고로 들어갈 수 있었을 잠재적 소득의 포기를 요구한다. 이것만으로도 왜 제약주의가 결코 인플레이션주의와 경쟁할 수 없었는지에 대한 설명으로 충분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약주의의 대중적 인기의 부재는 여타 원인들도 가지고 있다. 기존의 상황들에서 화폐의 객관적 교환 가치를 인상시키려는 시도들은 필연적으로 개별 국가들 각각으로 혹은 소수의 국가들로 제약되었으며, 기껏해야 전 세계를 통해 동시에 실현될 전망은 매우 작았을 뿐이다. 이제 다른 나라들이 그 가치가 하락하거나 정지하고 있는 화폐를 (혹은 비록 그 가치가 증가하고 있지만 동일한 정도로는 증가하지 않는 화폐를) 유지하고 있는 동안, 한 나라가 혹은 소수의 국가들이 구매력이 증가하는 화폐로 넘어가고자 하는 순간, 위에서 예를 들어 설명한 것처럼, 국제무역의 조건들은 수정된다. 화폐의 가치가 증가

하는 국가에서는 수출은 더 어려워지고 수입은 더 쉬워진다. 그러나 수출의 증가된 어려움과 수출의 증가된 용이성은, 간략하게 표현하면 무역수지의 악화는 보통 바람직하지 못한 상황으로 간주되어 왔으며 결과적으로 회피되어 왔다. 이것만으로도 화폐의 구매력을 증가시키려는 조치들이 왜 대중적으로 인기가 없는지 설명이 되었을 것이다.

이에 더해 외국무역에 대한 고려와는 별개로, 화폐가치의 증가는 지배계급의 이득에 부합하지 않았다. 그와 같은 증가로부터 직접적인 이득을 얻는 사람들은 고정된 금액을 수령할 권리를 가진 모든 사람들이다. 채권자들은 채무자들의 희생 아래 이득을 본다. 화폐가치가 증가함에 따라 조세가 더욱 부담스러워지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발생하는 이득 중 대부분은 국가가 아니라 채권자들이 확보한다. 채무자의 희생 아래 채권자들을 유리하게 하는 정책들은 결코 대중적 인기를 누린 적이 없다. 돈을 빌려 준 사람들은 어느 시대에나 어떤 민족들 사이에서도 혐오를 받았다.¹⁸⁶⁾

일반적으로 말해서, 그들의 소득을 전적으로 혹은 대부분 다른 사람들에게 빌려 준 자본에 대한 이자로부터 얻는 계층의 사람들은 특별히 별로 많지 않거나 어느 나라에서나 언제나 별 영향력이 없었다. 자본의 대부분으로부터 나오는 총소득 가운데 작지 않은 부분이, 그 소득이 주로 여타 원천들로부터 나오는 사람들, 그리고 자신의 예산에서 그것이 부차적인 역할만을 담당하

186) Bentham, *Defense of Usury*, 2d ed.(London, 1790), pp.102ff.

는 사람들에 의해 수령되었다. 예를 들어 저축예금이나 채권에 투자된 저축을 가지고 있는 노동자들, 농부들, 소기업인들, 공무원들의 경우에만 이것이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마찬가지로 대규모의 채권을 소유했던 많은 대기업인, 도매상, 주식보유자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다. 화폐 대부자로서 이들 모두의 이해관계는 지주들, 상인들, 제조업자들 혹은 피고용자들의 이해관계에 종속적이었다. 그래서 그들이 이자수준을 상승시키려는 시도에 대해 시큰둥하다는 것은 놀랄 일이 아니다.¹⁸⁷⁾

제약주의적 개념들은, 포기된 인플레이션 정책 대신 무엇이 그 자리를 차지할지 결정하는 것이 필요해질 때인 화폐의 가치 절하의 시기를 겪은 이후가 아니면, 결코 상당한 정도의 대중적 인기를 얻지 못했다. “현재가치로의 화폐의 안정화 혹은 인플레이션 이전에 화폐가 지녔던 수준으로의 재평가”와 같은 대안 중 일부로서 취급되는 경우를 제외하면, 제약주의적 개념들이 심각하게 받아들여진 적은 거의 없었다.

화폐가치의 안정화와 관련해서 질문이 제기될 때, 과거 금속 패리티로의 복귀를 하는 이유는 은행권이 본질적으로 그만큼의 금속화폐를 지불한다는 약속이기 때문이라고 보통 제시되었다. 신용화폐가 유래된 것은 언제나 (예전에는 언제든지 소지자가 요구하면 언제든지 태환될 수 있었고 이미 유통되고 있었던) 재무부 증권 혹은 은행권의 현금으로의 태환성의 일시적 정지에서였다. (때로는 그 일시 정지가 명목주화들 혹은 은행예금들에 대해서도 확대되었

187) Wright and Harlow, *The Gemini Letters*(London, 1844), pp.51ff.

다.) 이제 원래의 즉각적인 태환의 의무가 법에 의해 명시적으로 적혀 있는지 혹은 단지 관습에 기초하고 있는지 무관하게, 태환의 일시 정지는 언제나 아마도 용서될 수 있는, 그러나 정당화되지는 않는 법률의 위반이라는 외양을 취했다. 현금지급의 일시 정지를 통해 신용화폐가 되었던 주화나 은행권들은, 요구하면 지불되는 상품화폐의 총액에 대한 안전한 청구권인 화폐대용물로서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는 결코 유통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즉각적인 태환의 일시 정지는 언제나 단순한 일시적 조치로서 포고되었으며, 미래에 그 조치가 해제된다는 전망이 있었다. 그러나 만약 신용화폐가 단지 지불한다는 약속으로서만 간주된다면, ‘평가절하’는 법률의 위반, 혹은 국가부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밖에는 간주될 수 없다.

그러나 신용화폐는 단지 채무를 지고 있다는 인정(認定), 그리고 지불한다는 약속에 불과한 것은 아니다. 화폐로서, 그것은 시장의 거래에서 다른 지위를 가지고 있다. 그것이 하나의 청구권이 아니었다면 그것은 화폐대용물이 될 수 없었다는 것은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실제 화폐—신용화폐—가 되었을 순간, 그것의 미래 완전한 태환에 대한 다소간 불확실한 전망에 따라 가치를 부여받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약속했던 화폐적 기능으로 인해 가치를 부여받기 시작하였다. 미래의 현금지급에 대한 불확실한 청구권으로서의 훨씬 더 낮은 가치는, 교환의 공통된 매개물로서의 신용화폐의 더 높은 가치가 고려되는 한에 있어서는, 전혀 중요성을 지니지 않는다.

그러므로 통화가치 평가의 절하를 국가부도로 이해하는 것은 크게 핵심을 벗어난 것이다. 화폐가치의 현재의—저(低)수준으로의 안정화는, 심지어 단순히 기존 채무관계들에 미치는 효과라는 관점에서만 간주될 때에도 이것과는 다른 어떤 것이다. 이것은 국가부도보다 더 크면서도 동시에 더 작은 무엇이다. 먼저 그것이 국가부도보다 더 큰 것인 까닭은 그것이 공공채무뿐만 아니라 모든 민간채무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그것이 국가부도보다 더 작은 이유들 중 하나는, 그것이 현금(금속화폐)이나 외환으로 된 채무들에게는 영향을 주지 않는 반면, 신용화폐의 단위로 된 국가의 청구권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또 다른 이유는 그것이 그 통화가 낮은 수준에 있을 당시에 당사자들이 화폐가치의 상승을 계산하지 않은 채, 신용화폐를 단위로 이루어진 그 어떤 채무계약의 당사자들 사이의 관계에도 아무런 변화를 주지 않기 때문이다. 화폐의 가치가 증가한 때, 당시 신용화폐 혹은 신용화폐에 대한 청구권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더 부유해진다. 그들의 부의 증가는 채무자들에 의해 지불되어야 하며, 그 채무자들 속에는 국가(즉, 납세자들)도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화폐가치의 증가로 부유해진 사람들은 인플레이션의 와중에서 화폐가치의 하락으로 손해를 본 사람들과 동일인이 아니다. 그리고 화폐가치 증대 정책의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사람들은 화폐가치의 하락으로 혜택을 본 사람들과 동일인이 아니다. 디플레이션 정책을 수행한다고 해서 인플레이션의 결과들이 무효화되는 것이 아니다. 당신은 다시 새롭게 법을 위반함으로써 과거에 행해진 그 법의 위반을 보상할 수 없다. 그리고 채

무자들에 관한 한 긴축은 법의 위반이다.

만약 채권자들이 인플레이션 동안 겪은 손상을 보상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면, 이것은 확실히 긴축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덜 발달된 신용 시스템이라는 더 단순한 상황들에서, 인플레이션 이전에 그리고 그 기간 중에 계약된 채무들을 전환시킴으로써 그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날 길을 찾으려는 시도가 있었다. 그것은 바로 모든 채무를 원래 계약한 날의 금속화폐 단위로 그 신용화폐의 가치에 따라서 평가절하된 화폐로 다시 계산하려는 시도이다. 예를 들어, 금속화폐가 예전 가치의 5분의 1만큼 가치가 절하되었다고 가정한다면, 인플레이션 이전에 100굴덴을 빌린 사람은 안정화 조치 이후에는 100굴덴이 아니라 500굴덴을, 500굴덴에 대한 이자와 함께 갚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신용화폐가 이미 그 명목가치의 반으로 침몰한 당시에 100굴덴을 빌린 사람은 250굴덴과 250굴덴에 대한 이자를 상환해야 할 것이다.¹⁸⁸⁾ 그러나 이것은 단지 아직 유효한 채무만을 보상해 줄 뿐이다. 이미 평가절하된 화폐로 청산된 채무들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다. 고정된 화폐총액에 대한 채권과 여타 청구권들의 판매와 구매에 대해서는 우리는 아직 고려하지 않았다. 그리고 소지자 채권(bearer bond)의 시대에 이것은 매우 특별하게 심각한 단점이 아닐 수 없다. 마지막으로 이런 종류의 규제는 당좌계정(current-account) 거래에는 적용될 수 없다.

이것보다 더 좋은 어떤 것이 생각될 수 있는지 여부는 여기

188) Hofmann, "Die Devalvierung des österreichischen Papiergeldes im Jahre 1811," *Schriften des Vereins für Sozialpolitik* 165, Part I.

에서 우리가 논의할 문제는 아니다. 사실, 만약 채무자들이 겪은 피해에 대한 어떤 종류의 보상이라도 하는 것이 조금이라도 가능하다면, 그것은 명백히 그와 유사한 어떤 재(再)계산의 방법을 통해 추구될 것임은 틀림없다. 그러나 아무튼 화폐의 구매력을 증가시키는 것은 이 목적에 적합한 수단이 아니다.


신용정책의 고려들도 역시 인플레이션 시기의 시작 이전에 지배적이던 금속 패리티에 비해 화폐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데 호의적이다. 인플레이션으로 야기된 통화가치의 하락을 통해 채권자들에게 손해를 입힌 국가는 과거 수준의 가격들로의 복귀 이외의 방법으로는 무너진 신용에 대한 신뢰를 회복시킬 수 없다고 말해지고 있다. 이렇게 하여야 비로소, 국가가 새로이 돈을 더 빌려오려는 사람들이 그들의 국가에 대한 청구권의 미래 안정성에 대해 안심할 수 있다. 그래야 채권보유자들은 그 어떤 잠재적인 새로운 인플레이션도 궁극적으로 그들의 청구권을 감소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가정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이 끝난 이후 원래의 금속 패리티가 복귀될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 주장은 가장 중요한 소득의 원천이 세계의 은행가로서의 런던시의 지위였던 나라들 중 영국에 아주 특이한 중요성¹⁸⁹⁾을 가지고 있다. 영국 은행 영업이 영국 통화의 미래에 대한 불신에 의해 위축되지 않기 위해서는 영국 은행 시스템을 이용하던 모든 사람들이 영국 예금들의 장래 안

189) [이 영역본은 1926년에 출판된 독일어 판본을 기초로 했음을 기억해 둘 필요가 있다. 그러나 위의 영문판 서문의 영국정책에 대한 논의를 보라. H.E.B.]

정성에 대해 만족하고 있어야 했다고 말해지고 있다. 이와 같은 신용정책의 고려들에는 언제나 그렇듯이, 이 주장에는 상당히 의심스러운 심리에 대한 가정들이 많이 깔려 있다. 일부 손해를 본 채권자들—이미 그들의 청구권을 처분한 사람들—에게 전혀 혜택을 주지 않으면서 아무런 손실을 겪지 않았던 많은 채권자들—그들의 청구권을 통화가치의 절하가 시작된 다음 획득한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는 조치들에 비해 더 효과적으로 미래의 신뢰를 회복시킬 방법들이 있을지 모른다.

그러므로 화폐가치를 인플레이션 정책의 시작 이전의 수준으로 회복시키는 것을 지지한다고 제시되는 이유들이 결정적이라고 간주하기는 일반적으로 불가능하다. 특히 무역이 화폐가치의 상승에 의해 영향을 받는 방식을 고려할 때, 우리는 매우 조심스러울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오로지 가격들이, 아직 화폐 스톡과 이에 대한 수요 사이의 관계—화폐 수량의 증가로부터 초래된—에 완전히 조정되지 않은 곳에서만 그리고 그런 한에 있어서, 너무 과격한 반대에 직면하지 않으면서 과거 패리티로의 복귀로 진행해 나가는 것이 가능하다.

5. 화폐정책의 목표로서의 화폐의 객관적 교환가치의 불변성

 그래서 화폐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려는 노력은 실제적이 아니라고 판명되고 있다. 화폐가치의 상승은 일반적으로 단지 그 공동체의 작은 일부만이 요구하는 (것

처럼 보이는) 그런 결과들을 초래한다. 이런 목적을 가진 정책은 너무나 큰 이익들에 반(反)하는 것이어서 그 정책을 그런 큰 이익에 대항하여 장기적으로 목적을 유지하기는 어렵다. 화폐가치를 하락시키는 데 목적을 둔 간섭의 종류들은 더 대중적 인기가 있어 보인다. 그러나 그 목표는 더 쉽게 더 만족스럽게 다른 방식으로 달성될 수 있다. 비록 그 방법들의 실행이 상당히 극복하기 어려운 애로들을 만나게 되지만 말이다.

그래서 화폐의 객관적 교환가치의 증대나 축소 둘 다 모두 거절하는 것 이외에는 다른 대안은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 이것은, 화폐의 가치에 대한 화폐적 영향들에 관한 한, 불변의 교환가치를 지닌 화폐라는 이상(理想)을 시사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계몽된 정치가와 경제학자들의 이상적 화폐이지 대중들의 이상적 화폐는 아니다. 후자는 여기에 내재된 문제들을 파악할 수 있기에 너무나 혼동된 방식으로 사고한다. (이 문제들이 경제학에서 가장 어렵다는 점은 고백되어야 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그들이 인플레이션적 개념들에 기울어지지 않는 한) 화폐는 그 객관적 교환가치가 어떤 변동도—그것이 화폐 측면에서 혹은 상품 측면 중 어디에서 기인하는지는 상관없이—전혀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화폐의 공급과 이에 대한 필요(수요) 사이의 비율이 변동함에 따라 같이 변동하지 않는 (불변의) 교환가치를 지닌 화폐—즉, 불변의 내적 객관적 가치를 지닌 화폐(a money with an invariable *innere objektive Tauschwert*)¹⁹⁰라는 이상(理想)은 화폐가치의 결정

190) 상권 192면 각주 117)을 보라.


에 규제 당국의 간섭을 필요로 한다. 그것도 단 한 번의 간섭이 아니라 계속적인 간섭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여기에서 대부분의 심각한 의심들—이미 언급한 바 있지만, 우리가 화폐가치에 영향을 주고자 의도된 조치들의 수량적 중요성을 알 수 있는 유용한 지식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다는—이 그 상황으로부터 즉각 야기된다. 여전히 더 심각하기는 우리가 결코 정확하게 그 어떤 원인에서였든지 화폐의 교환가치에 변동이 발생했는지, 그리고 그와 같은 변화들이 화폐 측면으로부터 작용한 영향들에 의해 귀결된 것인지 여부에 대한 질문과는 상당히 별개로, 만약 그렇다면 그런 변동이 어느 정도로 일어났는지를 결정할 위치에 있지 않다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이런 의미에서 화폐의 교환가치를 안정화시키려는 시도들이 출발부터 좌절되지 않을 수 없는 까닭은 그들의 목표와 그 목표로 향하는 길 양자 모두 인간 지식이 결코 관통할 수 없는 암흑에 의해 어두워진다는 사실 때문이다. 그러나 화폐의 교환가치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간섭할 필요가 조금이라도 있는지에 대해 존재하게 될 불확실성, 그리고 그와 같은 간섭의 필요한 정도에 대한 불확실성은 필연적으로 인플레이션주의자들과 긴축주의자들의 갈등하는 이해관계에 완전한 면허증을 주게 될 것이다. 일단 국가가 화폐가치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주어야 한다는 원리가 용인되고 나면, 비록 단지 화폐가치의 안정성을 보장하려는 것이었음에도, 즉각 실수와 과잉의 위험이 다시 발생하게 된다.

이 가능성들과 공공재정과 인플레이션에서의 최근의 실험들의 기억은 불변의 교환가치를 가진 화폐라는 실현 불가능한 이

상을, 국가가 적어도 화폐에 대한 어떤 종류의 영향도 행사하려는 유혹을 삼가야 한다는 수요에 복속시켰다. 금속화폐로 사용될 수 있는 수량의 증대 혹은 감소가 의도적인 인간의 간섭으로부터 독립적인 금속화폐는 현대의 화폐적 이상(monetary ideal)이 되고 있다.

금속화폐 시스템 고수의 중요성은—그와 같은 시스템이 보장하는—국가의 영향으로부터 화폐가치의 자유에 있다. 의심의 여지 없이, 화폐의 공급과 이에 대한 수요의 비율의 변동뿐만 아니라 그 금속의 생산조건에서의 변동 그리고 그 금속에 대한 산업적 수요의 변동들이 화폐의 가치의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사실로 인해 이 시스템은 상당한 불리한 점들을 안고 있다. 이 효과들은, 금의 경우에는 (그리고 심지어 은의 경우에도), 터무니없이 크지 않으며, 금과 은은 현대에서 고려될 필요가 있는 유일한 두 화폐적 금속인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심지어 그 효과들이 더 크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화폐는 여전히 국가 간섭 아래 놓여 있는 화폐에 비해 선호될 만한 가치를 지니고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후자와 같은 종류의 화폐는 여전히 더 큰 변동들 아래 놓여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6. 화폐정책의 한계


 우리의 화폐정책의 발달과 중요성에 대한 탐구의 결과들은 우리를 놀라게 하지 않음에 틀림없다. 국가는, 소득의 분배에

영향을 주기 위해 어느 정도 화폐의 객관적 교환가치의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힘을 한동안 사용한 이후, 더 이상 그런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포기했어야 했다. 이 사실은 생산수단의 사적 재산권에 근거하고 있는 사회적 질서에서의 국가의 경제적 기능을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들에게 이상하게 보이지 않을 것이다. 국가는 시장을 지배하지 않는다. 제품들이 교환되는 시장에서는 강력한 주체가 되는 것은 가능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단지 많은 경제주체들 중 하나일 뿐 그 이상이 아니다. 시장에서 결정되는 경제체들 사이의 교환비율들을 변형시키려는 모든 시도들은 단지 시장의 수단들을 가지고 취해질 수밖에 없다. 어떤 특정 간섭의 결과가 정확하게 어떤 것인지는 결코 예견될 수 없다. 그러한 간섭은 원하던 정도로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없다. 왜냐하면 수요와 공급에 영향을 주기 위해 활용하는 수단들은 단지 개인들의 주관적 가치평가라는 매개를 통해서 가격을 매기는 과정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가치평가들에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변형의 정도에 대해서는 그 어떤 판단도, 그 간섭이 될 중요한 소수의 상품들에 제한된 작은 것일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루어질 수 없으며 그런 작은 간섭의 경우에도 단지 대략적으로만 판단할 수 있을 뿐이다. 화폐의 객관적 교환가치의 변동에 영향을 주기 위해 취해진 모든 화폐정책 조치의 효과들은 미리 예견될 수도 없으며, 그런 조치가 이미 취해진 후에도 그 효과의 속성과 크기가 결정될 수 없다.

이제 (금속상품 통화의 보유에 내재된) 화폐정책의 근거들 위에서

이루어진 간섭의 거부가 완결된 것은 아니다. 신용수단의 발생에 대한 규제에서 화폐의 객관적 가치에 영향을 줄 또 다른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야기하는 문제들을 먼저 탐구하고 난 다음(다음 제3부), 우리는 그 제도 아래에서는 화폐가치가 금 통화 시스템에 비해 더 안정적일 것이라고 최근에 선언된 어떤 한 화폐체제의 설립에 대한 계획을 검토할 것이다.

7. 보론: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 개념

 주의 깊은 독자들은 이 책에서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혹은 제약 혹은 긴축)과 같은 용어에 대한 정확한 정의가 내려져 있지 않다는 사실에 아마도 놀랐을 수 있다. 그리고 그 용어들이 별로 쓰이지 않거나 단지 특별히 정의의 정확성에 의존할 필요가 없는 곳에서만 쓰인다는 사실에 아마도 놀랐을 수 있다. 단지 인플레이션주의와 디플레이션주의(혹은 제약주의)가 언급되고 있으며, 이 표현들에 의해 암시된 개념들에만 정확한 정의가 내려져 있다.¹⁹¹⁾ 명백히 이런 절차는 특별한 정당화를 필요로 한다.

나는 인플레이션이라는 표현의 채택에 반대하여 제기되는 이 용어를 아예 쓰지 말자는, 보통 영향력 있는 목소리들¹⁹²⁾에 결코 동의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것은 그 단어를 쓰지 않더라도

191) 상권 3. 인플레이션주의(338면 이하)와 4. 제약주의 혹은 디플레이션주의(356면 이하)를 참고하라.

192) 특히 Pigou, *The Economics of Welfare*(London, 1921), pp.665ff. 참고.

별문제가 없는 표현이라는 점, 그리고 화폐와 은행에 관한 순수 경제이론에서의 의미와 통화정책에 관한 일상의 논의에서의 의미 사이에 심각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라는 표현을 그 단어의 날카로운 과학적 엄밀성이 바람직한 곳에서 사용하는 것이 매우 위험할 것이라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

이론적 탐구에서는 인플레이션이라는 표현에 합리적으로 부여될 수 있는 의미는 다음 단 하나뿐이다. 즉—(광의의) 화폐에 대한 수요의 상응하는 증가에 의해 상쇄되지 않은, 그렇기 때문에 화폐의 객관적 교환가치의 하락을 반드시 수반하는—(광의의) 화폐의 수량의 증가. 다시 한 번, 디플레이션(혹은 제약주의 혹은 긴축)은 다음을 의미한다. 즉—(광의의) 화폐에 대한 수요의 상응하는 감소에 의해 상쇄되지 않은, 그렇기 때문에 화폐의 객관적 교환가치의 상승을 반드시 수반하는—(광의의) 화폐수량의 감소. 만약 우리가 이 개념들을 이렇게 정의한다면, 인플레이션 혹은 디플레이션은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다. 왜냐하면 화폐의 객관적 교환가치가 변화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 매우 오랫동안 지속되기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우리의 정의의 이론적 가치는, 화폐의 객관적 교환가치의 변동을 측정할 수 없다고 해서 혹은 심지어 우리가 그 변동들이 클 때를 제외하고는 그 변동들을 구분해 낼 수 없다고 해서, 조금이라도 감소하지 않는다.

만약 이 원인들로부터 기인하는 화폐의 객관적 교환가치의 변동들이 너무나 커서 더 이상 관찰되지 않을 수 없다면, 경제정책의 토론에서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혹은 제약, 혹은 긴축)을 말하는 것이 보통이다. 이제 그 실제적 중요성이 매우 큰 이

토론들에서, 유일하고 엄격하게 과학적인 기준에 부합하는 이 엄밀한 개념들을 사용하는 것은 그런 토론의 목적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 나라 혹은 다른 나라에서 인플레이션이 1914년 이후 발생했는지에 대한 논쟁에서 다음과 같이 말함으로써 경제학자들이 기여하고자 시도하는 것은 경멸스러운 현학이 될 뿐이다. “실례합니다만, 1896년 이후 전 세계를 통해 비록 소규모이지만, 아마도 인플레이션이 있었을 것입니다.” 정치에서 (어느 정도로 실행할 것인지를 따지는) 정도의 문제(the question of degree)는, 원리의 문제인 이론에서와는 달리 때로는 전체 문제이기도 하다.

그러나 일단 경제학자가 화폐의 객관적 교환가치의 큰 변화들을 환기시키는 화폐수량의 그와 같은 변동들을 나타내는 데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이란 표현들을 사용하는 것이 완전히 무의미한 것은 아니라고 인정하고 나면, 그는 순수이론에서 이 표현들을 사용하는 것을 포기해야 한다. 왜냐하면 교환비율의 어떤 변화가 ‘크다’고 불릴 자격을 가지기 시작하는 그 시작점은 정치적인 판단의 문제이지 과학적 연구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개념들이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이라는 용어의 대중적인 용법에 묶이게 된다는 것은 논의할 여지없이 명백하다. 이 대중적 용법이 경제학적 연구에 기어들어올 때에는 우리는 명백히 이 용법들이 경제학 연구에서는 완전히 부적절하므로 이에 투쟁해야 한다. 일상 용어에서, 이 표현들은 화폐가치의 안정성이라는 완전히 지지될 수 없는 개념에 기초해 있으며, 또한 (화폐

수량이 상품수량의 증가와 감소에 비례해서 증가하고 감소하는) 화폐 시스템에 화폐가치를 안정되게 유지하는 속성을 부여하는 개념들에 기초해 있을 때도 많다. 그러나 이 오류가 심하게 비난을 받아야 마땅하다 할지라도, 최근의 가격들의 엄청난 변동들의 원인에 대한 통속적인 오류들과 투쟁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첫 번째 관심사는 일반적으로 화폐의 본질의 문제에 대한 올바른 견해를 보급하는 데 있다기보다는, 사람들이 계속 믿게 되면, 결국 재앙적 결과들을 반드시 만들어 낼 근본적인 오류들을 반대하는 데 있다는 사실은 부인될 수 없을 것이다. 1914~1924년 사이에 인플레이션 정책의 지속에 반대하기 위해 독일에서 수지균형이론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던 사람들은, 만약 그들의 동 시대인과 계승자들이 언제나 인플레이션이란 단어의 사용에 있어 매우 엄격하게 과학적이지 않았다면, 이 용어들에 대한 이들의 탐닉을 주장할지 모른다. 사실 이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이라는 용어의) 탐닉—우리는 화폐문제들을 다루는 소책자와 글들에 대해 이런 탐닉을 단련시킬 의무가 있다—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과학적 논의에서 이 오해를 유발하는 표현들의 사용을 자제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든다.

1. 국가주의 화폐 이론

☞ 국가주의는 하나의 이론으로서는 국가의 만능 원칙이며, 하나의 정책으로서는 모든 세속의 세상사를 권위적인 명령과 금지에 의해 규제하려는 시도이다. 국가주의의 이상적인 사회는 특별한 종류의 사회주의 공동체이다. 이 이상적 사회가 개재된 논의에서는 국가사회주의(State Socialism) 혹은 어떤 맥락에서는 크리스천 사회주의(Christian Socialism)를 언급하는 것이 보통이다. 피상적으로 간주될 때에는 국가주의적인 이상적 사회는, 사회의 자본주의적 조직화에 의해 취하게 되는 외양적 형식과 그렇게 다르지 않다. 국가주의는 결코 생산수단의 모든 소유권을 기존 법률 시스템의 완전한 전복을 통해 국가소유로 형태적으로 변형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지 않는다. 단지 최대의 산업, 광산, 그리고 운송기업들이 국유화될 것이다. 농업, 그리고 중소기업 산업에서는 사적 재산권이 명목상 지속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기업들은 사실상으로는 국영이 될 것이다. 소유자들은 소유권의 직함과 위신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며, '그들의 지위에 합당하게' '합리적인' 소득의 수령에 대한 권리는 주어질 것임은 사실이다. 그러나 사실상 모든 기업은 정부 사무소로 변

화될 것이며 모든 생업은 공식적(관료적) 직업으로 변화될 것이다. 어떤 종류의 국가사회주의 아래에서도 독립적인 기업에 대한 여지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가격은 권위적으로 통제된다. 당국은 무엇이 생산되고, 어떻게 생산되며, 얼마나 생산할지 고정한다. 투기, '과잉' 이윤, 손실이 전혀 없을 것이다. 당국에 의해 명령되지 않는 한 혁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공무원들이 모든 것을 명령하고 감독할 것이다.¹⁹³⁾

인류를 국가주의의 특별한 사회주의적 이상에 부합하지 않는 다른 방식으로 함께 살아간다는 것 자체를 상상할 줄 모른다는 것이 국가주의의 특이성 가운데 하나이다. 국가주의의 이상과 패턴인 사회주의 국가와 생산수단의 사적 재산권에 기초한 사회질서 사이에 존재하는 피상적인 유사성은 국가주의로 하여금 이 둘을 갈라놓는 근본적 차이점들을 간과하게 한다. 그 두 종류의 사회질서가 유사하다는 가정을 모순되게 만드는 모든 것에 대해 국가주의자들은 이것들을 일시적 혼동으로 간주한다. 그리고 이들은 권위적 명령에 대한 과잉한 위반에 대해서는 이것을 국가가 정부의 통제를 느슨하게 하였고 모든 것이 다시 아름다운 질서를 찾게 하기 위해 단지 그 통제를 더욱 확고하게 손에 잡기만 하면 된다는 증거로 간주한다. 인간의 사회적 삶은 특정의 한계들에 직면해 있다는 사실, 그것이 자연의 법칙들에 비견되는 일련의 법칙들에 의해 지배된다는 사실, 이런 것들은 국가주의자들에게는 알려지지 않은 개념들이다. 국가주의자들

193) 여기에 대해서는 다음의 나의 책을 참고, *Die Gemeinwirtschaft*, 2d ed., (Jena, 1922), pp.211ff.

에게는 모든 것이 권력(Macht)—권능, 강제력, 완력—의 문제이다. 그의 권력의 개념은 정제되지 않은 물질주의적인 것이다.

국가주의적 사고의 모든 단어는 사회학과 경제학의 원칙에 의해 모순된다. 이것이 왜 이런 과학들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증명하려고 국가주의자들이 노력하는 이유이다. 그들의 의견으로는 사회적 상태는 국가에 의해 그 모습이 만들어진다. 법으로 모든 것들이 가능하다. 그리고 국가 간섭이 전능하지 않은 그런 분야는 존재하지 않는다.

오랫동안 현대 국가주의자들은 그들의 원칙들을 화폐의 이론에 명시적으로 적용하지 않았다. 일부 사람들이, 특히 아돌프 바그너(Adolf Wagner)와 렉시스(Lexis)가 국내와 해외의 화폐가치에 대해 그리고 무역수지가 교환들의 조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화폐의 탄력적 이론의 모든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는—견해를 표명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언제나 매우 조심스럽고 유보적으로 견해를 표명하였다. 국가주의 원리들을 화폐원칙의 분야에 명시적으로 적용하려고 시도한 첫 번째 사람은 크나프(Knapp)였다.


국가주의 정책은—그 자체가 국가주의 이념의 지배가 낳은 불가피한 결과였던—제1차 세계대전의 기간 중 전성기를 맞았다. ‘전쟁경제’(War Economy)에서 국가주의의 기본원리는 실현되었다.¹⁹⁴⁾ ‘전쟁경제’와 ‘이행기 경제’(Transition Economy)는 국가주의가 어떤 쓸모가 있는지, 국가주의의 어떤 정책이 달성될 수 있

194) 이에 대해서는 다음의 나의 책을 참고. *Nation, Staat und Wirtschaft* (Vienna, 1919), pp.108ff.

는지 보여 주었다.

탄력적인 화폐원칙과 화폐정책의 검토는 개념의 역사에 한정되지 않는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그 모든 잘못된 성공에도 불구하고, 국가주의는 여전히, 적어도 유럽대륙에서는 지배적인 원리이다. 아무튼 그것은 지배자들의 원칙이며, 그 이상들이 화폐정책들에 널리 퍼져 있다. 그것이 과학적으로 가치가 없는 것이라고 우리가 아무리 확신하고 있더라도, 오늘날 그것을 무시하는 것은 우리에게 별 의미가 없다.¹⁹⁵⁾

2. 국가 위신과 환율

 국가주의자에게 화폐는 국가의 창조물이다. 그리고 화폐가 보유하는 신위는 국가가 누리는 존경 혹은 위신의 경제적 표현이다. 국가가 더 강하고 더 부유할수록 화폐도 더 낫다. 그래서 제1차 세계대전 중 승자의 “화폐 기준이 궁극적으로 최선의 화폐가 될 것”이라고 단언되었다. 그러나 전투에서의 승패는 단지

195) 카셀(Cassel)은 이렇게 옳게 말하고 있다. “화폐문제에 대한 완벽하게 명백한 이해는, 세계대전에 의해 비로소 초래되었는데, 관료들의 이 문제에 대한 이해가 눈점마다 하나씩 잘못되었음이 증명될 때까지는, 그리고 당국들이 가능한 한 오랫동안 일반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으려고 했던 모든 망상들 위에 철저한 빛의 조명이 비칠 때까지는 이런 완전한 이해는 결코 도달될 수 없었다”(Cassel, *Money and Foreign Exchange After 1914* [London, 1922], pp.7ff.). 가장 중요한 국가주의 주장들에 대한 그레고리(Gregory)의 비판은 그의 다음 저서를 참고. *Foreign Exchange Before, During and After the War*(London, 1921), esp. pp.65ff.


화폐의 가치에 간접적으로만 영향을 행사할 수 있을 뿐이다. 일반적으로 말해서 승전국은 패전국에 비해 인쇄기의 도움을 단념할 수 있다. 왜냐하면 한편으로는 지출을 제한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신용을 얻기가 더 용이할 개연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러나 동일한 고려들은 더 높아진 평화의 전망이 심지어 패전국의 통화도 더 유리하게 평가받도록 이끌 것임을 시사한다. 1918년 10월 마르크와 크로네가 올랐다. 심지어 독일과 오스트리아에서 인플레이션이 중지될지 모른다고 예견되었다—물론 그 예상은 널리 인정되듯이 충족되지 못했지만.

역사는 때로는 ‘승자의 화폐기준’이 매우 나쁜 것으로 판명될 수 있음을 마찬가지로 보여 준다. 영국 군대들에 대항하여 워싱턴의 지도 아래 있던 미국 반군에 의해 최종적으로 성취된 승리보다 더 찬란한 승리는 별로 없었다. 그러나 미국 ‘대륙’(continental)의 달러는 그런 승리로부터 혜택을 받지 못했다. 더 자랑스럽게 성조기(星條旗)가 높이 휘날릴수록 환율은 더 낮게 떨어졌으며, 마침내 반란군의 승리가 확보된 바로 그 순간, 그 달러는 완전히 무가치해졌다. 사건의 진행은 그리 멀지 않은 이후인 프랑스에서도 별로 다르지 않았다. 혁명군의 승리에도 불구하고, 금속 프리미엄은 지속적으로 상승해서 마침내 1796년에는 화폐의 가치가 영(零)에 달았다. 두 사례들 모두에서 승전국은 극도의 인플레이션 정책을 수행했다.

어느 국가도 한 나라의 부(富)가 그 화폐의 가치평가에 어떤 관계를 가지게 하지 않았다. 화폐기준을 그 국가 혹은 그 공동체의 몫과 같은 성격의 것으로 간주하는 확산된 습관보다 더 잘못

된 것은 없을 것이다. 독일 마르크가 취리히(Zurich)에서 10상팀(centime, 100분의 1프랑)의 시세를 형성했을 때, 은행가들은 말했다. “지금이 마르크를 살 때다.” 독일 공동체는 정말 오늘날 제1차 세계대전 이전에 비해 더 가난하다. 그래서 마르크의 낮은 가치평가는 정당화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의 부(富)는 확실히 그 전쟁 이전에 비해 12분의 1로 감소한 것은 아니다. 그래서 마르크는 상승하게 되어 있다. 그리고 폴란드 마르크가 취리히에서 5상팀으로 침몰했을 때, 다른 은행가들은 말했다. “이 낮은 수준은 설명이 불가능하다. 폴란드는 부유한 국가이다. 그 나라는 번창하는 농업을 가지고 있으며, 목재, 석탄, 석유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 환율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높아져야 한다.”¹⁹⁶⁾ 그와 같은 관찰자들은 화폐단위의 가치평가는 그 나라의 부가 아니라 화폐 수량과 이에 대한 수요에 의존하며, 그래서 심지어 가장 부유한 국가조차도 나쁜 통화를 가질 수 있으며 가장 가난한 국가도 좋은 화폐를 가질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3. 권위주의적 명령에 의한 가격규제

 가장 오래된 그리고 가장 대중적 인기가 있는, 국가주의적

196) 헝가리 소비에트 공화국의 지도자는 저자에게 1919년 봄 이렇게 말하였다. “소비에트 공화국에 의해 발행된 지폐는 정말 러시아 화폐 다음으로 최고 높은 환율을 마땅히 가져야 한다. 왜냐하면 모든 헝가리 사람들의 사적 재산권의 사회화를 통해, 헝가리는 러시아 다음으로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국가가 되었고 결과적으로 신용의 가장 높은 단계를 얻을 만하기 때문이다.”

인 화폐정책의 수단은 최고가격(maximum price)의 공식적 고정이다. 국가주의자는 이렇게 생각한다. 높은 가격들이란, 화폐수량의 증가의 결과가 아니라 ‘공격적 투자자들’(bulls)과 ‘모리배들’(profiteers)의 규탄받을 활동의 결과이며, 확실하게 가격들의 상승을 중지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음모를 억압하기만 하면 충분하다. 그래서 ‘과다한’ 가격을 요구하거나 심지어 그런 가격을 지불하는 행위는 처벌할 수 있는 법규위반으로 변한다.

대부분의 여타 정부들과 마찬가지로, 제1차 세계대전 중 오스트리아 정부는, 국가재정에 충당하려고 인색기를 돌리던 바로 그날 가격인상에 대해 이런 종류의 형사법 경쟁을 시작하였다. 처음에 그 정부가 이에 성공적이었다고 가정해 보자. 전쟁이 또한 상품들의 공급을 감소시켰다는 사실을 완전히 무시해 보자. 그리고 상품 측면으로부터 상품과 화폐 사이의 교환비율을 변경하게끔 작동하는 힘들이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다고 해 보자. 그리고 더 나아가 추가적으로 우리는 그 전쟁이, 화폐를 수송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증가시킴으로써, 그리고 청산 시스템의 작동을 제한시킴으로써, 그리고 여타 방식으로 개별 경제주체들의 화폐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켰다는 사실도 무시하기로 한다. 우리는 단지 다음의 질문만 논의할 것이다. 만약 다른 조건들이 불변일 때, 화폐수량의 증가가 있는 상태에서 가격들이 공식적 강제에 의해 과거 수준으로 제한된다면, 어떤 결과들이 필연적으로 수반될 것인가?

화폐수량의 증가는 시장에서—예전에는 존재하지 않던—새로운 구매욕구의 출현을 초래한다. 이를 두고 보통 ‘새로운 구매력’

이 창출되었다고 말한다. 만약 그 새로운 잠재적 구매자들이 시장에 이미 있던 사람들과 경쟁한다면, 가격을 인상하는 것이 허용될 수 없는 한, 단지 총구매력의 일부만이 행사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그들이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면서 시장을 떠나는 잠재적 구매자들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비록 그들이 요구된 가격에 기꺼이 동의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잠재적 구매자들은 집을 출발하면서 구매를 위해 가지고 갔던 화폐를 그대로 품고서 집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공식적 가격을 지불할 준비가 되어 있는 잠재적 구매자가 그가 원하는 상품을 획득할 수 있을지 여부는—시장의 관점에서는 비본질적인—모든 종류의 상황들에 달려 있다. 그 여부는, 예를 들어 그가 그 장소에 적시에 있었는지, 혹은 판매자와 개인적 관계가 있는지, 혹은 여타 유사한 우연적인 요소들에 달려 있게 된다. 시장 메커니즘은 더 이상 잠재적 구매자들 사이에 누가 여전히 구매할 수 있으며 누가 그렇지 않은지 구별하는 기능을 작동시키지 않는다. 시장 메커니즘은 더 이상 가격의 변동을 통해 수요와 공급의 일치를 이루어내지 않는다. 공급은 수요에 뒤처진다. 시장의 작동은 그 의미를 잃는다. 다른 힘들이 그 자리를 대신 차지한다.

그러나 새로 창출된 은행권을 유통시키는 정부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상품들과 서비스들을, 그것들이 종전에 사용되던 용도들로부터 가져와서 다른 (그들의 생각에) 바람직한 용도로 전환시키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 상품과 서비스들을 구매하기를 원한다. 또한 발권과 마찬가지로 충분히 상상할 수 있는 절차이지만 강제력으로 이 상품들과 서비스들을 징집하기는

원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정부는 모든 것이 화폐로, 그리고 오로지 화폐만으로 반드시 획득되기를 원함에 틀림없다. 일부 잠재적 구매자들이 그들의 목적물을 획득하지 못한 채 후퇴하게 만드는 상황이 시장에서 발생하는 것은 정부에 이득이 되지 않는다. 정부는 구매하기를 원한다. 그것은 시장을 사용하기를 원하는 것이지 시장의 조직을 파괴하고 싶지는 않다. 그러나 공식적으로 상품과 서비스들이 화폐를 매개로 사고 팔리는 통제된 고정가격의 강제는 시장을 혼란케 한다. 상업은 가능한 한 다른 방식으로 피난처를 찾는다. 그것은 직접교환의 시스템—상품과 서비스들이 화폐라는 중개수단이 없는 상태에서 교환되는 시스템—을 다시 발전시킨다. 고정된 가격에 상품과 서비스들을 처분할 것을 강제 당한 사람들은 그것들을 누구에게나 처분하지 않고 단지 호의를 베풀고 싶은 사람들에게만 처분한다. 잠재적 구매자들은 그들이 얻을 수 있는 것을 너무 늦기 전에 남아채기 위해 긴 줄에서 기다린다. 그들은 아직 팔리지 않은 것을 찾을지 모른다는 희망에 숨이 차게 이 가게에서 저 가게로 달려간다.

당시 시장상황에 의해 요구되는 수준보다 더 낮은 수준에서 가격이 당국에 의해 고정되었을 때 일단 이미 시장에 있던 상품들이 다 팔리고 나면, 빈 비축공간은 다시 채워지지 않는다. 특정 가격 이상을 부과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지만, 생산과 판매는 강제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더 이상 판매자들은 존재하지 않는다. 시장은 그 기능을 멈춘다. 그러나 이것은 노동분업에 근거한 경제조직이 불가능해지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적 노동

분업의 시스템을 전복시키지 않고서는 화폐가격의 수준은 고정될 수 없다.

그래서 가격의 공식적 고정, 일반적으로 자유시장에서 도달하는 수준보다 더 낮게 가격과 임금들을 확립시키려는 의도를 가진, 완전히 실행 불가능한 것이다. 만약 상품과 서비스들의 개별 종류들의 가격들이 그와 같은 제약들 아래 놓여 있다면, 그러면 교란이 일어난다. 여기에서 다시 그 교란들은 사적 재산권에 기초한 경제질서가 지닌 조정의 능력—그 시스템의 지속이 가능하도록 만들기—에 충분—에 의해 다시 정돈된다. 만약 그와 같은 규제들이 일반화되고 정말 강제로 시행된다면, 이런 상태가 사적 재산권에 기초한 사회질서의 존재와는 양립 불가능하다는 것이 명백해질 것이다. 가격을 한계를 정해 놓고 통제하려는 시도는 포기되어야 한다. 시장가격을 철폐하려고 나서는 정부는 필연적으로 사적 재산권의 철폐를 지향하게끔 되어 있다. 자유계약과 결합된 생산수단의 사적 재산권의 시스템 그리고 생산수단의 공동 소유권의 시스템, 즉 사회주의 사이에 제3의 중도의 길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 정부는 인식하여야 한다. 그 중도의 길은 점차 강제생산, 보편적 노동의 의무, 소비의 배급,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 생산과 소비의 공식적 통제로 나아가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이것은 전시(戰時)에 경제정책이 택한 길이다. 기쁨에 넘쳐 국가가 하고자 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국가의 능력을 공포했던 국가주의자는 경제학자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옳았다는 것을, 그리고 가격규제만으로는 관리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그들은 시장의 작동을 배제하기를 원했으므로, 그들이 원래 의도했던 것보다 더 멀리 나아가야 했다. 첫 단계는 가장 중요한 필수품들의 배급이었다. 그러나 곧 강제노동에 의존해야 했으며, 궁극적으로는 모든 생산과 소비를 국가의 지시에 복속시켜야 했다. 사적 재산권은 이름으로만 존재하였고, 사실상 철폐되었다.

군국주의(militarism)의 붕괴는 또한 전시사회주의(War-time Socialism)의 종말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혁명(the Revolution) 아래서도 이런 경제문제에 대한 이해는 구체제 아래서 보였던 것보다 더 나아진 것이 없었다. 완전히 동일한 경험들을 사람들은 다시 한번 겪어야 했다.

경찰과 형법의 지원을 받으면서 이루어진 가격의 상승을 방지하려는 시도들은 재난에 빠지지 않는다는데, 이는 관료들이 엄격하게 행동하지 않았기 때문이거나 사람들이 그 규제들을 회피하는 방법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난파당하지 않았는데 그 까닭은 기업가들이 사회주의 국가주의 전설들이 가지고 있는 공공정신에 투철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노동의 분업과 생산수단의 사적 재산권에 기초한 경제조직은 오로지 시장에서의 가격결정이 자유로운 한에 있어서만 기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시도들은 실패가 예정되어 있다. 만약 가격의 규제가 성공적이었다면 전체 경제 유기체를 마비시켰을 것이다. 생산이라는 사회적 기구의 계속적인 기능을 가능케 한 유일한 이유는 규제를 집행해야 할 사람들의 노력들이 마비됨에 따라 그 규제들을 불완전하게 실시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 때문이었다.

수천 년 동안 주민들이 살고 있는 지구의 모든 곳에서 ‘공정하고 합리적인 가격’이라는 망상으로 인해 무수한 희생이 있었다. 가격을 규제하는 법률을 어긴 사람들은 중벌을 받았다. 그들의 재산은 몰수되었으며, 감옥에 수감되었고, 고문을 받았으며, 사형에 처해졌다. 국가주의의 주체들은 확실히 열광과 에너지가 부족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행정관들과 경찰들이 경제적 사업들이 계속 진행되게끔 만들 수는 없다.

4. 통화정책의 기초로서의 지급수지(balance-of-payment) 이론

 현행 견해에 따르면, 건전한 화폐적 조건의 유지는 오로지 ‘지급의 신용균형’(credit balance of payments)이 있어야만 가능하다. ‘적자수지’(debit balance of payments)인 국가는 영구적으로 그 화폐의 가치를 안정화시킬 수 없다고 가정되고 있다. 통화의 평가절하는 유기적 기초를 가지고 있으며 유기적 결함들을 제거하지 않고서는 치유될 수 없다고 가정되고 있다.

이것과 이와 관련된 반대들에 대한 논박은 화폐수량설과 그레섬의 법칙(Gresham's Law)에 내재되어 있다. 화폐수량설은 화폐가 결코 영구적으로 단지 금속화폐—통화원칙(the Currency Principle)의 ‘순수한 금속화폐’(purely metallic currency)—만이 사용되고 있는 어떤 한 나라로부터 해외로 흘러 나갈 수 없음을 보여 준다. 화폐 스톡의 일부의 유출에 의해 야기된 국내시장에서의 통화긴

축(통화공급 감소)은 상품의 가격을 감소시킨다. 그렇게 되면, 국내가격 감소는 수입을 제한하며 수출을 촉진시키는데 이 과정은 다시 그 나라에 화폐가 다시 한 번 충분해질 때까지 이어진다. 화폐의 기능을 수행하는 귀금속들은 화폐에 대한 각자의 수요의 정도의 강도에 따라 개인들 사이에—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서로 다른 국가들 사이에—분배되어 있다. 화폐의 국제적 이동을 규제함으로써 공동체에 필요한 화폐수량을 확보하려는 국가 간섭은 쓸데없는 것이다. 원하던 화폐의 유출은—서로 다른 가치들을 지닌 화폐에 동일한 법정화폐의 자격을 부여하는—국가 간섭의 결과일 뿐이다. 화폐체제가 교란되지 않게 보존하기 위해 국가가 할 필요가 있고 또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단지 그와 같은 간섭을 삼가는 것일 뿐이다. 그것이 고전학과 경제학자들과 그들의 직접적인 계승자인 통화학파(the Currency School)의 화폐이론의 핵심이다. 우리는 이 원칙을 현대 주관주의 이론의 도움을 받아 더 세련되게 만들고 증폭시킬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을 전복시키고 그 자리에 다른 어떤 것을 대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어떤 사람들이 만약 이 점을 망각한다면, 그것은 단지 그들이 경제학자로서 사고할 줄 모른다는 것을 드러낼 뿐이다.

어떤 나라가 금속화폐 대신 신용화폐 혹은 법정화폐로 대체했다면, 과잉 발행된 지폐와 금속화폐를 법적으로 동일하게 취급함에 따라 그레섬의 법칙에 의해 묘사된 메커니즘이 작동하기 시작할 것이기 때문에, 지급수지(the balance of payments)가 환율을 결정한다고 자주 단언되고 있다. 그러나 이것도 역시 매우 부적절한 설명이다. 환율은 각 종류의 화폐단위가 지닌 구매력

에 의해 결정된다. 그것은 상품들이 직접 한 종류의 화폐로 구매되든, 혹은 간접적으로 다른 종류의 화폐를 통해 구매되든 아무런 차이가 없는 그런 수준에서 결정될 것임에 틀림없다. 만약 환율이 구매력 패리티에 의해 결정되는 위치—우리가 자연환율 혹은 균형환율이라고 부르는—에서 벗어나 움직인다면, 특정한 종류의 거래들이 이윤을 얻게 될 것이다. 그 구매력에 의해 주어졌던 환율에 비해 환율이 과소평가된 화폐로 구매하는 것이 유리해질 것이고, 또 그 상품들을 구매력에 비해 환율이 과대평가된 화폐로 판매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다. 그리고 그와 같은 이윤 기회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외환시장에서 저평가된 통화에 대한 수요가 있을 것이고, 이에 따라 환율은 균형의 위치에 도달될 때까지 상승할 것이다. 환율이 변화하는 까닭은 화폐수량이 변화하고 상품의 가격들이 변화하기 때문이다. 이미 언급된 것처럼, 이 기본적 관계가 실제로 사건들의 시간적 순서대로 표현되지 않는 것은 순전히 시장 기법 때문이다. 사실 환율의 결정은, 투기의 영향 아래에서, 상품의 가격에서의 예상된 변동들을 예견하고 있다.

지급수지(Balance-of-payment)이론은 외국 무역의 양은 완전히 가격에 의존한다는 것을 망각하고 있다. 만약 무역을 이윤이 남게 해 주는 가격에서의 차이가 전혀 없다면 아무런 수출도 아무런 수입도 발생하지 않는다. 지급수지이론은 그것이 다루고 있는 현상의 피상적인 측면들에 집착하고 있다. 만약 우리가 단순히 매일 혹은 매시간의 환율의 변동을 쳐다본다면, 우리는 오로지 당시의 지급수지(balance of payments)의 상태가 정말 외환시장

에서 공급과 수요를 결정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환율의 결정요인들에 대한 적절한 탐구의 시작에 불과하다.

다음 질문은 이것이다. 무엇이 어떤 순간의 지급수지의 상태를 결정하는가? 그리고 이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대답 이외에는 그 어떤 다른 가능한 대답도 존재하지 않는다. 지급수지를 결정하는 것은, 가격수준 그리고 가격 마진에 의해 유발된 판매와 구매이다. 환율이 오를 때에도, 만약 그 상품들이 높은 가격에도 불구하고 구매자를 찾을 수만 있다면, 외국 상품들은 수입될 수 있다.

지급수지이론의 한 유형은 필수품의 수입과 없어도 되는 물품의 수입을 구분하고자 시도한다. 필수품들은 없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 가격이 어떻게 구매해야 한다고 말한다. 해외로부터 필수품을 수입해야 하고 단지 상대적으로 없어도 되는 물품들을 수출할 수 있는 나라인 경우 결과적으로 그 나라의 통화에 지속적인 평가절하가 있어야 한다. 그렇게 주장하는 것은, 개별 재화들의 더 크거나 작은 필요성 혹은 불필요성(없어도 되는 정도)가 시장에서 그 재화들에 대한 수요의 강도와 크기에서, 그리고 그 재화들에 대해 지불되는 화폐의 수량에서 완전하게 표현되고 있음을 그들이 망각하는 셈이다. 오스트리아인들의 외국 빵, 고기, 석탄 혹은 설탕에 대한 욕구가 아무리 강하다고 하더라도, 오로지 그들이 이 상품들에 대해 비용을 지불할 수 있어야만 이것들을 획득할 수 있다. 만약 그들이 더 많이 수입하기를 원한다면, 그들은 더 많이 수출해야 한다. 만약 그들이 제조업 제품 혹은

반제품(半製品)을 수출할 수 없다면, 그들은 주식, 채권, 다양한 종류의 증권들을 수출하여야 한다. 만약 은행권 유통이 증대되지 않았더라면 판매하기 위해 출하된 물건들의 가격은, 만약 수입재화에 대한 수요가(그래서 가격이) 증가하지 않는다면 하락해야 할 것이다. 혹은 그렇지 않다면, 필수품 가격의 상향 이동은 없어도 되는 물품들—그런 물품의 구매는 필수품들의 구매를 허용하기 위해 제약되어야 하기 때문에—의 가격하락에 의해 상쇄되어야 할 것이다. 가격들의 일반적 상승은 의문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그리고 지급수지는, 증권 등의 수출에 의해서 혹은 사치품의 증가된 수출에 의해서 다시 균형상태로 되돌려질 것이다. 외환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외국 상품들이 여전히 동일 수량만큼 수입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위의 가정이 유효하지 않을 때, 오로지 유통되는 은행권의 수량이 증대되었을 때뿐이다. 외환의 증가가, 지급의 신용균형(a credit balance of payments)이 다시 있을 때까지, 수입을 질식시키지 않고 수출을 촉진하는 것은 오로지 이 가정이 유효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고대 중상주의의 오류는—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유령으로 진화하였다. 어떤 나라도, 심지어 최빈국도, 건전한 통화조건에 대한 희망을 포기할 필요가 없다. 환율을 올라가게 만드는 것은 개인들과 그 공동체의 빈곤, 외국에 빚을 지고 있는 상태, 나쁜 생산조건들이 아니라 인플레이션이다.


이로부터 환율의 상승을 방해하기 위해 채택되는 모든 수단들이 쓸모가 없다는 결론이 나온다. 만약 인플레이션 정책이 지속된다면, 그 수단들은 효력이 없는 상태가 계속될 것이다. 만

약 아무런 인플레이션 정책도 없다면, 그들은 불필요할 것이다. 이 방법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없어도 된다고 간주되는 혹은 적어도 다른 것들에 비해 덜 필수불가결하다고 간주되는 특정 재화들의 수입금지 혹은 수입제한이다.

이것은 이 상품들의 구매에 사용되었을 국내 화폐의 총액을 여타 구매들에 사용되게 만들 것이고, 자연스럽게 여기에서 관심의 대상이 되는 유일한 재화는 그렇지 않았더라면 해외에서 팔렸을 재화들이다. 이것들은 이제 국내에서 해외에서 제시되는 것보다 훨씬 더 높은 가격에 구매될 것이다. 그래서 수입의 감소와 외환에 대한 수요의 감소는 다른 한 쪽에서의 수출과 외환공급의 동일한 감소에 의해 균형을 맞출 것이다.

수입은 사실 수출에 의해 지불되는 것이지, 신(新)중상주의의 야마추어들이 아직도 계속 믿고 있는 것처럼 화폐로 지불되는 것이 아니다. 만약 외환에 대한 수요를 진정으로 막고자 한다면, 수입을 중지시키는 것이 바람직한 정도로 화폐수량은 국내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탈취되어야 한다—예를 들어 조세를 통해—그리고 완전히 유통에서 이탈시켜야 한다. 즉, 국가의 목적을 위해 사용되지 말고 파괴되어야 한다. 말하자면 디플레이션 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 초콜릿, 와인, 레모네이드의 수입을 제한하는 대신, 그 공동체의 구성원들로부터 그들이 그렇지 않았더라면 상품들에 지출했을 화폐를 박탈해야 한다. 그러면 그들은 이 상품들 혹은 여타 상품들에 대한 소비를 제한하지 않을 수 없다. 전자의 경우 더 적은 수량의 외환이 수요될 것이며, 후자의 경우에는 예전에 비해 더 많은 외환이 공급될 것이다.

5. 투기의 억제

 화폐의 가치하락을 투기자의 활동 때문으로 추적하는 원칙을 아직도 굳게 믿으며 고수하는 사람들이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쉽지 않다. 이 원칙은 가장 저급한 형태의 선동에 동원되는 필수불가결한 수단이다. 그것은 희생양을 찾고자 하는 정부의 자원이다. 오늘날 그것을 방어하는 독립적인 저술가들은 거의 없다. 그것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돈을 받고 그렇게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몇 마디 말을 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오늘날의 화폐정책은 대개 그런 원칙에 근거해 있기 때문이다.

투기가 가격을 결정하지 않는다. 투기는 시장에서 결정된 가격들을 받아들여야 한다. 투기자의 노력은 미래의 가격상황들을 정확하게 추정하고 이에 따라 행동하는 것에 쏠려 있다. 투기의 영향으로 주어진 기간의 가격들의 평균수준이 변경될 수 없다. 투기가 할 수 있는 것은 최고가격과 최저가격 사이의 틈을 좁히는 것이다. 가격변동들은 투기에 의해 감소된다. 대중적 전설이 묘사하는 것처럼 투기에 의해 악화되는 것이 아니다.

투기자가 미래가격들을 추정하면서 길을 잃는 일이 벌어질 수 있음은 사실이다. 이 가능성을 고려하면서 보통 간과되는 것은 주어진 상황들 아래에서는 미래를 좀더 정확하게 예견하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의 능력을 훨씬 넘어선다는 사실이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서로 반대되는 집단의 구매자들 혹은 판매자들은 시장에서 우세를 차지했을 것이다. 시장에서 수용된 의견

이 나중에 틀렸음이 증명되기도 하지만 아마도 이에 대해 그런 의견을 지녔던 투기자가 아닌 그 누구도 그 투기자처럼 진정한 슬픔을 느끼며 탄식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들은 계획적인 악의에서 틀렸던 것이 아니다. 결국 그들의 목적은 이윤을 얻는 것이지 손실을 얻는 것이 아니다.

투기의 영향 아래 성립된 가격들조차도 두 집단들, 즉 공격적인 투자자들(bulls)과 보수적인 투자자들(bears)의 협력으로부터 나온다. 두 집단의 각자는 유가증권을 매입하거나 하지 않거나 혹은 매도하거나 하지 않거나 함에 있어 그 강도와 정도에서 다른 사람과 언제나 동일하다. 가격의 결정에 각자는 동일한 책임이 있다. 아무도 처음부터 계속 공격적 구매자 혹은 보수적 구매자인 경우는 없다. 딜러들은 누구나 오로지 시장상황에 대한 종합적 고려에 근거해서, 혹은 더 정확하게는, 그와 같은 종합적 판단을 따르는 거래들에 근거해서, 황소(공격적 투자자)가 되기도 하고 곰(보수적 투자자)이 되기도 한다. 누구나 언제든지 자신의 역할을 바꿀 수 있다. 가격은 두 당사자들이 서로를 상쇄하는 수준에서 결정된다. 환율의 변동은 단지 외환을 팔아넘기는 곰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정도로 외환을 구매하는 황소에 의해서도 결정된다.

국가주의적 견해는 외환의 가격상승을 국내 혹은 해외에 있는 국가의 적들의 음모의 탓으로 돌린다. 이 적들이 그 나라 통화를 투기적 의도로 처분하고 외환을 투기적 의도로 사들인다고 단언되고 있다. 두 가지 경우들이 상정 가능하다. 이 적들이, 다른 여타 모든 투기자들과 마찬가지로 그들의 거래들에서 이

운을 얻을 수 있다는 희망에서 이렇게 행동한다. 혹은 비록 그들 자신은 이런 목적을 달성해 줄 활동으로 인해 손해를 입게 됨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 통화의 가치를 절하시킴으로써 그들의 적인 국가의 명성에 손상을 입히기를 원한다. 그와 같은 사업들의 가능성을 고려하는 것은 그것들이 거의 실현 가능하지 않음을 망각하는 것이다. 곰의 매각은, 만약 그들이 시장의 분위기에 반하게 행동한 것이라면, 즉각적으로 반대 움직임을 시도시킨다. 처분된 총액은 곧 나타날 반등을 기대하는 황소들에 의해 매입될 것이며, 그래서 환율상에 언급할 가치가 있을 만큼의 변화도 주지 않을 것이다.

실제에 있어서는, 이윤을 얻기 위함이 아니라 그 국가의 명성에 손상을 주려고 실행에 옮겨진, 이 자기희생적인 곰의 조작은 우화의 영역에 속한다. 외환시장에서 이윤을 확보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시장조건들에 상응하지 않는 어떤 환율을 창출하고 유지하는 것이 목표인 조작들이 행해질 수 있음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런 종류의 간섭은 항상 통화에 책임이 있다고 여기고 항상 균형수준 이상의 환율을 확립하고 유지하려는 정부들로부터 진행된다. 이것들은 자의적인 황소의—곰이 아니라—조작들이다. 물론 그와 같은 간섭은 또한 장기적으로는 효과가 없다. 사실 최종적인 분석을 해 보면, 단지 화폐의 추가적 하락을 방지하는 데 유일한 방법, 즉 은행권 발행의 증가를 멈추는 일이 있을 뿐이며, 화폐의 가치를 올리는 데도 유일한 방법, 즉 은행권 유통을 감소시키는 것이 있을 뿐이다. 1923년 봄 독일 라이히스뱅크(Reichsbank)의 간섭—팽창된 은행권의 단지 일부만이 은

행들의 외국 어음들의 판매를 통해 회복되었던—과 같은 그 어떤 간섭도 필연적으로 성공적이지 못할 것이다.

투기를 반대한다는 개념에 이끌려, 인플레이션적인 정부들은 그 의미를 이해하기 힘든 조치들에 개입되었다. 그래서 한때 은행권의 수입이 금지되었다가, 이 은행권의 수출이 금지되었고, 그런 다음 다시 이 은행권의 수출과 수입 둘 다 모두 금지되었다. 수출업자들은 자신의 나라의 은행권을 팔지 못하도록 금지되었으며, 수출업자들은 그것들을 가지고 구매하는 것이 금지되었다. 외국 화폐와 귀금속의 단위로 된 모든 무역은 국가독점임이 선포되었다. 국내 외환시장에서 외국 화폐의 환율의 시세 발표는 금지되었으며, 공식 외환교환소 이외의 국내 외환거래에서 결정되는 환율과 외환거래소에서 협상되는 환율에 관한 정보의 소통은 심한 처벌을 받게 되었다. 그러나 이 모든 조치들은 소용이 없음이 밝혀졌으며, 아마도 만약 이런 조치의 유지에 유리한 중요한 요인들이 없었더라면 실제 그랬던 것보다 더 빨리 제거되었을 것이다. 화폐가치의 하락이 사악한 투기자들 탓일 뿐이라는 가설의 유지에 붙여진 이미 언급된 정치적 중요성과는 아주 별개로, 모든 거래의 제한은 그것이 실시된 후부터는 그 제한의 제거에 반대하는 기득권을 창출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때로는 외환시장에서 고풍에 대항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고풍들만이 환율을 결정하는 때가 있다는 사실에 의거해서 투기에 반대하는 조치들의 바람직함을 보여 주려는 시도들이 이루어졌다. 그것은 물론 정확하지 않다. 그러나 투기가 통화의 경

우에는, 통화의 누진적 가치하락이 예상된다고 하더라도 그 평가절하가 언제 정지할 것인지를—아무튼 정지한다면—예견하기는 불가능하다는 특이한 효과를 가지고 있음을 알아 두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투기는 평균 가격수준을 변화시키지 않으면서 최고가와 최저가 사이의 틈을 줄이는 데 반해, 여기 외환시장에서는 가격 움직임이 추측하건대 같은 방향으로 지속되는 경우, 자연스럽게 투기가 최고가와 최저가의 틈을 줄이는 경우일 수 없다. 여기에서 투기의 효과는—그렇지 않았더라면 더욱 균일하게 진행했을—그 변동이, 일시적 휴식을 사이에 두고 발작과 출발의 패턴을 보이도록 허용하는 데 있다. 만약 환율이 오르기 시작하면, 그 상황에 대한 자신들의 견해와 일치되게 구매하는 투기자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더해 무수한 수의 외부자들이 가담하게 된다. 이 캠프의 추종자들은 독립적인 견해에 따라 투자하는 소수에 의해 시작된 움직임을 더 강화하며, 이들이 가세함으로써 오직 전문적인 직업적 투기자들의 영향 아래에서 이루어졌을 것보다 움직임은 더욱 커진다. 왜냐하면 그 반응이 통상적인 것처럼 그렇게 빨리 그리고 효과적으로 시작될 수 없기 때문이다. 물론 화폐의 가치하락이 더 심해진다는 것은 일반적 가정이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외국 화폐의 판매자들이 반드시 등장할 것이며, 환율의 상승 움직임도 정지되게 된다. 아마도 후퇴의 움직임조차 당분간 시작될 수도 있다. 그래서 ‘안정된 화폐’의 기간 이후, 전 과정이 다시 시작된다.

널리 인정되듯이 그 반응은 늦게 시작되지만, 그러나 환율이 상품가격들보다 너무 앞서서 나가는 순간 시작될 것임에 틀림

없다. 균형환율과 시장환율 사이에 격차가 너무 커서 이윤을 남기는 상품거래들이 나타나게 할 정도라면, 국내 지폐에 대한 투기적 수요가 또한 발생할 것이다. 상품가격들의 상승에 따라 그와 같은 거래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다시 사라질 때까지는, 외환가격의 새로운 상승은 시작되지 않을 것이다.

국가주의는 궁극적으로 외환, 외화예금, 외국 어음의 보유를, 그 자체로 비난받아야 할 행동으로 간주하게 된다. 이 관점에서 보면, 통화가치의 절하가 자신들의 사적 재산권에 미치는 해로운 결과를 인내하고, 화폐의 가치하락에 의해 잠식되지 않는 소유물들을 획득함으로써 이런 해로운 결과를 회피하려고 시도하지 않는 것이 시민의 의무—이것이 그렇게 많은 단어들로 단언되어서가 아니라 그것이 모든 공식적 선언들의 논조라는 점에서—이다. 국가주의자들은 선언한다. 개인의 관점에서는 마르크화로부터 도피함으로써 곤궁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좋아 보일지 모르지만, 공동체의 관점에서는 그러한 행동은 해로우며 그래서 저주받을 짓이다라고. 이 요구는 정말 인플레이션의 혜택을 누린 사람들 입장에 서서, 다른 모든 이는 국가의 파괴적 정책에 따른 희생을 감수한다는 의미에서 그들의 부를 포기해야 한다는 ‘시원한’ 요구에까지 이른다. 이 경우 유사한 단언들이 이루어지는 여타 모든 경우들에서와 마찬가지로, 개인의 이익과 공동체의 이익 사이에 대립이 존재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 국민자본(national capital)¹⁹⁷⁾은 그 국가의 개별 구성원들의 자본으로

197) national capital은 그 국가의 구성원들이 보유한 자본으로 구성된다. 이 용어는 어떤 측면에서는 국가자본으로 번역될 수도 있겠지만 국가자본

구성되어 있으며, 후자가 소비되면 전자도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 그의 재산을 화폐의 평가절하에 의해 잠식될 수 없는 방식으로 투자하려고 조치를 취하는 개인은 공동체에 손해를 입히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정반대로, 그의 사적 재산을 파괴로부터 보존하기 위해 조치를 취하면서, 그는 또한 그 공동체의 재산의 일부를 파괴로부터 보존하고 있다. 만약 그가 재산을 인플레이션의 효과에 반대하지 않고 그냥 복종했다면, 그가 한 것이라고는 국부(國富)의 일부를 파괴한 것이며, 그 인플레이션 정책이 이득을 안겨 준 사람들을 살찌우는 것이었을 뿐이다.

독일에서 가장 유능한 계층에 속하는 상당수의 사람들도 인플레이션주의자들과 그들을 추종하는 언론들의 엄숙한 단언들을 받아들였음은 사실이다. 많은 이들이, 자신들 소유의 마르크화(貨) 혹은 크로네화, 그리고 마르크 혹은 크로네 증권들을 처분하지 않고 보유하는 행동을 하면서 자신들이 애국적 행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그렇게 행동함으로써 그들은 조국에 봉사한 것이 아니다. 그런 행동의 결과 그들과 가족들이 빈곤으로 빠져들게 되었는데, 이 사실은 단지 그들로부터 독일의 문화재건이 기대되었던 독일 국민들 중 일부 계층의 구성원들이, 자신이 속한 공동체를 구하기는커녕 그 자신조차도 부양할 수 없는 처지로 몰락했음을 의미할 뿐이다.

은 민간자본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쓰이고 있어 적합하지 않은 측면도 있다. 국가자본보다는 국내자본이 더 적합할 수 있지만, 이것은 지역을 경계로 해서 쓰일 수 있는 개념이어서 국민들이 보유한 자본임을 드러내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국민자본이라고 번역하였다.

THE THEORY OF MONEY AND CREDIT

keri
한국경제연구원
www.keri.org



ISBN 978-89-8031-602-1
ISBN 978-89-8031-604-5(전2권)

(150-70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7-3 하나대투증권빌딩 8층
전화 : (대표) 3771-0001 팩스 : 785-0270~3

값 20,000원